

2022 연구결과 요약집

Summaries of 2022
Research Reports

발 간 사

우리 연구원은 “미래 시정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기관” 실현이라는 경영비전에 입각하여 인천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정분야별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더 나은 미래 도시발전 방향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인천의 꿈이 실현되고, 혁신을 통한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원은 2022년에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전환 대비,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한 솔루션 도출에 노력하였고, 민선 8기 핵심시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기초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했습니다.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은 2022년 한 해 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중 공개 가능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별 연구개요, 정책 건의 사항에 관한 연구성과를 요약하여 연구 분야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현장연구 확대 및 시민소통의 일환으로 실시한 각종 학술행사 결과물도 함께 담았습니다. 관내 정책전문가로서 수행한 연구진들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이 책이 관련 연구자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분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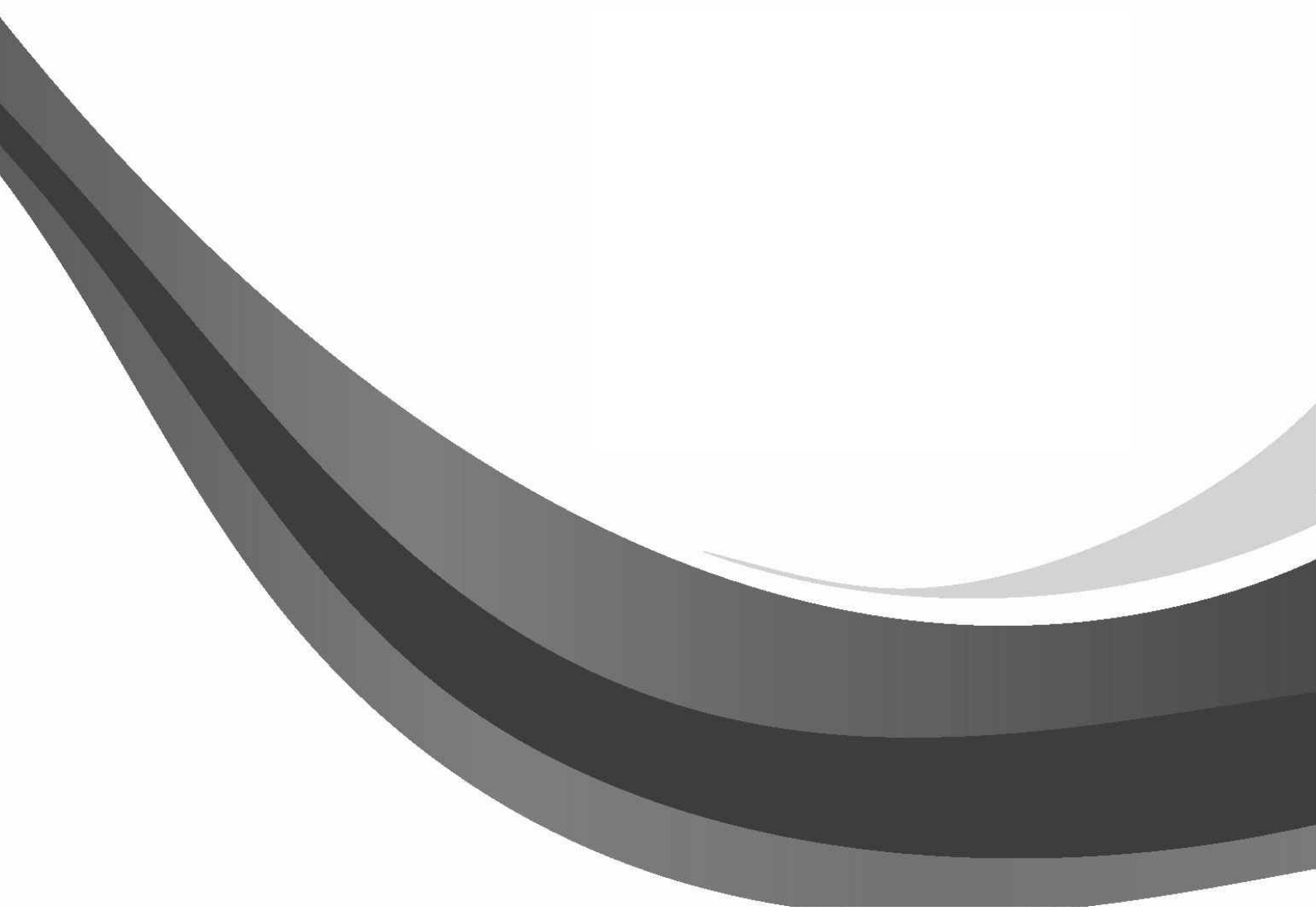
2023년, 인천연구원은 시정현안 대응력 강화에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시정 핵심시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랜드 도시비전 구상’,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행복 구상’을 3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민의 꿈과 인천의 꿈 실현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년 1월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연구사업개요



연구과제 추진실적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은

대외 공개 여부 및 2022년 말 기준 발간된 과제를 선별하여 총 121편 수록

(단위 : 건)

| 구분 | 소계 | 행재정 남북 | 교육 복지 | 문화 관광 | 경제 | 환경 | 동북아· 국제 | 교통 물류 | 도시 계획 | 투자 분석 |
|--------|-----|-----------|----------|----------|----|----|------------|----------|----------|----------|
| 소계 | 214 | 18 | 15 | 17 | 25 | 36 | 7 | 37 | 37 | 22 |
| 기초연구 | 8 | - | 1 | 1 | 2 | 1 | - | 2 | 1 | - |
| 정책연구* | 44 | 5 | 3 | 6 | 3 | 3 | 1 | 9 | 14 | - |
| 기획연구 | 74 | 9 | 4 | 3 | 7 | 15 | 2 | 6 | 8 | 20 |
| 현안연구** | 46 | 3 | 4 | 5 | 9 | 4 | 3 | 6 | 10 | 2 |
| 수탁연구 | 42 | 1 | 3 | 2 | 4 | 13 | 1 | 14 | 4 | - |

* 정책연구에 군·구협약 정책연구를 포함함.

** 현안연구에 이슈브리프를 포함함.

학술행사·국제교류·정책간담회 추진 실적

| | |
|--------|---------------------------------|
| 국내학술행사 | 2022년 미래산업연구단 기획세미나 외 15건 |
| 국제학술행사 | 2022 인차이나포럼 한중 전문가 국제회의 외 8건 |
| 정책간담회 |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 업무협약 외 2건 |

● ● ● 연구과제 구분

| | |
|---|---|
| 기초연구 | 인천시 정책 및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
| <p>연구자별로 각 연구 분야에서 중·장기적 정책을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엄격한 과제선정 과정을 통해 추진하게 되는 연구원의 기초 연구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자료와 정책 논리를 제공하는 연구</p> | |

| | |
|--|--------------------------------------|
| 정책연구 | 인천시 시책 수립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 |
| <p>연 2회 상하반기 각 부서의 요청과 정책기획관실의 조정과정을 통해 선정하는 연구과제로서 연구자의 전문가 적 식견을 기초로 단기적 검토를 통해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집행에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연구</p> | |

| | |
|--|--------------------------------------|
| 기획연구 | 정책 이슈 발굴을 통해 인천시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
| <p>인천시 차원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시정 현안에 대응하고, 여러 분야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학제 간 통합연구와 같이 기초연구 형태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하에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구</p> | |

| | |
|--|------------------------------|
| 현안연구 | 시급한 현안 이슈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연구 |
| <p>시의성이 요구되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쟁점별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는 연구</p> | |

| | |
|--|-------------------------------|
| 이슈브리프 | 현안이슈 및 잠재적 정책 이슈에 대하여 제언하는 연구 |
| <p>현안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 및 연구자의 전문적 식견에 기반하여 인천시 정책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단문 연구보고서</p> | |

| | |
|---|-----------------------------|
| 수탁연구 | 법정계획 등 시정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
| <p>인천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분야별 법정계획과 광범위한 기초조사 등이 수반되는 연구로서 조사비, 외부 인건비 등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며, 발주부서에서 사전에 연구수행의뢰가 이루어지면 연구원 내부의 용역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행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별도의 계약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연구</p> | |

2022년 5대 역점사업 연구단

I. 미래산업연구단

| 전환기 인천시 산업전략과 정책과제 | | 미래산업연구단 | 5 |
|--------------------|---|---------|----|
| 기초 |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민규량 | 8 |
| | 인천시 로봇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 | 이정영 | 12 |
| | 인천광역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연구 | 한 준 | 16 |
| 기획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 심진범 | 20 |
| |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화에 관한 연구: 지역별 이행여건 및 주요 정책 분석 | 김수한 | 25 |
| | 인천광역시 도시빅데이터 이슈 및 정책방향 | 민혁기 | 29 |
| |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인천바이오헬스밸리 미래 전략 | 서봉만 | 32 |

II. 청년친화연구단

| 인천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추진방안 | | 청년친화연구단 | 39 |
|-------------------|----------------------------|---------|----|
| 기획 | 인천시 청년 참여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정욱 | 42 |
| | 인천광역시 청년 노동시장 현황 및 이행요인 분석 | 민규량 | 47 |
| | 인천시 육아친화 환경 조성 방안 | 정혜은 | 51 |
| | 인천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방안 | 최영화 | 55 |
| 정책 |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 기윤환 | 58 |

III. 포용상생연구단

| 인천시 포용성 진단과 정책 제언 | | 포용상생연구단 | 65 |
|-------------------|--|---------|-----|
| 기초 | 인천 원도심 주거지 분리 특성 분석: 주택유형별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 조상운 | 70 |
| | 인천광역시 버스교통체계의 서비스 취약지역 분석 | 정동재 | 75 |
| 기획 | 인천시 계층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 기윤환 | 79 |
| | 인천시 이주청소년의 학업생활실태와 지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 배은주 | 84 |
| |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및 제언 | 이왕기 | 89 |
| |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 방향 설정 연구 | 이용갑 | 93 |
| | 인천광역시 일자리 공간분포 및 직주근접성 분석 | 이종현 | 98 |
| | 인천시 생활SOC 현황과 공급 방안: 돌봄·여가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 안내영 | 102 |

IV.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가치 및 쟁점 도출 | |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 107 |
|----------------------------|---|------------|-----|
| 정책 |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 검토 | 기윤환 | 112 |
| | 연안항 및 남항 배후지역 일원 기능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연구: 항동 7가를 중심으로 | 안내영 | 117 |
| 현안 | 인천내항 항만기능 재배치 방향 검토 | 김운수 | 121 |
|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교통체계 구축방안 | 석종수 | 122 |
| | 인천내항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쟁점 및 방향 | 심진범 | 123 |
| |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인천시 주도 사업구조 전환방안 | 배덕상 | 124 |
|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 및 전문가 의식조사 | 윤혜영 | 125 |
| |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한 중·동구 일원 활성화 방안 | 윤혜영 | 126 |
| | 내항 배후지역 산업구조 개편 이슈와 과제 | 최태림 | 127 |

V. 글로벌도시연구단

|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진단과 제언 | | 글로벌도시연구단 | 131 |
|----------------------|-----------------------------------|----------|-----|
| 현안 | '초일류 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형 글로벌 역량 강화 방향 | 배은주 | 135 |
| | 글로벌 물류도시 인천의 발전 방향 | 강동준 | 136 |
| | 글로벌도시 홍콩의 사회·경제 변화와 시사점 | 김수한 | 137 |
| |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문화도시 인천으로의 발전 방향 | 민경선 | 139 |
| | 아시아 글로벌 도시의 경제산업 특성과 경쟁력 지표 동향 분석 | 서봉만 | 140 |
| |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인천의 방향 | 한 준 | 142 |
| | 인천 내 해외기업 투자확대 방안 모색 | 이정영 | 144 |
| | 동아시아 주요 도시 글로벌경쟁력 비교 | 김수한 | 146 |

도시사회연구부

I. 행·재정·남북관계 분야

| | | | |
|-----------|-------------------------------|-----|-----|
| 기획 |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연구 | 남근우 | 151 |
| |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시의 남북협력 정책과 과제 | 남근우 | 157 |
| 정책 |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인천 데이터 체계 연구 | 채은경 | 160 |
| | '(가칭)서해평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 남근우 | 163 |
| | 캠프마켓 시민공론화 운영 방안 | 김정욱 | 166 |
| 현안 | 연수구형 마을공유공간 조성 및 방안 | 김정욱 | 170 |
| |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사전 검토 연구 | 이정철 | 173 |

II. 교육·복지 분야

| | | | |
|-----------|--|-------------------|-------------------|
| 기초 | 인천시 도시건강모델 개발 연구 | 이용갑 | 177 |
| 기획 | 인천광역시 시민인권교육 현황과 향후 과제 | 배은주 | 182 |
| 정책 | 인천시 1인가구 특성과 정책 방향 중구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정혜은 배은주 | 184 187 |
| 현안 | 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체계 비교 팬데믹 시기 보편적 아동 돌봄서비스 의미 인천시 1인가구 정책 제언: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배은주 정혜은 정혜은 | 190 191 192 |

III. 문화·관광 분야

| | | | |
|-----------|--|--|--|
| 기초 | 인천 문화통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 민경선 | 195 |
| 정책 |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방안 연구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방안: 일진전기를 중심으로 캠프마켓 활용 음악산업지구 조성 방안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 발전방안 (구)인천우체국의 문화적 활용방안 중구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훈관광 정책 방향 | 심진범 민경선 최영화 최영화 최영화 심진범 | 199 204 207 210 214 217 |
| 현안 | 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 정책 방향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현황 및 재원 확보 방안 | 심진범 최영화 | 221 222 |

경제환경연구부/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I. 경제·국제 분야

| | | | |
|-----------|---|--------------------------------|--------------------------|
| 기획 | 인천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국내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 이정영 | 227 |
| 정책 | 인천의 중국 도시외교 기본 방향과 과제: 주요 교류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분석 및 추진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 연수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 김수한 민규량 조승헌 서봉만·이정영 | 230 233 235 237 |
| 현안 | 인천시 지능형 기술 기반 제조현황 및 미래전략 싱가포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인천시 아파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변화 분석 인천시 음식점 개·폐업 변화 분석 | 최태림 서봉만 도시정보센터 도시정보센터 | 241 242 243 244 |

II. 환경·안전 분야

| | | | | |
|------------------------|---|------------------------------|-----|-----|
| 기획 |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생활안전 분야 | 조성윤 | 247 | |
| | 인천광역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사전 검토 연구 | 한 준 | 250 | |
|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 조경두·김보람 | 253 | |
|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취약대상 공간적 상세화 및 정책적 활용방안 | 조경두·류지은 | 256 | |
| | 인천지역 읍면동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업데이트 | 조경두·부찬종 | 258 | |
| |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증진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조경두·이종욱 | 261 | |
| |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업데이트 | 조경두·최종석 | 263 | |
|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 한 준·이태휴 | 267 | |
| | 인천광역시 도시회복력 평가체계 개발 연구 | 조성윤·염재원 | 269 | |
| | 2022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 조성윤·주필주 | 272 | |
| | 인천광역시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조성윤·주필주 | 275 | |
| | 정책 | 인천시 도시숲 조성현황 분석 및 시민 이용방안 연구 | 권전오 | 279 |
| | | 인천시 공원 이용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권전오 | 282 |
| 한강하구 수환경측정망 확충방안 | | 김성우 | 286 | |
| 현안 | 인천 ESG 지표 개발 연구 | 한 준·이정철 | 291 | |
| |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제도의 변화와 쟁점 | 한 준·채은경 | 293 | |
| | 인천광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 조성윤·주필주·염재원 | 294 | |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 조성윤·주필주·서민경 | 296 | | |

교통물류연구부

I. 교통·물류 분야

| | | | | |
|-----------|---|--------------------------|-----|-----|
| 기초 | TIMS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택시 이용행태 연구 | 손지연 | 301 | |
| | 기획 인천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교통사고분야 | 박민호 | 307 | |
| 정책 |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 | 김운수 | 311 | |
| | 인천시 도로교통소음 관리 정책 | 석종수 | 315 | |
| | 건축물 전면공간 주차 차량의 보도 진입 방지방안 | 석종수 | 319 | |
| | 항만·항공·물류 분야의 통계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방향과 과제 | 강동준 | 322 | |
| |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 강동준 | 326 | |
| | 인천지역 교통문화지수 향상방안 마련 연구 | 박민호 | 329 | |
| |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방안 | 이성훈 | 333 | |
| | 기축 아파트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 방안 | 정동재 | 337 | |
| | 현안 | 제물포 르네상스를 위한 중단기 광역 교통정책 | 석종수 | 341 |

도시공간연구부

I. 도시계획 분야

| | | | |
|-----------|-------------------------------|-----|-----|
| 기획 | 인천광역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 개선방안 | 이인재 | 347 |
| | 인천시 준공업지역 토지이용 실태와 관리 방안 | 안내영 | 351 |
| 정책 |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 | 이왕기 | 354 |
| | 인천광역시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 이인재 | 358 |
| | 녹지축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개선방안 | 이종현 | 362 |
| |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 | 조상운 | 366 |
| | 인천광역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정책 방향 | 민혁기 | 370 |
| | 연수구 원도심 노후아파트 정비·관리 정책방향 | 민혁기 | 374 |
| 현안 | 인천시 청년주택 공급방향 | 기윤환 | 379 |
| | 인천지역 수도권규제의 역사적 흐름과 대응방안 | 이종현 | 380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I. 투자분석 분야

| | | | |
|-----------|---|-----|-----|
| 기획 | 공공주차장 사업 편익추정을 위한 주차 지표 분석 및 적용방안 | 박찬운 | 385 |
| | 2022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 | 박찬운 | 388 |
| |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진단과 보정수요 발굴에 관한 연구: 교통관리비 밀도조정 및 공항·항만수요 중심으로 | 박찬운 | 391 |
| |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 박찬열 | 394 |
| | 인천시 공단의 경영성과 분석 및 사업다각화 방안 | 박찬열 | 397 |
| |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 박찬열 | 401 |
| | 인천 신항 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 박찬열 | 404 |
| |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지 활용방안 | 배덕상 | 407 |

학술행사 · 국제교류 · 정책간담회

I. 국내 학술행사

| | |
|----------------------------|-----|
| 2022년 미래산업연구단 기획세미나 (1~4차) | 415 |
| 2022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성과 공유 토론회 | 416 |

| | |
|--|-----|
|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정기총회 및 공동연구발표회 | 418 |
| 2022 도시정보 콜로퀴움 (1~4차) | 420 |
|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5~6회) | 421 |
| 도시연구세미나 (22~23회) | 423 |
| 한국ITS학회 2022년도 국제학술대회 인천연구원 세션 | 425 |
| 2022년 인천지역 공공분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세미나 | 426 |
| 2022 아시아 태평양 혁신 콘퍼런스 인천세션 | 427 |
| 2022 DMZ 국제포럼 인천세션 | 428 |
| 2022 인천미래정책포럼 | 429 |
| 2022년 인천-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공동세미나 | 431 |
| 2022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1~4차) | 432 |
| 2022 인천기후환경포럼 (1~4차) | 433 |
| 2022 황해평화포럼 분과회의: 정책세미나 | 435 |
| 2022 인차이나클러스터: 중국 전문가 회의 (1~10차) | 437 |

II. 국제 학술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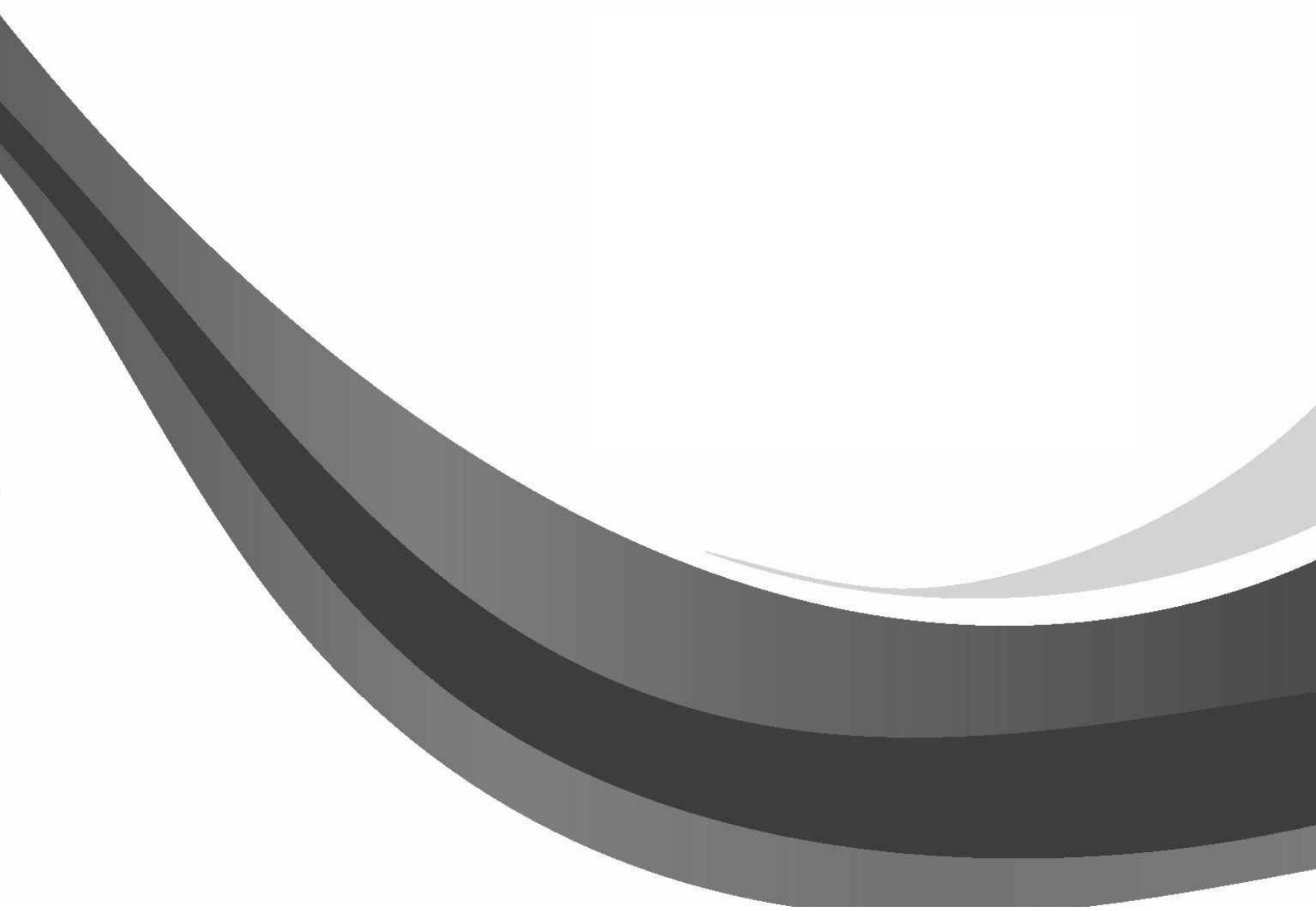
| | |
|-------------------------------|-----|
| 2022 인차이나포럼 한중 전문가 국제회의 | 443 |
| 제6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 445 |
| 인차이나포럼 2022 국제콘퍼런스 | 447 |
| 2022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 449 |
| 2022 황해평화포럼 | 451 |
| 2022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 454 |
| 제27차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 457 |
|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 458 |
| 제15회 인천연구원-키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 461 |

III. 정책간담회

| | |
|-----------------------------|-----|
|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 업무협약 | 465 |
| 전국시도연구원-한국환경연구원 업무협약 및 환경포럼 | 467 |
| 인천경제연구회 업무협약 및 창립총회 | 470 |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2022년 5대 역점사업 연구단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미래산업연구단

● 단행본

전환기 인천시 산업전략과 정책과제

● 기초연구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현황 및 시사점

인천시 로봇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

인천광역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연구

● 기획연구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화에 관한 연구: 지역별 이행여건 및 주요 정책 분석

인천광역시 도시빅데이터 이슈 및 정책방향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인천바이오헬스밸리 미래 전략

전환기 인천시 산업전략과 정책과제

미래산업연구단



1. 배경과 목적

-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기술이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인천시로서는 산업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함
- 인천시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태세와 정책과제를 바이오헬스케어, 관광산업, 중소 제조업체, 자동차 부품산업을 사례로 검토함
- 산업전환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2. 전환기 인천시 산업경제 정책 방향

1)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방향

-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데이터 인프라가 디지털 전환에서 차지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정책 역량의 집중이 필요함

2)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 방향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 방향

-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은 관광기업, 관광공간, 관광생태계라는 전체적 시각에 기반하여 '디지털 기반 관광산업 혁신을 통한 인천 관광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3) 제조업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방향

-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고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
-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IEA나 주요 선진국이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략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전기화, 저탄소 에너지원 확대를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제조업에 대한 이들 지원을 강화해가야 함
-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 지역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상호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중재가 필요

4) 전기차 산업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방향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아래 표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시사점별로 전기차 시장 현황 결과, 인천시 현황 분석 결과, 정책 환경 분석 결과,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를 결합하여 인천시 자동차 부품산업 정책의 기본 틀을 제안함

3. 결론

1) 산업전환 관련 인천시 기업의 인식 수준 대비 대응 태세는 미진

-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역량 부족으로 소극적으로 대응
 -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자금, 기술력, 인력 등 내부 자원의 부족이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에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드러남
 - 관광산업은 업종·규모별로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디지털 역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 기업은 탄소중립 관련 인식 수준도 낮고, 대응 방안도 미비한 상황
 - 인천시 제조업체는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도 낮고, 대응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전기차 전환이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긍정, 중립, 부정 기업군으로 나뉘며, 긍정적 기업군은 적극적으로 기술 전환에 대응하고 있으나 부정적 기업군은 정보도 부족하고 전환 방향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인천시 기업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새로운 기회로 인지

- 디지털 전환의 핵심 목표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 인천시 바이오헬스케어와 관광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디지털 전환의 주요 목표로 설정
- 자동차 부품 기업군 중 긍정적 부품군은 탄소중립을 새로운 계기로 인지
 - 긍정적 부품 기업군은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환 과정이 자사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3) 낮은 정책 만족도의 개선과 함께 과감한 지원정책 추진 필요

- 전반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업전환 관련 정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는 낮음
 -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빅데이터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평가한 반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관광기업은 업무 환경 구축, 온라인 마케팅 등에 높은 정책 수요를 보임
- 탄소중립은 낮은 인식 수준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
 - 탄소중립에 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강화가 선행하여야 하며, 에너지효율 개선과 저탄소 에너지원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현재 정책사업 대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민규량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차량 배출 온실가스 규제가 가오하되고 있으며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또한 가속화 됨.
-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에 비해 필요 부품수가 적고 공정이 비교적 간단해 국내 내연기관차 관련 업체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 인천시에도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적지 않아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위기 및 기회에 노출된 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회사의 경우 2,3차 벤더로 이어지는 산업의 특성상 전국사업체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내 내연기관 관련 자동차 산업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인천시가 받는 영향에 대해 질적·양적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2. 인천시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및 전망

- 전통 자동차의 비중은 인천시가 전체 제조업에서 사업체 기준 2.9%, 종사자수 기준 5.9%로 전국 3.6%, 10.5%보다 낮은 수준임.
- 반면, 범 자동차 제반 관련 산업의 비중은 인천시가 사업체 기준 18.2%, 종사자수 기준 22.2%로 전국 17.5%, 22.8%와 비슷함.

[표 1] 전국, 인천시 부품군별 비교

| | 전통 자동차 부품산업 | | 범 자동차 부품산업 | |
|-------|--|--|--|--|
| | 전국 | 인천시 | 전국 | 인천시 |
| 긍정부품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 수준 • (1위) 모듈 • (종사자수) 2.3만 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 수준 • (1위) 모듈 • (종사자수) 1.3만 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3% 수준 • (1위) 서비스 • (종사자수) 58.0만 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1% 수준 • (1위) 서비스 • (종사자수) 2.1만 명 |
| 중립부품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2% 수준 • (1위) 모듈 • (종사자수) 154 만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3% 수준 • (1위) 모듈 • (종사자수) 0.7만 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4% 수준 • (1위) 소재/가공 • (종사자수) 50.6만 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9.6% 수준 • (1위) 단위부품 • (종사자수) 2.8만 명 |
| 부정부품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9% 수준 • (1위) 단위부품 • (종사자수) 8.9만 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8% 수준 • (1위) 단위부품 • (종사자수) 0.3만 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 수준 • (1위) 모듈 • (종사자수) 11.9만 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 수준 • (1위) 모듈 • (종사자수) 0.7만 명 |

- 부품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범 자동차 부품산업에서는 부정부품군에서의 비중이 전국보다 인천시가 높은 반면, 긍정부품군의 비중은 전국이 인천시보다 높음
-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중지 등에 따른 위기 기업의 수는 2019년 기준 전통 자동차 제조 업체수 약 160개, 범 자동차 제조 업체수 약 458개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위기 종사자수는 각각 3,334명 및 6,699명으로 추산됨.

3.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 면담 조사

- 면접조사는 총 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7] IDI(In-Depth Interview) 설문 면접 결과 개요

| 구분 | 부정적 부품군 | 중립적 부품군 | 긍정적 부품군 | |
|--------------|-----------------------|--|---|--|
| 기업 및 신상정보 | 최근3년내 매출 및 영업이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매출타격이 크진 않음 •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적요인에 의한 이익감소폭이 큼 • 내부 구조조정으로 감소 | | |
| | 미래성장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가 아닌 다른 산업군 진입을 고려할 정도로 나쁨 • 원자재나 기술개발 경쟁력이 없어서 불투명함 • 파이가 줄어들고 있어 불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연기관 축소 영향은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이 안정되고 공급처가 늘어나면 성장가능성 매우 높음 |

| 구분 | | 부정적 부품군 | 중립적 부품군 | 긍정적 부품군 |
|-------------|-------------|--|---|---|
| 전기차 전환 인식 | 전환 체감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생산은 2025년까지만 한다고 하니 위기감을 느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적이나 기술개발에서 내연기관 차량관련 요청은 이제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기술개발 수요 증가를 체감함 |
| | 전환 수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부족함 먹거리가 막막함 경량화가 대세인 상황이라 수요감소가 확실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연기관 관련 차량 부품에서 전기차 관련으로 규격 등을 바꾸면 수용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히려 전기차 전환시 부품수요가 증가함 이미 상당부분 기술개발이 이루어짐 |
| | 산업의 성장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별로 성장파이 배분이 부익부 빈익빈 상태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인 변화는 시대 흐름임 독식하는 기업 발생을 우려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연기관 차 시장 부품 기업 중 일부는 도태될 것이나 살아남는 기업은 성장할 것임 |
| 산업 전환기 준비현황 | 전기차 전환 준비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전자 인력이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개발 등은 기존 인력으로 가능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 부분 연구가 진행됨 대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각함 |
| | 전환 추진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컨설팅은 의미가 없음 정부의 기술개발분야 지원이 절실함 아이템이 없으니 자금확보도 어렵고 연구개발비 투자가 힘든 악순환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인력을 모셔옴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함 현재 완성차 업체에 재직중인 사람에게 컨설팅을 요청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업체와 합작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중임 |
| | 전환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 부분 퇴출을 예상함 기계를 절반 이상 교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라고 해서 부품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문제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긍정적임 |
| | 전환 준비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연구-기획-개발-생산까지 최소 2~3년, 최장 5년도 고려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형 같은 것은 6개월만에도 가능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개발, 검증까지가 보통 2년이고 그 이상도 소요됨 |
| | 전환의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정보가 없음 매출, 영업이익 감소가 뚜렷하지만 대안이 없음 전기차 부품전환에 성공 하더라도 양산화까지 3~5년은 매출 냉각기가 예상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 종류가 간소화되면서 필요로하는 업체수는 줄어들 것임 전환에 실패한 1차 밴더 도산 시 2~3차 밴더의 연쇄도산이 우려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 관련 인력의 추가확보에 어려움 대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발생함 |
| 정책관련 | 부품지원사업 만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편임 부품지원 사업의 참여가능 기업 규모가 애매해서 도움이 되지 않음 | | |
| | 전환 애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력이 부족하여 전환 모색 방안 강구가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으로는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데 범퍼가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부품들이 통합 |

| 구분 | 부정적 부품군 | 중립적 부품군 | 긍정적 부품군 |
|-------|--|---|---|
| 정책 니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아이টে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현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규사업 개발 인력, 자금 등 확보가 쉽지 않음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큼 (초기 투자 비용의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이 산업전환을 준비하기는 정보가 너무 부족함 부품수 감소 등의 이슈로 매출 기회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듈단위로 전환되고 있어 업종의 구분없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아이টে,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장이 필요함 신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및 지원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컨설팅과 협력으로 장기간 모니터링 및 지속관리하는 지원이 필요함 기업 간 기술개발 커뮤니티 형성 및 지원 연구개발에 필요한 교육 및 투자금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계를 리딩하는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 해야함. 현재 지원은 너무 중소기업 중심임 R&D관점에서 해외부품을 국산화 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지원이 필요함 |

3. 인천시 자동차 부품산업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1)부품사의 기존 매출 유지 이슈, 2) 전기차 전환 관련 이슈, 3) 미래 투자 관련 이슈로 그룹핑하여 정리할 수 있음.

[표 3] 정책과제 및 방향에 따른 정책제언

| 정책과제 | 정책방향 | 정책제언 |
|---------|---|---|
| 기존 매출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착륙을 위한 사업 확대 부정적 부품군의 기업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친환경차 정책 수립 중앙정부에 제언 기존 부품산업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 전기차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전환 기회의 다양화 초기비용 지원을 통한 투자 risk 축소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안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연 협력 커뮤니티 구성 초기 투자비용이 큰 시험기기 등의 공용화 기술전환센터 및 플랫폼 등의 구성 대학과 연계한 인재양성교육안 마련 |
| 미래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지원 대상 중견으로 확대 관련 기관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대화채널 확대 인천시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차 벤더와 3-4차 벤더를 연결하는 투자체계 구축 및 관련 커뮤니티 지원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에 투자를 촉진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 지역차원에서 가능한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 |

인천시 로봇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

■ 이정영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4차산업 기술의 발달로 로봇의 활용 범위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넓어졌으며, 국외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로봇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함.
- 인천은 선제적으로 지역 내 로봇 문화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07년 로봇랜드 조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으로써 투자를 확대함.
 - 2018년을 기준으로 경기, 서울 다음으로 전국 3위 수준으로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주춤했던 산업의 성장세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에 앞서 지역 내 로봇산업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산업육성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은 지난 10여 년간 미래 전략산업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였으나 지역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
- 본 연구에서는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정책을 살펴보고, 지역단위로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의 로봇산업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였음.
 - 로봇산업을 정의하고 지역별 비교를 통해 인천의 로봇산업 집적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혁신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또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기업 입장에서 인천의 로봇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 인천시 로봇산업 분석

-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로봇산업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① 공간분석, ② 혁신성과 분석, ③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함.
 - 공간분석을 통해 지역별 클러스터 발전단계를 살펴보고, 인천 기업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핫스팟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 내 산업의 공간 특성을 분석함.
 - 혁신성과분석에서는 특허출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과 수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허들음이항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정책 수요조사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인천시 로봇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사업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함.

1) 공간분석

-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발전단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대전은 2012년 이후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인천은 미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인천은 2012년~2014년까지 클러스터 형성 초기였으나 고용성장률이 저조함에 따라 2019년까지 산업 집약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음.
- 인천 기업의 공간정보를 고려한 밀도 기반 클러스터 분석 및 핫스팟 분석에서는 관내 연수구 송도동과 남동구 고잔동, 논현동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동구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용 로봇관련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수구는 서비스용 로봇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음.
- 인천 전체로는 산업집중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인천 로봇관련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중을 꾸준히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별기업 간 혁신활동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산업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혁신성과 분석

- 인천 내 기업들의 혁신성과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특허를 출원한 기업들이 업력이 길고 벤처기업이며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기업일수록 특허출원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으나 지속적인 특허 활동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오히려 지속적인 혁신성과를 높이는 데는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가 20년간 특허권자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특허권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기업은 전략적으로 특허출원 및 특허유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특허성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

3) 정책 수요조사

- 인천 내 입지를 결정하는 데 사업상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입주비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전한 업체들로,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면서 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인천으로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로봇랜드에 입주를 결정한 기업들은 로봇랜드의 제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입주하였음에도 현재 지지부진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함.
- 현재 전문인력 확보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은 대부분 공개채용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천 내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
 - 신성장산업에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중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78%이며,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73%로 매우 높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지원이나 운영자금 지원과 같은 자금조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정책제언

1)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 마련

-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로봇랜드 내 산업시설을 확충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인천 내 역량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 프로그램을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2) 지역 내 사업과 연계한 수요처 발굴

- 지자체에서 지역 내 다양한 형태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역의 제조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로봇을 활용가능한 사업을 검토하거나,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하고 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산업육성을 위한 인천 내 협력체계 강화

-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천 내 기업 간 기술교류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또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인력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연구

■ 한 준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인천 제조업에서의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가운데 제조업 업체들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파악을 비롯해 일선 업체에서의 탄소중립 관련 인식과 준비상황, 향후 대응 계획, 정부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함.
- 이에 이 연구는 인천 제조업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분석과 탄소중립 관련 인식 및 준비상황, 지원 수요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인천 제조업의 탄소중립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천지역 제조업의 탄소중립 대응 정책 수립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정책 제언

- 첫째, 1990년대 이후 인천 제조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제조업 성장 간 상대적 탈동조화가 나타나 긍정적이긴 하지만, 석유정제품제조업, 1차철강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다배출(전체 배출의 대략 60%)을 하고 있어서 이들 업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철강업의 경우 전기로 전환이나 수소환원제철법, 석유화학·정유 산업의 경우 원료 전환, 연료 전환 등의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R&D 투자가 매우 중요.
- 둘째, 인천 제조업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가 낮고, 탄소중립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인식도 낮으며, 대응 계획 수립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 대상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EU 대상 수출 업체나 국내 RE100을 선언한 대기업의 협력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수출국의 조치나 대기업으로부터의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별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임.
 - 탄소중립으로 인해 제조업이 받을 영향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중소기업 대상 탄소중립과 그로 인한 영향,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높여야 함.
 - 기존 시장이 새롭게 재편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등 시장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고, 저탄소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지 않고는 기업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주어야 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가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셋째, 지역 차원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정부는 이미 2021년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이나 저탄소 벤처스타트업 기업 육성, 탄소중립 경영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역에도 필요하고, 지역 중심의 산업 분야 탄소중립 대응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산업은 원래 중앙정부 관할 영역이지만, 목표관리제 참여 업체나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가 아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별다른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함.
 -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와 연계해 테크노파크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체계가 꾸려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저탄소 전환 및 저탄소 산업 발전 전략을 준비해야 함.
 - 탄소중립 대응 매뉴얼 제작부터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전반적인 가이드 제시가 필요.
- 넷째, IEA(2021)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에서 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화, 저탄소 에너지원 확대를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에서 보듯이, 제조업 대상 효율 개선, 전기화, 저탄소 에너지원 확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함.
-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효율 관련 제도를 보다 확대·강화하고, 기업의 K-RE100 참여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2021년 EU 의회 수정안 기준,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관련 업종) 수출 기업이나 탄소중립 이행을 선언 혹은 선언 예정인 대기업의 가치사슬에 속한 중소기업에 대한 파악을 비롯해 이들 대상 우선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들 기업이 가장 먼저 수출에 있어 타격을 받거나 대기업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임.
 - 지역 내 관련 업종 및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필요하고,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함.
- 여섯째, 지역 제조업 업체들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통계를 구축·관리하고 있지만 10인 이하 사업장(전체 중소기업 수의 1.4%)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루는 범위가 적음.
 - 이에 한국에너지공단과의 협력 하에 지역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받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관련 지원방안 수립이나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될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체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서비스(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중소기업 대상 온실가스 산정 지원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용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기(예;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등에서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등) 보급을 통해 기업이 자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일곱째, 탄소중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화된 지원이 더 필요함.
 - 탄소중립 대응 과정에서 기업 입장에서 작게는 설비교체부터 공정 개선, 품목 전환, 업종 전환 등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됨.
 - 일부 업종(예; 내연기관 자동차 감소 관련 자동차 부품 업종 등)에서는 타 분야로 품목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좌초자산까지 발생할 수도 있음.

- 탄소중립 대응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EU의 'Fit for 55'에서도 탄소중립 대응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독일의 경우 탄소차액거래계약(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CCfDs)을 통해 배출방지 비용을 중심으로 계약상 정의된 탄소가격과 현재 탄소가격의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지향 기술 투자에 대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Global Tech Korea, 2021).
 - 이처럼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취약 업종 기업의 피해에 대해 지원 검토와 준비가 필요.
- 여덟째, 대기업이 가진 탄소중립 대응 관련 노하우나 정보, 인프라를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관계를 만들고, 중소기업 간 탄소중립 대응 공동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정과 중재가 필요함.
-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개념 안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음.
 -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은 탄소중립 대응 관련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기술 정보나 노하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실정임.
 -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기서 정부의 역할과 중재가 필요.
 -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보다 확산되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중소기업 간에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해 공동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강민지, 2022).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 심진범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문제 인식 및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함. 첫째,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며 최근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인천시의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기업들의 정책 수요는 어떠한가? 셋째,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은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며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 관광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 사업 현황 및 관광기업의 정책 수요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2.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1)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 방향



2) 문제 의식 및 정책 과제 도출

- 제안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할 때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 의식은 다음과 같음.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있어 관광산업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단계를 고려하여 어떻게 종합적인 지원 구조를 갖출 것인가?
-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①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 ②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통합 지원체계 구축, ③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함.

[그림 1]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단계와 인천시 대응 과제



주 :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단계 모델은 정광민 외(2021)외에서 제시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단계 인용

3) 과제별 추진방안 제안

(1)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

- 인천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관광산업 이해관계자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성 제고 필요
 - 기존 다수의 사업은 정책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광 가치사슬 고도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계된 비전 및 인식 공유 필요
- 관광산업 생태계는 여행업, 관광숙박업과 같은 전통적 관광기업, 관광벤처 등의 다양한 시장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과 투자 유인이 상이하여 이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성 제고가 정책의 핵심 관건
 - 자체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역량이나 투자 유인이 부족한 중소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이 핵심 이슈
- 관광기업을 포함한 정책 이해관계자의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 사업 확대 및 체계적인 실태 파악 추진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제고,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혁신 사례 발굴·확산,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

[표 1]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과제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혁신 사례 발굴·확산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정례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온·오프라인 활용 하이브리드 러닝 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관광산업 업종별·유형별 혁신 사례 발굴·창출 • 인천 관광 디지털 전환 혁신 사례집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포함 인천시 관광사업체 실태조사 정례화 • 관광기업 디지털 역량 진단 지표 개발·보급 |

(2)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추진 중인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의 정비·보완을 통한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의 체계성 및 효과성 제고
 - 2020년 이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디지털 전환 컨설팅, 관련 자금 지원 등 관련 사업이 확대되어 왔으나, 시류적 성격이 강하여 정책의 방향성 정립 및 체계적 정비 필요성 대두
- 다양한 업종과 상이한 디지털 전환 단계의 관광기업으로 구성된 관광산업 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체계화를 통한 정책의 효용성 제고
 - 관광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뒤처질 경우 관광기업 간 디지털 격차 발생과 불균형 심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 가능
- 관광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 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등 인천시 관광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동하는 인천 관광 디지털 BIG-PUSH 전략¹⁾ 추진
 - 관광산업 업종별·디지털 전환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인천시 관광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인천 관광 디지털 전환 거점 육성 추진

[표 2]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

|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정비 | 인천시 관광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인천 관광 디지털 전환 거점 육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 업종별, 디지털 전환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다양한 기관에서 분화되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을 종합지원체계로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천 관광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 관광기업의 관광 데이터 니즈를 고려한 멘토링 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관광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 거점 육성 • 인천 관광 디지털 플랫폼 기능 강화 • 주요 관광공간의 디지털 전환 혁신 사업 추진 |

1) 산업통상자원부(2021.4.1.)는 업종, 주체, 지역별 전반적인 디지털전환 수준과 범위가 상이하여 일부 대기업 중심 투자로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디지털경제의 네트워크 효과,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동시에 혁신하는 디지털 BIG-PUSH 전략을 제시함.

(3)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광산업 행정기능 강화 및 정책전달체계 정비
 - 정책 초기 단계인 현재의 정책 추진체계는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 구조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도 정책적 논의 과제로 대두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영역이 확대되어온 가운데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천시 역할 확대 필요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인력 교육, 기업 지원 사업 등으로 인천시 관련 사업이 확대되어 온 가운데, 2022년 5월 新정부의 관광 분야 국정과제에 스마트관광생태계 확산과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이 포함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 확대 예상
 -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자체 역할은 관련 법률이나 국정과제 등을 통해 제도적 당위성이 강화되는 상황
-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는 관광산업 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인천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산업 행정 고도화 및 선도형 정책 구조로의 전환
 - 인천시 관광산업 행정 기능 강화, 인천관광공사의 디지털 전환 중간지원조직 기능 강화, 인천 관광 디지털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 정비

[표 3]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주요 과제

| 인천시 관광산업 행정 기능 강화 | 인천관광공사의 디지털 전환 중간지원조직 기능 강화 | 인천 관광 디지털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정비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계획 수립·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관광공사의 인천 관광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기능 강화 •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의 관련 조직 및 인적자원 보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핵심 이해관계자 융합·협업 체계 구축 • 디지털 전환 협업과제 발굴, 인천 관광 데이터 활용 등 협력사업 추진 |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화에 관한 연구: 지역별 이행여건 및 주요 정책 분석

■ 김수한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이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 산업전략에 대한 중국 국가전략 및 지역별 정책 동향 정리를 통해 인천시의 대중국 교류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하여 ①중국 중앙정부 탄소중립 전략의 형성 및 내용 ②중국 성·직할시 지방정부 14개의 탄소중립 이행 여건 및 중점 산업전략을 조사·분석함

2. 시사점 및 제언

1)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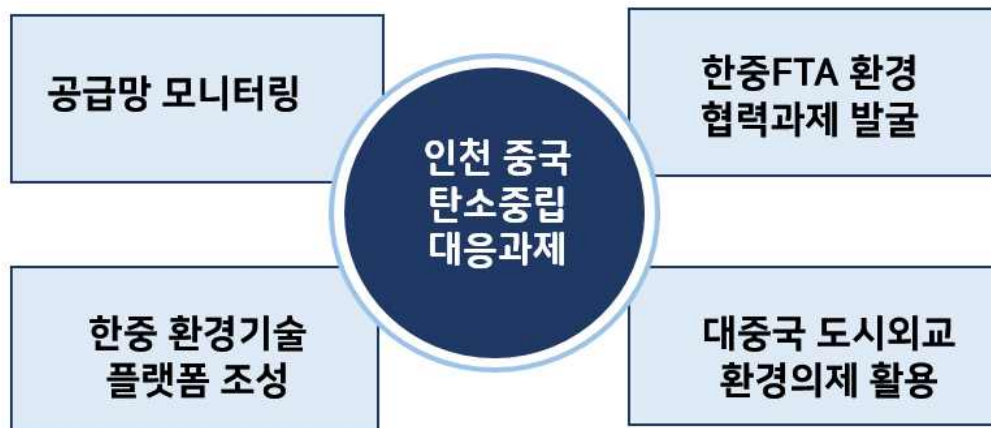
- 중국의 탄소중립 산업전략은 우리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탄소중립 산업전략으로 인한 위협요인으로는 △공급망 변화 △친환경 인증 요구 및 교역 차별 △녹색기술 유출 우려 등을 꼽을 수 있음
 - 중국의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축소, 원료와 원자재의 관리 및 교역 제한 등 조치가 더욱 확대될 것임으로 보임. 이에 따라 중요 산업 핵심 원료의 국내 공급망 구축과 수입 채널 다변화가 긴요한 과제로 대두됨
 -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친환경/저탄소 생산공정 (탄소라벨) 인증을 의무화하거나 교역차별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 한중 친환경 분야 경제산업 협력 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투자 보호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문서 등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함

- 중국 탄소중립 이행 관련 한중 간 경제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회요인 역시 포착해야 함. 한중 모두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같은 동일한 목표와 난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친환경 산업정책 분야에서 상호협력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야 함
 - 탄소배출 감축 대상업종 및 공정, 신산업 육성 전략업종 역시 유사함. 공동의 난관 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부품 조달·해외시장개척 등의 협력과제 발굴이 가능함
 - 친환경 업종은 아직 견고한 글로벌공급망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력의 여지가 있음. 수소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분야의 선진기술 표준 공동개발 추진이 가능하며, 청정에너지 설비와 건설공정 노하우 등 분야의 협력이 가능함

2) 정책제언

- 본문의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 시정부의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화 대응 과제로 ①공급망 모니터링 ②한중FTA 환경 협력과제 발굴 ③한중 환경기술 플랫폼 조성 ④인천 대중국 도시외교 환경의제 활용을 제시함

[그림 1] 인천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 관련 대응 과제



(1) 공급망 모니터링

- 2021년 발생한 요소수 사태와 같이 중국의 탄소 감축으로부터 기인한 중국발 공급망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부품의 국내 생산 및 공급 채널 다원화 등 국가 및 기업 차원의 대처방안이 대두됨

- 공급망 불안정은 지역기업 및 일반시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준비 태세 역시 필요함
-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관련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인천 산업에 있어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문제 발생 시 인천시가 갖추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국 주요 지역의 전략광물 등 부존자원 실태를 사전에 조사하여 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함

(2) 한중FTA 환경협력 과제 발굴

-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시범지인 인천의 위상을 활용하여 한중FTA 환경분야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중FTA협정은 양국 간의 관세협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역 외에도 다양한 의제를 담아낼 수 있는 개방적 형태로 구성됨. 특히 협정의 16조에서는 환경 관련 조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양자협력을 위한 협력분야 예시를 명문화하고 있음
- 인천시는 한중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제조업 난관기술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 △탄소배출권 거래시장·녹색금융시범지 조성 등을 의제로 개발하여, 매년 개최되는 한중FTA공동위원회 및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인천-웨이하이)를 통해 국정과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한중 환경기술 플랫폼 조성

- 한중FTA 환경 협력과제 발굴과 연결하여 한중 환경기술 교류플랫폼을 조성하여 추진함
- 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산업 관련 한중 간에 추진된 기술교류회 등의 성과 검토에 기초하여, △우수 환경기술의 확산 △환경 협력 프로젝트 발굴 △ 환경기술의 실증화 및 수출 등을 위한 한중 환경기술 플랫폼을 구축함

(4) 인천 대중국 도시외교 환경의제 활용

- 한국정부의 대중국 국정기조에 보조를 맞추어 인천의 대중국 도시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간 탄소중립 이행을 주요 이슈로 한 환경의제를 활용하도록 함
- 인천시는 정부의 실질 협력과제를 반영하여, 대중국 도시외교에 환경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국제평화협력담당관실과 각 부서의 전문성을 연계한 협업을 통해, 경제,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환경(미세먼지) 분야의 실질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 특히 환발해 권역 중국 지방정부와의 결연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같은 환경의제의 확산을 도모하도록 함. 인천시는 2023년 인천-톈진 자매결연 30주년을 시작으로 하여, 다롄, 칭다오, 단둥 등 환발해 권역 지방 도시와의 연이은 30주년 결연 기념을 앞두고 있음
 - 각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산업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천과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의제를 발굴하여 추진, 인천 대중국 도시외교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함

인천광역시 도시빅데이터 이슈 및 정책방향

민혁기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데이터 수집·관리·처리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도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음.
- 그렇지만 현재 주목받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정책이 과거와 어떠한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인천시 차원에서 검토하는 시도는 많지 않았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서 주목하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 정책 사례, 민간기업 정책수요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인천시 도시계획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제안하고 빅데이터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도시빅데이터 문헌 검토)** 빅데이터 관련 주요 문헌을 검토하여 빅데이터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최근 발표되는 도시빅데이터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주제와 활용 빅데이터 등 인천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사례 분석)**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수집·생성 사례, 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례, 빅데이터 활용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민간기업 정책수요 조사) 도시빅데이터 활용 기업의 빅데이터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빅데이터의 생성, 저장, 관리, 보급, 활용하는 업무에 대한 인식과 이슈,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파악함.

2. 결론

1) 인천시 도시빅데이터 이슈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천시 도시빅데이터 이슈를 도출함.
 - 이슈1. 인천시 도시빅데이터 수집·생성 확대 및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 이슈2. 인천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및 분석기능 확충
 - 이슈3. 인천시 도시빅데이터 활용 연구·정책 발굴 및 추진

[표 1] 연구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 인천시 도시빅데이터 이슈 도출

| 주요 시사점 | 주요 특징 |
|---|---|
| 도시빅데이터 문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빅데이터 활용 연구 확대 ✓ 공공 빅데이터 추가 확보 및 개방 ✓ 빅데이터와 기존 공공데이터의 연계 활용 | 최근 국내외 연구 문헌수 빠르게 증가 추세 모바일·통신데이터 기반 도시빅데이터의 유용성 높음 도시빅데이터의 공간 및 개인 속성 정보 추가 필요 |
| 도시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도시빅데이터 수집·생성 방안 마련 필요 ✓ 도시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및 분석 기능 확충 필요 ✓ 빅데이터 활용 정책 수립 및 발굴 필요 | 인천시 각 부문별 빅데이터 생성·수집 방안 부재·부족 인천 도시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개방 필요 인천시 빅데이터 활용 정책 및 스마트시티 정책 미흡 |
| 민간기업 도시빅데이터 정책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확대 및 품질 개선 필요 ✓ 공공주도 도시빅데이터 생산·확보 필요 ✓ 오프라인 빅데이터센터 설립방안 마련 필요 | 인천 플랫폼 활용도 미흡, 인천 특성 반영 데이터 확보 필요 도시빅데이터 활용기업의 기술력 증가, 공공투자 필요 인천시의 주요 사용자 특성 고려 필요 |

인천시 도시빅데이터 이슈

인천시 도시빅데이터 활용확대를 위한 주요 이슈

- ✓ 인천시 도시빅데이터 수집·생성 확대 및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 ✓ 인천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및 분석기능 확충
- ✓ 인천시 도시빅데이터 활용 연구·정책 발굴 및 추진

2) 정책방향1. 도시빅데이터 수집·생성 확대 및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 인천시 주요 교통지점부터 시작하여 최대한 많은 위치에 교통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안전 차원에서 보행량과 보행패턴을 측정하는 센서·카메라 역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민간 택시나 승용차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교통 빅데이터를 인천시가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라이다(LiDAR)와 같이 도시를 3차원으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인천시가 운영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에 유용한 도시빅데이터를 생성하고 향후 인천시 스마트도시 정책 개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하여 다양한 도시빅데이터를 수집,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정책방향2.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및 분석기능 확충

- 인천시 공공데이터의 종류와 유형을 확대하고 데이터 연계성을 높임과 동시에(고유 ID를 부여한 이종 데이터 연계, 업데이트 주기 개선 및 일치, 시공간 데이터 단위 세분화·일치화) 결측치 및 이상치를 신속하게 제거·수정하여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인천시 빅데이터 플랫폼을 민간 개방하고 도시공간 데이터를 플랫폼 안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기능을 확충해야 함.

4) 정책방향3. 도시빅데이터 활용 연구·정책 발굴 및 추진

- 빅데이터 관련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임.
- 다른 국내외 도시에서는 도시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입지를 선정하거나 재난과 범죄 등 시민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다른 도시의 정책사례를 참고하면서도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정책 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인천바이오헬스밸리 미래 전략

■ 서봉만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인천바이오헬스밸리의 성장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사업을 제안하는 것임
-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동향과 정책들을 검토하고 인천바이오헬스밸리의 미래전략 수립의 핵심 요소로서 디지털 전환의 활용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민선 8기 인천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과제임

2. 인천바이오헬스밸리 미래전략 및 정책제언

1) 인천형 시민참여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혁신 플랫폼 구축

-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소비자 맞춤형 의료 및 처방의 개발이며, 시민들은 바이오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중요한 지위를 점함
- 기존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조성 전략은 관련 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됨. 다만 그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집적과 성장이 지나는 지역 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 인천바이오헬스밸리의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향은 시민이 혁신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인천시민들이 보유한 유전체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 등을 통합한 인천시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소재 기업들이 활용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함

❖ 정책과제 : 인천시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 인천시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강원도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짐
 - 인천시민의 유전체, 의료데이터, 국민건강보험정보 등을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함
 - 인천시민에게 주요 질병 관련 위험도를 측정하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²⁾ 유전체 데이터를 기부받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민이 새롭게 개발된 정밀의료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
 - 데이터 이용에만 치중하여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미 국내에서 발생한 유출과 악용 사례들로 인한 제공자의 반발과 함께 규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반대로 데이터의 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 개발이 촉진되기 힘들며 시민들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누릴 기회를 얻지 못함
 - 최근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등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호와 이용 사이에서 중용(happy medium)의 대안에 접근해 가고 있음
-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나타낼 수 있도록 초기에 참여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플랫폼 참여자의 규모가 임계점(critical mass)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2) 인천시 소재 기업 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존재함.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유전체 데이터 기부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유전체 관련 암 발병 위험률 등 건강관리 정보)의 제공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강원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인천시는 규제자유특구가 아닌 규제샌드박스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 차별점임
-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할 경우 신청기업이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시민 대상 핵심의료 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 인천형 바이오헬스케어 산·학·연·병 협력 체계 구축

- 디지털 전환 관련 실태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산·학·연·병 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됨
-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내 분야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이 차별적이며 이를 고려할 때 분야별로 협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인천바이오헬스밸리 내 주요 산업 분야별 산·학·연·병 협의체를 구성을 지원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인천시가 지역의 핵심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함

❖ 정책과제 :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산·학·연·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산·학·연·병 협의체를 크게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로 나누어 구성함
 - 인천시는 분야별 산·학·연·병 협의체를 대상으로 협업과제 공모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인천바이오헬스밸리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음
 - 산업별 협의체 차원에서 공유 가능한 기반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코로나로 인해 중지된 ‘혁신신약살롱 송도’와 같은 분야별 소통 채널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협업 채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3) 민관 협력 기반 혁신생태계 강화

- 인천바이오헬스밸리가 위탁제조와 생산 중심 클러스터에서 향후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벤처의 육성이 중요함

- 인천시는 K-바이오 랩허브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벤처 육성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
 - 국내 바이오벤처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규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인천시는 수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없으나 민간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는 있음
- 인천시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추진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후보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인 민관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음

❖ 정책과제 : 인천형 규제샌드박스 후보 사업 발굴 및 운영

-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정,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체감하게 될 사업 관련 리스크는 부담스러운 상황임
- 인천시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추진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게 마중물 성격의 지원을 통해 소규모의 '규제샌드박스' 후보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기획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관련 컨설팅과 함께 중앙정부와 인천시 바이오벤처 간 규제 관련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도 검토할 수 있음

❖ 정책과제 : 디지털 전환 연계 민관 협력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수요 창출

- 인천시 소재 바이오헬스케어 업체가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요를 발굴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주)더좋은운동으로 사례와 같이 민간기업이 인천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확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청년친화연구단

● **단행본**

인천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추진방안

● **기획연구**

인천시 청년 참여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인천광역시 청년 노동시장 현황 및 이행요인 분석

인천시 육아친화 환경 조성 방안

인천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방안

● **정책연구**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인천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추진방안

청년친화연구단



1. 연구배경과 목적

- 중앙정부는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함
- 인천광역시도 「청년기본법」 제9조와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오고 있으나, 주요 내용이 일자리 정책에 치우침
- 기존 청년정책이 다른 생애주기 지원정책에 비해 정책 발굴 및 추진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인천시 청년들의 일자리(노동시장), 주거, 복지(육아), 문화, 참여(거버넌스) 여건과 실태를 검토하고, 인천 청년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청년정책을 제안함

2. 인천의 청년친화도시 여건 분석 종합

- 인천시의 분야별 청년친화도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도출됨
 - 청년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고용환경과 산업환경을 분석하고 인천의 청년들이 미취업자에서 취업자 등으로 이행하는 경로요인을 분석함
 - 청년 주거와 관련하여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가구와 신혼부부의 주거 수준 및 수요 특성을 진단함
 - 청년 육아와 관련하여 인천시 10개 군·구별 육아인프라의 공급 및 접근성 등 육아친화도를 분석함
 - 청년예술인과 관련하여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여건과 활동여건, 활동실태, 정책수요를 분석함
 - 청년 참여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청년참여제도를 점검하고 인천시 청년의 참여 형태를 분석함

[표 1] 인천시 청년친화도시 여건 분석 종합

| 구분 | 내용 |
|---------|---|
| 청년 노동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환경: 20대 고용율은 높으나 30대 고용율은 낮으며 실업율이 높음.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율이 높고, 낮은 임금 및 높은 근로시간이 특징 산업환경: 산업 간 격차가 크고, 공공부문의 진입·퇴출도 크며, 동일산업 내 교육수준별 임금격차가 높은 반면, 제조업의 경우 안정적 고용 유지가 가능함 이행요인: 장기 미취업자가 많고, 조기에 취업하지 못하면 장기 미취업자로 남을 확률이 크며, 업무 만족도가 높아도 타 지역에 비해 이직확률이 높음 |
| 청년 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비용: 관리비·임대료 등 주거관리비 부담 큼 주거입지: 청년은 학교 및 직장 주변, 신혼부부는 역세권 지역 주택단지 선호 주택선호: 청년은 행복주택, 신혼부부는 장기 전세임대주택 선호 주거지원: 청년은 전·월세 지원, 신혼부부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선호 |
| 청년 육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공급: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육아인프라의 절대적 공급 부족 인프라 접근: 중구, 강화군, 옹진군은 육아인프라의 접근성 부족 인프라 배치: 연수구, 서구는 육아인프라의 상대적 공급 부족 |
| 청년 예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여건: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 참여 미흡,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추진기반 미흡, 군·구별 지원격차 발생 우려 활동여건: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필요, 인천시 지원정책 실효성 점검, 문화예술 전공자 지역 활동기반 필요 활동실태: 청년예술인 경제적 여건 개선 및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 창작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 시급 정책수요: 다년도 사업 필요,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청년예술인 커뮤니티 및 협력사업 지원, 피드백 제공, 창작·연습·공연 공간 여건 개선, 창작-홍보-멘토링 통합연계 지원, 공공기관 연계사업 및 다양한 업종과의 협업사업 발굴, 예술인 지원사업 자금 편성 지원 등 다양한 수요 반영 필요 |
| 청년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참여: 선거 및 정당 참여보다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서명·시위 등의 방식으로 참여 사회참여: 시민사회조직(동창회·향우회), 동호회와 종교단체 참여율이 높은 편임 정책참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의 실질적 논의 구조와 문화·시간·공간 개선 필요 |

3. 인천 청년친화도시 정책 제안 종합

- 인천시가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존중받으며 참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의 청년친화도시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분야별 청년정책을 [표 2]와 같이 제안함
 - 청년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청년 고용환경과 산업환경 여건에 대응하고 미취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청년 주거와 관련하여 청년형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한 청년주택공급계획,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재원확보 등의 청년주거정책을 제안함

- 청년 육아와 관련하여 군·구별 육아친화도 유형에 따른 인프라 공급 확대 및 접근성 강화, 육아친화 가치 확산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청년예술인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청년예술인 교류·협력·참여 진흥을 제안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함
- 청년 참여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 확대 및 실효적 운영, 청년네트워크 전담 지원조직 구성 및 참여위원 역할 구분 운영, 접근성 고려한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제안함

[표 2] 인천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제안 종합

| 구분 | 내용 |
|---------|---|
| 청년 노동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환경: 인천시의 적극적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 필요, 일·가정 양립 친화적 환경 마련, 인천시 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필요, 니즈에 부합하는 일자리 매칭서비스 및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 대상 노동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산업환경: 노동자 직업훈련 및 기업 생산성 향상 교육 제공, 일자리와 교육프로그램 병행 및 안정적 근무 가능 노동환경 제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 인센티브 제공,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인턴십 채용, 청년 고용 개선 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 이행요인: 장기 미취업자 구직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학생 조기 취업 패키지 시행, 고졸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인천시 정주여건 개선 |
| 청년 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하철역 중심의 청년형 분양주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직주근접 청년형 분양주택, 지하철역 중심의 청년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교통편리성과 보육환경이 확보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저소득 청년 계층을 위한 지하철역 중심의 청년 행복주택·우리집 등 공급 필요 • 인천시 역세권 중심의 공간계획에 의한 청년 주택공급계획 마련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마련 자금의 이자비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인천형 청년주택 정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지원 |
| 청년 육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인프라 공급 확대 및 접근성 강화, 기존 인프라 적정 배치 필요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서구 및 미추홀구 등 타 산단에도 확대 • 육아공동체 구축: 주민주도 지역맞춤형 육아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 |
| 청년 예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지원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보완, 청년예술인 및 청년예술작품 홍보 강화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창작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확대, 창작·발표·연습 공간 확충 및 지원 • 청년예술인 교류·협력·참여 진흥: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강화,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구조 마련 |
| 청년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 확대 고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빈도·시간 확대, 환류 과정 필요 • 네트워크: 청년네트워크 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담당자 총원 필요, 참여위원 역할 구분하여 운영 제안 • 공간: 이용 접근성 고려하여 청년공간 조성, 청년 수요 부합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 활동 진흥, 공간 대관 편의성 증진 및 교류·소통 활성화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제안 |

인천시 청년 참여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정욱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인천시 청년들의 참여 정도를 분석하고, 참여제도 운영상의 개선 및 보완점을 분석하여 인천시 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인천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참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분석하고,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 등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함.
- 인천시 청년들의 지역참여 및 참여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 청년정책의 참여 분야 정책 방안을 제시함.

2. 인천시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1) 청년 참여제도

- 인천시는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의 기능은 다소 상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청년 간의 소통·교류·논의를 위한 기구라는 점은 동일함.
- 지방자치단체와 청년 간의 소통·교류·논의를 위해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형식적이고 상징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청년참여제도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된 청년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당사자인 인천시 청년,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임. 따라서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나 그 해결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청년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먼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개최빈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실의 문제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 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2회 이상은 개최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와 제주도는 연 2회 이상, 광주시는 연 3회 이상 위원회 개최를 조례로 정하고 있음. 위원회를 2회 이상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되거나 위원장의 개최 필요성 제기,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해야 함(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 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과 공무원, 전문가 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원활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 시 개최시간이 2시간 정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를 통한 청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의 정책반영 노력을 환류(Feedback)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청년네트워크

-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논의하는 조직임. 취업이나 창업, 참여, 주거, 문화 등으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인천시는 2022년부터 청년들의 참여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를 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함. 2022년 6월 현재 500여 명의 청년들이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
- 청년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예산 등이 확대된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증가한 만큼 직영이나 민간위탁 등의 운영방식과 상관없이 청년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팀을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충원할 필요가 있음.

- 청년네트워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청년네트워크에서의 논의과정을 충실히 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을 설계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체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청년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예산의 확대 없이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청년네트워크과 인천시청 담당부서 간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청년네트워크의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3단계의 거버넌스 구조(담당부서-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네트워크)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상쇄될 수도 있을 것임.
- 청년네트워크를 헌신도, 관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을 구상하는 역할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로 구분하여 운영하거나, 정책을 구상하는 역할과 제안된 정책에 공론을 제시하는 역할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청년네트워크는 지역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등 충분한 관심이나 헌신, 시간의 투자 등이 필요한 참여제도임. 관심이나 헌신도, 참여역량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위원들을 선발하거나 역할을 구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1안) 청년정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300~800명 규모의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함. 제시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100~200명의 청년들은 청년네트워크 분과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함.
 - 2안) 관심과 헌신, 역량 등을 갖춘 100~200명의 청년들은 문제점이나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청년네트워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 300~800명의 청년들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공론조사 방식의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함.

2) 위원회

-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다양성이나 민주성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음. 19~39세의 청년비율은 6.67%로 타 연령대와 비교하면 참여 정도가 낮음(김정욱·안지선, 2021).
- 다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쟁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청년들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조건 없이 높이는 것은 지양해야 함. 청년들의 의견이 과대대표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위원회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김정욱·안지선, 2021)인 만큼 전문성을 고려하며 위원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 집단의 참여비율 확대는 지양해야 함.

3) 공간

- 공동이용공간은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Kim, Jang, & Dicke, 2017)인 만큼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
- 인천시는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 참여 증진을 위해 청년센터마루를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현재 행정구역상 미추홀구, 부평구, 동구에 청년공간이 조성·운영되고 있음.
-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거주 및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은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나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군·구별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 등을 야간이나 주말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조성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확인하여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것, 기 조성된 공간은 공간 활용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 접근성과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빈집을 활용한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것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청년공간의 조성뿐만 아니라 공간 이용도의 제고와 청년의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공간에서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조성되는 공간인 만큼 청년들이 이용할 만한 동기요인이 있어야 할 것임.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청년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기타

-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청년공간의 이용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해 보임.
 - 시설 방문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공간 및 프로그램 접수뿐만 아니라 앱(Application) 또는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공간예약과 프로그램 접수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년정책의 홍보나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리나 시설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도 필요해 보임.

인천광역시 청년 노동시장 현황 및 이행요인 분석

■ 민규량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청년들의 고용 현황이 2015년 대비 2020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청년들의 일자리 이행경로 요인을 인천시 및 전국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2. 인천광역시 청년 일반 고용현황

- 인천시 청년의 경우 전국 대비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높아 경제활동인구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흐름이 남녀에 관계없이 나타나며 사회초년생인 20대에서 두드러지게 관측됨.
 - 이는 인천시 관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20대 청년이 타 시도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에 이들의 고용을 자원으로 맡겼을 때, 청년 취업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연령별 고용률에서 특히 30대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결혼, 육아 등의 이슈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인천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환경이 타 시도대비 열악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
 - 타 시도대비 30대 초반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것은 돌봄환경과 연관되어있을 확률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2015년 대비 2020년에 비정규직의 증가 비율이 전국 대비 약 2배가량 높다는 것은 인천시 청년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의미함.

- 비정규직이 증가한 연령대가 29세 이하인 것으로 볼 때, 첫 직장으로 진입 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국 평균대비 낮은 임금수준과 적은 임금 증가율, 상대적으로 긴 근로시간 등은 역외 인재 유인을 어렵게하고 역내 인재 유출의 원인이 됨.
 - 인천시의 역외인재 유인지수는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이며 역내인재 양성지수도 6위에 그치고 있음.¹⁾ 본 연구의 통계에 따르면 이는 전국 평균대비 낮은 임금수준, 긴 노동시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의 임금 증가도 중졸 이하 등 최저 임금 한계선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 증가에 따른 것이었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임금 상승폭은 전국 평균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임.
 - 향후 인재 유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개선 인센티브’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3. 인천광역시 산업별, 직종별 청년 고용 현황

- 산업별 직종별 절대적 임금격차가 클 뿐 아니라 2015년 대비 2020년에 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노동효율이 낮은 산업군에 대한 노동자 직업훈련 및 기업 생산성 향상 교육 등의 필요성을 시사함.
 - 금융 및 보험업 등 대표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사업과 비교할 때 숙박 및 음식점업 등과의 임금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임금이 낮은 산업에서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이탈하게 되고 임금이 높은 산업에서의 취업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게 되어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산업간 임금격차 감소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 교육과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모두 필요함.
 - 따라서 적절한 교육기관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 허문구(2016), 인재확보역량의 지역분포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 공공 일자리가 이직에 도움이 되는 경험적 일자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산업군 중에서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관련 산업의 임금 격차가 다방면에서 커지는 것이 관측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노동회전률 측면에서도 이들의 회전률이 매우 높아 산업군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경우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일 수 있음. 즉,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간의 경험적 일자리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 장기적으로 이러한 일자리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경험적 일자리로써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과 병행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수준별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가 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경우 산업 내 임금격차의 요인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노동회전률이 낮고 꾸준한 연봉 상승이 관측되는 것은 청년들이 해당 산업에 진입하면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됨을 의미함.
 - 제조업 부문에서의 구인난 등은 대체로 정보 비대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인턴십 지원, 청년고용 개선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기업과 청년을 적극적으로 매칭해 주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인천광역시 청년 일자리 이행요인 분석

- 미취업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장기 미취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함.
 - 매 기를 기준으로 미취업자→미취업자로 이행하는 비율이 44.4%라는 것은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인 경우에도 장기 미취업자로 남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장기 미취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기업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원스톱 취업 지원이 필요함.

-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시 연령 증가가 취업 확률을 특히 낮춘다는 점에서 인천시 청년의 조기취업 지원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함.
 - 연령 증가는 전국 공통적으로 취업 이행 확률을 낮추지만, 특히 인천시에서 그 효과가 30%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즉, 인천시 청년들은 조기 취업에 실패할 경우 장기 미취업자로 남을 확률이 타 시도보다 높음.
 - 따라서 학생에서 취업으로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기 취업 성공 패키지' 등의 정책을 시 차원에서 특히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전국 및 수도권 대비 인천시에서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의 취업자 이행 확률이 유독 높게 나타난 반면 정규직 이행에는 무차별 하다는 점을 비취볼 때, 고졸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중요한 과제임.
 -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시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자 이행 확률 증가가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것은 미취업 고졸자의 취업이행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의미함.
 - 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이행시 교육수준에 따른 확률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일단 인천시 청년이 취업한 후에는 타지역과 달리 직무 내에서 필요한 스킬을 배우고 익혀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가 많음을 의미함.
 - 따라서 고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이들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정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수월할 수 있음.

- 인천시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향후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주요한 과제임.
 - 타 직종의 경우 정규직->정규직으로의 이행 확률이 무차별한 가운데 연구 및 기술직만 유일하게 인천시에서 이행확률이 6.6%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천시에 있는 연구 및 기술직들이 수도권이나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전기(past period)의 업무 만족도가 높은 경우 이직할 확률의 감소폭이 수도권 또는 전국보다 인천시는 낮음. 즉, 업무에 만족하더라도 여전히 이직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함.
 -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인력들이 인천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인천시 육아친화 환경 조성 방안

정혜은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천시는 「청년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0~2024)」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오고 있음
-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고용정책’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점이 정책 안에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특히, 청년층(만19세-39세)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일자리 외에도 육아친화적인 환경은 청년의 정주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
- 따라서 인천시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시 군·구별 육아 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정책 대안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군·구별 육아친화도를 점검하고 육아친화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결과

1) 육아환경과 청년 정주와의 상관관계

-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 거주 기혼 청년(만 19세~만39세)의 육아환경과 청년 정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 분석 결과, 기혼 청년의 정주 의사와 1) 교육 환경 만족도와 2) 거주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존중받고 있는 정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청년 특성 및 정책 현황

- 인천시 청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집단은 만35-39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를 구성한 청년 가구 중의 51.8%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됨
 - 청년층은 가족 형성의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개인차원의 접근보다는 가족단위로 확대하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청년정책의 대부분은 일자리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복지 분야의 정책 역시 취업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지원이 대부분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맞는 삶의 질 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다방면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군·구별 청년의 연령구성, 성비 등에서도 차이를 보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 2022년 인천시 정책 중에서 육아친화와 관련한 사업을 정리한 결과, 대부분은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이 부족함

3) 인천시 군·구별 육아친화도 분석

- 강은진 외(2020)의 육아친화지표를 활용하여 인천시 군구별 육아친화도를 분석함
- 육아친화마을 구성 요소 중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분석 결과, 상대적 공급 측면에서 보육/돌봄, 보건/의료, 교통/안전 육아인프라 에서 연수구와 서구는 상대적인 공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녹지 육아인프라는 강화군·옹진군 상대적인 공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접근성 측면에서는 강화군·옹진군·중구가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 시설 공급과 함께 기존 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을 시사함
- 절대적 공급 측면에서는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3. 정책 방안

1) 육아 인프라 공급 확대

- 부족한 인프라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새롭게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육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육/교육시설의 교육 철학과 가치를 브랜드화하여 질적인 제고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임

2) 육아 인프라 접근성 강화

- 강화군, 옹진군, 증구는 인프라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청년층 부모가 육아 인프라 이용을 도울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육아택시 등)
- 또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최대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녀 출산을 앞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다각도의 정보 제공이 필요함

3) 기존 육아 인프라 적정배치

- 대상 아동대비 시설 수가 부족한 연수구와 서구에는 보육/돌봄 인프라의 상대적 공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송도와 청라국제도시 개발로 인하여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아동 인구가 증가함에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지 않으므로 상대적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
-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단계에서 보육시설 부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주기적인 아동인구 추계(동별, 연령별)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육아친화적인 가치 확산

- 청년에게 중요한 일하는 공간에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친화적인 일터 조성이 필요함

-
-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 산단개조 직장어린이집을 2023년에 남동공단에 개원 예정이며향후에도 타산단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청년층 부모가 우선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거버넌스(육아공동체) 구축

- 군·구별 인구 구성(아동 및 부모 연령) 및 돌봄관련 자원이 상이하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육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운영 철학부터 운영 시간 및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관에서 주민조직화를 담당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청년세대는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정보공유 및 소통이 익숙하므로, 다양한 소통방식(오픈채팅방, SNS 등)을 활용한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임

인천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방안

최영화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천시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정책 미흡
 - 2022년 5월 기준 인천시 등록예술인 중 청년예술인은 3,401명으로 전체 예술인 대비 55.6%에 해당하나 청년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미흡함
 - 「2021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 청년예술인은 인천시의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적으며, 인천(45.7%)보다 인천 외 지역(54.3%)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음
 - 기성예술인에 비해 경력이 부족한 청년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면서 전반적인 인천시 예술정책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정책에 치우친 청년정책 보완 필요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인천시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야 하나, 담당부서가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여서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도 일자리 정책에 치우쳐있고, 문화 분야 사업은 3건에 불과함
- 인천시 청년예술인의 현황과 활동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청년예술인들이 인천에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천시 청년예술인 지원방안

1)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 기존 지원정책이 청년예술인의 역동성과 취약성 등 특성을 반영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으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청년예술인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인천시의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의 비전을 “청년예술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인천”으로 설정함
- 인천시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복지’가 아닌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교류·협력·참여 진흥’으로 설정함
 - 인천시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6개 추진과제와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함

[표 1] 인천시 청년예술인 지원 방향 및 추진과제

| 비전 | 청년예술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인천 | |
|-----------------------|------------------------------|---|
| 추진전략 |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 |
| 1.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1-1.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청년포털 연계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인천예술인지원센터의 원스톱 정보플랫폼 구축 |
| | 1-2. 청년예술인 및 청년예술작품 홍보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청년예술인의 대내외 홍보 지원 • 지원사업 결과보고회 연계 청년예술주간 운영 |
| 2.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 2-1. 창작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확대 • 예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통합 지원 |
| | 2-2. 창작·발표·연습 공간 확충 및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섬 활용 청년예술인 창작레지던시 조성 • 발표·연습공간 연계 및 대관시스템 구축 |
| 3. 청년예술인 교류·협력·참여 진흥 | 3-1.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확대 • 기업 및 국내·외 타 도시와 교류·협업 지원 |
| | 3-2.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구조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청년예술인 정책 포럼 운영 • 인천 청년예술인회의 발족 및 협력 |

2) 정책제언

- 청년예술인 실태조사·연구 실시
 - 인천시 청년예술인 실태조사가 부재함에 따라 청년예술인 현황 및 활동 실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청년예술인 지원방안 마련에 앞서 이들의 활동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함

- 청년예술인 지원기준 개선방안 모색
 - 현재 지원체계 내에서 청년예술인에 대한 정의는 '나이'와 '지역 거주' 및 '연고'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청년예술인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예술활동에 오히려 제한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인천시의 청년예술인의 지원기준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청년예술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활동의 제약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후속 논의가 요구됨

- 군·구별 청년예술인 지원체계 강화
 - 군·구별 여건 조사 결과, 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단 유무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발생이 우려됨
 -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경우,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 등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 홍보채널과 문화시설을 활용해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초문화재단을 설립한 지자체는 지역 내 창작·연습·발표공간을 청년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의 문턱을 낮추고 자체 지원사업을 발굴·운영하며, 광역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원 기반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예술인 전담기관 인력 확대
 - 인천시의 청년예술인 지원 전담기관은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내 청년문화팀이지만, 담당인력은 팀장 포함 총 4명으로 신규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임
 - 인천시가 청년문화와 청년예술인의 지원을 강화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인천시 청년인구는 2020년 기준 28.5%로 저출산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지만, 비수도권에서의 유입으로 전국 대비 청년인구 구성비는 다소 높은 수준임
- 청년은 사회진입을 위한 독립과정에서 1인 가구 형태를 취하며, 소득불안정에 따른 재정적 한계로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의 주거문제에 직면해 있음
-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으로는 행복주택, 누구나 집, 청년주택 등 맞춤형 주택공급과 함께 전월세 보증금, 월세 등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청년계층의 수요특성을 조사하여 이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한 주거정책방향을 도출함

2. 정책제언

1) 청년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청년수요 대응을 위한 청년주거실태조사 실시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된 2022년 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는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표본수가 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청년계층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는 표본수 2,000부 이상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를 통하여 청년계층을 세부적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 청년계층 수요에 부합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주택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선호 입지 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함

❖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세부적인 청년주택 공급계획 방향

- 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인천형 청년주택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근거, 재원확보 등의 계획이 추진되어야 함
- 청년·신혼부부는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과 함께 주택 및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여 인천 원도심 지역내 청년·신혼부부의 유입·정착을 위해서는 문화시설·주차장 등의 생활SOC, 맘카페 등의 주택내 커뮤니티 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관련 사업의 연계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청년계층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일정 소득 이상의 청년가구 등 가구특성에 따라 주거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청년주택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의 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천시 역세권 특성 파악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의 지하철 관련 역은 총 83개이 있으며, 이 중에서 환승역은 10개 역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역세권 중심의 청년주택사업, 재개발사업, 복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마련이 필요함
-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공공택지개발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 역세권 특성과 연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가능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계획의 마련을 통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함
- 특히,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역세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재정 및 사업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사업가능성을 높여야 함
- 이에 역세권 주변으로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운영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사업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등의 제정이 필요함

3)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

❖ 주거복지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마련

- 주거정책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2030년 인천주거종합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례제정을 통한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거복지기금의 예산은 인천광역시 지방세 기준 매년 2% 수준(2030년 인천주거종합계획)을 확보하고, 사업업무에 청년주택 공급사업을 지정하여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인천시 주거복지정책 차원에서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등 다른 주거복지수혜자와의 형평성 유지가 가능함
- 가칭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형 청년주택의 개념정립, 청년주거유도기준, 공급사업, 재원마련 등의 내용과 함께 재원마련시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활용

- 도시정비기금은 공공지원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의 도심복합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의한 청년주택 공급시 기금 활용이 가능함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사업, 생활SOC 확보 사업 등과 연계된 청년주택 공급사업에의 활용이 가능함
-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의 재원은 적립된 재원수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활용하는 점에는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 및 주택도시기금 활용

-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은 영구임대주택 건설비의 85%, 매입임대주택 건설비의 45% 등 사업비 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국비와 연계하여 재원의 확보가 가능함

-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개량 등에 사용이 가능하여 공공시행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용 보조 및 용자, 주택구입 및 임대료 자금 용자, 월세지원 등에 활용이 가능함
 - 청년주택 공급시 건설비용의 용자, 공공지원 민간사업 추진시 공공리츠 재원 확보, 청년 임대보증금 재원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가 가능함
- 국비 및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에 의존한 사업은 중앙정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추진되어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공급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금융권 등 민간자본 활용

- 인천시 자체의 청년주거지원사업으로써 청년 주택마련자금 및 임대보증금, 월세 등의 금융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 금고로 지정된 신한은행 등과 같은 금융권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 금융대출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나 인천시 자체적인 보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개인신용보증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인천시 자체적인 보증과 인천 관내 금융권의 자금을 활용하여 인천시 재원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자금대출지원사업, 임대료 이자비 지원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함

4) 인천형 청년주택 정립,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의 후속과제 추진

- 인천형 청년주택으로 제안한 ‘지하철역 중심의 청년형 분양주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직주근접 청년형 분양주택’, ‘지하철역 중심의 청년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교통편리성과 보육환경이 확보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저소득 청년계층을 위한 지하철역 중심의 청년 행복주택·우리집’ 등은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세부적·실질적 공급을 위한 사업 설정은 후속과제로 추가적인 ‘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청년주택 공급계획에서 다루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천형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후속과제로 추가적인 ‘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실시와 이에 근거한 청년주택 공급계획,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마련 등을 추진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포용상생연구단

● 단행본

인천시 포용성 진단과 정책 제언

● 기초연구

인천 원도심 주거지 분리 특성 분석: 주택유형별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버스교통체계의 서비스 취약지역 분석

● 기획연구

인천시 계층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인천시 이주청소년의 학업생활실태와 지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및 제언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 방향 설정 연구
인천광역시 일자리 공간분포 및 직주근접성 분석
인천시 생활SOC 현황과 공급 방안: 돌봄·여가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인천시 포용성 진단과 정책 제언

포용상생연구원



1. 배경과 목적

-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국 경제가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오히려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배제, 계층·세대간 갈등, 불평등, 양극화, 소외 등의 문제가 표출되고, 공간적 분리로 나타나기도 함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속에 팬데믹 기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질서는 변화 중이며 인천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포용성 강화는 중요한 과제임

2. 지표로 본 인천시 포용성 진단

1)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조짐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시의 지니계수는 0.31에서 0.34로, 상대적 빈곤율은 16.8%에서 18.5%로 높아졌으나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며,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증가하여 노동시장 환경도 좋지 않음. 코로나19로 고용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표 1] 시도별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 구분 | 지니계수 | | | 상대적 빈곤율(%) | | |
|-------|------|------|------|------------|-------|-------|
| | 2018 | 2019 | 2020 | 2018 | 2019 | 2020 |
| 인천광역시 | 0.31 | 0.32 | 0.34 | 16.8% | 17.6% | 18.5% |
| 서울특별시 | 0.32 | 0.33 | 0.34 | 17.1% | 16.3% | 18.0% |
| 경기도 | 0.30 | 0.31 | 0.32 | 15.4% | 15.1% | 16.7% |
| 전국 | 0.33 | 0.33 | 0.35 | 18.0% | 17.9% | 19.3% |

주: 상대적 빈곤율 =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1/2 이하인 인구 / 전체 인구 × 100

자료: 질병관리청,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참고하여 분석

2) 지표로 본 인천시의 포용성 수준

- 2020년이 되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부 경제 관련 지표와 분배 지표가 조금씩 악화됨. 장기적인 추이 비교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로 추정
- 일부 언론의 주관적인 조사²⁾에 의하면, 인천시의 삶의 수준이나 이미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경향이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하였을 때 여타 지역에 비해 뛰어나지도 않은 한편,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양호한 수준을 보여줌
- 주택가격이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률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정착하기 좋은 편임.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타 시도보다 낮은 편으로 공공에서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타 지역에 대해 높은 편은 아님
- 즉, 주택시장이나 경제환경 등 민간 시장 영역으로 볼 때 인천시 환경이 서민들이 정착하기 좋지만, 상대적으로 공공에서 지원은 취약한 편이라 할 수 있음

3. 인천시 균형발전을 통한 포용성 강화방안

1) 지역특성에 따른 주거지 관리 및 주택공급 방안

-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고 제시
-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선택 기회 확대
- 주민조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

2) 머니투데이, 2021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www.mt.co.kr/ksi)

- 단독주택지에 대한 정비·관리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과 종합적 지원

2)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방향 전환

- 공간개선정책과 사회경제적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전면철거 정비방식과 점진적 개선방식 등의 공간개선정책은 지역 특성에 따라 최적의 정책수단 활용
- 도시정비사업 가능 지역에서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등 행정지원체계 강화,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생활권계획 활용,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기준 마련, 주거환경관리지표와 밀도기준에 기반한 관리 필요
- 도시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은 낮은 지역이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집수리지원정책 확대,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 지역공동체와 주민역량 강화로 점진적 개량 정책 추진
- 거주 위험과 불안요소가 많은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공공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 등 공적 지원기능 강화와 공공재원 확대 운용

3) 직주근접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환경의 포용성 강화

-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생활권에는 임대주택 위주로 인근 생활권 근로자의 거주수요까지 고려한 주택공급계획 수립. 해당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가구에 우선 분양하는 주택청약제 확대
- 주택 대비 일자리가 부족한 생활권에 주택보다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공급
- 일자리를 철도역세권 중심에 집중시키는 압축도시개발 일자리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구축 등 기반시설 투자
- 생활권마다 일자리 계획과 주거계획을 함께 검토

4) 버스서비스 취약지역 관리 방안

- 뚜렷한 대중교통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개선이 시급한 서비스 요소를 식별하여 계획지표를 정비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서비스 취약지역은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식별 방안 마련 필요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 공급방안

- 생산기반시설을 의미하는 SOC개념을 확장하여 생활SOC를 강조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성장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주목하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과 궤를 같이함
- 2019~2022년 동안 정부가 주도한 생활SOC복합사업 일단락되어 인천시 자체적으로 생활SOC 체계적 공급을 위한 조직과 계획 필요
- 시설공급을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 마련이 큰 관건임. 재정비사업, 재생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 역세권 개발이나 사전협상제도,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생활SOC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계
- 생활SOC 복합화는 시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시설 간 시너지 효과 발휘
-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설치 등 국가보조금 제외사업과 운영비용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 필요

4. 취약계층 지원 기반 강화를 통한 포용성 강화

1) 계층별 주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인천시 저소득 청년과 노인 계층의 월세, 이사비 등 주거비 부담이 높아 이들 계층에 대한 임대료 및 이사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등 입주자격부여 등 지원 강화
- 주거복지서비스 정보의 계층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오프라인(off-line) 형태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강화. 그 중 주거복지센터는 역할 강화 중요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소득계층 수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균형적 공급 필요

2)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는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의 개발을 의뢰하고, 2022년부터 공모사업으로 3개 자치구에서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 중임
-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시범사업에서 모든 군구에서 정규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의 역할 및 군구와 관계의 정립하고,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실시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방안을 명확화해야 함

3) 이주청소년 교육 지원 방안

- 자립역량 강화 및 취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자치활동, 참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이주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성을 함양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함
- 체계적인 수준별 한국어학습 기회를 제공, 모국어 전공 대학생멘토링을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강화 지원 등 언어적 지원 강화하여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이중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전문적인 심리 및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 자치 및 교류활동 지원, 학무모 상담 및 코칭 지원 등 심리적 정서적 지원 강화
- 체류연장을 위한 출결지원제도, 이중언어상담사 양성 및 상근배치, 한누리학교 재구조화, 인천글로벌청소년센터 설립 등 제도적 포용기반 강화

인천 원도심 주거지 분리 특성 분석: 주택유형별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 조상운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개인의 주거지 선택은 소득, 신분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심화되어 양극화가 나타나는 경우 특정 집단끼리의 이해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타 집단에 대한 배타적 행위로 나타나게 됨
- 특히 원도심에서는 사업성이 좋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전통 주거지와 공간적으로 양극화 또는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주거지 분리에 따른 공간적 양극화 현상은 아파트 위주의 주택정책의 불균등한 시행의 결과이자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을 완화하고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인천시 원도심 내 주택유형의 공간적 분포와 이에 따른 주택 및 가구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원도심의 주거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 주택 임대료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유형별 주거지 분리 수준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봄. 이를 토대로 주거지 분리에 따른 주거 공간의 양극화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여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인천 원도심 주거지 분리 특성 진단

1) 주택임대료 수준별 주택의 균등분포 판단 결과

- 인천시 원도심 전반적으로 높은 임대료 주택의 상이지수가 낮은 임대료 주택의 상이지수보다 주거지 분리 수준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심각하게 분리가 나타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구별로 살펴보면 높은 임대료 주택의 경우 8개 구 중 5개 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낮은 임대료는 4개 구(중구, 동구, 연수구, 서구)에서 상이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구 내 행정동별로 주거지 분리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0년 현재 높은 임대료 기준 주거지 분리 정도가 강한 구는 중구, 동구, 서구 순이며, 낮은 임대료 기준 주거지 분리가 강한 곳은 서구, 연수구, 동구 순으로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해당 구 내에서 일부 행정동에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는 높은 임대료 주택과 낮은 임대료 주택의 주거지 분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주택임대료 수준 주택의 군집도 변화 분석 결과

-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전역적 공간자기상관 분석(Global Moran's I) 결과, 2011년과 2020년 모두 높은 임대료와 낮은 임대료의 단독주택 통계량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단독주택이 특정지역에 군집되는 경향이 높다는 의미로 주거지 분리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또한,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의 낮은 임대료 주택의 통계량이 상대적으로 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낮은 임대료의 주택이 밀집되어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경향이 개선되지 않고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들 지역에 대한 공공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높은 임대료 주택을 중심으로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Local Moran's I, Getis-Ord G_i^*)을 실시한 결과, 2011년은 HH지역과 핫스팟은 서울과 부천에 인접한 부평구 일대 및 계산택지 지구를 중심으로 인천시 동측 경계부에 남북방향으로 2022년에는 2011년 HH지역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검단신도시 등 신규 개발지역과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추진된 인천시청 일대에 새로운 핫스팟을 형성함. 이는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높은 임대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함

-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주택이 약한 지역의 군집을 나타내는 LL지역과 콜드스팟은 2011년에는 중구 일대와 서구의 경인고속도로 변 두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0년에는 동구로 범위가 확대되고 서구 가정동, 석남동 일대가 제외되어 내항 및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권역을 형성함. 이 지역들은 대부분 노후저층주거지이며 공간적으로 공업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러한 입지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3) 주거지분리 수준과 근린환경 특성과의 관계 분석 결과

- 주택임대료 수준에 따른 주거지 분리와 근린환경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상관분석 결과, 높은 임대료 주택이 군집해 있는 지역의 근린환경 특성은 주택측면에서는 노후주택 비율이 낮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청장년인구 및 친족가구비율이 높은 지역임. 또한, 생활편의 및 교육복지문화 측면에서는 쇼핑시설, 외식시설, 학원수, 문화체육시설수가 많은 지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반대로 낮은 임대료 주택이 군집해 있는 지역은 사업체종사자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생활편의 측면에서는 쇼핑시설 및 외식시설 수가 적고, 교육복지문화시설은 학원수와 문화체육시설이 적은 특성이 있음
- 결과적으로 높은 임대료와 낮은 임대료 주택의 군집의 정도는 대별되는 근린환경을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높은 임대료 수준의 주택이 군집되는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노후주택이 적고 젊은 층의 인구가 생활편의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음
- 회귀분석 결과, 높은 임대료 주택의 군집특성을 잘 설명하는 근린환경의 변수는 노후주택비율이 적고, 인구밀도가 높은 대규모아파트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군집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반대로 낮은 임대료 주택의 군집은 쇼핑시설이 부족하거나 사업체종사자비율이 높은 사업체가 많은 지역에 주로 모이는 경향을 보임. 특히 친족 관계가 없는 독립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사회복지시설당 이용인구수가 많아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몇 가지 시사할 만한 지표에서 특징을 보임. 먼저, 사업체종사자수 비율은 높은 임대료와 낮은 임대료의 군집정도를 동시에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이는 주로 공업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즉, 제조업 등 공장밀집지역 주변에서는 낮은 임대료 주택이 군집되는 경향이 강하고 반대의 지역은 높은 임대료 주택이 군집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 주변의 주거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다음은 대규모아파트단지수로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지역일수록 임대료 수준이 높고, 적은 지역일수록 낮은 임대료 수준이라는 것임. 이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료 수준의 상승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규모아파트단지는 주거지 분리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 생활편의 및 교육문화시설등 생활환경 측면으로, 쇼핑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이 충분히 공급된 지역으로 높은 임대료의 주택이 군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낮은 임대료 주택이 군집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이에 생활SOC 등 기반 및 공공시설의 확충은 주거지 분리를 완화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주거지 분리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소득에 따른 주거선택에 대한 격차가 심화되어 공간적 양극화가 더욱 진행되는 경우, 이는 계층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연구결과,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은 원도심 내부에서도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규명됨. 특히 정비사업이 사업성이 좋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추진되면서 추진여건이 어렵고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는 공간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종합적 주거지 관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특히 원도심내 많은 주거지가 아파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계층 또는 지역간의 주거지분리에 따른 공간적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어 지역격차가 증가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열악한 주거지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노후 주거지의 관리정비에 있어 민간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공차원에서 주거지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 심층분석하여 주거지별 맞춤형 주거지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차원에서 주거지분리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지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인천광역시 버스교통체계의 서비스 취약지역 분석

정동재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배경과 목적

-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미성년자, 고령자와 같이 개인교통수단 운전이 어려운 계층과 소득수준이 낮아 자가용을 보유하기 어려운 계층의 주요 교통수단임. 따라서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교통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서비스 수준 관리가 필수적임.
- 그런데 교통수요를 비롯한 교통 여건의 변화 속에서 버스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지역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그로 인해 야기되는 버스 이용에 대한 배제를 최소로 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한 이동기회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을 진단 및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됨.
- 한편 버스의 역할은 대중교통으로서 대량수송하는 역할과 공공교통으로서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할이므로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도 버스의 두 역할을 고려하여 진단 및 관리를 해야 함.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및 권역을 분석하고자 함. 이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를 고려하여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을 진단하고자 함.
 - 첫째, 버스의 대량수송과 공공교통 두 역할 측면에서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을 진단함.
 - 둘째,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까지 고려하여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적, 질적 서비스 취약지역을 진단함.
 - 셋째, 국내 대표연구에서 적용된 두 공급 지표, 정류장 커버리지와 운행횟수 외에 인천시 지역특성과 버스체계의 특징이 고려된 지표를 추가 활용함.
 - 넷째, 지역별 버스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반영하되 서비스 취약지역을 진단하는 기준은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방식으로 설정함.
 - 다섯째, 어느 지역의 서비스 취약성은 그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서비스 취약성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버스 서비스 취약성이 높은 특정 지역을 식별하는 것 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서비스 취약성 성질을 갖는 취약권역도 식별함.

2. 인천시 버스체계 현황 분석

- 이 장에서는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의 발생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인천시 지역 특성을 살펴봄. 또한 버스체계의 두 요소이자 서비스 취약지역의 결정요인인 버스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현황을 검토함.
- 이를 통해 크게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인천시의 용도지역, 지목별 토지이용, 교통망 및 지형 여건 등에 관한 일반 현황은 버스 서비스 공급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서비스 취약지역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둘째,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은 2개 군, 8개 구로 구성되고 행정군 및 구는 다시 1개 읍, 19개 면, 135개 행정동으로 세분되며,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분석의 평가 단위는 현재 버스 서비스 수준, 데이터 확보 가능성, 평가지표간 비교를 위한 집계단위의 일관성, 관련정책 추진 주체 및 관할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
 - 셋째, 인천시 버스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이러한 수요 분포에 비례해 공급이 충족되지 않으면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이 될 수 있으므로 수요에 대한 검토가 중요함.
 - 넷째, 수요관련 지표 중에서 유동인구와 승하차 인원 지표는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분석에 적용하거나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인천시 버스 공급관련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인천시 버스 서비스 수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인천시 내에서는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도서, 산간 지역이 비교적 많이 포함돼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겠으나 이는 서비스 취약지역 진단 및 관리가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임.

3. 인천시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분석

- 인천시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진단을 위한 수요지표 10개와 공급지표 8개를 선정함. 또한 인천시 행정동을 대상으로 총 45개 측면의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을 진단하고, 수요와 공급 지표의 특성에 따라 대량수송 역할 측면에서의 양적 또는 질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지역 및 권역,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의 양적 또는 질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지역 및 권역을 식별함.

- 연구 결과 총 45개 측면의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및 취약권역 진단 결과에서 남동구와 계양구가 총 40개 측면에서 버스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 비중이 높고, 이어서 서구 32개, 부평구 28개, 영종도 26개 순으로 높음.
 - 대량수송 역할 측면에서의 서비스 취약지역 진단 결과로는 계양구가 17개 측면에서, 이어서 남동구 16개, 서구 13개, 부평구 11개, 영종도와 옹진군 10개 측면에서 서비스 취약지역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의 서비스 취약지역 진단 결과로는 남동구가 24개 측면에서, 이어서 계양구 23개, 서구 19개, 부평구 17개, 영종도 16개 측면에서 서비스 취약지역 비중이 높게 평가됨.
 - 한편 계양구, 부평구, 서구는 서비스 취약권역이 두 개 이상의 구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진단 결과가 다수 나타나 권역 단위의 서비스 개선이 요구됨.
- 인천시 버스 체계의 서비스 수준이 대량수송 역할 측면과 공공교통 역할 측면 중에서 무엇이 더 취약한지와 앞으로 정책 대응방향에 관한 두 가지 시사점이 도출됨.
 - 첫째, 인천시 버스체계는 전반적으로 대량수송 역할 측면보다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 서비스 취약지역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버스의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의 서비스 수준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함.
 - 둘째, 버스의 대량수송 역할 측면에서의 서비스 취약지역과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의 서비스 취약지역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대량수송 역할 측면의 서비스를 개선하면 동시에 공공교통 역할 측면의 서비스 수준도 일정 수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예산과 민원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대량수송 역할 측면의 서비스 개선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점차 공공교통 역할 측면의 서비스 개선 정책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임.

4. 결론

- 이 연구는 기존 방법론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인천시에 적용해 봄으로써 서비스 취약지역 진단 방법론의 학술적, 정책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축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또한 인천시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과 취약권역을 여러 지표로 진단하여 그 지표의 특성 또는 분류방식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지역격차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정책 개발 및 목표설정 에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버스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지역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남동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 영종도(중구)에 대해 서비스 개선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를 높이면 정책 효율성이 높을 것임. 특히 버스의 대량수송 역할 측면에서는 계양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영종도(중구) 순으로,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는 남동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 영종도 순으로 서비스 개선이 정책이 요구됨. 한편 계양구, 부평구, 서구는 서비스 취약권역이 두 개 이상의 구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진단 결과가 다수 나타나 관할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권역 단위의 서비스 개선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버스 서비스 수준 개선과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관리 및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그런데 정책 방안들이 지엽적, 산발적, 단발적 정책으로 추진되어 실효성 없이 자원 낭비만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표 1]과 같이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단기, 중장기적 방안을 제언함.

[표 1]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단기, 중장기적 방안

| 구분 |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해소 방안 | 세부 추진방안 |
|-----|---|---|
| 단기 | 대중교통 정책목표와 계획지표 정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비스 취약지역 해소 지표를 대중교통 계획지표에 포함하고 목표치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취약지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의 시내버스 체계에서 중요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서비스 품질요소 식별 •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품질요소에 대하여 단계적인 개선 목표와 계획지표 설정 • 지방대중교통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계획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등 계획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 버스 서비스 개선 정책방향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의존 이용자의 이동권과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의 서비스 수준 개선 강조 • 예산과 민원 등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대량수송 역할 측면의 서비스 개선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점차 공공교통 역할 측면의 서비스 개선 정책으로 확장 |
| |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진단방안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연구의 3장 3절 및 5장 평가방법론 참조 |
| 중장기 | 준공영제 개편을 통한 서비스 확대 여력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적으로는 현행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되, 재정지원 합리성(인센티브) 강화 • 장기적으로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로 점진적으로 전환 추진 |

인천시 계층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개요

- 2010년 이후 주택재고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지역별 주택보급율 격차, 계층별 주택소유 및 주거수준 격차 등의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주거격차의 확대는 중산층의 소멸을 의미하며, 주거부문에서는 주거양극화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의미는 주택자산과 주거서비스 수준의 격차 및 확대로 볼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포용도시 측면에서 주거부문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소득별, 계층별 주거격차 및 양극화분석에 따른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20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계층별 주택자산 및 주거서비스의 격차분석과 주거지표를 통한 계층별 주거격차 분석을 시계열적으로 실시하여 주거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2. 계층별 주거격차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1) 주거격차완화를 위한 주거서비스 정책방향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인천시의 저소득 청년과 노인계층의 월세, 이사비 등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에 대한 주거격차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함

- 지원방안으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임대 거주자의 월임대료의 70~80% 수준 지원,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부여 등을 통해 주거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저소득 청년 및 노인계층을 위한 이사비 지원은 대상을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가구와 노인가구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계층별 주거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함
- 이사비 지원방안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임대 거주자의 이사비 50% 수준 지원, 1회성 지원보다는 임대기간 4년(2년+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주거복지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분양 및 임대주택 정보, 임대료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모든 주거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에 대하여 장년층, 노년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 용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계층특성에 따른 주거복지서비스정보의 계층간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과 같은 오프라인(Off-Line) 형태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제공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유도해야 함
- 찾아가는 서비스 등과 같은 오프라인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거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양성되어야 함
-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편화해야 함
- 주거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함
-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민간단체는 시민단체, 집수리자활공동체·민간주거복지센터·쪽방상담소·사회복지단체 등의 활동단체 등이며, 이외에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H, 지방공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자원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이 필요함

2)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방향

❖ 지역별 소득 및 가구특성에 부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인천시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의 기성시가지와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신시가지간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이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
- 최저소득 계층을 위해 임대료가 매우 낮은 영구임대주택 등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군·구별 지역거주제한 등에 의해 지역별 균형적 공급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급비율이 낮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등의 지역에 우선 공급하여 지역별 최저 주거가 가능토록 적정 배분이 필요함
- 청년가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가능한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여 대학생형, 신혼부부형, 사회초년생형, 고소득 청년형 등 세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함
- 강화군과 옹진군 등 농어촌 도서지역과 같은 지역은 노인가구비율이 높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형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함

❖ 계층별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격차가 높은 계층은 저소득 청년과 노인, 중장년 계층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통해 주거격차 완화가 이루어져야 함
-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저소득 청년계층을 위한 청년형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필요함
 - 청년형 공공임대주택은 카페,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유공간이 확보되고, 주거전용면적은 수요가 높은 60㎡ 이하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함
 - 청년형 공공임대주택의 인천시 차별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 가구·가전 등 빌트인 제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천형 청년주택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신혼부부는 보육시설이 확보된 장기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선호하여 인천시 신혼부부형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맘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등이 확보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자녀 양육을 위해 주거전용면적의 수요가 높은 85㎡ 이하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장기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유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적절함
- 노인가구는 관리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관리비가 낮은 유형인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유형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노인형 공공임대주택의 차별화를 위한 주거복지 및 의료서비스 연계, 시설공급 등은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급하여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노인형 공공임대주택은 노령화 수준이 높은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의 지역에 우선 공급하여 노인가구의 주거안정화를 도모해야 함

3) 주택자산격차 완화 방향

❖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 중앙정부의 주택구입 자금대출이 가능한 일정한 소득 이상의 청년, 중장년층은 기존 정책을 이용하고 인천시 차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중앙정부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저소득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함
- 지원방안으로는 무주택자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최대 연 3.00% 이내, 대출금 주택가격의 80% 이내 최대 2.5억 원 이내에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구입시 지원토록 유도함
- 인천시 차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정책을 위해서는 자체 보증, 인천관내 금융기관 등과 연계한 재원마련 등이 확보되어야 함
- 저소득 청년 및 중장년계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비 지원으로 계층간 형평성을 확보함
- 지원방안은 중앙정부의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저소득 청년 및 중장년계층을 대상으로 이자비의 50% 수준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월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금액과 유사한 수준인 월 20만 원 이내로 책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원기간은 5년 단위로 하여 인천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저소득 계층의 소유권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

- 주택구입 금융부담이 낮고 처분이익이 공유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자의 자가주택보유로 주택으로 발생하는 자산격차를 완화할 수 있음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인천형 공공주택의 개념 정립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LH,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업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마련해야 함
- 자가보유가 가능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소유를 확대하여 주택자산에 의한 계층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이 선호하는 공공주택(2022년 인천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으로 역세권, 보육 및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내 공급하여 청년계층의 자가소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택 공급자 및 보유자의 과세제도 활용

- 저소득계층의 주택구입이 가능한 저렴한 민간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주택공급자에 대한 저렴한 택지 제공,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택의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민간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5년 또는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등은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유도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대하여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건설임대용 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감면을 통해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여 인천시 차원에서 소득별·계층별 차별적 적용을 통해 세제의 재분배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택자산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음
- 무주택 저소득계층 청년, 중장년층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택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자가주택구입 가능성을 향상시켜 주택자산형성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구입시, 1가구 다주택 가구, 고소득계층의 주택구입시에는 현행대로 1~12%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무주택 저소득계층,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면세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재분배 효과를 통한 주택자산격차 완화를 유도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는 세제에 의한 부의 재분배를 통한 자산격차를 완화하여 조세형평성 및 국가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주택수가 아닌 자산 가격 기준 정비하여 재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천시 차원의 접근보다는 중앙정부의 세금정책에 건의하여 추진해야 함

인천시 이주청소년의 학업생활실태와 지원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고교생을 중심으로

■ 배은주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가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달리,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국내출생보다는 중도입국한 자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여러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음
- 인천의 경우에도 외국인가정 자녀수가 2013년 295명에서 2021년 2,863명으로 증가하면서 중·고교생도 75명에서 84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교생의 증가율이 약 1,100%로 매우 높은 실정이며, 더욱이 외국인가정 자녀들 중 중도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고교 시기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에게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가정 자녀들 중 일반 한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가정 중·고교 청소년을 사례로 그들의 학업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단,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인 면담조사에 의존하였고 연구참여자가 7명으로 제한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인천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계 고려인 동포 출신 중·고교생들의 학업생활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선정된 연구참여자가 대표성을 띠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하지만, 연구참여자가 선정에 의도성을 가지지 않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으며, 면담조사를 통해 외국인가정 청소년들의 학업생활 현실(realities)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임을 감안해야 함

2. 인천시 이주청소년 교육지원방안

1) 기본 방향: “불리하지 않게”

- 외국인가정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의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적어도 “불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가능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
- 이주청소년이기에 불리한 점은 언어적 소통 부족으로 인한 것과 여권 및 비자 갱신으로 인한 출결문제, 진학과 취업에서의 취약점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

2) 지원방안

(1) 언어적 지원

❖ 체계적인 수준별 한국어학습 기회 제공

- 이주청소년이 재학하는 학교에서는 이주청소년이 재학하는 기간 동안 수요조사를 통해 한국어학급을 수준별로 충분히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학교급별 학업수행에 적절한 한국어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수준별로 체계적인 한국어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맞춤형 한국어학급 운영

- 학교에 개설되어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의 경우 한국어 습득을 위한 것이므로 되도록 본학급의 국어수업과 겹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학생 개별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어학급 수 증대 및 한국어강사 증원 등이 필요함

❖ 러시아어 전공 대학생멘토링 지원

- 이주청소년을 위하여 대학생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는데, 되도록 원활한 언어 소통을 위하여 이주청소년의 모국어 소통이 가능한 동일 언어 전공 대학생(유학생 포함)과의 멘토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동일언어권 유학생과의 멘토링은 원활한 소통뿐만 아니라 이주

경험과 동일문화권 공유 등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모국어 능력 유지 및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이중언어 역량 강화

- 이주청소년들의 경우 이중언어능력이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어학습과 더불어 모국어 학습을 통해 이중언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준별 모국어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연령대 발달에 맞게 모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심리 및 정서 지원

❖ 전문적인 심리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

- 이주청소년들은 이주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소통되지 않는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 잘 알지 못하는 언어로 따라가야 하는 학습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 알 수 없는 미래설계에 대한 불안과 우울 등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어려운 가정환경까지 더해져 더 힘든 생활을 견뎌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이주청소년의 경우 원활한 학업수행과 진로진학 그리고 현실적인 미래 설계 등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진로진학 상담이 필요함

❖ 자치 및 교류 활동 지원

- 이주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에 이주청소년을 필수로 참여시키며 일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한국인 청소년과 함께 교류, 협력,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함
- 이주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학급이나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자치활동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를 지지, 권유하는 학급 및 학교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

❖ 학부모 상담 및 코칭 지원

- 사춘기에 있는 이주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돕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통역을 지원하여 한국의 학교제도와 종류, 진학, 진로, 자녀양육, 학부모의 역할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코칭, 상담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3) 포용기반 강화

❖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홍보 활성화

- 이주청소년을 대하는 학교의 분위기와 교사의 태도 등에 따라 이주청소년의 학업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교사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모두에게 다문화감수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 홍보 및 캠페인 등이 필요함
- 다문화이해교육을 넘어서 다문화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연수를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주경험으로 인한 이주청소년의 심리적·문화적 충격과 불안, 언어적 소통능력의 한계 등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그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체류연장을 위한 출결지원제도

- 이주청소년들 중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여권이나 비자 연장을 위하여 본국에 필수적으로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학교 수업에 결석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외국인가정 중도입국 이주청소년들만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체류자격 관련 본국 방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장기적으로는 교육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미인정 결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주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금 지원이 운영되고 있고 구비 서류 요건도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주청소년 대상의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고, 또 장학금 제도 요건 개선에 대하여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주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부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가정 자녀도 포함하도록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중언어상담사 양성 및 상근배치

- 장기적으로는 이중언어상담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중언어가 가능한 사람이 상담을 전공함으로써 이주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상담한다면 언어소통의 한계 극복, 이주배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주청소년의 모델링이자 미래 일자리 등의 효과를 보일 수 있음
- 이중언어상담사가 양성되기 시작하면, 이주청소년이 많은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직으로 배치한다면 상담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임

❖ 한누리학교 재구조화

- 일부 이주청소년에게는 위탁 다문화대안학교인 한누리학교가 오히려 모국어 집단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어학습 효과를 기대만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한누리학교가 그 목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운영방식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함

❖ 인천글로벌청소년센터 설립

-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이 많은 경기, 서울 등에서는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학생의 비율이 서울, 경기 지역보다 더 높고 향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에게 언어, 학습, 진로상담, 자치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및 제언

■ 이왕기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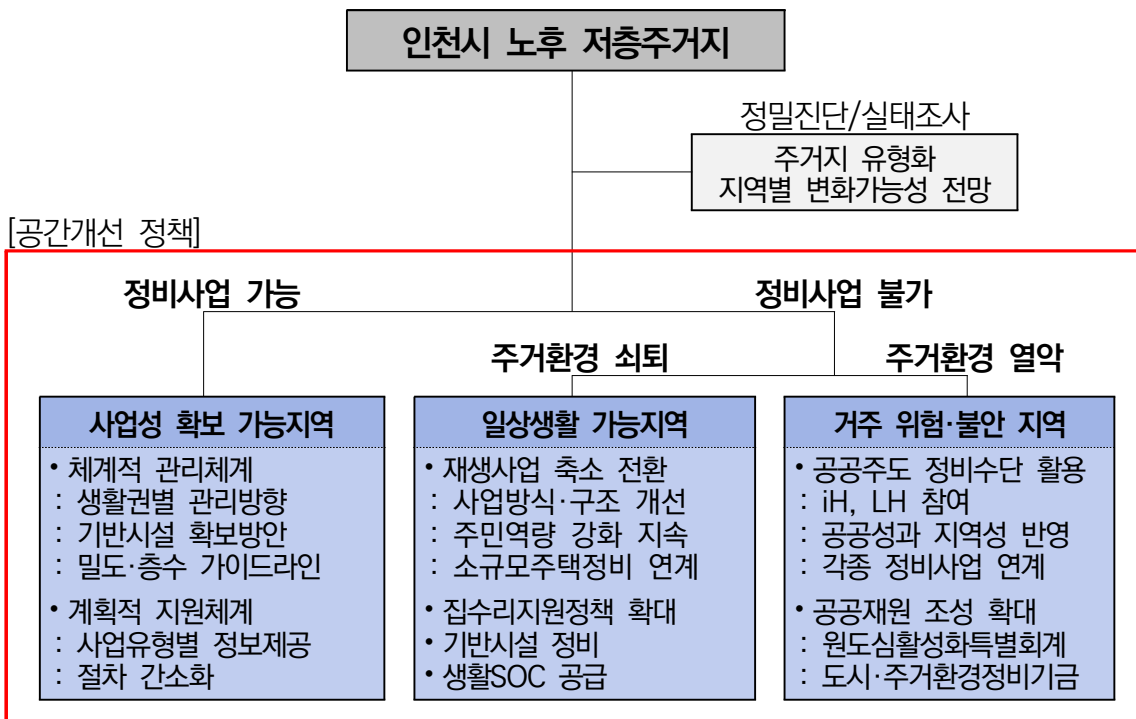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기성시가지 노후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전통적인 저층주거지 관리수단인 도시정비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과 함께 주거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도시 내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병행함
- 사업성에 의존한 도시정비사업은 고층·고밀의 주택건설, 기반시설 공급 부족,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 난개발이 발생하였고, 2010년대 전후로 부동산시장 정체와 맞물려서 도시정비사업의 부진과 해제 요구가 증가하였음. 이는 점진적 개량방식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정책전환이 일어나는 계기로 작용함
- 인천시는 자체사업으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21개소, 더불어마을사업 25개소 등 총 46개 구역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발적인 주택정비 저조,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 등의 한계가 지적됨. 이러한 시점에서 인천시는 2022년 선정구역을 마지막으로 더불어마을사업 추가 지정을 중단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서, 중단 이후 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의 방향 재정립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원칙과 방향, 기존 관리정책의 개선 및 활용방안, 신규 정책의 발굴 필요성 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전환 방향

1)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기본구조

- 저층주거지의 쇠퇴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간개선 정책과 함께 사회경제적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공간개선 정책 운영방식에 중점을 두고 검토함
- 공간개선정책은 전면철거 정비방식과 점진적 개선방식을 지역 상황과 특성에 따라 운영해야 함. 즉, 전면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점진적 개량을 목표로 지역공동체 및 지역 고유자산에 기반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방식은 공존이 불가피함
- 공공의 역할은 적용 가능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과 비교 가능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각 정책수단에 맞게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

[그림 1]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기본구조



+

[사회경제 정책]

- 원도심 가치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 전반의 정책 지속 추진
 -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환경개선, 도시철도 연계기능 강화
 - 내항, 공장 이전지, GTX역세권 등 거점기능 강화를 통한 일자리·유동인구 창출
 -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교육·문화·환경 등 분야별 도시기능 개선

2) 도시정비사업 지원체계 강화와 체계적 관리

- 사업성 확보가 중요한 도시정비사업은 개발밀도와 층수 등의 규제사항을 완화하거나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민간 스스로 정비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되, 사업구역 자체의 쾌적한 개발은 물론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공의 계획적 관리체계가 필요함
- 도시정비사업의 지원체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정비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 운영 사례와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인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인천시에 서로 연계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22년 말까지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천시 차원의 준비가 요구됨
- 체계적 관리방안에는 장소 단위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종합 관리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생활권계획을 활용함. 주거생활권계획에서 생활권 내 정비사업 실행지침, 생활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하도록 재수립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선정과 사업계획승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의 수립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음. 또한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환경관리지표와 용적률 체계를 활용하여 밀도기준에 기반한 체계적인 정비사업 관리가 가능함

[표 1]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정책지원 및 관리 방향

| 지원체계 강화 | + |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처리 지원체계 구축 • 정부정책과 연계한 민간사업 적극 지원 • 전담 지원부서 운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기준 마련 • 주거환경관리지표와 밀도기준에 기반한 관리 |

3) 점진적 개량정책 개선

-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부분적 환경개선을 통한 거주가 가능한 저층주거지에서는 점진적 개량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함
- 집수리지원정책을 확대함에 있어서 인천시 집수리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체계적 정책 운용을 위해서 「(가칭)인천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며,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와 연계하여 노후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민간의 정비사업 참여는 어렵지만, 거주가능한 저층주거지에서는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신설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함. 기반시설은 행정동 단위의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을 통해 요청하고, 기반시설의 정기적인 이용실태 파악과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토대로 시설을 공급하도록 계획함
- 더 이상 추가지정 없이 종료되는 더불어마을사업은 주민참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회 또는 지역사회·지역단체와 연동시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저층주거지의 지역주민과 공동체 역량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재생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표 2] 점진적 개량정책 기본방향

| | | | | |
|--|---|--|---|--|
| 집수리지원정책 확대 | + |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 | + | 지역공동체와 주민역량 강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리지원조례 제정과 집수리 지원 전담조직 설치 • 리모델링활성화구역과 건축협정 등 규제완화 수단 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가로 등 기반시설 정비 •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생활 SOC 공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마을사업 지속 관리를 통한 안정적 마무리 •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역량 강화 지속 |

4) 공적 지원기능 확대

- 사업성이 부족하여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노후도가 열악한 지역, 안전·재난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 지역쇠퇴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지역 등은 공공개입과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임. 신규주택의 수요가 있는 지역은 공공주도의 전면 정비방식을 활용하고,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는 지역이거나 주택건설 시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공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지로 전환하도록 함
- 공공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개선하여 운용하는 방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 조성항목 비중을 높이거나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표 3]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공공 지원기능 확대 방향

| | | |
|---|---|---|
| 규제완화·인센티브 정책 연계 | + | 공공재원 기반 확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공공직접시행 방식 활용 • 도시정비사업 관리체계와 연동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용방안 개선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확대 |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 방향 설정 연구

■ 이용갑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과 목적

- 인천광역시는 공모를 통해 3개 자치구(동구, 미추홀구, 부평구)에서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이 시범사업은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의 사업계획을 분석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회계층과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2.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선 방향

1) 3개 자치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계획 비교분석

- 중앙정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준으로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3개 자치구의 계획을 비교분석함
- 대상자 유형의 범주화 및 세분화를 통한 목표집단 설정의 경우 범주화 및 유형화되었다기보다는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주 대상자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미추홀구는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아동 등도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음
- 다양한 서비스의 범주화를 통한 서비스 연계의 경우 3개 자치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세부사업은 내용적으로는 주거/신체건강·보건의료/일상생활지원/보호돌봄요양 서비스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7월 현재 인천광역시 및 3개 자치구 모두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은 상태임
- 3개 자치구는 사회복지분야 기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구축 차원에서 시민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면서 10개 군·구의 돌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지역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22년 시범사업에서는 3개 자치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어서 3개 자치구는 독자적인 지역돌봄수요·공급조사나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음

[표 1] 인천광역시 및 3개 자치구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 비교분석

| 구분 | 인천광역시 | 3개 자치구 | | |
|---------------|--------------------------------|--|---|---|
| | | 동구 | 미추홀구 | 부평구 |
| 공공부문 전담조직 구성 | 전담부서 ‘복지서비스과’ 및 ‘지역사회통합돌봄팀’ 신설 | △ •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건복지팀’ 구성,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 배치 | X | △ • 기존 복지정책과에 전담팀 ‘통합돌봄팀’ 신설 |
| 대상자 범주화 및 유형화 | • 지침, 또는 권고사항 없음 | X • 기존 사업의 대상자 중심 | X • 기존 사업의 대상자 중심 • 한부모가정아동 등 돌봄필요 아동 추가 | X • 기존 사업의 대상자 중심 |
| 서비스 연계 및 범주화 | • 지침, 또는 권고사항 없음 | X • 연계/신규/자체사업 구분 없음 • ‘동구 건강매니저 사업’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사업 중 하나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연계가 가능 | X • 연계/신규/자체 사업 구분 없음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사업’은 신규 사업 | ○ • 연계/신규/자체사업 구분 • ‘돌봄특새 제로 서비스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서 2021년 6월 이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전환 • ‘스마트 토이봇 “효돌이” 지원 사업’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 • ‘어르신 한방주치의 사업’ 및 ‘팀 기반 방문의료사업’은 신체건강/보건의료 부문에서 연계/신규 사업 |
| 조례 제정 | X | X | X | X |

| 구분 | 인천광역시 | 3개 자치구 | | |
|---------------------|---|-------------------------------|-----------------------------------|--|
| | | 동구 | 미추홀구 | 부평구 |
| 시민참여 지원 | ○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민지원단' 모집·운영 | X • '긴급출동 동구 돌봄팀'은 민간협의체 | ○ •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더불어 사는 골목 만들기' | ○ • '부평형 지역사회통합돌봄망 강화사업' • '돌봄활동가(이웃지기)사업' |
| 지역돌봄 수요·공급 조사, 모니터링 | ○ • 2021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10개 군·구 지역 돌봄 수요·공급조사 분석 • 2022년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 X • 지역 돌봄 수요·공급조사, 모니터링 없음 | ○ • 지역 돌봄 수요·공급조사, 모니터링 없음 | △ • 2021.12. 구청 관련 부서/동 행정복지센터/공공·민관기관 실무자 대상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방향 설문조사 실시 • 모니터링 없음 |

2)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

- 3개 자치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 설정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서 인천광역시의 역할과 군·구와 관계 정립' 및 '인천광역시 및 군·구가 실시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대한 협의와 합의 및 지원'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인천광역시 및 군·구의 비전과 목적 및 목표의 명확한 제시
 - 둘째, 2022~2025년 로드맵과 실행과제의 명확한 제시
 - 셋째, 중앙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수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의 지난 4년간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도출 및 벤치마킹
 - 넷째, 인천광역시 및 군·구의 로드맵과 실행과제에 따라 공공부문 전달체계 구축, 대상자의 범주화와 유형화 및 융합형으로의 전환, 서비스의 연계와 범주화 및 신규 사업개발 등을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부터 구체화
- 특히, 3개 자치구가 2022년 시범사업을 기본적으로 기존 복지사업 중심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2020년부터 중앙정부가 제시한 노인 세부유형을 지자체 자체 선정 세부유형과 결합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자체가 범주화한 대상자집단 내에서도 노인에 대해서는 먼저 인천광역시가 세부유형을 제시하여 노인의 경우이라도 인천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대상자를 범주화/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정부 선도사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2021년 말 인천광역시가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 당시 사례로 제시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정리한 건강고위험군 중심 노인의 네 가지 유형, 탈시설 재가장애인 중심의 장애인의 3가지 유형,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의 아동 세 가지 유형을 시범사업 2차 연도인 2023년부터는 우선순위로 범주화하고, 기존의 복지사업에서 대상자를 찾은 2022년 대상자는 자체 선정 대상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함
- 2023년 대상자의 범주화 및 유형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대상자를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사각지대, 홀몸 등 기존 사회복지사업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시설이 아닌 자기 집/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또는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범주화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의료기관 퇴원환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홀몸노인 등 자기 집,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건강고위험군 노인에게 주거/신체건강·보건의료/일상생활지원/보호돌봄요양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된다면 지역에서 노인의 거주와 지역사회참여가 지속되고, 그 결과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포용도시 실현이 점차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서비스의 연계와 범주화 및 신규 사업개발에서 중앙정부 선도사업의 서비스 범주와 내용을 참고하여, 먼저, 세부사업을 두 가지 기준(사업 내용 및 사업 주체)으로 구분하고, 사업주체별/사업내용별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보건소의 다양한 신체건강/보건의료 서비스와 보호돌봄요양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지자체의 다양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LH와 광역지자체 토지구획공사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 등 연계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연계사업자와 군·구를 연결하여 작업이 필요함
- 이러한 의미에서, 동구의 '동구 건강매니저' 및 부평구의 '방문한의진료', '팀 기반 방문진료' 등은 건강보험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동구의 '당신의 이동 파트너' 및 부평구 '따뜻한 동행 이동지원'은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의 의료기관 진료 동행이라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인천광역시차원에서 시범사업 군·구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표준사업으로 설정할 필요도 있음

3. 결론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원칙과 네 가지 정책 방향의 설정을 제안하면서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범주가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노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포용도시의 실현을 강조함
-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복지분야 또 하나의 보조금사업이 아닌 노인과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 지역사회기반 통합사례관리방식의 연계형 서비스 제공임을 환기한다면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본 연구는 포용도시 개념화 및 실현의 한 축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개 자치구의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계획서를 분석함으로써 사업 자체의 진행과정이나 성과를 확인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또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제안한 원칙과 방향은 2019년부터 4년째 진행 중인 중앙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자율성을 어느 범위와 어느 수준에서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거주 취약계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환경, 객관지표·설문조사에 근거한 지역평가에 기반한 지역분석을 기반으로 중앙정부 선도사업과 비교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계획을 평가함으로써 노인 등 취약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연계·통합제공에 대한 사업 중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일자리 공간분포 및 직주근접성 분석

■ 이종현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개요

-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생활권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일자리와 주택을 공급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근로환경 격차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및 도시경쟁력을 개선하는 포용도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인천시 일자리 공간분포 및 소득과 주거, 교통자료를 활용한 직주근접실태 등을 분석하여 인천시의 포용도시 구성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분석결과, 인천시의 가계부채 금액은 타 광역시보다 높아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편이며 일과 삶의 균형수준도 하위권에 속하고 있음. 일자리 공간분포 분석결과, 구월생활권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군구별로는 남동산단이 위치한 남동구가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일자리는 산업단지 일원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은 면적에 비하여 제조업 분포가 많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일자리는 송도경제자유구역 송도13동이 집적지로 분석되었으며, 4차산업 관련 일자리 역시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특화지역임을 알 수 있음. 그리고 4차산업은 2차산업인 제조업에 기반을 둬에 따라 서구, 남동구, 동구도 제조업 일자리가 특화되었음.
- 일자리와 주거지 간의 직주근접성은 자치구별 및 생활권별로 분석하였음.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직주근접성은 군구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0 인천시 사회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인천소재 사업장의 임금수준 및 해당지역 주택가격수준을 3분위 및 5분위로 비교한 결과, 연수구와 서구는 임금수준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낮아 직주근접 가능성이 높은 자치구로 도출되었음.
- 생활권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순직주비는 영종권역이 높으며 동인천권역, 구월권역, 부평권역의 경우 타 권역대비 순직주비가 낮는데, 철도망이 구축되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직주비의 경우 동인천권역, 산업단지가 있는 연수남동권역, 송도권역, 청라권역에서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직주비와 순직주비는 각각 주택 및 가구수와 출퇴근통행량 만으로 산정되어 직주근접성을 직접적 나타내는 수치로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주근접성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유형별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전체업종 평균소득, 제조업 평균소득,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평균소득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로 나눈 직주근접성 지표를 도출하였음.
- 분석결과, 송도, 연수남동권역, 영종권역, 청라권역 이른바 경제자유구역의 직주근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인천권역, 주안권역, 구월권역, 부평권역 등 원도심 권역은 임금수준 대비 주택가격 부담률이 높아 직주근접성이 낮은 특성을 보이므로 향후 직주근접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향후 정책방향

1) 일자리 중심의 주택공급 관리계획 수립 및 분양/청약제도 개선

- 직주근접성 개선을 위하여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생활권에는 임대주택 위주로 인근 생활권 근로자의 거주수요까지 고려하여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제도와 함께 해당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가구에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주택청약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주근접 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허가 관리에 의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의 경우 지역내 균형발전과, 포용도시 조성을 위해 직주근접 우선분양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일자리 부족 생활권의 신규일자리 공급

- 주택 대비 일자리가 부족한 대부분의 생활권에는 주택보다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음. 고소득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소득비율에 맞추어 저임금 일자리를 공급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공급문제가 개선되면 원도심 생활권의 정주환경이 좋아져 고급인력이 유입될 수 있고, 신생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학관연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3) 일자리 환경(QWL)과 직주근접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 일반적으로 저임금 일자리 주민은 출퇴근 비용이 저렴한 근거리를 거주지로 선호함. 저소득층 주민은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률이 높아, 저렴한 출퇴근비용을 원하기 때문에 주거지 인근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일자리 근처를 주거지로 선택함.
- 이 경우 철도 등의 대중교통인프라 수요가 발생하며, 소득보다 주택가격이 높아 직주근접성이 낮아질수록 대중교통 수요는 많이 발생하게 됨.
- 세부방향으로 첫째, 주택가격 수준이 낮은 원도심에서 일자리가 많은 부평~구월~송도생활권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역세권 중심의 압축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철도역세권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일자리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순환선 등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면, 시간 중심의 직주근접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인천의 대중교통망인 경인선, 인천 1호선과 2호선은 각 생활권의 일자리와 주거지를 교차하여 연결하므로 각 역세권 중심의 생활권 형성을 계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주택가격 수준이 높은 생활권의 저임금 일자리 근로자를 위하여 부평, 구월, 송도생활권 등을 대중교통망으로 빠르게 연결하여 임대주택 재고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4) 생활권 일자리 및 주택 공급계획 수립

- 지역주민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거주지가 한번 정해지면 그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생애주기에 따라 나이가 들고 소득 및 가족수가 증가하면서 주거면적 수요도 증가하고 주거비 지출도 증가하게 됨.
- 그러나 소득 증가속도가 주택가격 증가속도보다 느린 생활권은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할 확률이 높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각 생활권마다 일자리계획과 주거계획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자리 입지에 영향을 주는 기반시설 지표를 생활권마다 균형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특정 생활권의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재산세 증가분의 일부를 다른 생활권의 일자리 유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예산으로 배분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

인천시 생활SOC 현황과 공급 방안: 돌봄·여가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 안내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개요

- 국민의 삶의 질 제고의 방안으로 생활SOC를 공급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19년 발표한 생활SOC 확충방안이 2022년을 기준으로 일단락됨.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진행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2019년부터 3개년에 걸쳐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고, 2022년 현재 신규 공모는 종료하고 기존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만 진행 중임
- 생활SOC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생활SOC의 접근성이나 공급 수준 데이터를 구축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시설 사용 현황이나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한편, 자료 구축이 국가재생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공공에서 공급하는 생활SOC 시설과는 차이가 있음. 생활SOC는 여러 가지 시설을 포괄하는데, 시설마다 공급체계도 각각 다른 상황이므로 각 생활SOC 공급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시 생활SOC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생활SOC 공급이 활기를 띠었으나 3개년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역할이 중요해짐. 본 연구는 시설별로 다른 공급체계를 가진 생활SOC 현황을 인천시 전체 범위로 조사하고, 특히 돌봄과 여가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공급체계의 쟁점과 이용자의 이용 행태 분석을 통해 향후 인천시의 생활SOC 공급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구체적인 시설은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으로 함. 돌봄·여가 시설 중 도보권의 마을 중심 시설에 속하고 건축물에 복합화하기 좋은 시설임

- 생활SOC의 개념과 종류, 선행연구와 포용도시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관련 사업과 공급 정책의 변화를 살펴봄. 5개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인천시 생활SOC 공급현황과 쟁점을 분석한 뒤 인천시 생활SOC 공급 방안을 제안함

2. 인천시 생활SOC 공급 방안

1) 생활SOC 공급 체계화

- 생활SOC 공급을 위해 체계화된 조직체계와 종합계획이 필요함
- 현재 생활SOC의 수요조사, 공급계획, 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 등이 모두 시설 담당자에게 맡겨져 있음. 그러나 군·구의 경우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한 명의 담당자가 여러 시설을 관리하기도 함. 시 예산담당관이 전체 시설의 예산을 총괄하지만 각 시설에 따른 개별 사항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 외의 것을 고려한 시설 배분은 어려움
- 각 시설의 담당자는 시설의 운영 목표에 따른 운영과 관리 업무의 비중이 높음.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인천시에 필요한 새로운 시설을 파악이나 수요 대응이 어려움. 생활SOC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수요에 따른 수량 산출과 배분 계획, 필요 입지와 공급 가능한 공간 마련 등 생활SOC 공급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함
- 인천시 차원에서 필요한 생활SOC의 종류와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별, 시기별 배분과 설립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함. 각 군·구의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SOC 공급 전략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공급 전략이 필요함. 생활SOC 공급은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사업, 제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여 종합하여 계획해야 함

2) 시설공급을 위한 관련 제도 연계

- 시설공급을 위한 물리적 공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함
- 원도심에서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은 대부분 재정비사업과 재생사업임. 재생사업 시 확보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재건축을 통해 생활SOC 공간 확보가 가능함

- 공동주택 건설 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과 연계할 수 있음. 100세대 이상이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등 세대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추가되어 생활SOC 시설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역세권 개발이나 사전협상제도 등 공공기여와 연계하여 생활SOC를 공급할 수 있음. 사전협상제도를 먼저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도입할 공공기여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협상 단계부터 적합한 시설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도 함. 생활권별로 필요한 생활SOC 공급으로 공공기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천 내부에서는 아직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노후 시가지를 정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확보하는 공공시설 부지를 생활SOC 공급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3) 시설 간 연계 복합 방안

- 개별 시설에 복합화를 원하는 시설을 조사했을 때 복합화를 원하는 시설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타 시설이 가장 복합화를 원하는 시설은 작은도서관으로 특히 돌봄시설이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특화된 어린이도서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 시설의 수요를 단순 종합하여 진행되었다면, 향후 복합화 사업은 각 시설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복합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와 집에서 안전하고 쉽게 이동 가능한 위치가 중요하고, 복합화가 아니어도 주변 놀이터나 체육시설 등이 위치하면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아동 돌봄 시설은 안전을 위해 타 시설과 입·출입구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독립적 설계가 필요함
-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생활SOC 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조사를 통해 시설 간 복합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IV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 단행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가치 및 쟁점 도출

● 정책연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 검토

연안항 및 남항 배후지역 일원 기능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연구: 항동 7가를 중심으로

● 현안연구

인천내항 항만기능 재배치 방향 검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교통체계 구축방안

인천내항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쟁점 및 방향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인천시 주도 사업구조 전환방안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 및 전문가 의식조사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중·동구 일원 활성화 방안

내항 배후지역 산업구조 개편 이슈와 과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가치 및 쟁점 도출

■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1. 배경과 목적

-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에 따른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단계별 실천방안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 청사진적 사업계획 수립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추진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
- 이에 인천 내항뿐만 아니라 중·동구 일원에 대한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고, 실천적이고 전략적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1차년도(2022년 하반기)에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항만, 관광 등 분야별로 지역의 현안 및 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둠

2. 제물포르네상스 핵심가치 설정 및 추진방향

1) 제물포르네상스 핵심가치의 설정

- 핵심가치 설정 방향
 - 제물포르네상스는 제물포(공간) + 르네상스(목표)의 합성어로, 쇠퇴된 공간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를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임
 - 핵심가치는 지역이 가지는 장소적 가치나 특성에 대한 명확히 규정하에 미래 도시공간이 가져나갈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 시정방향 및 목표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핵심가치(안)
 - 1)미래 도시경쟁력 향상: 개항이래 인천의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한 생산공간중 하나임. 이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거점을 조성하여 미래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
 - 2)새로운 제물포시대의 가치 재창조: 해양문화·근대역사라는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옛 인천의 명성을 구현, 새로운 제물포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

- 3)사람중심의 지속가능 사회 구현: 기후변화에 대응, 새로운 시민의 가치관과 자긍심 넘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함

[그림 1] 제물포르네상스 핵심가치 제안



2) 제물포르네상스의 목표 및 추진방향¹⁾

○ 목표 및 우선순위

- (지역의 한계와 잠재력)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25.0%), 잠재력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항목은 '풍부한 근대역사자산'(28.8%)이며, '바다 및 넓은 수변공간'이 23.1%, '부두, 공장 등 대규모 유희부지 발생'이 21.2%로 나타남
- (목표) 제물포 르네상스의 목표로 '바다와 근대역사를 품은 개항도시 인천다운 문화 및 가치 창조'(37.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우선순위)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내항 전체 항만재개발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의 재수립'(23.1%)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

○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MP) 수립방향

- 마스터플랜은 단계별로 전략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action plan)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필요 (50.0%)하며, 마스터플랜 내용은 '(미래비전)미래를 지향하는 명확한 목표 및 기대효과의 설정'(23.1%), '(공간계획)공간별 특화된 도입기능 및 세부 공간계획 수립'(23.1%) 등을 포함함

○ 내항1·8부두 등 항만재개발사업 과제 및 방향

- 사업 추진 상 주요과제로 '해수부, 인천시,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통일된 개발 방향 미확립'(36.5%), '배후 노후시가지의 물리적, 경제적 쇠퇴로 인한 수요 부족'(19.2%) 등을 인식

1) 인천내 학계 및 업계종사자를 대상으로 '22년 11월 설문조사를 진행(배포 50부, 회신 26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추진방향)**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구조에 있어서는 ‘인천시 주도: 과감한 공적 자원 투입 등 인천시 주도로의 사업 전환’(61.5%)을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
- 종합하면, 제물포 르네상스는 해양·근대역사자원과 대규모 유희부지 활용하여, 개항도시 인천다운 문화가치 창조의 선도 프로젝트로서 기능하는 종합적 실행계획이 되어야 함

3. 분야별 쟁점과 대응과제

1) 분야별 쟁점 및 과제

- 항만: 1·8부두 재개발 적기 추진, 확대 지정 국가기본계획 반영, 대체부두 확보
 -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향후 내항 재개발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하므로 내항 1·8부두 재개발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 참여와 행정 지원 필요
 - 내항 재개발 확대는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의 반영 필수, '24년 수정계획 수립이 예상되므로, MP수립시 항만기능 재배치, 화물이전공간 등 검토, 국가계획에 반영을 위한 사전작업 수행 필요
- 산업: 인천 전략산업(디지털)분야 및 문화관광 콘텐츠 거점화, 앵커시설 구축, 인재양성
 - 인천시 및 내항지역의 산업적 우위 요소와 디지털 신기술을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푸드테크 서비스 산업과 같은 신산업영역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내항 배후지역 및 인천시의 제조업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디지털·SW 산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관광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항장 및 수변공간의 장소적 장점을 활용. 문화·관광 장소화 전략은 해당 지역을 단순히 관광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전략이 요구
 - 신산업 전환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 이에 관련 연구, 시험, 실증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 필요하며, 연구기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혁신 기관 설립 가능성
 - 신산업 유치,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유능한 인재 가용 여부로 신산업 영역 주된 인력인 20~30대 청장년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양성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
- 교통: 철도 및 도로 광영교통체계 개선, 수변 교통 확보, 내부 교통체계 개선
 - **(철도)** 수인선과 경인선을 직결하고, 부평연안부두선, 제물포연안부두선을 계획대로 건설할 필요
 - **(도로)** 남항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미집행 도로를 개설해서 사업지 주변의 순환도로 체계를 완성하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조기 개통하고 진·출입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수변 교통 확보)** 성공적 항만재생 사례의 공통점은 시민이 수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수상교통 수단을 제공한 것임, 내항 수변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주도록 계획
- **(내부 교통체계 개선)** 인천역 앞 우회 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인근 관광지와 원활한 연계를 위해 인증로 일부 지하화 필요성이 있으며, 버스 노선의 분산과 노면전차, 순환형 버스, 시티투어 버스, 해상케이블카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관광: 개항장·월미도 배후지역 관광 활성화, 복합관광지구 조성, 앵커시설 선도조성
 - **(개항장·월미도 등 배후지역 관광 활성화)** 개항장은 차이나타운 위주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전반으로 확산, 월미도 워터프론트 활성화를 위한 공간디자인 재생 프로젝트와 매력 요소 보완 필요
 - **(내항재개발을 통한 복합관광지구 조성)** 1·8부두 재개발사업을 통한 마중물 효과를 창출하고 개항장·월미도와 연계 가능한 내항 1·8·6·7 부두를 중심으로 관광 기능 집적화 필요
 - **(앵커시설 선도 조성과 상징 프로젝트 추진)**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오페라하우스, 호주 달링하버 국립해양박물관 등과 같은 랜드마크형 앵커시설 선도적 조성 필요
 - **(내항 일대와 주변지역 연계 연안관광권 구축)** 내항 재개발사업의 효과 확산을 위해 월미도 및 내항 일대, 영종도, 정서진, 송도 일대를 연계하는 내항 주변 ‘하나의 연안관광권’ 육성
- 경제자유구역(IFEZ)지정: 항만재개발사업 우선적 지위 해결, 토지소유권 확보
 - **(항만재개발사업 우선적 권리 문제 해결)** 내항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 IFEZ로 지정하더라도 항만재개발사업이 우선적 지위를 가짐. IFEZ의 사업적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98조, 항만재개발법 제19조 관련 인허가 의제에서 IFEZ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삭제 필요
 - **(토지소유권 확보)** 인천시 차원의 사업참여를 위해 부지확보 또는 사업시행자 지분 확보 필요. 인천시 자체 재원 투입과 인천도시공사를 통한 확보 등이 가능, 경제청의 재원투입은 IFEZ 지정 후 가능하나 감정평가금액 기준 부지매입(182만㎡)에 약 1.5조원이 예상, 고조성원가 문제 발생
 - **(지정 대안① 내항 전체 지정 후 단계별 사업추진)** 인천내항 전체와 주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 단계별로 추진. 1단계는 1·8부두, 2단계는 2부두와 6부두, 소월미도 등을 포함. 3단계는 3부두 잡화, 4부두 자동차·사료, 5부두 자동차, 7부두 양곡 잡화 등을 대상으로 추진 가능²⁾
 - **(지정 대안② 점진적 구역지정)** 사업추진 효과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지정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 부담이 낮고 해수부 등에의 대응이 용이. 위의 1~3단계 지역을 각각 지정함

2) 내항 4부두 자동차와 7부두 양곡은 대체 가능한 부두시설이 없는 상황으로 신항2단계 장래계획부지의 항만기능재배치를 통해 유휴화하여 확보해야 함

- 인천내항 1·8부두 개발 사업구조 : 인천시 지분 참여 및 사업성 극복 방안 마련
 -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IPA 사업안에 대해 보다 보수적 관점에서 사업성 분석이 필요, 낮은 사업성 극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
 - **(대안설정 및 검토 결과)** 시행자 및 역할에 따라 4개 대안의 사업방식을 분석한 결과, “대안2: IPA(현물출자), 인천시(현금출자)” 방식과 “대안4: SPC모+SPC자(IPA+인천시+민간)” 방식의 적용가능성이 높게 분석됨. 이는 별도 사업성 분석이 필요함
 - 인천시 참여 범위 및 재무적 부담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충원, 시민단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함
- 연안항남항 배후지역 공간개편 방안: 공업지역의 정비 및 친수공간 체계적 정비
 - 연안항남항 일원의 공간 개편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주요한 위상을 차지하나, 물리적 쇠퇴 심각, 관광기능 약화, 반면 수산업 판매 및 식품가공업에 큰 강점을 가짐
 - 스마트오토밸리사업,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부지 활용, 석탄부두 이전 등 다수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기 불투명한 상황이며, 내항 기능 재배치 및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이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
 - **(연안항남항 일대 활성화 방안)** 수산물판매와 친수공간 중심 공간 구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연안부두 트램과 연계한 대중교통 중심축 형성을 위한 노선 주변 정비 및 활성화, 수산도매/공업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사업 진행,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부지 등 가용 활용부지를 통한 순환형 정비모델 적용, 단기적으로 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보행가로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연안항 수제선 정비와 연계한 친수공간 확장 등 필요

2) 마스터플랜 수립시 고려사항 제안

- 유기적 연계성 + 집중화/유연화 + 실현계획 중심 수립
 - **(유기적 연계성)** 지구별, 구역별로 기능 또는 시설의 단순 배분이 아닌 기능간 유기적 연계성 고려를 통한 통합적 사업 발굴에 중점
 - **(집중화, 유연화)** 분산적 개발이 아닌 각종 기능의 집적 및 집중화하고, 이를 관광 및 투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 **(실현계획 중심)** 공공이 아닌 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수립하고,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특히, 앵커시설 등 재정 선투자를 통한 마중물 효과 발생 및 잦은 정책변화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 검토

■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 개요

- 인천시 민선 8기는 공약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인천내항과 강화 남단,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세계 명품도시 뉴홍콩시티 건설을 제시함
 - 원도심 혁신을 통해 균형있게 발전하는 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내항 소유권 확보,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인천의 심장 제물포(인천내항) 르네상스를 제시함
- 이에 본 연구는 뉴홍콩시티 건설, 제물포 르네상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시된 인천 내항, 수도권매립지, 강화 남단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인천내항, 수도권매립지,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 차원에서 기본적인 추진방향 수준으로 한정하여 검토함
 -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이나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및 수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데이터에 기반하기 검토보다는 기본적인 추진방향 수준에서 제시되었음
 - 인천내항, 수도권매립지,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경제자유구역법상 신규 지정이 아닌 기존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새로운 단위개발사업지구를 추가 지정하거나 기존 단위개발사업지구(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의 확대·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2. 정책제언

1)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정책 제언

❖ 핵심전략산업의 적정 배분에 따른 주요 기능 설정

-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유치를 통한 앵커기능 설정이 경제자유구역과 주변지역으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핵심전략산업과 혁신생태계 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2021년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을 고시하여 지역별 차별화를 유도하고 있음
- 특히, 혁신생태계 구성을 위한 기존 사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경제자유 구역내 네트워크 조성 및 지원이 중요한 요건으로 대두됨
-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 중인 인천내항, 수도권매립지, 강화남단 지역내 주요 앵커기능 설정을 위한 산업기능 배분은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좌우할 수 있음
- 수도권매립지의 미래자동차 관련 산업은 산자부의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라지구의 확대 지정 또는 수도권매립지의 추가 지정시 미래자동차, UAM 등과 같은 산업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총량관리제에 따른 구역 절차 이행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총량관리제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을 360km²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전국경제자유구역의 총면적은 293.96km²로 추가 지정 가능한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66km² 수준임
-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안산시, 고양시), 대전·세종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산시(북항재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제안하는 면적은 41.17km²로 이를 제외하면 24km²가 인천시가 고려해야 할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 범위임
- 인천내항, 수도권매립지, 강화남단의 지정 가능한 면적을 경제자유구역 실효성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 가능한 총 면적의 범위는 12.8~36km²로 총량관리 면적의 초과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규모 범위를 12~24km²로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총량관리제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외투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외투기업유치에 따른 조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이 차별적 이지 못하고, 비수도권 중심의 인센티브 확대 및 유사 특구 지정에 의한 사업 가능성으로 수도권내 경제자유구역의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적극적인 외투기업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며, 법개정을 통하여 차별화시킬 수 있어야 함
-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확대는 조세 및 지방세 감면의 확대, 기반시설비용의 국비 지원 의무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항만재개발사업보다 우선적 권리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지역별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 인천내항

①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 인천내항은 항만구역으로 항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임
- 인천내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의 법 개정, 둘째, 항만기능 재배치를 통한 항만 유희화에 따른 타용도 활용 등에 의해 가능함
- 위의 2가지 방안 모두 해수부가 승인 결정할 사항으로 인천시 차원의 항만기능 재배치계획을 마련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에 의한 인천시의 정책과 연계하여 해수부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함

② 인천내항 주변지역 정비와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 인천내항의 항만구역 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보다는 중구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가 파급되어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개항장 문화지구 등의 원도심 지역내 재생사업, 재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내항 주변의 소월미도(인방사), 월미도(해사고등학교), 연안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지역을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함

- 내항 주변 공업지역은 내항재개발 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의한 정비와 함께 핵심전략산업 및 주기능과 연계한 산업기능개편과 재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내항 배후 공업지역은 항만기능을 수행하는 수상운송업과 창고 서비스업, 항만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는 목재가공업과 식료품 제조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항만기능이 쇠퇴하면서 산업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하여 내항, 내항 배후지역, 개항장 문화지구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함

❖ 수도권매립지

- 수도권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는 사후관리 및 토지활용의 한계로 미미한 상황으로 개별법에 의한 활용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청라지구의 산업기능 강화 측면에서 청라지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보완·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임
- 북인천복합단지, 경서동 매립지의 드론인증센터 등을 청라지구의 개별사업지구로 통합하여 드론산업의 연구, 인증, 제조,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청라지구의 산업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강화남단

①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강화남단은 80% 이상이 농지법에 근거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필요함
-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강화남단의 평야지대의 농지전용은 유희농지정도 등을 파악하고 경제자유 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가 농지유지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을 설명해야 함

② 영종지구와 연계한 영종 개별사업지구 확대 측면의 접근

- 강화남단의 필수조건인 영종~강화간 연결도로 확보는 접근성 확보와 함께 영종경제 자유구역의 확대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함

-
- 강화남단은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보다는 영종지구에 포함된 개별사업단위로 접근하여 추가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면적의 과대 지정보다는 실효성 확보 수준의 최소 규모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 ③ 강화갯벌 보존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시 추진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의한 사업추진은 외투기업유치,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등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화갯벌의 보존을 전제로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시 2025년까지 구역을 확대하는 조건에 충족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강화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연안항 및 남항 배후지역 일원 기능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연구: 항동 7가를 중심으로

■ 안내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내항·연안항·남항 지역에 항만기능이 쇠퇴하고 해운·여객 운송 변화에 따라 항만 배후지역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연안항·남항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항동7가 상업지역은 연안항과 연계하여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 일찍부터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상권 형성을 도모하였으나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
- 국제여객터미널은 신항으로 이전 후 시설의 변화 없이 연안여객터미널로 이용 중
-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주변 준공업지역은 대형물류창고가 다수 건설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필지를 세분화하여 영세공장이 밀집하는 형태로 변화 중임
- 한편으로 인천시는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친수공간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여가와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확대하기 가장 유리한 곳이 연안항 주변임
- 연안항·남항 주변 배후지역의 기능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배후지역의 상권과 지역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연안항과 항동7가 주변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점 및 이슈를 파악하고 장단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함

2. 연안항 및 남항 배후지역 일원 활성화 방안

1) 연안항의 장소성을 살린 활성화

- 연안항은 인천의 다양한 섬들과 내륙을 이어주는 매개적 장소
 - 내항이 무역항으로 인천항의 공적·상징적인 장소라면 연안항은 시민들의 터미널로 개인적 경험이 더 풍부한 장소임
- 수산물 도소매와 음식점, 숙박 등 해안 주변에 기존 상업공간 형성
 - 인천은 많은 면적이 바다와 접하고 있지만, 수변을 접하면서 상업공간이 크게 형성된 곳은 연안항과 소래포구 정도임
- 내항 재개발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연안항은 이미 형성된 장소성이 있으며 상업 역량도 보유하고 있음

2) 친수공간과 보행환경의 개선과 유기적 결합을 이룬 공간구조 구축

- 연안항은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여러 기능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함
 - 예를 들어 수산물어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장만 이용 후 해당 지역을 떠남
- 바다 공간이 가깝게 위치하지만 낮은 어메니티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
- 연안항, 남항 주변은 연안항 뿐만 아니라 서부두, 유희부두 등 조금만 환경을 개선하면 다양한 형태의 바다와 접할 수 있는 공간임
- 연안항과 서부두를 공간의 목적지로 두고 가로를 보행활성화 축, 대중교통 중심축으로 재구성하여 해안과 가로주변을 활성화

3) 유희공간을 활용한 주도적인 공간 재정비 구축

-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부지, 매립으로 인한 신규 토지, SK 유류저장 부지는 유희공간이 발생하고 있음
-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순환적으로 공간 재정비 가능

4) 기존 기능의 효율적 재배치, 새로운 기능의 유치

- 공간의 재정비를 통하여 수산물 소매와 연계한 상업시설의 확장
- 산재한 수산물 도매를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 발생
- 영세한 공업기능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산업기능 유치
- 용진군청 이전, 스마트오트밸리 등과 연계한 오피스 기능의 유치
-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 등 새로운 혁신 기능 유치
-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작은도서관, 다목적실을 연계한 생활SOC 복합 시설 마련
- 수산물 판매시설과 친수공간을 중심으로 공간구성
- 연안부두 트램노선과 연계한 대중교통 중심축 형성
- 수산 도매와 공업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체계적 정비사업 시행
-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부지 등 활용 가능 부지를 통한 순환 정비

[그림 1] 장기적 구상(안)



3. 정책 제언

-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인천항만공사와 수협 등 권리·관리 주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유희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허가, 사업추진 실행
-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선도사업을 수행하여 다른 사업들을 견인하는 역할 필요
-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내항·연안항·남항 일대의 종합적 발전 도모
 - 연안항 주변의 특성을 활용하여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연안항 주변 재생의 추진력을 확보
- 석탄부두, 모래부두 등 지역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의 지속적 이전 추진
 - 연안항과 남항 일대의 매력도를 높이고 주간 인구나 상주인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석탄부두와 모래부두 이전이 필수적임
 - 석탄부두는 이전 계획이 있으나 시기가 불투명하고 모래부두 이전 계획은 좌초된 바 있음. 행정에서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이전 계획을 실현해야 함

인천내항 항만기능 재배치 방향 검토

■ 김운수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내항은 북항, 신항, 남항 국제여객부두가 단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항만기능이 일부 이전되었고, 이는 물동량 감소로 이어져 일부 시설에 대한 유희화 가능성이 높아짐
- 민선 8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인천내항의 항만기능 재배치 및 이전계획 필요
- 인천내항 물동량은 과거 3~4천만 톤을 처리하였으나, 최근 1천 5백만 톤 내외로 인천항 전체 물동량의 10.7%를 점유함. 인천내항 하역능력 33,901천 톤(공용부두 반영)의 절반에 그침
- 항만시설소요로 잡화부두는 2·3·6부두가 여유가 있으며, 철재·자동차·양곡부두의 경우 시설여유가 발생되지 않아 계속 사용해야 함. 현재 1·8부두 재개발지역 외에 추가로 2·3(일부)·6부두는 내항 재개발 확대구역으로 지정이 가능
- 한편 항만보안 문제, 재개발의 효율성, 도시계획과의 조화, 충분한 공공 친수기능·도심업무·상업 등 다양한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의 혼재로 전체적인 사업성에 효율적인 내항 전체 재개발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
- 이러한 재개발 확대 및 전면 재개발은 항만근로자 고용보장 및 대체부두 확보 등 부두폐쇄에 대응되는 선결조건 해소가 필요함. 대체부두의 경우 신항의 장래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이 현실적인 대안임
- 또한 국가계획(항만재개발 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인천시에서 사전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정부에 건의, 계획시 반영 노력 필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교통체계 구축방안

■ 석중수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려면 경인선과 수인선을 지하에서 연결하고 트램을 계획대로 건설해야 함.
- 광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남항 일대의 도로를 정비하고 고속·광역순환망을 구축해야 하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을 조기에 개통하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진·출입 체계를 개선해야 함.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로 내항을 중심으로 한 수변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야 하고, 내항의 장점을 살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안전하면서 재미있는 수상 보트를 운영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수변뿐 아니라 내항 전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역에서 남항 석탄 부두까지 연결되는 폐철로를 이용해서 내항과 개항장 일대 전체를 순환하는 새로운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내항과 개항장 일대를 순환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항과 배후지역의 재생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함.
- 내항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것에 맞춰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수변공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므로 시가지에서 수변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 접근로를 조성해야 함.
- 차이나타운 등 인근 관광지와 내항을 원활하게 연계하려면 인증로 일부(약 2.5km)를 지하화해야 함.

인천내항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쟁점 및 방향

■ 심진범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내항 일대 관광 활성화 주요 쟁점

- (개항장·월미도 관광 경쟁력의 先강화) 초장기 사업인 내항 재개발사업 특성상 개항장과 월미도의 자원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개항장·월미도 관광 활성화 사업 선행 필요
- (내항 일대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항의 역할 정립) 내항으로 인한 월미관광특구의 지구 간 단절과 개항장·월미도 관광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내항의 역할 필요
- (인천 관광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접근)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재개발 사업은 송도, 영종도 등 인천시의 타 관광거점과 연계한 인천 관광의 통합적 미래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추진
- (초장기 사업으로서의 환경 변화 대응성) 항만 재개발은 본질적으로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외부 환경 변화 대응성은 사업 추진의 핵심 이슈

2. 내항 재개발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향

- (개항장·월미도 관광 활성화 추진)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연계하여 개항장~내항 역사문화관광 연계축 활성화, 월미도 문화의거리 일대 수변 공간의 매력 요소 보완 및 디자인 명소 육성 사업 추진, 관광·문화·도시재생사업 등의 총괄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 (내항 재개발과 연계한 내항 복합관광지구 전환) 1·8부두 마중물 효과 창출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접근, 내항의 유·무형 자산 보전과 가치 창출, 앵커시설 선도 조성 및 글로벌 이슈성이 강한 상징 프로젝트 추진, 관광시설 집적화 및 복합화, 축제·이벤트 활성화 및 장소 마케팅
- (내항 일대와 주변 지역 연계 연안관광권 구축) 내항 일대·영종도·정서진(아라뱃길 경인항)·송도 일대 연계 ‘하나의 연안관광권’ 육성, 연안관광 명소 주요 지점 연계 연안 페리 수상 네트워크 구축, 내항 일대·송도국제도시·영종도 관광 연계 및 포지티브섬 전략 추진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인천시 주도 사업구조 전환

■ 배덕상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 내항 1,8부두 개발 관련 지속적 소요 제기가 있었으나, 공공성 강화 요청에 따른 개발 제한 및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15년간 진척되지 않음.
- 인천항만공사가 2020년 개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고 현재 사업안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임. 사업안의 주 취지는 분양으로써, 경제적편익분석(B/C)와 더불어 수익성분석(PI)가 핵심임.
- 그러나, 사업안의 매출과 비용이 다소 공격적으로 가정되어 있으며 현재 금리 상승으로 개발 여건이 좋지 않아 예타 통과는 장담하기 힘들. 설사, 예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 참여가 적극 필요한 상황임.
- 거제 고현항의 주상복합개발, 망상 국제복합의 글로벌브랜드 유치사례를 토대로 본 건의 사업구조를 고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본 건의 사업구조는 현재안의 일부 수정안인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시 지분출자로 “부지조성 및 부지매각”안과 “부지 및 건물조성, 일부시설 분양 및 일부시설 운영”안으로 압축될 수 있음.
- 전자안은 사업 매출리스크가 낮지만, 부지 활성화 달성 불확실성이 존재함. 후자안은 사업 매출리스크가 다소 높지만, 대지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는 다소 용이한 것으로 전망됨.
- 사업부서는 사업성 분석 추가연구를 통해 사업구조를 구체화 시켜야 하며, 민간자본을 일으키기 위한 전문인력 고용 또는 아웃소싱,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마일스톤 수립 및 재정 한도를 결정해야 함.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 및 전문가 의식조사

■ 윤혜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본 연구는 민선 8기가 제시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에 따라 이에 관련한 인천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실시함
- 두 집단 모두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대한 인식, 주거지재생의 필요성 인지, 내항 재개발사업에 있어 인천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 내항 일대에 '바다'와 '근대역사자산'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
- 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는 인천시의 주도적 역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시민과 전문가 집단 모두 공적재원 투입 등 적극적인 방식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내항 소관지역 행정기관 참여 등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체계 확충에 있어서는 시민과 전문가 집단 모두 인식하고 있는 과제이며 신규 인구유입 방안과 주변지역 보행 및 대중교통체계 확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조사 결과에서 내항 재개발 사업간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났으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의견조정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인천시의 역점 프로젝트라는 위치에서 인천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민참여체계 구상이 필요함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중·동구 일원 활성화 방안

■ 윤혜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본 연구는 민선8기가 제시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를 위한 중, 동구 일원의 사업진단 등 종합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음
- 영종지역을 제외한 중구와 동구는 여러지표에서 쇠퇴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중, 동구 대상사업 검토결과, 중구는 내항재개발과 이를 연계한 지역활성화, 동구는 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 등에 주력하고 있었음
- 재원확보 문제가 가장 많았고 지자체 위계로 인한 권한의 한계 문제 등도 나타났음
- 향후 중동구 일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인천시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중, 동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활성화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넷째, 대상사업 중 교통체계 관련 사업은 타 전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해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통해 중, 동구 일대를 대상으로 한 교통체계의 확충 사업을 구상,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장기적으론 지역 입지특성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대상사업 이외 지역 활성화 사업까지 통합적 논의가 필요함

내항 배후지역 산업구조 개편 이슈와 과제

■ 최태림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인천 내항은 고도성장기의 주요 무역항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였으나, 항만 운송기능이 지속하여 하락하고 있고 내항 1·8부두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증대됨.
- 인천 내항과 배후지역의 산업활동 현황을 이해하고 항만지역 산업기반 재구조화의 전략과 사례를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내항 및 배후지역의 산업 재구조화의 전략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분석과 제언

- 항만지역 산업기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전략은 ① 도시기능으로 전환, ② 항만관련 산업기능 고도화, ③ 신산업으로 전환, ④ 관광·문화 장소화 전략으로 구분 가능.
- 인천 내항 및 배후지역은 원료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생산을 수행하던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의 산업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역, 보관, 운송기능의 해상물류업과 목재 가공, 곡물 제분, 제당, 사료 제조, 식료품 가공업에 특화된 산업구조이며, 항만기능의 쇠퇴로 이들 산업의 입지적 장점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인천 내항 및 배후지역의 산업구조 재편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수입 원자재를 운송·가공하는 요소 투입형 산업구조를 현재의 디지털화된 산업환경에 적합한 혁신 기반형 산업활동의 중심지로 변화시키는 과정임.
- 미래산업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 분야의 핵심 기술을 창출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유관 업종을 유연하게 수용하도록 접근하고 인천시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연계 기능을 구축하며 이를 위해 앵커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기반 마련.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글로벌도시연구단

- 단행본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진단과 제언

- 정책연구

‘초일류 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형 글로벌 역량 강화 방향

글로벌 물류도시 인천의 발전 방향

글로벌도시 홍콩의 사회·경제 변화와 시사점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문화도시 인천으로의 발전 방향

아시아 글로벌 도시의 경제산업 특성과 경쟁력 지표 동향 분석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인천의 방향

인천 내 해외기업 투자확대 방안 모색

동아시아 주요 도시 글로벌경쟁력 비교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진단과 제언

글로벌도시연구원



1. 배경과 목적

- 글로벌 도시란 범세계적인 경제체제에서 초국적 제반 활동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중심지를 의미함
- 영국·도쿄·파리 등 선진국의 수도, 홍콩·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가 외국자본과 다국적 기업 본부의 유치·혁신역량 제고·글로벌 인재 유인 등을 통해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각축을 벌이는 상황임
- 인천의 초일류도시 시정 목표 역시 이 같은 글로벌 도시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인천이 만들어가야 할 글로벌 도시(global city)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고자 함

2. 변화하는 세계도시의 향방과 시사점

1) 아시아 글로벌 도시의 경제산업 특성과 경쟁력 지표 동향 분석

- 글로벌파워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이하 GPCI)를 활용해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 지표의 변동, 특히 아시아 글로벌 도시의 지표 동향을 비교 분석함
- 아시아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 지표 동향과 산업구조 변화 간 관계
 - 도쿄의 경제 분야 지표가 개선되는 시기와 정보통신업과 학술연구·전문·기술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한 시기가 겹침
 - 베이징의 정보통신, 금융업, 부동산업,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과 GPCI 경제 분야 지표 개선이 동시에 진행

- 서울시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 비중이 높은 첨단산업형 구조로 전환 중인데, 도쿄와 베이징 대비 전환이 느림
-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우선 과제는 산업구조 전환
 -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도 느리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품은 인천시가 지향하는 글로벌 도시의 '첨단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생산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생산자 서비스 분야와 함께 바이오와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필요

2) 글로벌 도시 홍콩의 사회·경제 변화

- 아시아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인 홍콩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에 기초하여, 홍콩을 대체할 인천의 글로벌 도시 역량 조성이라는 시정목표 추진과 연계하여 홍콩의 도시경쟁력 점검
- 인천시가 글로벌 도시 역량을 강화하고 뉴홍콩시티 구상 시 △홍콩 변화의 장기성 △홍콩 경쟁력의 다양성 △홍콩-중국 연계성 △중화권 도시의 대체성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첫째, 비즈니스 중심지 홍콩 변화의 장기성 고려
 - 둘째, 글로벌 도시 홍콩 경쟁력의 다양성 반영
 - 셋째, 홍콩-중국 주장삼각주 도시 간의 연계성 주목
 - 넷째, 중국 및 중화권 도시의 대체성 관측

3) 녹색도시 코펜하겐·스톡홀름의 경험과 인천

- 인천 민선 8기에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라는 핵심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함(2022.12.06.)
- 기후변화 대응 해외 선도도시 사례 선정 및 검토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향후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인천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민선 8기에서 적극 추진하는 바와 같이 도시 전체를 스마트 도시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코펜하겐 솔루션 랩 같은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둘째,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다면 석탄화력 발전은 양립할 수 없으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내지 폐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지역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가는 것이 필요하며, 인천시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해상풍력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넷째, 탄소중립 목표와 비전하에 분명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이행 체계를 마련하여 점검해가는 것이 필요함

3. 인천의 글로벌비즈니스 여건 진단과 제언

1) 인천 내 해외기업 투자확대 방안 모색

- 인천의 외국인 투자기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지표를 통해서 인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인천 내 해외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 3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함
 - 지역의 전략산업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업 및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연계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의 투자유치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투자기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 인력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글로벌 물류도시 인천의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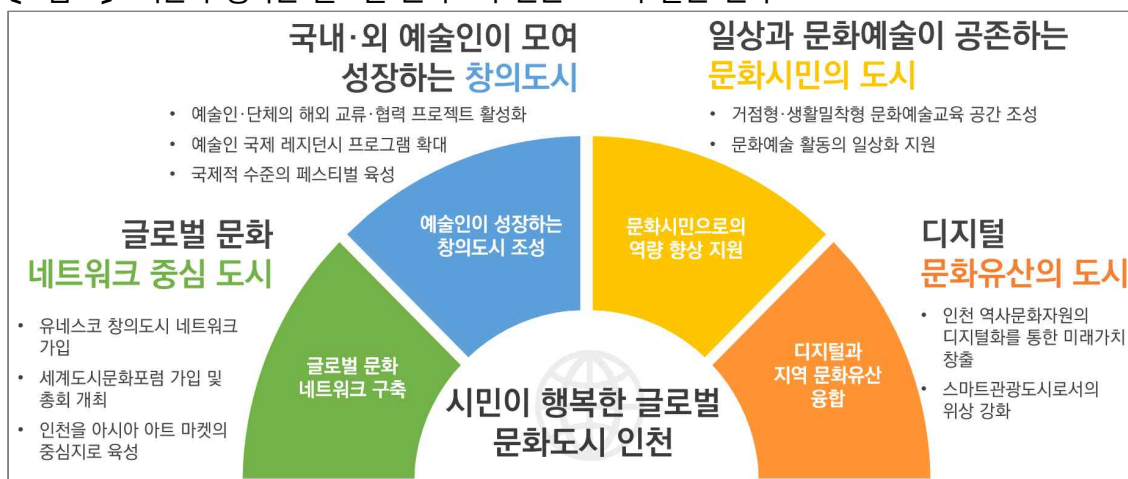
-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및 국제정세 유동성으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항과 항만이 동시에 입지한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물류도시 인천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인천이 글로벌 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인천 물류산업의 현황 및 전략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한 인천의 글로벌 물류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함
- 인천의 글로벌 물류 도시 추진 방향으로 △스마트디지털 물류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원,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신산업 육성, △물류 네트워크 연계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 △사람 중심의 안전망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제시함

4. 글로벌 창조도시를 향한 탐색

1)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문화도시 인천을 위하여

- 인천이 문화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국제적 의제와 관련한 문화의 역할을 검토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글로벌 문화도시의 특성과 국제적·사회적 의제에 대응한 문화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발전 방향성을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 구축’, ‘예술인이 성장하는 창의도시 조성’, ‘문화시민으로의 역량 향상 지원’, ‘디지털과 지역 문화유산 융합’을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그림 1]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문화도시 인천’으로의 발전 전략



2) 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역량 강화 방향

- ‘시민이 행복한 뉴글로벌도시 인천’ 구현을 교육측면에서 살펴보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며, 글로벌 인재란 곧 ‘글로벌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글로벌 역량이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글로벌 역량교육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요청되는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함
- 글로벌 역량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생 대상의 학교교육 혁신과 성인 대상의 시민교육 혁신, 그리고 ‘인천’이라는 지역적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적 혁신이 필요함

‘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형 글로벌 역량 강화 방향

■ 배은주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초일류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하여 인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천형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글로벌 역량이란 일반적으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특정 상황의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총체적 인간능력’의 측면과 UNESCO가 강조하는 ‘세계시민역량’의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지구적 문제와 상호의존적 환경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 사고,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 습득과 소통능력,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협동 및 연대 능력, 책임있는 행동과 실천 등을 강조함
- 지금까지 글로벌 역량 교육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지만, 글로벌 도시는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시민들이 활동하고 거주하는 도시로, 이를 위해서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성인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이주민을 포함하여 도시의 거주민 모두가 글로벌 시대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직업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세계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천이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개발에도 주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생 대상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학교교육 혁신, 성인 대상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관과 시민(구민)대학을 활용하는 세계시민교육 강화, 인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적 혁신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함

글로벌 물류도시 인천의 발전 방향

강동준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 최근 글로벌 물류산업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사람중심·수요자 중심의 물류서비스 창출 및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을 조성 노력을 지속중임
- 주요 글로벌 물류 도시는 공항만을 중심으로 육상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복합운송의 효율성 확보와 함께 배후지역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신규사업 개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음
- 인천시는 공항만을 중심으로 역점정책모델을 발전시켜 왔으며 글로벌 물류 도시로 발전을 위해 과거 하드웨어 인프라 중심의 사고를 확장하여 최신 물류 여건을 반영하고 국제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발전방향이 필요 상황임
- 이에 인천의 글로벌 물류 도시 추진 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함
- 첫째, 스마트·디지털 물류 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원으로 인천시 자체 물류정보DB 구축, 도시물류 체계의 디지털 전환 등을 제시하였음.
- 둘째,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신산업 육성으로 항공물류 수용능력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천형 UAM 상용화 등을 제시하였음.
- 셋째, 물류 네트워크 연계 강화로 Sea&Air 복합운송 연계 강화 지원방안 마련, 인천신항 철도 인입선 구축을 제안함
- 넷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친환경 화물차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망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전략으로 물류산업 종사 근로여건 개선, 물류 스타트업 지원,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제시함

글로벌도시 홍콩의 사회·경제 변화와 시사점

■ 김수한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배경과 목적

- 민선 8기 인천 시정부는 국가보안법 및 코로나19 등 여러 대내외 이슈로 인해 아시아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인 홍콩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에 기초하여, 홍콩을 대체할 인천의 글로벌도시 역량 조성을 주요 시정 목표로 제시
- 이 연구에서는 홍콩의 형성 과정, 글로벌도시 홍콩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의 글로벌도시 역량 강화와 뉴홍콩시티 구상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 도출

2. 시사점 및 제언

- 인천시 글로벌도시 역량 강화 및 뉴홍콩시티 구상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홍콩 변화의 장기성 △홍콩 경쟁력의 다양성 △홍콩-중국 연계성 △중화권 도시의 대체성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1) 첫째, 비즈니스 중심지 홍콩 변화의 장기성 고려

- 독특한 역사와 제도적 환경에서 성장한 홍콩이 갖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위상과 지위는 단기간 변화가 없음
- 미중 전략 경쟁이 지정학, 지경학, 기술민족주의, 가치·이념으로까지 심화, 그러나 강대국 패권 경쟁은 점진적으로 진행 가능성 큼
- 홍콩의 위상 하락이 시작되더라도 이는 더딘 변화 과정이 예상됨

2) 둘째, 글로벌도시 홍콩 경쟁력의 다양성 반영

- 글로벌도시 홍콩의 경쟁력은 독특한 역사·제도적 맥락下 형성
 - 중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지리적 연결성 △초국적 다문화와 융합성,
 - 영국 식민지와 일국양제를 거치면서 민간 주도로 조성된 △개방적 시장경제와 △친기업 비즈니스 환경 등이 홍콩 경쟁력의 원천
- 인천 추구 뉴홍콩시티 구상의 목표가 단순히 탈홍콩 자본의 유치 및 입지 기반 조성에 한정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홍콩이 지닌 다양한 강점 요인에 주목, 인천 고유의 비교 우위에 바탕을 둔 경쟁 우위를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을 제안

3) 셋째, 홍콩-중국 주장삼각주 도시 간의 연계성 주목

-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국면에서도 다수의 홍콩 주재 외국기업들은 여전히 홍콩-중국 간의 비즈니스 연계성에 대한 기대가 큼
 - 웨강아오 프로젝트(GBA)에 따른 홍콩을 발판으로 한 중국 비즈니스 개척 기대
-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은 고조·확산하고 있지만, 다수의 미국·유럽 금융회사는 여전히 홍콩을 기반으로 新 비즈니스 기회 준비
- 중국 본토의 금융시장 개방 속도가 제한적인 대신 홍콩과의 연결성이 확대된다면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홍콩은 여전히 유효한 중간자

4) 넷째, 중국 및 중화권 도시의 대체성 관측

- 홍콩-중국 주장삼각주 중심도시와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보다 세밀히 관찰 필요
- 홍콩 유력 대체지, 싱가포르·상하이·하이난다오 등의 경쟁력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문화도시 인천으로의 발전 방향

■ 민경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지역의 고유한 문화 진흥, 문화적 정체성 정립 및 창의성 향상을 바탕으로 한 해외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은 도시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함. 이처럼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가 지닌 사회적 역할의 증대 역시 요구되는 실정임
- 따라서 인천이 문화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국제적 의제와 관련한 문화의 역할을 검토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글로벌 문화도시와 시민 행복의 개념을 검토하고 거시환경 변화와 인천 문화정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문화도시 인천으로의 발전 방향’을 네 가지 전략을 통해 제시함
- 첫째,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 중심도시’에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세계도시문화포럼 가입 및 총회 개최, 그리고 인천을 아시아 아트 마켓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과제를 제안함
- 둘째, ‘국내·외 예술인이 모여 성장하는 창의도시’에서는 예술인·단체의 해외 교류·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예술인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확대, 국제적 수준의 페스티벌 육성을 제시하였음
- 셋째, ‘일상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문화시민의 도시’에서는 거점형·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문화예술 활동의 일상화 지원을 강조함
- 넷째, ‘디지털 문화유산의 도시’에서는 인천 역사문화자원의 디지털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 스마트관광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제안하였음

아시아 글로벌 도시의 경제산업 특성과 경쟁력 지표 동향 분석

■ 서봉만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민선 8기 인천시가 지향하는 초일류도시는 사첸이 제안한 ‘글로벌 도시’ 개념과 일맥상통함
- 초일류도시는 글로벌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형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다양한 인재가 추구하는 창조와 혁신의 삶을 지지하는 글로벌 도시의 실현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지향점임
- 사첸은 글로벌 도시의 기능을 ① 글로벌 컨트롤타워 ② 금융 및 전문서비스의 핵심 집적지 ③ 첨단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생산의 장소 ④ 혁신의 소비시장으로 구분함
- 본 연구는 GPCI를 활용해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 지표의 변동, 특히 아시아 글로벌 도시의 지표 동향을 비교 분석함
- GPCI는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을 경제적인 컨트롤타워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인재들의 삶의 질의 측면까지 고려해서 측정함
- 최상위 글로벌 도시군을 형성하는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의 경쟁력 순위는 10년간 변함없이 유지
- 런던, 뉴욕, 도쿄는 경제와 연구개발 분야에서 최상위에 있는데, 사첸의 글로벌 도시 개념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도시
- 도쿄, 싱가포르, 베이징, 상하이, 서울 등 아시아 글로벌 도시는 경제 분야 지표에서 상위권에 포진
 - 서울은 최근 경제 분야 지수가 하락 추세인데, 특히 노동 환경과 인재 관련 지표의 개선이 중요
 - 거주, 환경 분야에서 아시아 글로벌 도시 경쟁력의 개선 필요

- 아시아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 지표 동향과 산업구조의 변화 간의 관계를 살펴봄
 - 도쿄의 경제 분야 지표가 개선되는 시기와 정보통신업과 학술연구·전문·기술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한 시기가 겹침
 - 베이징의 정보통신, 금융업, 부동산업,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과 GPCI 경제 분야 지표의 개선이 동시에 진행
 - 서울시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 비중이 높은 첨단산업형 구조로 전환 중인데, 도쿄와 베이징 대비 전환이 느림
-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우선 과제는 산업구조 전환
 -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자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도 느리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품은 인천시가 지향하는 글로벌 도시의 '첨단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생산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생산자 서비스 분야와 함께 바이오와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함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인천의 방향

한 준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 인천 민선 8기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라는 핵심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초일류도시’는 5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초스마트시티로 문화, 역사, 환경, 교육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인간 중심의 행복도시를 의미함¹⁾
- 한편,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였음 (‘22.12.6)²⁾
-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해외 선도도시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향후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선도도시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는 유럽 녹색 수도 상(European Green Capital Award), 탄소중립도시 연합(Carbon Neutral Cities Alliance), C40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 C40)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이들 그룹에 공통적으로 속하면서 인천시와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큰 도시를 선정해 해당 도시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인천시와 유사성이 큰 도시를 살펴봄에 있어 특히 화력발전소나 공항 유무, 바다 인접 여부 등을 살펴보고자 함

1) 인천광역시. (2022.10.20.). ‘초일류도시 인천’ 조성 뒷받침할 전문가 자문단 출범.

2) 인천광역시. (2022.12.06.). ‘인천시, 국가목표보다 5년 앞당겨 2045년 탄소중립 실현.’

2. 정책제언

- 인천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민선 8기에서 적극 추진하는 바와 같이 도시 전체를 스마트 도시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코펜하겐 솔루션 랩 같은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도시 발전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스마트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코펜하겐 솔루션 랩과 같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도출하면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험실 같은 기구를 만들어보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음
- 둘째,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다면 석탄화력 발전은 양립할 수 없으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내지 폐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코펜하겐이나 스톡홀름 모두 기존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친환경연료(바이오매스 등) 발전소로 전환하였듯이,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연료 전환 내지 폐쇄가 반드시 필요함
 - 전환 부문과 관련된 결정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고, 전력수급 관련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함
- 셋째,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지역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가는 것이 필요하며, 인천시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해상풍력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코펜하겐이나 스톡홀름 모두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발판으로 삼았으며, 인천의 경우 결국 해상풍력이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주 전력 공급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앙정부 정책 기조 변화와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하고 긴 인·허가 절차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 이를 잘 극복해가는 것이 과제임
- 넷째, 탄소중립 목표와 비전하에 분명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이행 체계를 마련하여 점검해가는 것이 필요함
 - 코펜하겐이나 스톡홀름 모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로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감축 수단별 감축잠재량 평가를 비롯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 체계, 점검 체계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잘 참고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인천 내 해외기업 투자확대 방안 모색

■ 이정영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인천의 외국인 투자기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지표를 통해서 인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1) 지역 전략산업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유인책 강화

-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다양한 투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임
- 인천은 지역의 전략산업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업 및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남동구에 제조업이 집적화되어 있으므로 스마트 제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 지역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송도글로벌캠퍼스를 중심으로 국내외 대학이 밀집해 있음에도 전문인력 공급에서의 경쟁력이 타지역대비 낮으므로 연구개발시설 유치 시 혜택을 제공하여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거점지역 운영은 지역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등을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 전략 수립

- 지역 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연계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의 외국인 투자기업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의 중고차 수출기업으로 이는 인천 내 조성된 대규모 수출 중고차 단지의 영향으로 보이며, 수출액 증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지역이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조함
-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혜택이 전무하여 유입이 적으므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 매칭사업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 유인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투자유치기관의 역할 강화

- 인천의 투자유치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투자기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 인력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서비스의 간편화를 통해 인천에 관심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검토가 필요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행정서비스와 관련해 해외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보다 더 이를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
 - 서울은 '서울투자청'을 통해 투자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천도 외국인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생활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투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하는 기구가 필요
 - 전담기관이 없더라도 지역의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음
 -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지원센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협약을 맺음

동아시아 주요 도시 글로벌경쟁력 비교

■ 김수한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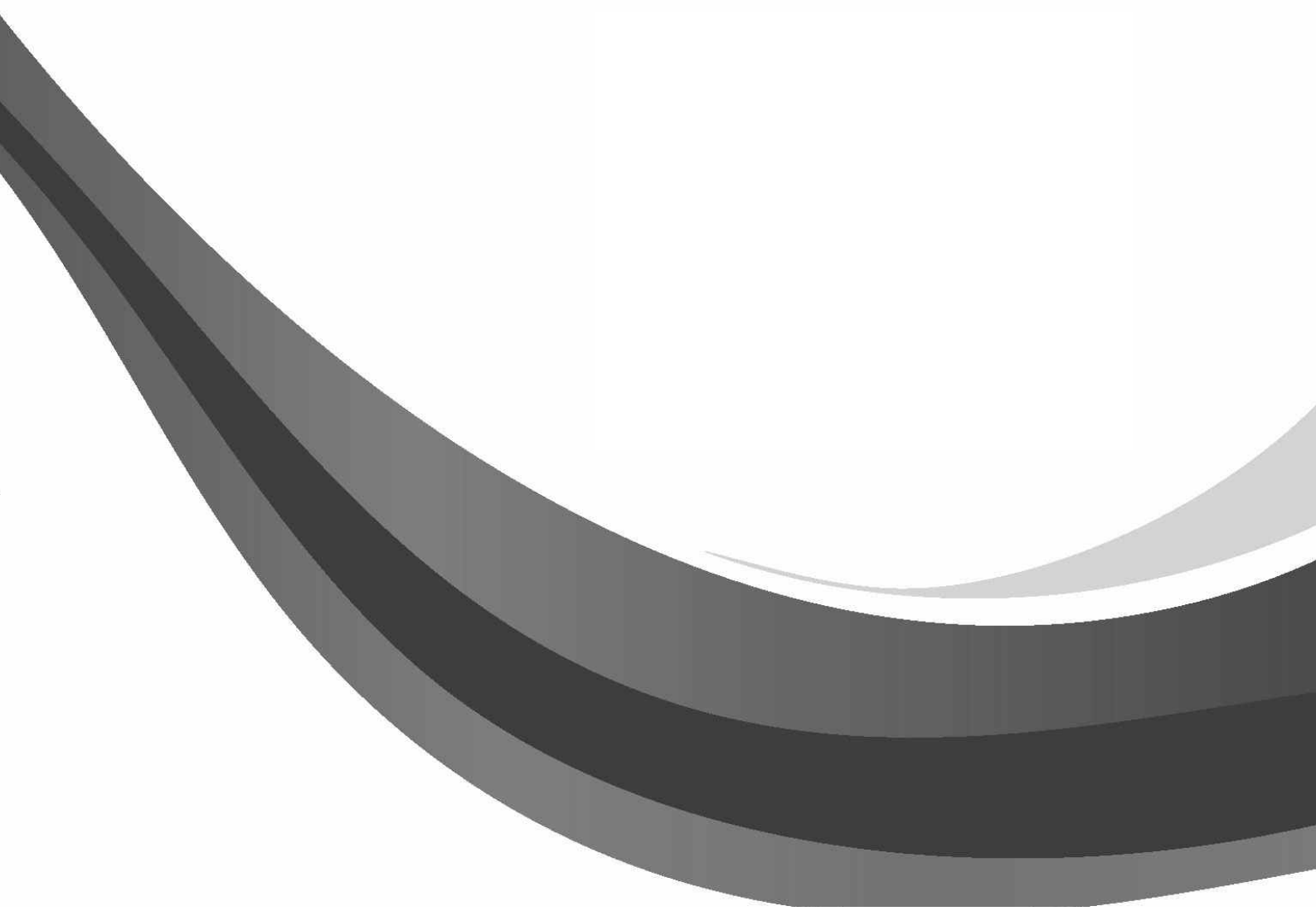
-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글로벌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해 인천 민선 8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시정에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유엔 인간정주위원회(HABITAT)와 중국사회과학원의 「글로벌도시경쟁력보고서(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 GUCR)」 자료를 활용함
- GUCR은 광범위한 조사 대상, 프로젝트 수행의 연속성(2011년부터 매년) 등으로 인해 인천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 도시 간 경쟁력 비교가 가능한 유용한 자료임. GUCR은 글로벌도시 경쟁력 관련 유력 조사 가운데 인천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 드문 경우임

2. 시사점 및 제언

- GUCR-인천 글로벌경쟁력 참고 척도로 활용 : GUCR은 △세계 전역 1,000개 도시 조사라는 ①포괄성, 10여 년간 매년 수행된 조사라는 ②연속성, 지속가능경쟁력과 경제경쟁력을 구성하는 지표를 갖추고 있다는 ③체계성, 그리고 유엔기구와의 공동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는 ④신뢰성을 갖춘 조사임. 이에 인천의 글로벌경쟁력 진단을 위한 참고척도로 사용할 것을 제언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한 글로벌 시정 방향 수립 및 컨센서스 확립 : GUCR의 동아시아 역내 도시 발전패턴 등을 참고하여 맹목적인 성장형 발전전략의 추구가 아닌, 균형/창조/소통의 시정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을 글로벌 시정 방향에 도입하고, 혁신경제 육성과 글로벌연결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의 구현을 위한 주요 행위자 사이의 컨센서스를 확립하도록 함. 그 첫걸음을 2023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설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도시사회연구부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행·재정·남북관계 분야

● 기획연구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연구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시의 남북협력 정책과 과제

● 정책연구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인천 데이터 체계 연구
'(가칭)서해평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캠프마켓 시민공론화 운영 방안

● 군·구협약 정책연구

연수구형 마을공유공간 조성 및 방안

● 현안연구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사전 검토 연구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연구

■ 남근우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생태환경 분야는 기후환경 분야와 함께 북한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자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협력의 추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분야임. 우리 정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남북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남북 생태환경협력 방안을 구상해왔음.
- 그러나 남북 생태환경협력에 대한 중앙정부와 연구자들의 관심은 주로 비무장지대(이하 'DMZ')에 맞추어져 있는 반면, 북한의 생태환경 정책수요는 생태환경 보호지역이 집중된 서해와 동해 연안에 맞추어져 있음.
- 따라서 남북 생태환경협력 정책과 연구의 초점을 DMZ에서 북한의 정책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서해 남북 접경수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 접경수역을 중심으로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함.

2) 연구의 목적

- 첫째, 관련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생태환경 분야 법정계획 및 이와 연계해 수립된 인천시 생태환경 분야 시행계획 내 남북협력 관련 실천과제의 이행을 정책적·학술적으로 지원함.
- 둘째,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2025)」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생태환경협력 정책과 구체적 실행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학술적으로 지원함.
- 셋째, 서해 남북 접경수역에 산재한 다양한 생태환경 자산을 경제, 인문역사 등 다른 협력 분야와 연계·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중심지로서의 '평화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자 함.

2.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인천시의 국제협력 방안

1) 국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표 1] 인천시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4대 추진방향 및 12대 추진과제

| | | | | |
|-------|--|--|---|--|
| 비전 | 한반도 서해 접경수역 생태평화 중심도시, 인천 | | | |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생태 평화도시 인천 조성 ▪ 한반도 서해 생태환경 자산의 국제적 확산 도모 ▪ 접경수역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인천형 남북 생태환경협력 추진 | | | |
| 추진 방향 | ① 국제기구 네트워크 강화 (남북 소통·협력 채널 확보) | ② 서해 남북 접경수역 생태환경 자산의 국제화 | ③ 인천시 남북 생태환경협력 역량 배양 | ④ 서해 생태평화 공감대 증진·확산 |
| 추진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국제협력 플랫폼 제공·참여 • 습지·멸종위기 철새·산림 중심 'Eco Fund' 출범 • 서해 생태환경 자산을 활용한 국제기구 행사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권 주요 월경성 조류 센세스 조사 • 서해연안 습지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 서해지역 산림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 남북 접경수역 생태환경 플랫폼 구축 • 남북 생태환경협력 추진체계 정비 • 황해평화포럼 국제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 생태환경 문화 행사 추진 • 인천 접경수역 남북 생태지도·교구 제작 • '세계철새의 날' 공동행사 추진 |

2) 중앙정부·인천시 생태환경 법정계획과 정책적 연계성

- 중앙정부 및 인천시 법정계획 내 남북 생태환경협력 추진과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한 국제협력 방안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제안함.

❖ 중앙정부 생태환경 법정계획 내 남북협력 사업 보완 방향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EAAPP, RRC-EA, 한스자이델재단에서 운영하는 국제네트워크 및 국제프로그램 활용 ▲에코펀드 조성 ▲북한의 정책수요가 서해에 집중된 '서해 접경수역 및 한강하구'를 대상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국제협력 방안 보완
- (국가환경종합계획) ▲본 연구에서 확인한 서해 접경수역의 철새, 습지, 산림 등의 현황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네트워크 및 국제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다자간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북한의 정책수요가 서해에 집중된 '서해 접경수역 및 한강하구'를 대상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국제협력 방안 보완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동 계획이 강조하는 국제기구 및 제3국 민간기구와의 협력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제협력 추진과제 반영 ▲‘서해 접경수역 및 한강하구’ 대상의 생태환경협력 추진과제 선정·보완
- (습지보전기본계획) ▲동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및 국제프로그램, 새로운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북한 주요습지의 57.4%(31곳)가 집중된 서해 접경수역을 대상으로 남북 습지협력 과제를 발굴·추진

❖ 인천시 생태환경 법정계획 내 남북협력 사업과의 연계성

- (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협력 4대 추진방향 및 12대 추진과제와 연계
- (환경보전계획) 동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 네트워크 구축·강화’, ‘인천시 남북 생태환경협력 역량 배양’, ‘서해 생태평화 공감대 증진·확산’을 활용
-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동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서 제시한 국제협력 4대 추진방향 및 12대 추진과제와 연계함. 또한 동 계획은 산림 관련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계획수립 시 보완 필요

3. 정책제언

1) 중앙정부 법정계획에 ‘DMZ 및 서해·한강하구’ 명칭 변경 제안

- 생태환경 법정계획은 접경지역을 모두 DMZ로 총칭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접경수역인 서해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이르는 지역은 DMZ가 아님.
 - 군사정전협정 제1조, 제2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남북 접경지역은 첫째, 파주시 정동리에서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까지 총 248km의 거리에 200m 간격으로 1,292개 표지판이 설치된 지상 접경지역으로서 DMZ, 둘째, 한강하구 중립수역, 셋째, 서해5도로 구분
- 정부의 법정계획에서 남북 생태환경협력 공간을 DMZ로 국한할 경우 북한의 생태환경 관심이 집중된 서해 접경수역은 원칙적으로 협력대상 지역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음.
 - 북한의 관영매체와 다양한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생태환경 분야 정책수요가 집중된 공간은 DMZ보다는 서해와 동해에 집중

- 따라서 남북 생태환경협력 추진에 대비해 중앙정부 생태환경 법정계획에 ‘한강하구 및 서해 접경수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관련 추진과제를 발굴할 것을 제안함.
- 즉,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등 3대 국가 핵심생태축의 하나인 ‘DMZ’를 ‘DMZ 및 서해·한강하구’로 수정할 것을 제안

2) 중앙정부와 접경 지자체 간 정책네트워크 강화 제안

- 남북 생태환경협력 추진과제를 담은 중앙정부의 법정계획들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접경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중앙정부 법정계획과 연계한 실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
- 그러나 중앙정부와 접경 지자체에서 수립한 법정계획은 연계성이 부족함. 특히, 중앙정부 법정계획은 접경지역을 DMZ로 국한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수립한 생태환경협력 추진과제가 북한의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함.
- 따라서 중앙정부는 접경 지자체, 특히 인천시와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앙정부 법정계획과 접경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인천시 생태환경 법정계획에 ‘서해·한강하구’ 공간 명기 제안

- 인천시 남북 생태환경협력 추진과제는 「생물다양성전략」, 「환경보전계획」,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등 3개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동 계획들에서 제시된 남북협력 과제는 인천의 지리적·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DMZ를 공간적 범위로 특정하고 접경지역, 민북지역 등으로 협력공간을 제시하는 반면, 인천시는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추진과제 제시
- 중앙정부 법정계획에 DMZ가 공간적 범위로 특정되어 있어 경기도와 강원도는 DMZ와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진과제 설정 가능
- 중앙정부 법정계획들의 법률적 근거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은 중앙정부 법정계획과 연계하되,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생태환경 관련 법정계획에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서해·한강하구’를 공간적 범위로 포함할 것을 제안함. 아울러 중앙정부 법정계획에 ‘서해·한강하구’가 DMZ와 함께 남북협력의 공간적 범위로 병기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문제제기 및 건의할 것을 제안함.
- DMZ는 남한의 주권이 제약받는 공간이면서 지리적으로 남북 주민과 국제기구의 활동이 쉽지 않은 공간임. 또한 동서해와 달리 북한의 생태환경 정책수요에서 다소 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적 호응을 유도하기도 쉽지 않음.
- 이에 반해 한강하구는 군사정전협정 상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립수역이면서 2018년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한강하구를 공동 이용하기로 남북한 간 합의함. 또한, 서해5도와 주변수역은 2007년과 2018년 남북정상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한 공간임.
- 따라서 중앙정부 및 인천시 법정계획에 남북 생태환경협력 공간으로 ‘DMZ 및 서해·한강하구’를 병기할 경우 인천 서해 남북 접경수역을 국제법적 및 남북한 합의에 기초한 공간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음.

4)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생태환경협력 사업 발굴 제안

- 인천시는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21년 6월,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2021-2025)」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동 시행계획은 4대 전략 2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천이 지닌 지리적·생태환경적 장점을 활용한 사업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기본계획은 접경지역이 갖는 접촉과 협력의 특성을 활용하여 서해5도와 한강하구를 한반도 평화·번영 선도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평화정착, 남북화합의 중심도시’를 목표로 설정
 - 그러나 시행계획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시하는 4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형 남북교류’에 인도지원, 사회문화, 경제협력 등 3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이 갖는 접촉과 협력의 상징인 생태환경 분야는 제외

-
- 향후 2023년 시행계획 수립 시 인천 접경수역이 지닌 지리적·생태환경적 공간의 장점을 살려 인천 송도국제도시 입주 국제기구와 협력강화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추진과제를 선정해 포함할 것을 제안함.

5) 평화 공감대 형성·증진을 위해 인천 서해 남북 생태환경 자산 활용 제안

- 인천시는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두 번째 전략인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해평화특별기간 운영,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가 국제협력 방안으로 제시한 4대 추진방향 중 ‘서해 생태평화 공감대 증진·확산’에서 제시한 추진과제를 동 전략 수행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 특히, 서해평화특별기간에 인천 서해 남북 접경수역 생태환경 자산을 활용한 그림·사진 등 전시회 개최, 스토리텔링 생태문화행사, 세계철새의 날 행사 등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국제기구를 통해 스토리텔링형 생태지도 및 교구를 제작해 동 행사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시의 남북협력 정책과 과제

■ 남근우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과 목적

-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협력 컨센서스에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천 접경수역이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확인하고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과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 기후환경협력 추진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함.
- 첫째, 본 연구는 2020년 11월 발표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 뉴딜’과 연계할 수 있는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기후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둘째, 인천시가 수립중에 있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에 북한의 정책수요와 인천의 지정학적 장점을 연계해 반영할 수 있는 남북협력 실천과제를 발굴함.
- 셋째,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인천 접경수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방향과 실천과제를 발굴함.

2. 정책제언

1) 인천 접경수역 중심의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 북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수요가 크고 서해에서의 남북 긴장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풍력, 태양광, 조수력, 산림 등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지원이 풍부한 인천 접경수역을 중심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함.

2) 중앙정부-접경 지자체 간 ‘그린평화시대 정책협의체’ 구성

- 중앙정부는 접경 지자체의 정책을 조율·통합하는 역할자로서 서해~한강하구~DMZ에 이르는 한반도 접경지역 그린평화시대화의 총괄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 이는 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해 접경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접경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정책수립 등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과제 도출이 필요함을 의미함.
- 따라서 한반도 탄소중립 실현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확보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접경지역 그린평화시대화 추진을 지자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그린평화시대 정책협의체’를 통해 필요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3)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남북 기후환경협력의 공간적 범위로 ‘서해·한강하구’ 포함

- 인천 접경수역의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해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서해와 한강하구를 남북협력의 공간적 범위로 반드시 설정해야 함.
 - 구체적으로 남북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DMZ 및 서해·한강하구’로 설정할 것을 제안
- 구(舊)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된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과 하위 부문 법정계획 및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에 포함된 남북협력 추진과제는 DMZ를 중심으로 수립된 분명한 한계가 있음.

4)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에 인천형 남북협력 실천과제 반영

- 인천시는 2022년 말까지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이에 본 연구에서 ‘자연재난협력’, ‘감축원협력’, ‘흡수원협력’, ‘도시협력’, ‘국제협력’ 등 5개 분야별로 제안한 남북협력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정책수요와 정부의 그린데탕트 전략과 연계해 인천 접경수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 실천과제를 동 전략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5) 민선 8기 ‘강화군·옹진군 남북교류협력 거점지역 육성’ 전략에 반영

- 본 연구가 제시한 인천시 남북 탄소중립협력 6대 추진방향과 5대 실천과제를 민선 8기 인천시 남북협력 정책인 ‘강화군·옹진군 남북교류협력 거점지역 육성’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6) ‘황해평화포럼’을 남북 그린데탕트 논의의 플랫폼으로 활용

- 인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황해평화포럼을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과 연계해 인천 접경수역 그린평화지대화 논의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황해평화포럼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천의 역할과 서해 접경수역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활발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인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논의의 장,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에 대비한 추진체계 및 시나리오별 추진방안 마련

- 인천시의 남북 탄소중립협력은 남북관계 개선 여부 및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약이 필요한 증장기 과제임.
- 따라서 인천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남북 탄소중립협력 6대 추진방향과 5대 실천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관계 긴장도를 고려해 중앙정부와 정책협약이 필요한 사업과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시나리오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인천 데이터 체계 연구

■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공공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공공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이슈에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인천시의 경우 ‘(가칭)인천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現)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수집 데이터의 양과 질을 고도화하고,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위 필요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짐.
 - 첫째, 공급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현(現) 인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플랫폼의 현황과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활용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둘째, 데이터의 수요적 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 경제 및 기업 분야, 일반시민 분야, 공무원 분야 등의 수요적 측면을 고찰하고자 함.
 - 셋째, ‘(가칭)인천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데 있어 데이터를 어떻게 유형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위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 국가 데이터 정책 현황 분석: 국가정책 현황과 공공데이터포털 체계 분석
 - 인천 데이터 현황 분석: 인천 데이터 정책과 인천 데이터 체계 분석
 - 데이터 수요 도출: 연구 및 공공데이터포털, 인터뷰를 통한 데이터 수요 도출 및 수요 맞춤형 데이터 제공의 한계
 - 국내·외 데이터 체계 및 활용 현황 분석
 - 인천데이터포털 관리과제 제시

2. 연구결과

1) 운영현황으로 본 시사점

- 국가 데이터 정책 현황 및 플랫폼 운용 현황, 인천 데이터플랫폼의 현황과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활용 데이터 현황을 살펴봄. 향후 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논의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 국가정책 운영과 연동된 데이터정책 체계구축 필요
 - 데이터의 양적 증가와 비정형데이터 축적 필요
 - 공무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필요
 - 공공데이터포털과 인천데이터포털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유형화 방안 마련 필요
 - 시민 소통을 위한 인천데이터 활용방식으로서의 변화 요구
 - 인천시의 특성을 활용한 데이터 생산과 관리

2) 수요조사 결과로 본 시사점

- 중앙정부 데이터플랫폼에 나타난 국민의 데이터 요구조사, ICT 서비스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부산 사례), 인천시민 대상 데이터포털 인식조사, 공무원 대상 데이터포털 인식조사, 군·구 등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현황 조사, 연구자 대상 데이터 수요와 문제점 조사, 예비 연구자 대상 데이터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수요에 따른 정보공개와 한계에 대한 인정 필요
 - 중앙정부에서의 데이터 수요 대응 결과와 데이터 요구사항을 통한 데이터 발굴 필요
 -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홍보를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
 - 데이터 활용사례의 탑재와 늘어나는 데이터 행정예의 대응 필요

3) 사례분석에 따른 시사점

-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포털 사례, 국외 공공데이터포털 사례를 통하여 사례별 데이터 유형화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함. 이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플랫폼별로 다른 데이터 유형화 방식 활용

-
- 오프라인 공간 구축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계기 마련
 -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분류체계 마련 필요
 - 하향식 데이터셋의 마련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필요

3. 정책과제

1) 공급적 측면에서의 과제

- 국가 중앙정부 정책과 연동된 데이터 관리 정책 필요
- 데이터의 양적 증대와 비정형 데이터 축적, 메타데이터 체계 도입
- 인천시 특성을 활용한 데이터 생산
- 공무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 지속적 현행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2) 수요적 측면에서의 과제

- 시민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데이터포털 활용
- 수요에 따른 정보공개 방식 마련
-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외부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기관 간 연계(Alliance) 확대
- 홍보를 통한 데이터 활용 증대
- 데이터 활용사례 탑재
- 오프라인 공간 구축 필요성과 논의 필요

3) 데이터 유형화

- 중앙정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의 형태를 활용한 데이터 유형화 필요
- 데이터플랫폼별로 다른 데이터 유형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유연한 활용 요구
- 제공(서비스)유형(예: sheet, chart, map, file 등)에 따른 분류 필요성 제기

‘(가칭)서해평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 남근우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북한, 통일, 평화와 관련한 연구, 활동 및 정책 수립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기초자료의 활용은 매우 중요함. 특히, 수요자가 다양한 분야의 자료와 정보를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인천시는 인천지역의 평화자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오픈소스 디지털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가칭)서해평화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함.
 - (가칭)서해평화 플랫폼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2025)」의 핵심추진 과제인 ‘평화·통일 공감 형성사업 추진사업’에서 중기(2020~2025) 사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며, 기본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 소관과제에 동 명칭으로 제시
- 본 연구는 인천시의 (가칭)서해평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연구의 성격으로서 아카이브 플랫폼의 일반성과 차별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분류체계를 크게 2단계(대분류>중분류)로 제시하고 플랫폼 실현을 위한 단계별(수립-발전) 구축전략을 제시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산 분류체계 선행연구, DMZ·접경지역 관련 선행연구를 비롯해 4개의 아카이브 플랫폼 사례를 분석해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와 정책적 관심 분야, 아카이빙 대상 자산의 분류체계 및 서해평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

2. (가칭)서해평화 플랫폼 아카이브 구축방안

- DMZ·접경지역 관련 선행연구와 네 개의 아카이브 구축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해평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현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서해평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연구의 성격으로서 아카이빙 대상 수록 자료의 분류체계를 크게 대분류와 중분류 등 2단계로 제시
- 서해평화 플랫폼 아카이빙 대상 수록 자료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류체계를 제시하기 때문에 향후 수집 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 대분류군의 명칭과 이에 따른 하위분류군(중·소·세부)의 명칭과 주제 변경 가능
 - 서해평화 플랫폼 아카이빙 분류체계를 2단계로 제시하기 위해 분류체계의 기준과 방향, 구성요소 등 제시
- 분류체계를 포함해 서해평화 플랫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구축 단계별 전략을 ‘수립단계’와 ‘발전단계’로 구분해 제시
 - 실제 서해평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제시한 단계별 전략에 대한 학계·시민사회의 지역 전문가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 가능

3. 정책제언

1) 서해평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단계별 중기 로드맵 수립

- (가칭)서해평화 플랫폼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2025)」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평화·통일 공감 형성사업 추진사업’의 세부과제인 ‘평화도시 인천 아카이브 조성’ 사업으로 계획(2020~2025)되었음. 그러나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2022년 11월 말 기준 추진 동력 약화됨.
- 서해평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계획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향후 플랫폼 구축의 여건이 마련될 때를 대비해 보다 정교한 중기 로드맵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선행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플랫폼 구축은 중기적 차원에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

2) 서해평화 플랫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운영 주체 선정

- 서해평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인천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운영주체를 사전에 선정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플랫폼 구축 전 과정에 참여한 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함. 기록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3) 인천지역 평화자산 적극 활용을 통한 서해평화 플랫폼 구축의 당위성 확보

- 인천지역 평화자산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디지털 웹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과 청소년들이 인천지역 평화자산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함으로써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평화자산을 인천시민과 청소년들의 일상 및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서해평화 아카이브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는 것이 플랫폼 구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함.

캠프마켓 시민공론화 운영 방안

■ 김정욱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개요

- 공론화는 숙의(Deliberation)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제도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
-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캠프마켓은 2022년 하반기 완전 반환을 앞두고 있으며,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음.
- 캠프마켓 부지의 공원조성 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보하며,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캠프마켓 부지 활용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2. 캠프마켓 부지 활용을 위한 공론화 운영 방안

- 본 연구가 제안하는 캠프마켓 공원조성의 공론화 결정 모형은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됨
 - 1단계는 공론화 운영의 결정 기준임. 적합성과 현실가능성으로 구성됨.
 - 2단계는 공론화 운영 방식의 선택 기준임. 참여 목적, 정책 단계, 참여 목적, 참여 주체, 참여 기간으로 구성됨.
 - 3단계는 공론화 운영 방식의 선택과 실행임. 공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배심원제, 합의의회 등 구체적인 참여 방식을 선택하는 단계임

1) 공론화 운영의 결정

- 먼저, 공론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공론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정책 결정과 집행 등에 있어서 항상 옳은 방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임.
-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선호가 바뀔 수 있는지, 공론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나 시간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함.

2) 기준

❖ 적합성

-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인 공론화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책대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임.
- 둘째, 캠프마켓 부지의 공원조성에 관한 현행 법률과 제도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공론화를 통한 공원 조성 방향의 설정이 현행 법률이나 제도에 상충될 경우, 공론화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임. 또한, 공론화 운영 시, 환경 관련 법률이나 문화재 규정 및 권고사항 등을 준수하며 공원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캠프마켓 부지의 공원조성을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봐야 함. 시민들이 숙의하기에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특정 조직의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 등은 공론화 주제로 적합하지 않음.

❖ 현실가능성

-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캠프마켓의 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시간과 예산의 투입가능성, 공론화 운영을 위한 역량과 신뢰 등의 뒷받침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함.

3) 공론화 운영 방식의 선택 기준

❖ 참여 목적

- 캠프마켓 부지 공원 조성의 경우 다양한 수요를 갖고 있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공원 조성)을 기획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정책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참여 목적이 정책 품질의 제고인 경우, 적합한 공론화 방식은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등임(ProDemos, 한국행정연구원, 2020).

❖ 정책 단계

- 캠프마켓 사례는 의사결정권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 즉, 자문과 협의 단계의 참여방식임.
-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집하거나(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정책을 결정하는 (공동결정, 주민결정) 수준의 참여 방식은 아님.

❖ 참여 수준

- 캠프마켓 사례는 의사결정권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 즉, 자문과 협의 단계의 참여방식임
-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집하거나(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정책을 결정하는 (공동결정, 주민결정) 수준의 참여 방식은 아님

❖ 참여 주체

- 캠프마켓 부지에 조성될 공원은 인천시가 조성하는 공원이므로, 공원조성 방향 공론화에 참여하는 주체는 인천시민이 됨.
-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의 규모는 예산에 의해 제약될 수 있겠으나, 조성될 공원이 전체 시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론화에 가능한 많은 시민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여 시민의 규모는 공론화의 참여 목적과 수준, 정책 단계, 그리고 기존의 운영된 사례에서 참여한 인원이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참여 기간

- 기존의 사례에서는 공론화는 위원회의 구성과 의견조사, 숙의과정, 합의의견 도출 및 의견서 제출을 포함하여 3~10개월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숙의과정은 2~5일 정도로 운영됨.
- 캠프마켓 부지의 공원조성을 위해 공론회를 운영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됨. 캠프마켓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안 수립 전에 비정기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4) 공론화 운영 방식의 선택과 실행

❖ 1단계

-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캠프마켓 부지의 공원조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다룰 세부 의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논의하여 결정함.

❖ 2단계

- 주제와 적합한 공론화 운영 방식을 선택하여 공론화를 진행함. 본 보고서에서는 공론조사(제1안)와 공론조사 및 시나리오 워크숍(제2안)으로 나누어서 제안함.

❖ 3단계

- 3단계에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론화의 전체 과정과 숙의과정을 통해 확인된 시민 의견의 조사결과와 정책제안을 발표함.

| | 제1안 공론조사 | 제2안 공론조사 + 시나리오 워크숍 |
|-----------------------------|---|---|
| 1단계 의제설정 및 운영방식 결정 | 공론화추진위원회 • 의제설정(적합성, 현실가능성) • 공론화 운영방식 결정(참여 목적·수준·주체·기간, 정책 단계) | |
| 2단계 공론화 운영 | 1) 공론조사(1차) • 일반시민 1,000명 구성 • 지역별, 연령별, 성별 비율 고려 층화추출 2) 교육 및 학습 • 숙의단 200~300명 구성 • 지역별, 연령별, 성별 비율 고려 층화추출 3) 공론조사(2차) • 교육 및 학습에 참여한 숙의단 대상 4) 숙의과정 • 주제발표 및 토론, 분임토의 5) 공론조사(3차) • 숙의과정에 참여한 숙의단 대상 | 1) 시나리오 워크숍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25~30명 구성 2) 공론조사(1차) • 일반시민 1,000명 구성 • 지역별, 연령별, 성별 비율 고려 층화추출 3) 공론조사(2차) • 숙의단 200~300명 구성 • 지역별, 연령별, 성별 비율 고려 층화추출 4) 숙의과정 • 시나리오 학습 및 평가 5) 공론조사(3차) • 숙의과정에 참여한 숙의단 대상 |
| 3단계 결과발표 및 평가 | 공론화추진위원회 • 공론화 개요 및 결과 발표 • 보고서 발간 및 공론화 평가 | |

자료: 채종현 외(2019), 104쪽, 공론화 모델 구성도(안)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연수구형 마을공유공간 조성 및 방안

■ 김정욱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연수구의 공동체 활동 및 공유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수구의 주거형태 및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마을공유공간 조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마을공유공간은 지역주민들이 회의, 교육, 문화, 체육 등 지역주민 공동의 편의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공유공간으로 정의함.
- 본 연구는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의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우수사례를 조사함.

2. 마을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방안

1) 마을공유공간 조성에 대한 사항

- 연수구에 마을공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수구의 환경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내 마을공유공간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마을공유공간의 조성, 일반주택지역의 마을공유공간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음.

❖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 활용

-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
 - 연수구는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가 조성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의 동의과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공유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마을공유공간은 복지나 교육프로그램 등 외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교류하고, 주민이나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회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함.

❖ 공동주택단지 내 공간 활용

- 둘째,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들의 교류나 소통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유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연수구는 공동주택단지의 비율이 타 지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있지 않거나 조성은 하였지만 방치되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마을공유공간 사업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임.
- 공공의 자금으로 마을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공동주택단지 외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주택지역 내 공간 조성

- 셋째,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간조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마을공유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
 -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빈집이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마을공유공간을 조성할 여지가 있을 것임.
 - 무엇보다 빈집에 대한 정보나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자료 구축을 위한 정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마을공유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영방식

- 먼저, 직영방식으로 마을공유공간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주민들이 마을공유공간을 주중 저녁이나 주말(예를 들어 주중 저녁 6시~9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통해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자원봉사자를 마을공유공간의 운영에 참여하게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은 제공되어야 함. 연수구자원봉사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마일리지 등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
 - 마을공유공간의 기간제 근로자나 자원봉사자가 마을공유공간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방식

- 둘째, 민간기관에 마을공유공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민간위탁방식으로 마을공유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연수구가 소유하고 있는 마을공유공간의 소유권은 연수구가 갖되, 공간의 운영을 위탁기간동안 민간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함.
- 민간위탁방식은 연수구청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마을공유공간의 활용목적을 기초로 운영에 참여하기 원하는 민간조직과 협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민간조직에 부여하고, 공간활용에 대한 권한을 민간기간에 위탁하는 것임.
-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마을공유공간의 활용과 관련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마을활동이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조직에 한정되어야 할 것임.
- 연수구청은 위탁기관에게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마을공유공간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마을공유공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받게 할 수 있게 하거나 공간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을 통해 필요한 경비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마을공유공간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나 교류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프로그램이나 수익사업 등은 공동체 활동이나 소통과 교류증진과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생산방식

- 마을공유공간을 운영하는 세 번째 방식으로 공동생산방식이 있음. 공동생산방식은 공공기관과 주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마을공유공간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마을공유공간을 이용하는 주민조직이나 공동체, 동아리가 연수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마을공유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연합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공간을 운영함. 연합조직에서 운영비 등을 포함한 운영을 위한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함.
- 연수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관련 규정을 보완,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하고, 운영은 연합조직에 참여하는 주민조직이나 공동체, 동아리 등이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마을공유공간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자체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단지에 조성된 마을공유공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단지에 관리 또는 승인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공동체나 동호회 등을 통해 운영될 수 있음.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사전 검토 연구

이정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천시는 2022년 8월, 현행 8구·2군 행정체제를 9구·2군으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함
 - 행정체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1)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통합한 제물포구의 신설, (2) 중구 영종지역의 영종구 분구, (3) 서구 지역의 서구와 검단구 분구임
- 본 연구는 2023년부터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과제들에 대하여 제언함

2.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검토 및 진단

- 중구 내륙·동구 원도심 생활권의 경우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주거·복지·교육·교통·문화 등의 측면에서 한계점을 진단하고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원도심 활성화 전략 필요성을 논의함
- 영종의 경우 중구 내륙과 서로 다른 생활권역이 형성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복지·행정서비스 등 영종 지역 내 생활권 중심의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논의함
- 서구는 현재 5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검단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향후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서구에만 약 7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주민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검단출장소 운영체제가 지닐 한계점 등에 대하여 진단함

3.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언

-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 등 절차적 관리과제를 제시하고,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글로벌시티 프로젝트 등 인천시 핵심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관리과제를 제시함

II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교육·복지 분야

● 기초연구

인천시 도시건강모델 개발 연구

●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시민인권교육 현황과 향후 과제

● 정책연구

인천시 1인가구 특성과 정책 방향

● 군·구협약 정책연구

중구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이슈브리프

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체계 비교

팬데믹 시기 보편적 아동 돌봄서비스 의미

인천시 1인가구 정책 제언: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인천형 도시건강모델 개발 연구

■ 이용갑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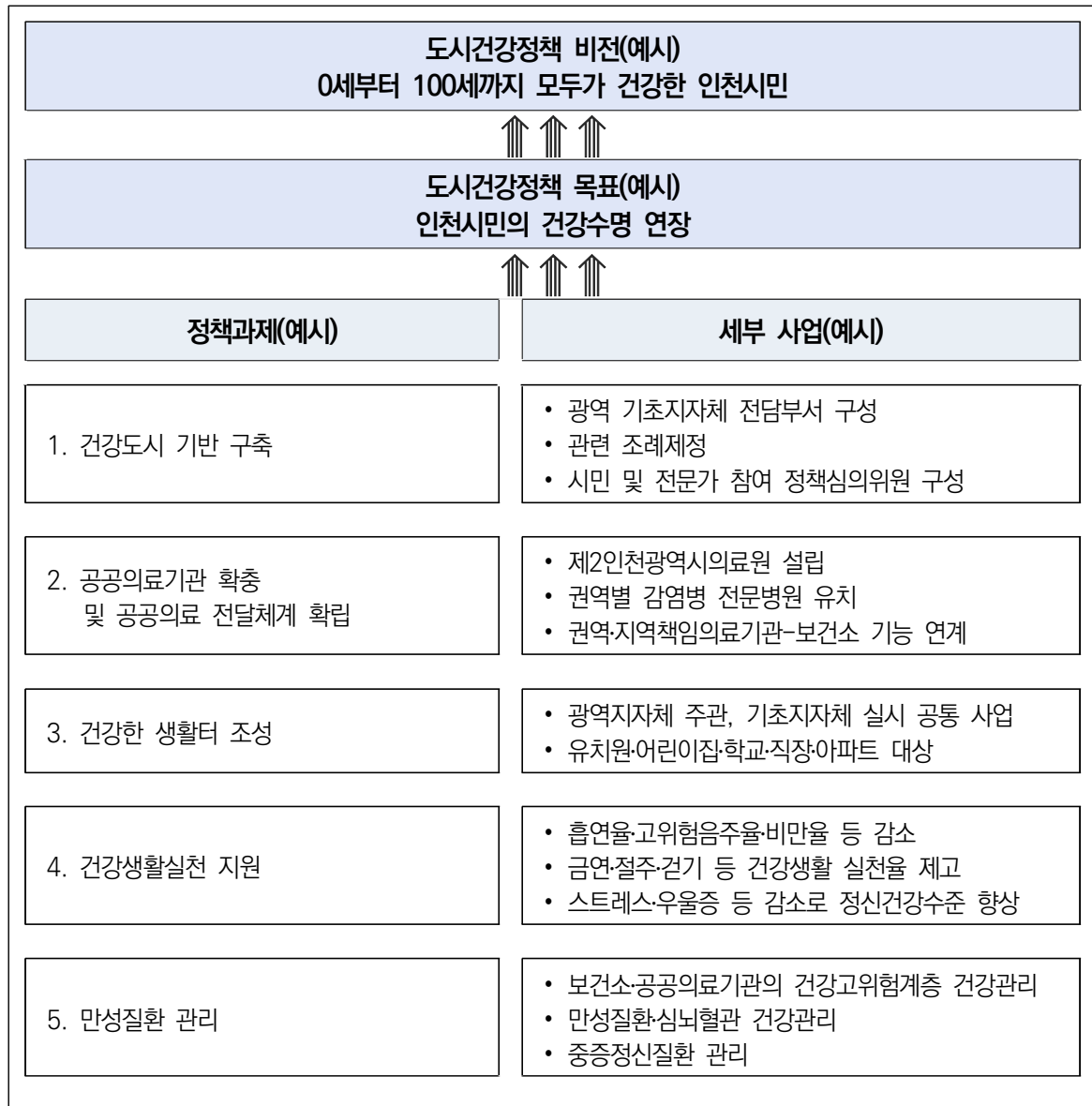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거주 시민의 건강을 향상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구체적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소위 ‘인천형 도시건강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가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군·구 간 건강수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도시건강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건강도시사업을 군·구와 함께 실시하고, 군·구의 독자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인천형 도시건강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2. 인천형 도시건강모델 개발

1) 인천형 도시건강모델 개발의 기본 방향

- 인천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민선8기 집행부의 시정공약 실현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강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개발하여 자치 군구와 함께 실시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소위 ‘인천형 도시건강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첫째, 자치 군·구와 함께 하는 인천의 도시건강정책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정책과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도시건강정책을 기획하고, 건강도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조직구성, 인력충원, 예산확보, 자치 군구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로 건강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도시건강정책을 기획하고, 건강도시사업을 수립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함

[그림 1] (예시) 인천광역시 도시건강정책의 비전, 목표, 정책과제, 세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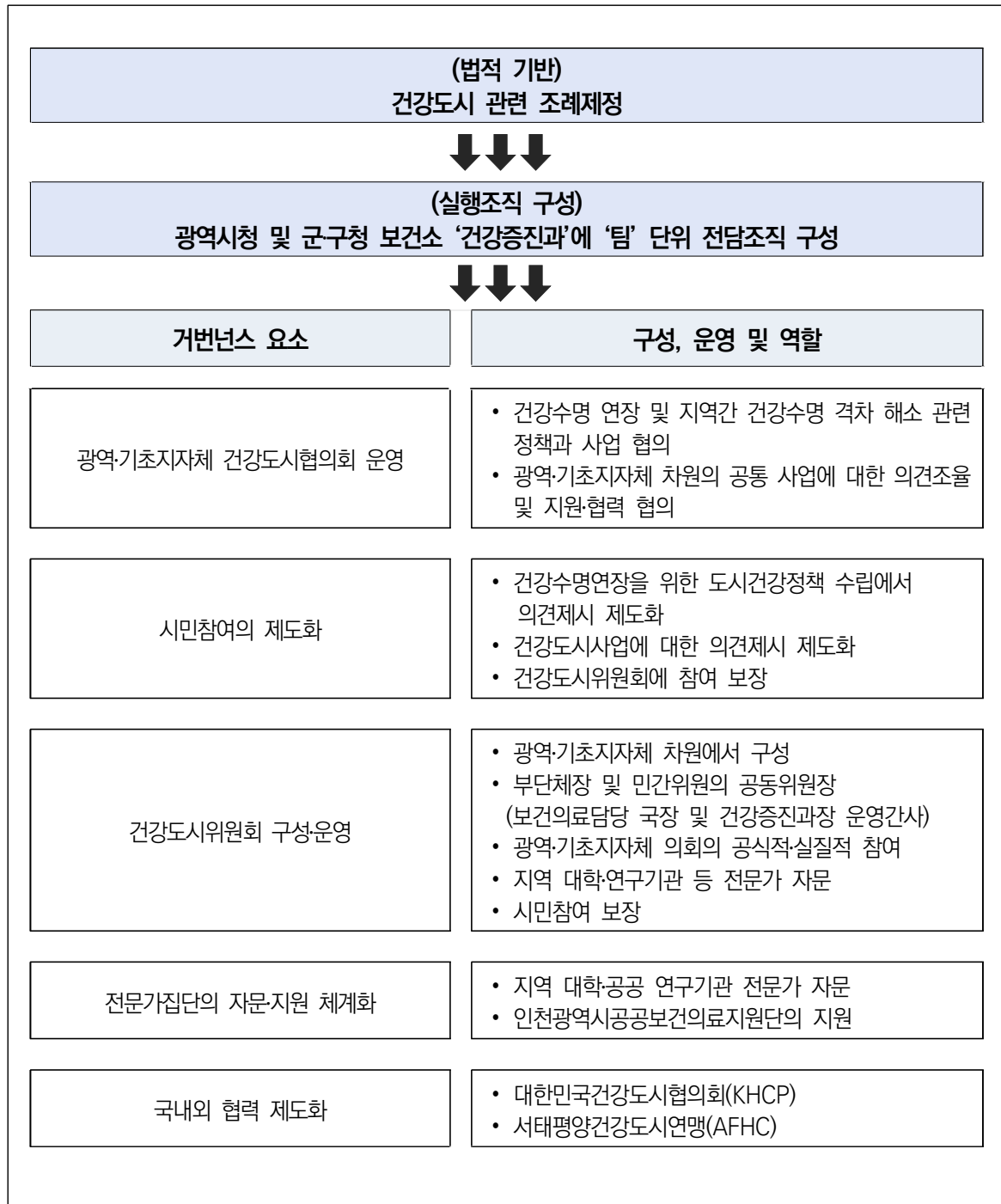
- 넷째, 도시건강의 목표를 예를 들어 '건강수명 연장'으로 설정하면 광역지자체의 사업과 기초지자체의 사업을 구분하여 기획하고, 협력하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에 가입하여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가 조례제정과 함께 지자체의 모든 정책에 건강요소를 고려하고,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인천광역시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과 군·구 보건소와의 공공의료기관 전달체계 구축이 도시건강정책의 목표달성과 건강도시사업 실시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일곱째, 건강도시사업의 내용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 군·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광역지자체 사업,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범주화할 수 있음

2) 인천형 도시건강모델 및 거버넌스 구축

- WHO가 제시하는 건강도시의 목적 중 하나인 지자체의 ‘모든 정책에 건강요소를 고려(Health in All Policies)’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건강도시사업을 실시하는 소위 ‘인천형 도시건강모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건강도시 관련 조례제정
 - 기본계획, 건강도시 조성사업, 재정지원, 건강도시위원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는 건강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지자체 집행부는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전담인력의 배치
 - 현재 인천광역시 건강보건국의 건강증진과에 도시건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군·구와 함께 실시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건강도시팀’이 조례제정을 기반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셋째, 광역·기초지자체 건강도시협의회 구성·운영
 -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 군·구에 가칭 ‘인천광역시 건강한 생활터 조성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 방향과 내용을 교육하고 모니터링하며,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 넷째, 시민참여의 제도화
 - 시민참여의 제도화는 ①건강수명연장을 위한 도시건강정책 수립 및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제시 제도화, ②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지자체 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건강도시위원회’에도 시민의 참여 보장 두 가지 차원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림 2] 가칭 ‘인천형 도시건강모델’의 거버넌스



- 다섯째, 건강도시위원회 구성·운영
 -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건강도시사업 담당 부서 공무원, 외부 전문가, 지자체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가칭 ‘건강도시위원회’는 도시건강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건강도시 조성사업 및 이를 위한 재정지원, 건강도시사업 수행을 위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여섯째, 전문가집단의 자문·지원 체계화
 - 조례에 근거한 가칭 ‘건강도시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자문, 모니터링, 분석, 피드백 등이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전후에 전문가집단의 자문과 지원이 필수적임
 - 인천연구원과 같은 지역사회 공공 연구기관, 대학 및 ‘인천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같은 공식 조직의 지원으로 전문가 자문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건강도시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광범위할 수 있을 것임
- 일곱째, 국내외 협력의 제도화
 - 국내적으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국외적으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인천광역시와 자치 군·구의 건강도시사업 자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국내외 건강도시들과 협력하고, WHO의 건강도시 관련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준회원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인천광역시 및 자치 군·구의 도시건강정책과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학술적 지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임

인천광역시 시민인권교육 현황과 향후 과제

■ 배은주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위원회 설치가 광역시급 중에서 늦게 이루어졌고,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늦게 수립된 탓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 및 기구 마련,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 등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인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제는 시민 대상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먼저 인천시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인권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그 추진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및 10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반 시민 대상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며,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것임. 인권교육의 수요자인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추진과제는 후속연구에서 기대함

2. 인천광역시 시민인권교육 추진 방향과 과제

❖ 기본 방향: 공감하고 실천하는 시민참여형 인권교육

- 시민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과 결과물로서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모든 시민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에 공감하면 할수록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인권교육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음. 또한, 인권교육의 결과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다양한 인권 활동을 실천하는 행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시민인권교육은 이제 시작한 초보 단계이며, 따라서 그 기본 추진 방향은 ‘공감하고 실천하는 시민참여형 인권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인권교육 추진기반 강화, 인권문화 확산, 인권교육 프로그램 확대의 세 가지 영역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영역별 세부 추진방안을 추진 주체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리고 세부 추진방안을 실시하고자 할 때 광역과 기초단체의 협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

[표 1] 시민인권교육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

| 구분 | | 세부 추진방안 | | 추진주체 |
|--------------------------|--------------|---|-------------------------|-------|
| 인권교육 추진기반 강화 | 법적·제도적 차원 | •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교육 지원근거 마련 | | 광역/기초 |
| | | • 인권 관련 업무 전담 부서 설치 | | 광역/기초 |
| | | • ‘광역(인권부서-유관부서-공공기관)-기초(인권부서-유관부서-공공기관)’의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 | 광역/기초 |
| | | •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인권교육 지표 포함 | | 광역/기초 |
| | 협력·지원 차원 | • ‘광역-기초-인권단체’의 인권교육네트워크 구축 | | 광역/기초 |
| | | •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과제 발굴 | | 광역 |
| | | • 인권교육 관련 정보 공유 | | 광역 |
| | | • 인권단체 및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 | 광역 |
| | 인권문화 확산 | • 인권주간 축제와 행사 | | 광역/기초 |
| | | • 인권교육 홍보 | | 광역/기초 |
| 인권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 대상별 | 일반 시민 대상 | • 평생학습관(진흥원)을 통한 생활인권교육 | 광역/기초 |
| | | | • 구민(시민)대학을 통한 체계적 인권교육 | 광역/기초 |
| | | • 찾아가는 주민생활인권교육 | 기초 | |
| | 취약계층 대상 | • 취약계층 이용 공공기관을 통한 생활인권교육 | 기초 | |
| | | • 찾아가는 생활인권교육 | 기초 | |
| | 다양한 형식 | •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화 | | 광역/기초 |
| | | • 교수학습 방식의 다양화 | | 광역/기초 |
| | 실천형 | • 인권지킴이 양성 | | 기초 |
| • 인권학습동아리 | | 기초 | | |

인천시 1인가구 특성과 정책 방향

정혜은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천시 1인가구 비율은 2020년 기준 28.3%로 7대 도시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2010년 대비 증가율은 70.2%로 가장 높았음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사회관계, 경제활동, 건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또한, 1인가구는 세대 및 성별 특징을 보이므로 이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인천시는 ‘인천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2022년 2월에 제정하였으며, 인천시 정책은 1인가구에 대해 분절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인천시의 1인가구 종합적 정책 마련을 위하여 인천시 1인가구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 결과

1) 인천시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 인천의 경우 2020년 1인가구 비율이 28.3%로 국내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2010년 대비 2020년의 증감률은 70.2%로 가장 높았음
- 2020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옹진군(41.6%), 중구(38.8%), 강화군(29.1%)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서구(24.3%)였음

- 인천시 1인가구의 특성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성별, 연령, 혼인상태, 주거점유 형태에서 차이를 보임
 - 전국과 비교하면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높고, 50대의 비율이 높으며, 이혼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음
 - 또한, 주거점유 형태에서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이 높은 전국 분포와는 다르게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인천시 1인가구를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이트 싱글, 블루 싱글, 실버 싱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학력, 소득, 성별 등 기본 특성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2) 인천시 1인가구 정책 현황

- 인천시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사회관계 위주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었음
 -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월세지원, 청년 공간 제공 등
- 청년층 대상 정책을 제외하고는 인천시 1인가구 정책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임
 - 독거노인의 안전, 고독사 예방 및 치매 관리 등
 -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생계비 지원, 활동지원, 주거공간 제공 등
- 인천시 군·구별 1인가구 정책 역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업 위주임

3) 사례 조사

- 서울시의 경우, 시장직속 1인가구특별대책 추진단을 마련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등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도 하며,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구단위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 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6개 영역별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족센터, 노인종합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사업 영역에 맞는 수행기관이 담당함
- 광주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9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장기계획(2022~2026년)을 발표함

3. 정책 제언

- 인천시 1인가구 특성을 바탕으로 정책 기본방향으로 통합적 지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생애주기별 지속적 지원을 제시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7년 이후까지 3단계에 걸친 1인가구 지원 정책 로드맵을 제시함
 - 1단계: 1인가구 지원 체계 준비 단계(2022-2023)
 - 2단계: 1인가구 지원 기반 구축 단계(2024-2026)
 - 3단계: 1인가구 지원 정착 단계(2027-)
- 또한,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할 인천시 전담조직, 군·구 사업 수행 주체, 1인가구 유형에 따른 공동사업 및 중점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시함
 - 전담조직: 1인가구 전담 추진단 구성
 - 군·구 사업 수행 주체: 가족센터 활용 방안
 - 사업: 돌봄 및 안전 영역, 사회관계 영역은 전 생애에 걸친 공동사업으로 제안하며, 청년(화이트 싱글), 중장년(블루 싱글), 노년(실버 싱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안함

중구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배은주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출생인구의 급격한 감소,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급격한 디지털화의 전환 요구 등에 따라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의 요구가 높아지고 이를 통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중구 또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중구의 지리적 이원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 지역에 본관과 분관의 형태로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평생학습기관의 운영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평생학습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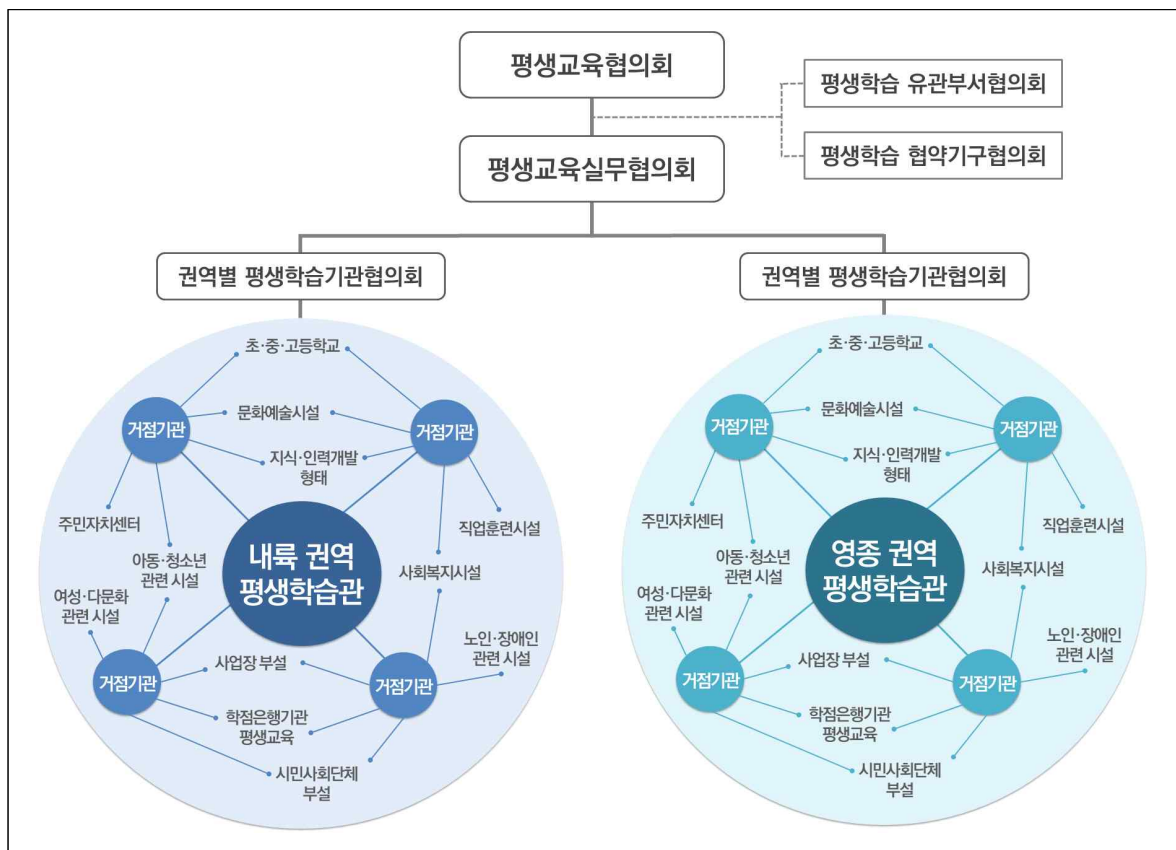
2. 중구 평생교육기관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과적·효율적 운영

- ‘함께 성장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중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구청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 및 이행에 발맞춰 주민들 스스로도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인 중구 관내 평생학습기관들도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질 좋은 평생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중구 평생교육이 부흥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구의 경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내 기관들이 가진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함. 중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기관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평생학습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중구의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도록 해야 함
- 따라서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세부적인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함

[그림 1] 중구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모델(안)



2) 추진 방안

- 내륙지역과 영종지역에 건립될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평생학습기관들, 그리고 이외의 다양한 평생학습기관들과 함께 연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평생학습기관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고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한 추진 방안 및 세부 과제를 도표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중구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방안

| 추진 과제 | 세부 방안 | 추진 지역 |
|--------------------------|---------------------------|-------|
|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권역별 평생학습기관협의회 정기개최 및 역량강화 | 공통 |
| | 평생학습 공동 홍보 및 행사 | 공통 |
| | 지역별·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통 |
| | 거점기관별 평생학습 특성화 | 공통 |
| |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 공통 |
| | 교·강사 교류 및 역량 강화 | 공통 |
| 평생학습 정보포털 구축 및 활성화 | 강사 인력풀 구축 및 정보 공유 | 공통 |
| | 공간 및 시설 정보 공유 | 공통 |
| | 프로그램 홍보, 정보 안내 및 공유 | 공통 |
| | 학습동아리 정보 안내 및 공유 | 공통 |
| 평생교육 인프라 및 인력 지원 | 학습공간의 유연한 활용 확대 | 공통 |
| | 무장애 평생학습 접근 기회 확대 | 공통 |
| | 내륙지역 노후 시설 및 장비 개선 지원 | 내륙 |
| | 영종지역 강사 운영 부담 해소 | 영종 |
| | 주말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 부담 해소 | 공통 |
| | 학습도슨트 양성 및 활용 제고 | 공통 |

3) 정책 제언

-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평생학습 유관부서협의회 구성 및 실행으로 유관부서들간 협력 및 조정 그리고 업무담당자들의 평생학습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둘째로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내실화를 통한 평생학습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공고화 등에도 중구청은 노력해야 할 것임

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체계 비교

■ 배은주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과 목적

- 도서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문화기반시설이면서도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임. 도서관 업무 관련 정책은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 소속으로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다가 문화정책 전담기관인 문화부가 탄생하면서 문화기반시설로서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정책 전담부서로 이관됨
- 도서관업무 전담 부서의 소속 유형별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장단점을 파악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2. 정책 제언

- 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주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할로 업무가 이루어짐으로써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이를 따르고 있음
- 도서관이 수행하는 평생교육 기능은 본질적 기능이 아닌 여러 부수적 기능의 하나로서, 도서관 업무의 관할 부서 변경을 위해서는 소관 부서 국장 및 도서관 업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서관의 특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의 강화 및 활성화에는 관련 업무의 소속 부서 편제보다는 도서관 업무를 바라보는 중요도, 우선순위, 예산확보,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인력 배치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팬데믹 시기 보편적 아동 돌봄서비스 의미

정혜은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과 목적

-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학교는 온라인 개학 및 단계적 등교수업을 진행하여 아동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에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사회계층별 다른 양상이 보고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돌봄 취약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팬데믹 시기 계층별 아동 돌봄의 경험과 가족관계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2. 정책 제언

- 보편적 아동 돌봄 체계 강화
 - 팬데믹 시기 공적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한 자녀 돌봄은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음
 - 현재 돌봄 공적체계가 저소득층·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편적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아동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군·구별 격차가 큰 만큼 군·구별 아동 수에 따른 장기적인 확충방안 마련이 필요함
- 팬데믹 시기 가정 내 돌봄 지원 강화
 - 팬데믹 시기 가정 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증가는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부모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인천시 1인가구 정책 제언: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정혜은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과 목적

- 인천시 인구는 2020년 기준 114.7만 가구로 이 중 1인 가구는 32.4만(28.3%) 가구를 기록함. 지난 20년간(2001~2020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1인가구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소득·건강·사회관계망 등의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안심종합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와 최근 1인가구 지원계획을 발표한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시 1인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2. 정책 제언

- 1인가구 정책은 다양한 대상과 정책 영역(주거, 안전, 돌봄, 건강 등)을 포괄하는 만큼 유관 부서의 긴밀한 협력체계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함
- 1인가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인천시 1인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인천시 군·구별 1인가구 특성이 다르므로, 군·구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밀착형 사업 개발이 필요함
- 증가하는 1인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인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경제자립교육·일자리 연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일자리 연계 등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문화·관광 분야

● 기초연구

인천 문화통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 정책연구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방안 연구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방안: 일진전기를 중심으로

캠프마켓 활용 음악산업지구 조성 방안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 발전방안

(구)인천우체국의 문화적 활용방안

● 군·구협약 정책연구

중구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훈관광 정책 방향

● 이슈브리프

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 정책 방향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현황 및 재원 확보 방안

인천 문화통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 민경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과 목적

- 본 연구는 여러 정책 영역 중 문화 분야 통계에 연구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지역이 문화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타 분야와 비교해 문화 분야에서는 자료 중복의 문제, 비교 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기 때문임(백선희·신인철·라도삼·박민진, 2019)
- 현재 인천에서는 「인천 문화지표조사»,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화 분야의 통계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자료수집 설계와 기준을 정립하지 않은 채 개별 기관의 관점과 수요에 따라 생산되고 있어 자료수집 및 활용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가 심화하지 않도록 인천 문화통계의 생산·관리 방식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변화하는 문화정책 수요 및 기초를 반영해 인천 문화통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기획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목적을 지님. 첫째, 인천 문화통계의 체계와 현황을 유네스코, 중앙,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하여 인천 문화통계 체계개선에 참고할 기초 근거 자료를 구축함. 둘째, 인천 문화통계 자료의 비교·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통계 생산·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인천 문화통계 개선 방향

1) 인천 문화통계 협력체계 구축과 주체별 역할 분담

- 인천 문화통계의 생산·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인천연구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업무 특성에 맞추어 역할을 분담할 것을 제안함
 - 앞선 장에서 진행한 지역 문화통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의견조사, 인터뷰 등에서는 문화통계 생산·관리를 총괄할 조직과 인력의 지정이 강조된 바 있음
 - 그러나 아직 인천에서 정기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문화 분야 통계의 양이 많지 않고 주요 보고통계는 인천시가, 조사통계는 인천문화재단이 생산하고 있는 형태여서, 문화통계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기보다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빈약한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조직적·인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함

[표 1] 인천 문화통계 개선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 구분 | | 담당 역할 |
|--------|----------|---|
| 인천시 | 데이터혁신담당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개방, 현행화 • 품질관리 지원 • 협력체계 구축·운영 |
| | 문화예술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통계 자료 취합·제출 • 근거법령 정비 및 예산 확보 • 보고통계 생산 • 문화정책 단위별 예산통계 구축 |
| 인천문화재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통계 생산 • 자체 품질관리 • 전문인력 확보 • 문화 트렌드 분석 및 맞춤형 큐레이션 제공 |
| 인천연구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통계 체계 분류 가이드 작성 • 중앙과 지역의 문화통계 생산 현황과 체계 비교·분석 • 통계자료 활용한 정책연구 수행 |

2) 문화통계 분류체계 가이드 작성과 정기적인 수정·보완

- 유네스코 문화통계 프레임워크에 따라 중앙·서울·경기의 문화통계를 분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표 2]와 같이 분류체계를 보완해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여러 통계 생산기관이 분류체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통계 분류체계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 작성이 필요할 것이며, 변화하는 문화 현상 및 사회적 수요에 기반하여 정기적으로 문화통계 분류체계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표 2] 문화통계 분류체계(안)

| 구분 | 가. 통합영역 | | | 나. 문화유산·문화재 | 다. 공연예술·음악 | 라. 시각예술·공예·만화 | 마. 도서·출판 | 바. 미디어 | | 사. 캐릭터·게임·지식정보 |
|--------------|---------|--------|---------|-------------|------------|---------------|----------|-------------|-------|----------------|
| | 복합 | 문화예술교육 | 생활문화·여가 | | | | | 영상·영화·애니메이션 | 방송·광고 | |
| 창작·생산 | 작품·문화재 | | | | | | | | | |
| | 인력·활동 | | | | | | | | | |
| | 산업·사업체 | | | | | | | | | |
| | 기반시설 | | | | | | | | | |
| 보급·전시·행사 | 활동 | | | | | | | | | |
| | 인력 | | | | | | | | | |
| | 산업·사업체 | | | | | | | | | |
| | 기반시설 | | | | | | | | | |
| 소비·향유·참여 | 활동·여건 | | | | | | | | | |
| | 인식 | | | | | | | | | |
| | 기반시설 | | | | | | | | | |
| 정책·제도·예산 | | | | | | | | | | |
| 시장규모·매출액·수출액 | | | | | | | | | | |

3) 상향식 문화통계 공유체계 구축

- 인천시와 인천연구원 및 인천문화재단이 시설별·영역별·사업별 데이터 수집 가이드를 개발·제공하고 자치구, 기초문화재단, 공공·민간문화기반시설에서는 가이드에 맞추어 자료를 작성하는 상향식 문화통계 생산·공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문화 현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에서 나아가 자치구, 공공·민간문화기반시설로부터의 각종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사업예산 및 운영 현황, 문화인력 현황 등에 관한 자료 공유가 필요함

4) 인천 문화통계 서비스 방식의 다각화

- 내실있는 문화통계의 생산·관리가 인천의 문화 현황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인포그래픽스나 문화통계 리포트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공급해야 함

5) 기존 문화통계 작성 주기 조정 및 신규 수집 주제 발굴

- 인천 문화통계의 활용도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 문화지표조사」의 작성 주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이를 2024년 조사 이후 시점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표 3] 향후 6년간 인천 문화통계 자료수집 시점(안)

| 통계명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 인천문화예술연감 | ○ | ○ | ○ | ○ | ○ | ○ |
| 인천통계연보 (문화)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사회지표 (문화와 여가) | | ○ | | ○ | | ○ |
| 인천 문화지표조사 | | | ○ | | | ○ |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 | | ○ | | | ○ |

- 그리고 인천 문화통계의 확충을 위하여 자문의견 조사 및 중앙과 서울 및 경기의 문화통계 현황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인천 문화통계 신규 주제(안)을 [표 4]에 제시함

[표 4] 인천 문화통계 신규 주제 설계(안)

| 통계명 | 주요 내용 | 비고 |
|-------------------|---|---|
| 인천시민 문화활동 실태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 실태(여가 시간, 여가활동, 동반자, 희망하는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 인식) • 문화예술활동 실태(관심도, 참여 경험, 경험 비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의향, 동반자, 관람 지역, 문화예술활동 인식, 생활문화 활동,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문화지표조사」에서 문화향유 분야 조사항목을 분리·확대하여 시행 • 중앙의 「국민 문화예술 활동조사」, 「국민 여가활동 조사」, 서울시의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조사 설계 |
| 인천 콘텐츠산업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산업 현황(사업체, 인력, 매출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조사 • 중앙의 「콘텐츠산업조사」, 경기도의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등을 참고하여 조사 설계 • 인천테크노파크 협력 |
| 인천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인지·관심도 • 온·오프라인 문화예술교육 참여 • 문화예술교육 미참여자 실태 • 문화예술교육 인식 및 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조사 • 중앙의 「문화예술교육조사」를 참고하여 조사 설계 |
| 인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정책(정책, 사업, 예산) • 문화다양성 여건(시설, 자원, 인력) • 문화다양성 활동 및 인식(인지도, 수용도, 참여도, 평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조사 •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최영화 외, 2017) 등을 참고하여 조사 설계 |
| 인천 문화정책사업 단위 예산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문화정책 사업 단위 설정 • 예산 구조 및 총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문화지표조사」의 '문화 관련 조례 및 예산' 조사항목 확대 |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방안 연구

■ 심진범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문제 인식 및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함. 첫째, 관광콘텐츠는 무엇을 의미하며 지역관광정책에서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둘째,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여건과 사업 추진 현황을 통해 본 정책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셋째,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정책은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며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사업의 체계적인 방향 설정 및 정책 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 인천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관련 사업 조정·개편에 직접적으로 활용
 -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정책 방향 및 과제는 향후 타 지역 관광콘텐츠 육성 정책 수립 시 참조 가능

2.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정책 방향 및 과제

1) 기본방향

❖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정책의 개념

- 인천시의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정책은 ‘개항장의 유무형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개항장 방문 관광객의 경험의 질과 매력도를 제고하고, 개항장 관광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공공정책’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 이때 지자체의 역할은 관광콘텐츠 직접 개발 사업 위주에서 민간 중심의 관광콘텐츠 생태계 육성을 위한 마중물 투자와 환경 조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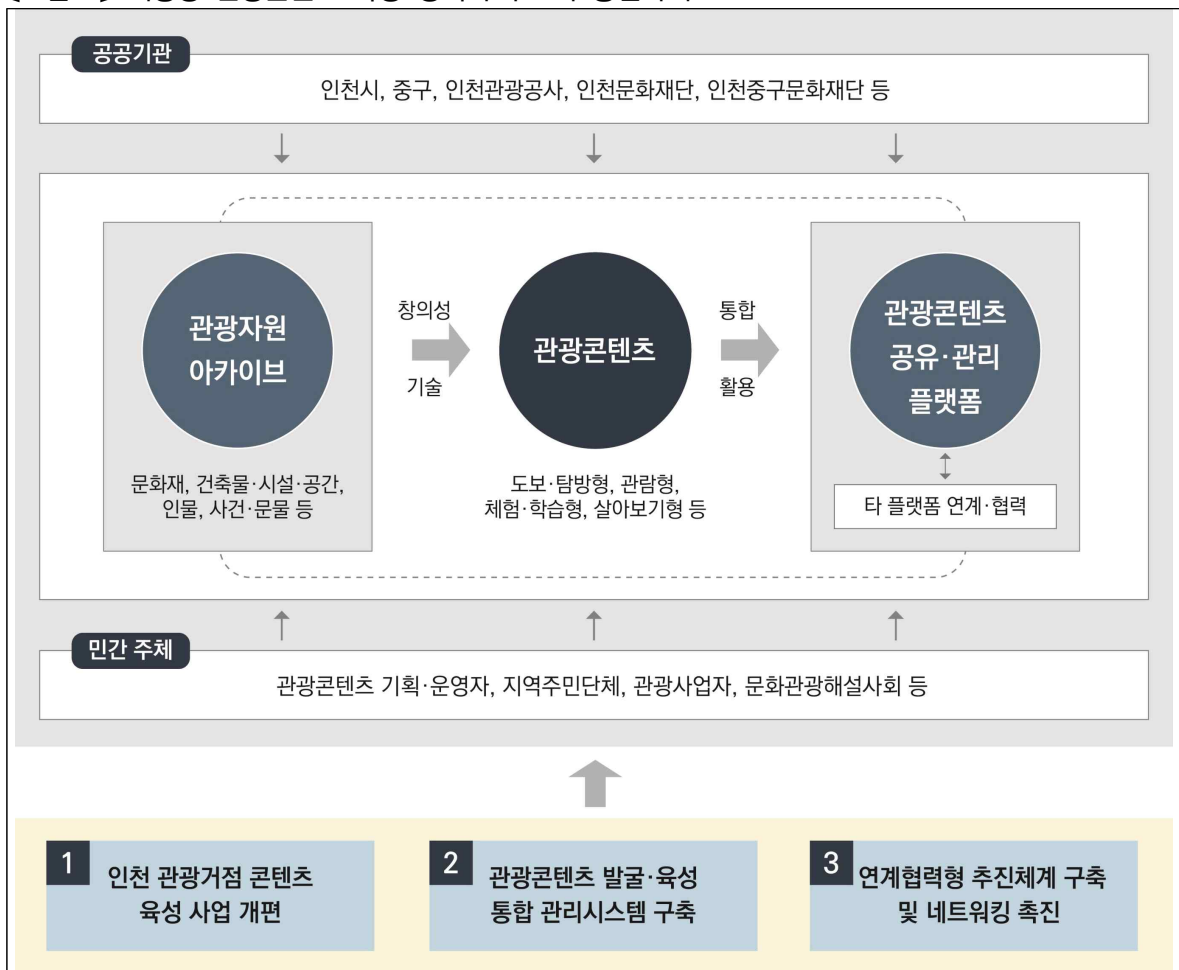
❖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정책의 방향

- 인천시의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정책은 ① 개항장 관광자원 활용·관리 고도화, ② 개항장 관광의 다차원적 경험 창출, ③ 개항장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도출

- 제안한 정책의 개념 및 방향을 토대로 할 때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① 인천시 관광거점 콘텐츠 육성 사업 개편, ②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③ 연계·협력형 추진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촉진 등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한 3대 중점과제를 도출함.

[그림 1]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정책의 구조와 중점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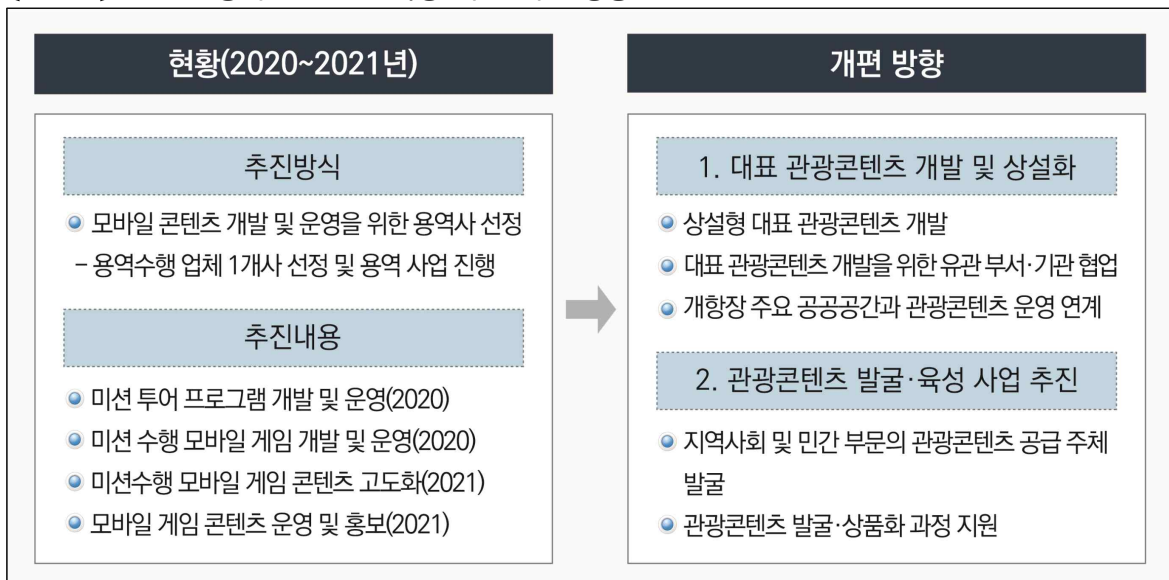


2) 과제별 추진방안 제안

❖ 인천 관광거점 콘텐츠 육성 사업 개편

-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 관광거점 콘텐츠 육성 사업 개편을 통한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사업의 체계성과 효과성 제고
 - 2020년부터 추진된 인천 관광거점 콘텐츠 육성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맞물리면서 모바일 게임 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진행되어 정책 방향 및 세부 사업 개편 필요
- 개항장의 관광자원을 고려한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및 민간이 주도하는 연계 관광콘텐츠 발굴·다각화를 통한 개항장 관광 매력도 제고 및 질적 발전 도모
 - 인물·사건 등 개항장의 근대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상설 운영 추진
 - 지역사회 및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공모형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사업을 통한 창의적인 관광콘텐츠 발굴 및 다각화
- 유관 부서와 기관,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 제고
 - 인천 개항장 문화재야행(2016년~), 인천관광 스토리텔링 사업(2019~2022년), 개항장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2020년~2021년) 등의 사업 결과 검토 및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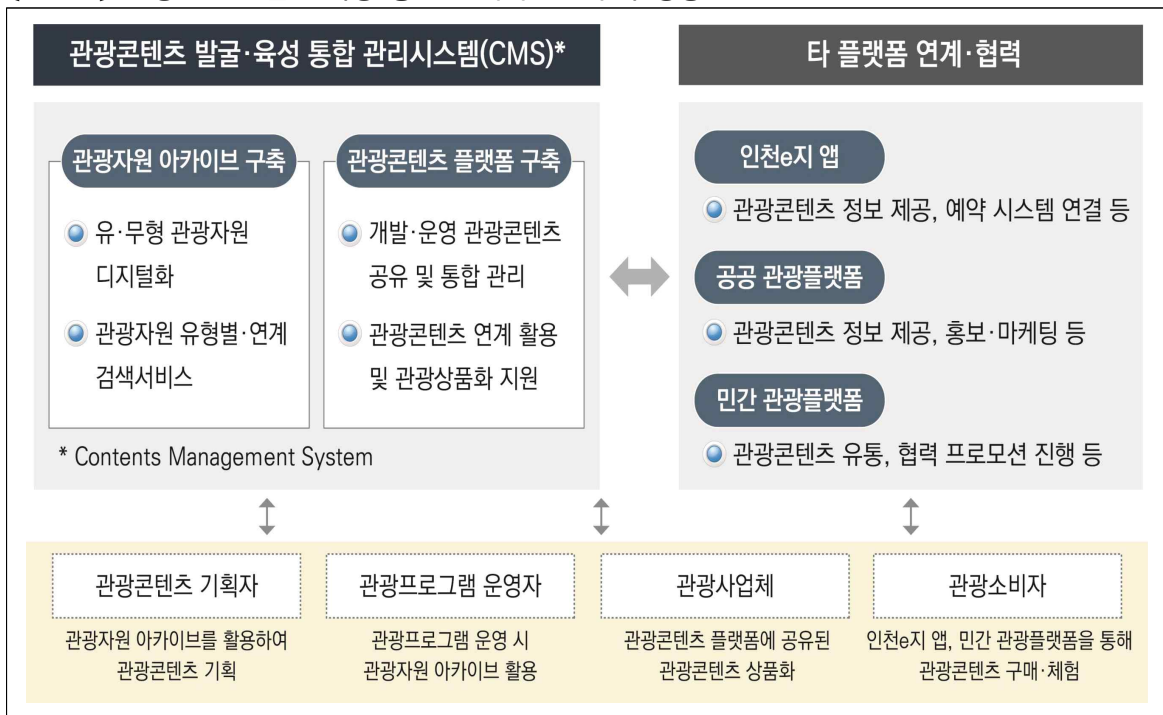
[그림 2] 인천 관광거점 콘텐츠 육성 사업 개편 방향



❖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관광콘텐츠 개발의 원천이 되는 지역 관광자원 원형을 조사·발굴하고, 디지털 아카이브구축을 통해 개항장 관광콘텐츠의 체계적 발굴·육성 도모
 - 관광콘텐츠의 다차원적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관광콘텐츠 개발의 소재가 되는 지역 관광자원 원형 아카이브 필수
- 관광콘텐츠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발된 개항장 관광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
 - 인천시 또는 인천시 중구 재정사업을 통해 다수의 관광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 종료 후 사장되는 문제 반복
 - 개발된 관광콘텐츠의 상품화와 판매·유통 촉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 주요 플랫폼과의 연계 체계 강화
- 관광자원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관광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은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통합 관리시스템(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 개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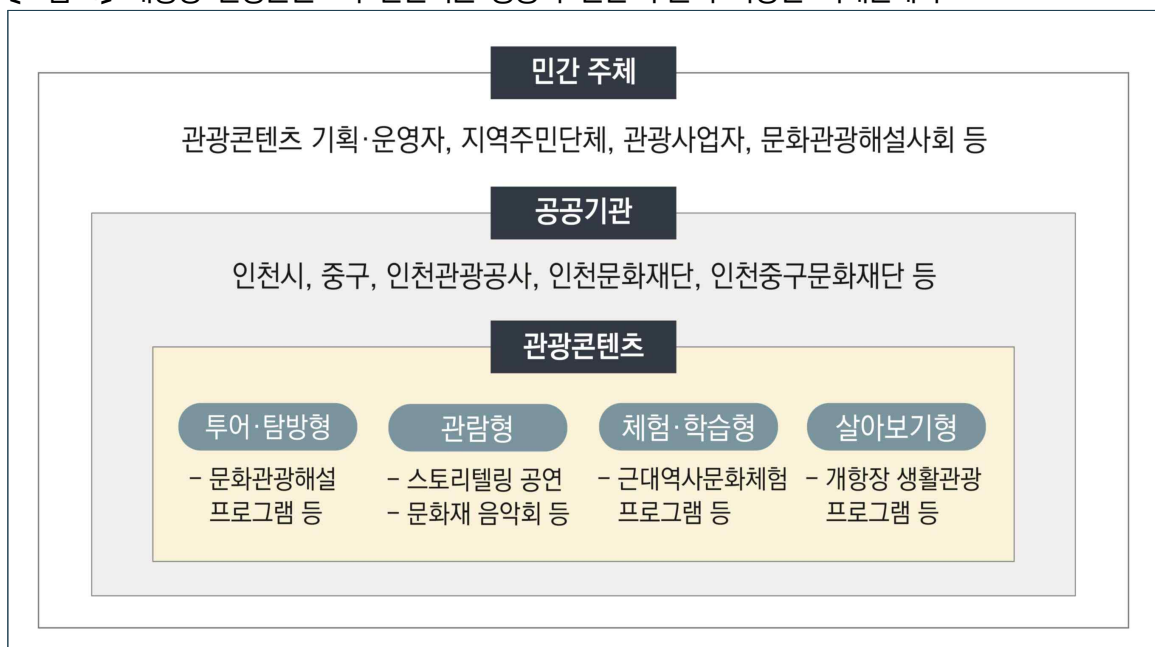
[그림 3]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 연계협력형 추진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촉진

- 개항장 관광콘텐츠 개발·운영과 관련되는 공공과 민간 부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계·협력과 네트워킹 촉진 필요
 -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사업은 인천시, 중구, 유관기관, 관광콘텐츠 기획·운영자, 지역사회 등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주체 관여
- 관광, 문화콘텐츠, 문화재관리,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부서가 관여되는 개항장 정책 특성 상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의 행정협업¹⁾ 체계 구축 필요
 - 다양한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진행되어온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여건 상 경쟁력있는 관광콘텐츠 육성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 이슈
- 개항장의 관광콘텐츠와 관련되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을 통한 개항장 관광산업 생태계 육성
 - 민간 부문의 네트워킹과 협력 촉진을 위한 관광콘텐츠 협업 프로젝트 지원
 - 중구의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과 연계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촉진

[그림 4] 개항장 관광콘텐츠와 관련되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1) 행정협업은 둘 이상의 행위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 정의됨(행정안전부, 2021.1.).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방안: 일진전기를 중심으로

■ 민경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유럽 각국에서는 근대산업사회의 유산인 폐공장이 그 시대 역사와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 아래 활용을 통한 보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폐공장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노후화된 폐공장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인천 동구에는 일진전기, 동일방직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유산이 현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산업유산에 대한 제도적 정의 및 보호 정책이 미비하여 일진전기와 같은 산업유산이 제도 안에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 및 노후화되고 있음
- 다만,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2019), 「동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2019~2021) 등 산업유산 및 동구와 관련한 관리계획이 지속 수립됨에 따라 지역 산업유산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그러므로 지역 산업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인천의 미래자산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진전기 인천공장을 둘러싼 부지 매입 및 재생·개발 논의가 적극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하나, 인천시는 일진전기 부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문화시설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일진전기 인천공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문화적 활용 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인천 산업유산인 일진전기의 현황과 입지적·역사적 특성을 조사함. 둘째, 국내·외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본 연구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함. 셋째, 일진전기의 문화적 활용방안을 제안함

2. 일진전기 인천공장의 문화적 활용방안

1) 기본방향 및 추진 과제

- 산업유산의 의미와 정책·사업 동향, 일진전기의 현황과 특성, 유휴공장의 문화적 활용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일진전기 인천공장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정책 비전을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유산 ‘일진전기 인천’”으로 설정함
- 정책 목표로 ‘산업유산의 보존과 역사·상징적, 사회·문화적, 공간·경관적 가치 확산’,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과 7개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함

[표 1] 일진전기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정책 비전과 목적 및 추진전략

| 구분 | 내용 |
|------|--|
| 비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유산 ‘일진전기 인천’ |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유산의 보존과 역사·상징적, 사회·문화적, 공간·경관적 가치 확산 •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 |
| 추진전략 | 1. 일진전기 인천공장의 보존·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 1-1. 일진전기-인천시-동구 간 협의체 조직 및 사업 추진체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진전기-인천시-동구’ 간 협의체를 조직하여 활용방향에 대한 합의 도출 및 주제별 역할 설정 |
| | 1-2. 일진전기 주요 건축물 공동조사TF 구성 및 보존·변형 범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유산, 문화재생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일진전기 주요 건축물 공동조사TF’를 조직하여, 건축물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존유형 및 보존방식 결정 |
| | 2. 일진전기 인천공장을 문화산업 거점으로 육성 |
| | 2-1. 역사적·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향후 주요 기능 및 이용 대상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일진전기 인천공장이 산업중심지였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지역문화 산업과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가능케 하는 공간으로 조성 |
| | 2-2. 인천시 문화예술진흥 방향성을 반영하여 영상미디어 산업 거점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인천의 중장기 문화예술진흥 방향성을 반영하여 일진전기 인천공장을 영상미디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 고려 |
| | 3. 문화적 활용사업의 확장성 증대 |
| | 3-1. 영상미디어 유관기능 집적으로 사업추진 효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을 집적하여 영상미디어 산업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영상·문화 중심의 문화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으로의 창조계급 유인 |
| | 3-2. 주변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일진전기 재생사업의 파급효과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산업유산 재생, 근대건축물 활용,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 |
| | 3-3. 일진전기 공간을 배경으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초기 일진전기 부지, 건축물, 이곳과 관련한 기억과 역사를 주제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단체의 관심을 향상하고 지역에 문화예술을 확산할 앵커 시설로서의 정체성 확보 |

2) 정책제언

❖ 인천 산업유산 보존·관리·활용 총괄 위원회 및 정책 수립

- 산업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부서협력형 위원회를 조직하고, 산업유산 정책을 총괄할 제도 수립
 - 이분화되어 있는 산업유산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와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건축과가 협력하여 '인천 산업유산 보존·관리·활용 위원회'를 조직함. 위원회는 지역 산업유산을 총괄하는 제도 및 정책의 수립과 이행, 산업유산 보존과 관련한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함

❖ 국비 지원사업 연계 전략 마련

-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한 재원확보
 - 우선 소유권 유지 혹은 이전 여부와 추진체계를 결정한 후, 산업유산에 대한 보수 및 문화적 재생과 연계할 국비지원사업을 발굴·신청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함
- 일진전기 문화적 활용 추진단 조직 및 공모사업 준비
 - 향후 일진전기 인천공장의 운영 방향성 및 공간 재구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총괄 기획자 체계의 '일진전기 문화적 활용사업 추진단'을 국비지원사업 신청 이전 단계부터 조직하여 공간의 정체성과 효용에 맞춘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함
- 산업유산·건축자산 전담조직 구성
 - 일진전기의 문화적 활용방안의 구체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유산 및 건축자산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의 조직과 인력확충이 필요함

❖ 인천 산업유산 아카이브 구축

- 산업유산 목록화와 조사·연구
 - 확립한 산업유산 가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지역 산업유산을 선정·목록화하고, 산업유산별 보존 상태 및 소실 위험도를 분석하여 순차적으로 지역 유산에 대한 조사와 심층적인 연구를 시행해야 함
- 산업유산의 문화적 재생 과정에 대한 아카이빙과 시민 참여
 - 일진전기 인천공장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 산업유산의 보전과 가치 확산을 의미함. 이에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으로의 조성과정을 아카이빙하여 공간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억하고 사업 추진의 의의를 높여야 할 것임

캠프마켓 활용 음악산업지구 조성 방안

최영화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음악도시 인천 마스터플랜」 연계 음악산업 기반 조성 방안 마련 필요
 - 인천시가 2020년 12월에 발표한 「음악도시 인천 마스터플랜」에는 3대 추진전략과 9대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에 ‘음악산업 기반 및 음악인 역량 강화’ 과제가 포함되어 후속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음악창작소 조성에 따른 지역 음악산업 생태계 구축 방향 설정 필요
 - 문체부가 지원하는 음악창작소가 부평 캠프마켓(1단계 B구역)에 조성 중이므로, 향후 음악창작소를 거점으로 한 지역 음악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부평구의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 연계 음악산업 지원 필요
 - 부평구는 2021년 1월에 문체부가 지정하는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특히 캠프마켓의 문화적 재생을 도모하고 음악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음악도시로서 부평의 장소성을 새로이 구축할 계획이므로 이와 연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캠프마켓 문화공간 조성계획에 인천시·부평구 음악도시 계획 연계 필요
 - 인천시는 ‘캠프마켓 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캠프마켓의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음악산업지구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필요함

2. 캠프마켓 음악산업지구 조성 방안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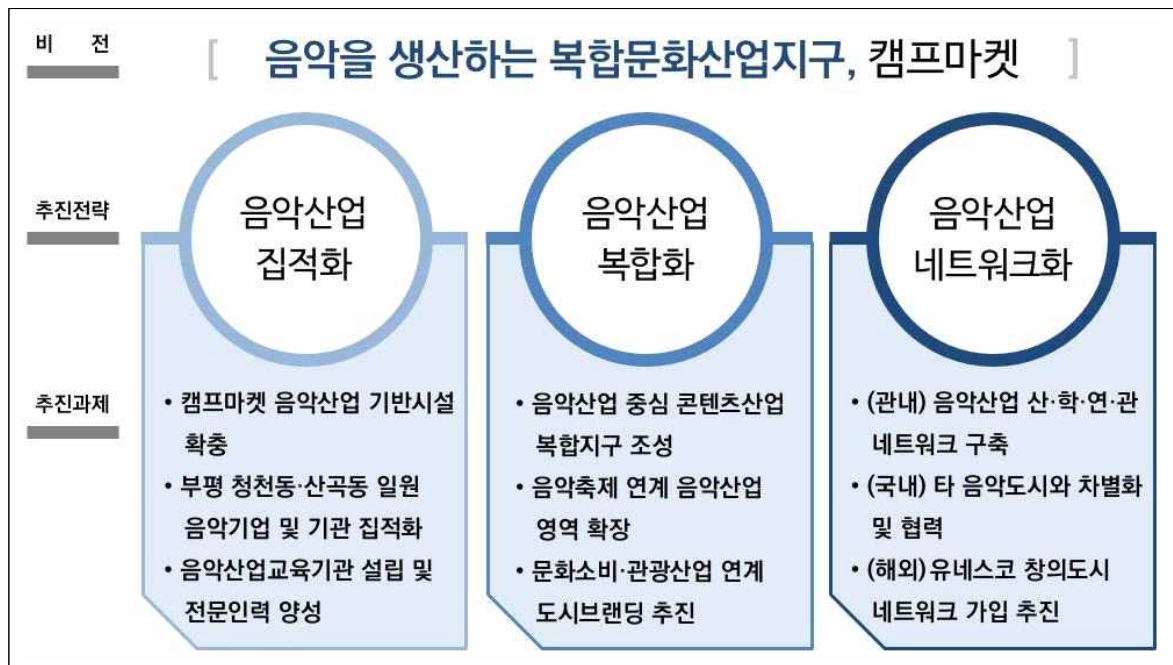
① 비전

- 과거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하던 캠프마켓은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여주는 미래 문화자산으로서 활용가치가 크고, 음악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장소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캠프마켓 음악산업지구 조성 방안에 대한 비전을 “음악을 생산하는 복합문화산업지구, 캠프마켓”으로 설정함

② 추진전략

- 캠프마켓 음악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문화산업클러스터의 정의와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①음악산업 집적화, ②음악산업 복합화, ③음악산업 네트워크화로 도출함

[그림 1] 캠프마켓 활용 음악산업지구 조성 방향



2) 정책제언

① 캠프마켓 음악산업지구 조성 계획 수립

- 음악콘텐츠산업을 중점업종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캠프마켓 일원에 새로 조성하는 것은 법적·행정적으로 가능하고, 도시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시도할 만하지만, 사전에 면밀한 여건 분석과 기업들의 수요 조사,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추진이 가능함
- 캠프마켓 음악산업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먼저 인천시 문화예술과와 문화콘텐츠과, 캠프마켓과,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지원센터와 콘텐츠지원센터,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및 부평구문화재단 등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이 음악산업지구의 조성 방향과 필요성, 조성 목적을 공유하고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② 캠프마켓 음악산업지구 단계적 추진

- 캠프마켓 부지의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우선 인천음악창작소와 함께 음악콘텐츠의 제작과 음악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음악산업의 지원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캠프마켓 음악산업지구 조성을 위해서는 단기-중기-장기 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기(2022~2025년)에는 인천시에 미흡한 관련 조례 제정 및 음악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중기(2026~2030년에는) 음악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장기(2031년 이후) 계획으로 음악산업 진흥지구 신청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을 준비함

③ 중앙정부 관련 정책사업 연계 추진

- 인천시의 음악산업 관련 정책사업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초기 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음악 분야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연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은 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그에 앞서 캠프마켓 부지 내 유희시설의 재생을 통한 기반시설 구축 시 중앙정부의 유관사업을 검토하여 연계하는 것이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콘텐츠산업 관련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사업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 발전방안

최영화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의 추진현황 검토 및 발전방안 마련 필요
 -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Diaspora Film Festival)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인천 대표 영화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 디아스포라(diaspora)는 이주, 이동, 분산, 이산을 뜻하는 초국적 개념임. ‘디아스포라영화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민이 시작된 도시이자 개항도시이며 이주민들의 도시인 인천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영화제로서 2013년에 시작하여 2022년에 10회를 맞이함

- 민선 8기 공약 연계 디아스포라영화제의 확장성 확보 방안 제시 필요
 -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 세계축제 개최)과 연계한 정책 방안 제시
 -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아시아 유일의 영화제이자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제이므로,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역의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영화제로 확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세계축제 개최’이므로, 해당 공약의 실천과제로서 디아스포라영화제의 발전방안 제시 필요

2. 디아스포라영화제 발전방안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디아스포라영화제 발전방안의 비전을 “문화다양성 영상문화축제로 도약하는 ‘인천 국제디아스포라영화제’”로 설정함.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3대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 및 18개 세부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 1] 디아스포라영화제 추진과제

| 비전 | • 문화다양성 영상문화축제로 도약하는 '인천 국제디아스포라영화제' | | |
|----------------------------|--------------------------------------|---------------------------------|---|
| 목표 | ①다양성 확대 | ②연계성 확장 | ③전문성 강화 |
| 추진전략 |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 | 내용 |
| 하드웨어: 영화제 개최장소 확대 | 영상문화 전용공간 조성 | 영화제 전용 영상문화복합공간 조성 | • 중앙정부의 관련 계획 및 사업과 연계하여 영상문화 기반을 확보 |
| | | 영화제 전용공간 상설·기획프로그램 개발·운영 | • 영화제 기간 외에도 시민들의 영상문화 거점으로 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설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인천영상위원회 및 지역 영화인, 민간 영화제 등과 연계한 독립·예술영화 상영, 시민 대상 영상 문화교육 진행, 전시프로그램 운영, 영화자료 열 람실 운영, 영화자료 아카이브 구축, 담론 형성 프로그램 운영 가능 |
| | 영화제 거점장소 외 생활권 상영회 운영 | 중구 외 관내 지역 연계 개최장소 다각화 | • 영화제 개최 거점장소를 지정하여 거점장소 내 민간 영화상영관과 문화기반시설을 연계하는 방 식으로 영화제 개최장소의 공간적 확장과 체험의 다양화를 도모 - 과거 이민사와 역사성을 간직한 디아스포라 도시 중구와 현재와 미래의 글로벌 디아스포라 도시 송도를 중점 개최장소로 지정하여 연계 |
| | | 기초지자체별 상영공간 확보 및 상영회 운영 | • 문화다양성 영상문화 종합축제로 인지도를 확장 하기 위해 영화제 기간에 인천시 전역에서 상영회 진행 |
| | 문화기반시설 연계 개최장소 확대 | 미술관·박물관 연계 디아스포라 프로그램 운영 | • 인천시에서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문화시설 과의 연계 고려 - 인천시립미술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
| | | 영상문화복합단지 연계 디아스포라 프로그램 운영 | • 청라국제도시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사 업'연계 영화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추진전략 |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 | 내용 |
|------------------------------|------------------------|--------------------------------|---|
| 소프트웨어: 영화제 프로그램 다양화 | 문화예술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 참여프로그램 다양화 | •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 예술 부대프로그램 개발 |
| | | 문화다양성 확산 프로그램 다양화 | • 문화다양성 주제에 따른 섹션 신설 및 재구성, 부대프 로그램 개발 |
| | 문화산업 연계 방안 마련 | 유료상영-무료상영 프로그램 병행 운영 | • 영화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 영화산업의 성장을 위한 수입구조의 다각화 • 전면 유료화보다는 유료-무료상영 병행 혹은 할인 및 무료 대상 지정 운영 고려 |
| | | 온라인-오프라인 융복합 운영전략 수립 | • 온라인 상영과 온라인 콘텐츠의 적극적 개발 • 온라인-오프라인의 융복합 운영전략 마련 |
| |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중구-송도 연계 디아스포라 투어프로그램 운영 | • 중구와 송도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방문객이 체류하며 영화제 관람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디아스포라 투어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 | | 체험형·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연계 운영 |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연계 관광·체험프로그램 의 개발 및 운영 |
| 휴먼웨어: 영화제 전문인력 확보 | 디아스포라 영화제 사무국 조직 | 프로그래머 등 상근 전문인력 확보 | • 전문인력이 타 국제영화제의 평균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됨 |
| | | 디아스포라영화제 상설 독립법인 설립 | • 국제영화제 요건 충족을 위한 별도의 법인 설립 • 관련 조례 제정 및 인천영상위원회와의 분리 및 연계 방안 마련 |
| | 대내외 영화제 홍보 다각화 | 국내 영화제 홍보마케팅 강화 | • 홍보마케팅전략 수립 및 홍보 전문인력 확보시급 |
| | | 해외 영화제 홍보마케팅 추진 | • 해외 언론 대상 홍보전략과 국내외 기자 대상 행사 및 서비스 제공 필요 |
| | 영화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대상 영화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 • 관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시설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영화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 | | 영화기획·제작 지원프로그램 운영 | • 디아스포라 주제 영화의 기획·제작을 지원하고, 우수 작품을 시상하여 지역 영화전문인력 양성 |

2) 정책제언

① 문화다양성 종합축제 지원 근거 마련

-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디아스포라영화제는 문화다양성 확산·강화를 주요 목표이자 가치로 삼고 있음. 향후 디아스포라영화제를 국제영화제로 육성하고, 문화예술·문화관광·

문화산업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종합축제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로서 문화다양성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천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조례 제정: (가칭)「사단법인 디아스포라국제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무국 설치, 사업, 정관, 재정지원, 운영규정, 사업계획, 위탁업무,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과 지원의 근거를 규정해야 함

② 국제영화제 육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

- 디아스포라영화제 중장기계획 수립: 단기적으로는 영화제 규모 및 지역적 범위의 확장,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통해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영화제의 비전 제시 및 주제, 내용, 인력 차원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 필수적임
- 단계적 로드맵에 따른 사업 추진: 민선 8기(2022~2026) 내 사업의 추진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우선사업('23~'24년)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2단계 중기사업('24~'25년)으로 휴먼웨어 사업을, 3단계 장기사업('25~'26년)으로는 기반 마련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환류체계 구축 통한 디아스포라영화제 개선·보완: 국제영화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영진위의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의 평가지표를, 문화다양성 축제 차원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③ 디아스포라영화제 전담조직 구성

- 정관 제정 및 집행위원회 구성: 영진위, 국제영화제작자연맹, 유럽영화제위원회의 국제영화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정관 제정 및 집행위원회 구성이 요구됨
- 인천영상위원회와 영화제 전담조직 간 역할 분담: 디아스포라영화제 독립법인 설립 과정에서 그간 사업을 주관한 인천영상위원회의 경우 관련 법률에 명시된 고유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함

④ 디아스포라영화제 재정 확보

- 디아스포라영화제 예산 규모 증액: 영화제 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므로 국내 국제영화제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디아스포라영화제 재원 다각화: 영화제의 독립성과 지속성 담보를 위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국제영화제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예산 항목의 보완이 요구됨

(구)인천우체국의 문화적 활용방안

최영화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 인천시의 (구)인천우체국 매입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인천시는 시 지정 유형문화재인 (구)인천우체국을 시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소유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와 재산교환(우체국 신축부지와 교환) 방식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및 교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활용방안을 확정된 후 2023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

- 시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넘어선 활용방안 모색 필요
 - (구)인천우체국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 (구)인천우체국은 지정문화재이므로 리모델링 시 관련 법률과 지침을 따르면서도 ‘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보존’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사회·문화·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구)인천우체국의 문화적 활용방안

1) 기본방향

- 비전: 시민의 문화소통창구로 (구)인천우체국의 역할 재정립
- 목표: ①보존과 활용 균형 추구, ②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③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2) 추진과제

[표 1] (구)인천우체국 문화적 활용 위한 추진과제

| 목표 | 추진과제 | 내용 |
|--------------------|---------------------------------|--|
| 1. 보존과 활용 균형 추구 | 문화재 원형 복원 지침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밀한 물리적 현황 조사 필요 • 문화재적 가치 회복을 위한 원형 복원 및 문화공간화에 따른 공간적 범위 설정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 |
| | 본관동과 별관동의 활용 다각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관동: 현장조사를 통한 가용공간 확인 후 (1층) 전시/공연/행사/교육 공간/문화예술도서관, (2층) 사무실/수장고(아카이브)/회의실/교육실/미술은행 등으로 활용 고려 • 별관동 및 수위실: 휴게공간, 기념품 전시·판매공간, 안내 및 지원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 • 공간 기능: '우정통신박물관', '지역문화예술 아카이브' 등에 대한 수요 제기되고 있으나, 한 가지 기능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 리모델링 이전에 연혁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필요 |
| 2.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 문화재 활용: 장소성과 건축물의 가치 반영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사적 지정 절차 고려 필요 •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재 야행 사업) 연계 통한 (구)인천우체국의 역사적 의미 및 가치 제고 필요 |
| | 문화예술 활용: 문화예술 수요 반영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및 예술가의 문화예술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 요구 • 미술은행 대여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술대여 및 향유 활성화 도모 • 아트숍 운영 및 지역 예술인 협업 통한 특화상품 전시·판매 |
| | 문화관광 활용: 관광·개발사업 연계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8기 인천시 내항 일대 역사·문화·해양관광·레저 중심의 허버시티 개발 공약, 문체부·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인천시 선정 등과 연계 필요 |
| 3.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 효율적·체계적 재생사업 추진 위한 MP(총괄기획자)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활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문화재 재생 및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총괄기획자를 사업책임자로 선정하여 추진 |
| | 전문 책임운영 및 사회적기업 참여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지정문화재로 인천시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시민 수요에 대응한 전문적 문화공간 운영이 요구되므로 전문 기획역량을 갖춘 책임 있는 기관에서 운영 필요 • 시설 내 상업공간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위탁운영하는 방안 고려 필요 |

3) 정책제언

❖ 리모델링 전 단계별 조사·연구 추진 필요

- (구)인천우체국 건축물의 정확한 실측조사 필요
 - 현재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측조사를 통해 사진과 실측도면, 3D스캔 자료, 3D맵핑 자료 등을 빠짐없이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보존·보수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도 문화재 최초 지정 시 조사자료와 정기조사자료를 확보해야 함
- (구)인천우체국의 역사적 가치 발굴 연구 필요
 - 인천의 우체역사에 대한 연구 및 고증, 자료 수집을 통해 (구)인천우체국만의 고유한 가치를 알려야 하며, (구)인천우체국과 그 일대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함
 -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인천우체국 관련 실측조사 자료와 도면, 사진, 문서, 유물 등을 이관받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향후 (구)인천우체국 내 조성될 상설전시관의 전시물과 콘텐츠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간 기능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연구 필요
 - (구)인천우체국을 시민과 예술인의 적극적인 문화소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를 우편·통신박물관으로 조성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되, 건물 일부에 인천의 우정사와 (구)인천우체국의 고유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공간과 콘텐츠를 할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체적인 공간 구성 및 활용전략 마련과 콘텐츠 발굴을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유희공간 문화재생 시 국비 확보 필요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국비 확보 필요
 - (구)인천우체국의 실측조사와 건물안정성진단조사 등은 시비로 추진하더라도, 유희공간의 문화 재생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국비(문체부 ‘폐산업시설 등 유희공간 문화재생’)를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중구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훈관광 정책 방향

■ 심진범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요청에 의해 수행한 연구 과제로 중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훈관광 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함.
 -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기존 관광사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새로운 근대문화유산 관광정책 방향 설정의 필요성 인식
 - 개항장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등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원도심 활성화 필요
 - 역사교훈관광 접목을 통한 중구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교육 가치 부각 필요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근대문화유산과 역사교훈관광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인천시 중구 원도심 역사교훈관광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 근대문화유산과 역사교훈관광에 대한 이론적 논의, 중구 및 국내 타 지역의 근대문화유산과 활용 동향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중구 원도심 역사교훈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도출

2. 중구 원도심 역사교훈관광 정책 방향

1) 한국 근대사의 주 무대로서 개항장 일대의 장소 정체성과 진정성 강화

- 역사교훈관광 접목을 통해 한국 근대사의 주 무대로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중구 원도심의 근대사와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및 사실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장소 정체성과 진정성있는 관광경험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2) 어두운 역사로부터의 성찰은 물론 지역사회 자긍심과 미래지향적 의미 발신 지향

- 단순히 어두운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성찰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사회의 자긍심과 미래 지향적 의미 발신을 고려하여 원도심 역사교훈관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역사교훈관광 접목을 통한 개항장 관광경험 방식의 확장 및 균형성 제고

- 역사교훈관광 접목을 통해 원도심의 전시·박물관, 근대문화유산 안내해설, 공연·축제 등을 통해 전달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관광콘텐츠를 보완하고, 근대문화유산 관광경험의 방식의 확장 및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과제 제안

1) 근대문화유산 상세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

-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훈관광 추진을 위해서는 개항장 일대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및 사실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등 근대문화유산별 상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함.
- 한국 근대사의 주 무대로서 중구 원도심의 장소 정체성을 고려하여 개항장 일대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전의 조사·목록화 결과 등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할 필요가 있음.
- 수집된 근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는 역사교훈관광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근대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외부에 개방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의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구의 독자적인 아카이브 구축은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 중인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구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근대문화유산 가치 전달 및 공유

❖ 안내해설체계 정비

- 개항장 일대 근대문화유산의 역사교훈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안내해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방문객들에게 역사교훈적 관점에서 개항장과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측면에서 원도심 안내해설 체계 개선 사업이 필요함.

- 안내해설 체계 정비 사업은 근대문화유산 상세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개항장 및 근대문화유산 안내해설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안내해설표지,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등 개항장 일대 설치되거나 운영 중인 안내해설 체계 전반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역사교육 거점공간 확보

- 개항장과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의 역사교훈적 가치와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항장 내부에 안내, 전시, 교육, 체험 등 복합 기능의 역사교훈관광 거점 공간이 필요함.
- 개항장 일대 역사교육 거점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공간의 콘텐츠 기획은 동아시아의 근대사와 제국주의, 조선의 개항과 근대사, 인천의 개항과 근대문화유산 등 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역사교훈관광과 연계한 근대문화유산 관광콘텐츠 개발

-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는 한국 근대사의 주 무대로서 개항장 일대 장소 정체성과 진정성 전달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임. 따라서,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의 역사교훈적 가치와 사실에 기반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군산, 목포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중구 원도심의 근대사와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사실에 기초하여 스토리텔링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의 상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근대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원도심 개항장의 장소 정체성과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인천 시민과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관광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근대사의 비중이 커졌고 인천 개항장을 배경으로 하는 다수의 역사적 사건이 역사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교의 역사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개항장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내고, 학년 수준별로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3) 정책추진체계 정비

❖ 역사교혼관광 조례 제정 검토

-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혼관광 정책은 장소 정체성과 역사 인식에 기반하여 원도심 관광 활성화의 균형 잡힌 관광정책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구 역사교혼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등을 포함한 중구의 역사교혼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와 육성·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역사교혼관광 추진 조직 강화

-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혼관광 추진은 근대문화유산 관련 조사·연구, 관련 계획 수립, 안내해설체계 정비, 관광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행정 행위와 업무를 수반함.
- 따라서, 중구 문화관광과의 업무 분장에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혼관광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반영하고 하드웨어 구축, 소프트웨어 운영 등 업무 특성에 따라 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리고,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역사교혼관광 전문조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교혼관광 정책은 장소 정체성과 역사 인식에 기반한 원도심 활성화의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러한 시각은 유관 기관이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원도심 근대문화유산 관련 사업에 관여되어 있는 중구 및 인천시의 관련 행정 및 유관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근대문화유산 활용의 관점과 방향, 역사교혼관광 관련 정책 및 사업이 공유되는 연계·협력 체계가 필요함.

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 정책 방향

■ 심진범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과 목적

- 관광객의 관광정보 원천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안내정보 제공 중심의 관광안내소 기능에 한계가 나타나는 등 관광안내소 기능 재정립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천시 관광안내소의 저이용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관광안내소별 직무수준 차이 및 관광안내소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 개선 필요성 제기
-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 정책 방향 모색 및 추진 과제 발굴 필요

2. 정책 제안

- 인천시의 관광안내소 운영 정책은 단순히 인천시가 설치·운영 중인 관광안내소의 재배치와 기능 재정립이라는 한정된 시각에서 타 기관 관광안내소와의 연계·협력,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 전체적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 과제 제안
- **(인천시 설치·운영 관광안내소 정비)** 관광산업 생태계가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 거점 관광안내센터의 기능 복합화, 야간관광 지원센터 등 특화 기능 강화
- **(연계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저이용 관광안내소 조정과 연계하여 군·구 및 유관기관 연계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인천시 설치·운영 관광안내소와 연계 관광안내소 운영 네트워크 구축
- **(온라인 관광안내센터 운영)** 온라인 기반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하이브리드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기 운영 중인 온라인 관광안내 매체 진단·정비를 통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현황 및 재원 확보 방안

최영화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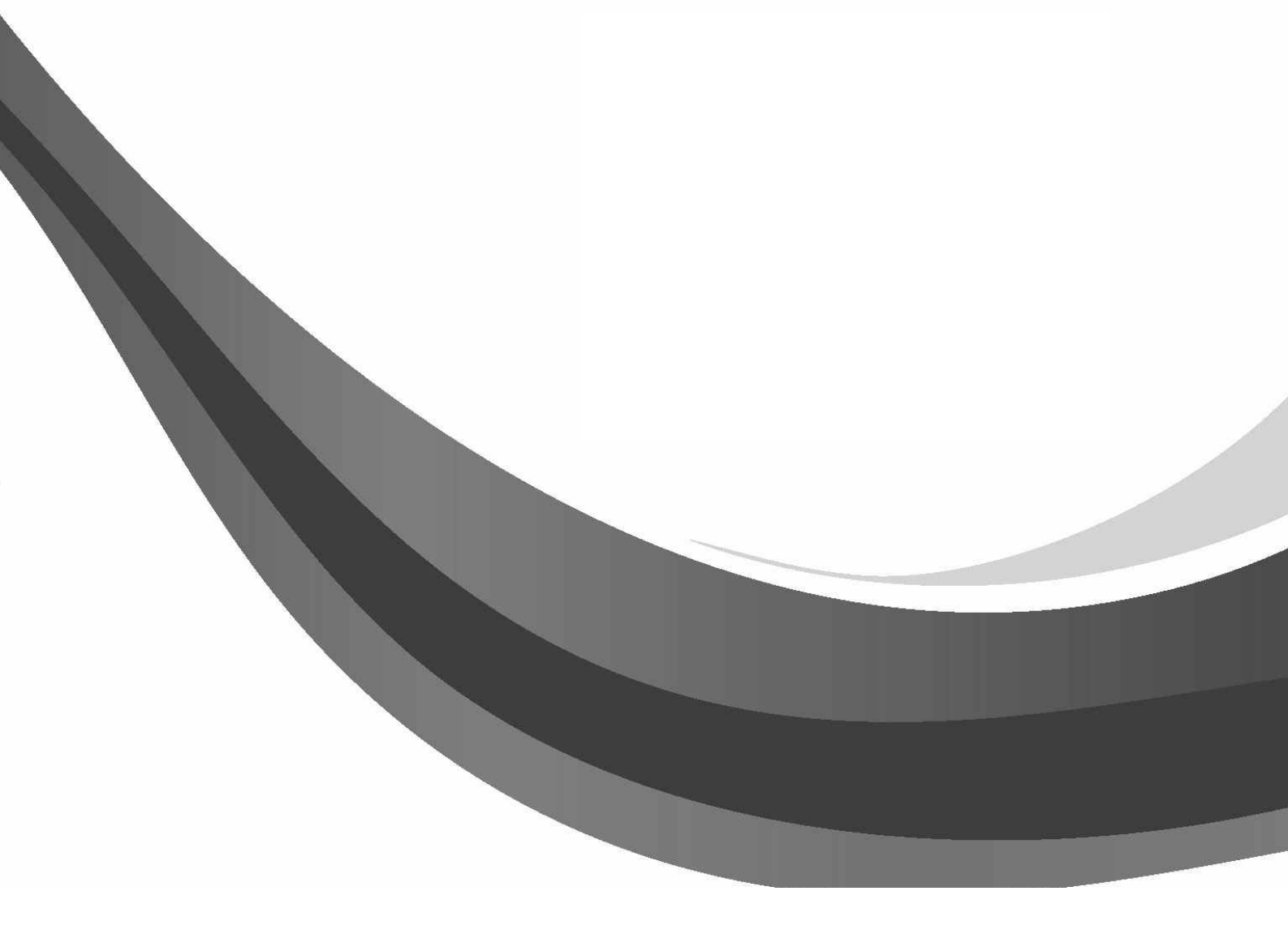
- 인천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이 1.67%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시 정부는 핵심 공약으로 문화예술 예산 비율을 임기 내 3%대로 확보할 것을 약속함
- 인천시의 문화예술 예산이 6개 광역시의 문화예술 예산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검토하고,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의 재원 구성과 사용 분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인천시의 문화예술 예산을 3%로 증액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임

2. 정책 제안

- 인천시의 문화예술 예산 중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5.29%로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문화예술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 재정 중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문화예술사업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이양되고 있으므로 지방 이양되는 문화사업이 축소·폐지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예산의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천시의 문화예술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하므로, 문체부가 매년 운영하는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하여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시·도자율편성사업을 통해 문화시설, 체육진흥시설, 폐산업시설 유희공간 문화재생 등 문화인프라 조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경제환경연구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I

경제 분야

● 기획연구

인천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국내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 정책연구

인천의 중국 도시외교 기본 방향과 과제: 주요 교류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분석 및 추진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

● 군·구협약 정책연구

연수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 현안연구

인천시 지능형 기술 기반 제조현황 및 미래전략

● 이슈브리프

싱가포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전환기 인천시 산업전략과 정책과제
인천시 아파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변화 분석
인천시 음식점 개·폐업 변화 분석

인천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국내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이정영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역 내 고용 확대, 세수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수도권 내 이동이 활발한 가운데 인천은 상대적으로 이동은 적고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상황임
 -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 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서 인천의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임
-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관내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함
 -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므로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기업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인천을 중심으로 기업이동에 관한 유형별 특성과 이동요인을 분석하여 기업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조례상 포함된 기업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기업이동에 미친 요인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검토함
 -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이동의 특성 및 결정요인에 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인천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기업이전을 결정하는 정성적인 요인에 대해 분석함

2. 정책제언

1) 산업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 정책 필요

- 인천 내 규모가 큰 제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오히려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산업 및 이동 형태를 고려한 기업지원제도 마련이 필요
 - 현재 인천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지원제도는 대단지 공장설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사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임
 - 서비스업은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대규모 인력보다는 기술 기반으로 소수 인력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므로 현재 고용 규모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제도가 기업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지역 전략산업의 주요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어 쉽지 않으므로 앵커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를 유치해서 지역 내 법인을 개설하여 다양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지역 현안 중심의 사업 기회 확대

- 역량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이전한 기업이 지역 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술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입지를 이동함에 있어, 전통적인 입지요인보다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기업의 비전이 부합하여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관내 기업이나 관내 기업과 협업하는 기업에 우선권 또는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컨소시엄 사업 모집 시, 관내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 시민의 편익을 우선하고 기술 활용 등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지역 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협업 또는 필요한 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3)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 관내 운영되고 있는 투자기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유치협력관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영역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투자자문단, 투자진흥관 등을 임명하여 민·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음
 - 투자기획위원회, 기업유치협력관을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또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인력양성과 공동연구개발이 확산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력 고용으로 주요한 산업에서는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음
 - 지역 내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수도권 내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인천의 중국 도시외교 기본 방향과 과제: 주요 교류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 김수한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대중국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인천의 중국 도시외교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하여 ①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② 한국 지방정부의 중국 교류 현황 및 특징 ③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현황 및 개선점 등을 조사·분석함
- 그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2.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현황 및 개선점

| 권역 | 도시 | 주요 교류 사업 및 특징 | 특징 및 교류 방향 제안 |
|----------------------------|----------------------------------|---|--|
| 한 발 해 · 동 북 | 수도권 인천 직할시 자매/199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비즈니스 교류 특화 • 환경·감염병/인문유대/크루즈新분야개척 • 공무원상호파견, 포럼 등 교류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최초 결연도시 • 결연주기 별 교류 고도화 • 2023년 자매결연 30주년 적극 활용 필요 |
| | 산동성 우호/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산동우호협력연석회의연례개최(2016~) • 산동성 주요 도시와의 협력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천 최대 교류대상지 • 산동성을 위시하여 산동반도 주요 도시와 파트너십 체결 • 한중FTA를 지렛대로 활용 • 웨이하이에 집중된 교류 협력을 산동성 기타 도시로 단계적 확대 필요 |
| | 산동성 칭다오시 우호/199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동반도 최대 경제 선도 도시 • 교역·해운 교류 특화 • 소비재 집산·전자상거래 협력 도모 • <미추홀식품관>개관(2015) | |
| | 산동성 옌타이시 우호/20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열차페리 협력구상 제안(2006) • 공무원상호파견(2011~2013) | |
| | 산동성 웨이하이시 FTA시범도시 /2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FTA지방경제협력시범도시(2015) • 각 인천/웨이하이대표처 운영 • 무역/투자/기술/관광/의료/통관 협력 | |

| 권역 | 도시 | 주요 교류 사업 및 특징 | 특징 및 교류 방향 제안 |
|--------------------------------------|----------------------|---|--|
| 환 발 해 · 네 트 워 크 | 랴오닝성 다롄시 우호/199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투자 교류 선도 • 한중순환경제시범지협력(2013) • 공무원상호파견/다롄외대-인천대공자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 거점도시와 자매우호 파트너십 체결 • 동북 권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미흡 • 한국 교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린성 창춘을 중심으로 한 교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공무원 상호파견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실있는 활용 방안 수립이 필요함 |
| | 랴오닝성 선양시 자매/20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양한국주간 연례 참가 • 공무원 상호파견 실시(2019) | |
| | 랴오닝성 단둥시 우호/199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둥인천산단조성협력(1996) • 남북중 축구화공장 운영(2011) • 서해평화포럼개최(2012/단둥) | |
| | 헤이룽성 하얼빈시 우호/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계축제(氷雪祭) 연례 참가 • 뷰티/소비재 판촉 등 탐색 | |
| | 지린성 창춘시 MOU/20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체육 교류 •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설치(2020) • 한중도시관내 인천관(2021) | |
| 중 서 부 | 서 남 | 충칭 직할시 자매/20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칭시 외에 중서부 내륙에 대한 교류 협력은 미미한 수준임 • 충칭-쓰촨(청두)을 연결한 교류, 원난-아섬, 중부 등으로 권역화한 교류 전략 수립이 필요 |
| | | 원난성 우호/2015 | |
| | 화 중 | 허난성 우호/2012 | |
| 동 부 연 해 | 화 남 | 광둥성 광저우시 우호/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최대 경제선도 지역이며, 국가 중점 육성대상임 • 인천과의 교류협력 미미 |
| | | 광둥성 선전시 MOU/200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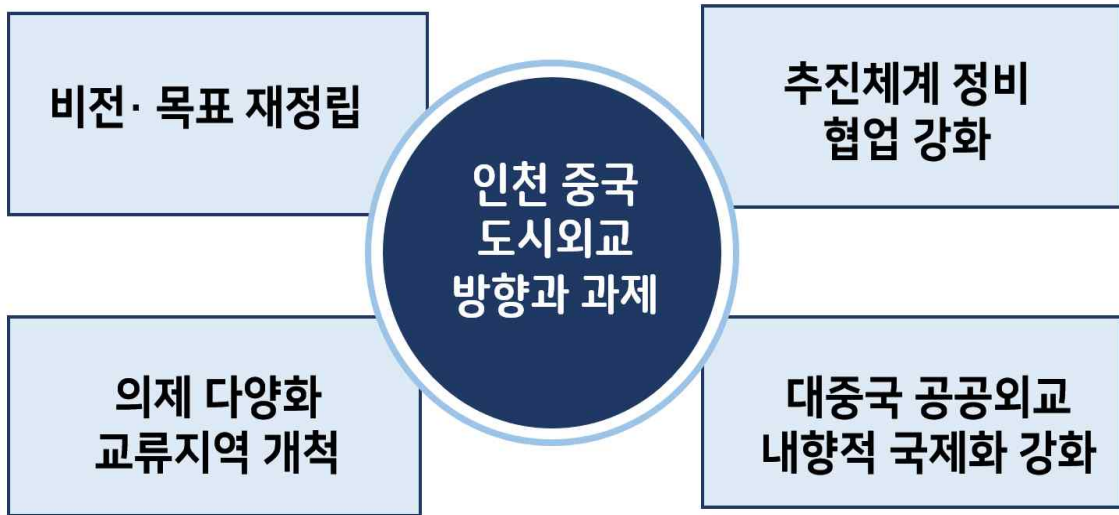
자료: 인천시국제협력담당관실 자매우호도시·국제기구 관리카드 정리하여 작성

- 1993년 텐진과의 자매결연 체결 이후 인천은 환발해 권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다각적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중국 최대 발달 지역이자 최근 국가중대전략 대상지로 지정된 화둥 및 화남 권역과의 교류는 미미한 실정임
- 인천시는 2017년부터 시행한 인차이나프로젝트를 정비하여 사업의 내용과 성과 지표를 조정하는 등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중국 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및 미중 경쟁으로 인한 세계화의 감속과 경제·산업 환경의 재편, 감염병, 비전통안보의 대두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국 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중국 교류와 관련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미흡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3. 정책 제언

- 본문의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의 중국 도시외교 방향과 주요 과제로 ① 비전과 목표의 재정립 ②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협업 강화 ③ 다양한 의제를 활용한 교류지역 개척 ④ 대중국 공공외교 및 내향적 국제화 강화를 제시함

[그림 1] 인천 중국 도시외교 방향과 과제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분석 및 추진방안

■ 민규량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 인천시 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 업무영역과 예산액은 크게 증가하여 왔고 그에 따라 위탁 및 실행기관으로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인천시는 다양한 소상공인지원기관들이 분산적으로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골목상권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의 실질적인 설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인천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통계적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데이터 체계 구축기능 등 재단의 기본적인 기능 및 설립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기본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역 차원의 상인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설립여건을 연구하고 향후 재단설립의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추진방안

1) 기본구상(안)

- 기본방향은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일부를 이관하고 기 소상공인지원 기관들과 연계함
 - 특히 지역내 특화된 협업화 공동체 단위의 상권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상권분석·정책연구 기능을 필수적으로 수행함

[표 1]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핵심목표 및 비전 도출

| 핵심 목표 | 비전 |
|--|-------------------------------------|
| 다양한 소상공인 공존 및 지원 선도적 경쟁력 강화 체계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창의적 지원체계 마련 | ▶ 다양한 소상공인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상권 인천시 |

2) 사업영역 설정

- 소상공인정책과는 최근 3년간 급속도로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중에 있는데, 이 중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현장밀착형 사업이나 매년 반복적으로 위탁되는 사업의 경우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관함.
 - 인천e음과 관련한 업무로서 서비스 기획, 개발, 홍보, 가맹점 모집 관리 등의 업무는 장기적으로 재단으로 이관함.
 - 전통시장관련 업무의 경우 현재 인천상인연합회, 인천관광공사 등에 위탁 중인 일부 사업들을 이관함.
 - 소상공인지원팀의 소상공인 진흥 관련 사업들(마케팅, 코리아페스타 등)은 향후 재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임.
 - 공정거래팀 업무는 독립적인 센터의 형태로 재단 내에서 운영되도록 이관함.
-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경우 금융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해야 하며 따라서 재단의 모태기관이 될 것임.
- 그 외 다른 소상공인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규모, 사업대상 등이 너무 다양하여 일부를 이관받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현재 재단에서 기획 중인 사업들과 중복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에도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의 여건분석결과 및 사업방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신규사업 고려가 필수.
 - 월스톱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계 시스템
 - 소상공인의 모바일화 및 스마트화 사업
 - (가칭)골목e음 사업
 - 소상공인 연구지원센터 구축
 - 노후상가거리 활성화사업
 -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

조승현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분석의 취지

- 2023. 1. 1. 시행이 예상되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자치단체 간 기부금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답례품 개발, 홍보전략 수립 등 기부 유인방안 마련이 필요

2. 고향사랑기부제 초기 시행 관련 정책 제언

1) 제도의 엄격성과 제약성

- [인천광역시의 역할] 인천시는 군·구간 협력으로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답례품의 지자체 통합 운용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
- [군·구의 역할] 현행 제도가 행정적으로 엄격하고 지역의 사정을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지만, 현행 제도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찾는 전향적이며 주체적 자세가 필요

2) 기부 수준의 불확실성과 시행 초기 자원 투자

- 소요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발굴, 홍보, 답례품 개발 등이 부실하면 2차 년도 이후에도 새로운 기부나 재기부 실적이 낮아 소요 자원 확보의 절대적 규모가 낮아지므로 미래지향적 투자 관점에서 사업발굴, 홍보, 답례품 개발에 초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함

3) 답례품 개별 제공 곤란 지역

- 통합답례품은 관내 10개 군·구별 각 2개 품목을 추천하고 인천e음카드를 추가하여 총 21개 품목으로 구성
 - [통합답례품 적용 지역] 지자체의 자체 공급 답례품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복수의 통합답례품을 답례품목으로 제공
 - [통합답례품 미적용 지역] 자체 답례품목을 기부자에게 제공
 - 통합답례품 미적용 지역에서도 통합답례품 공급은 가능하게 하되 판매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방식을 적용

4)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조직

- 전담 조직은 신설하거나 답례품 운용 기능과 유사한 기존의 조직(특산물 쇼핑몰 등)에 위탁도 검토할 필요
- 전담 조직은 사업 발굴 및 홍보, 답례품 운용, 클라우드 펀딩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위탁하는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답례품을 공급하는 업자로부터 수수료 징수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으로, 시행 초기에 이슈 발굴, 기금조성, 기금운용 및 홍보를 통한 재기부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를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전담 조직은 우선 이 기능에 초점을 두고 운용되는 것이 필요함

연수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 서봉만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이정영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수구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지구를 중심으로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신성장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져 향후 인천의 지역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지역임
 - 현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송도지구와 달리 원도심은 남동공단의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원사업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 본 연구는 연수구의 지역경제 및 산업구성의 변화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연수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실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기업지원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전략방향 및 정책제언

1) 전략방향

- 연수구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SWOT 분석을 통해 ① 신성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② 지역 내 연계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다양화 ③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완,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 및 확대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표 1] 연수구 경제 SWOT 분석

| SWOT 분석 | | 외부환경 | |
|---------|--|---|---|
|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의 경제자유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국가 전략산업에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침체로 반도체와 바이오산업 투자 불확실성 증가 신성장 분야 우수 인재 공급 부족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 |
| 내부환경 | 강점(Strength) | SO : 우선 수행 (강점활용 및 기회확대) | ST : 우선 보완 (강점활용으로 위협 최소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자유구역 내 반도체와 바이오산업 등 신성장산업 앵커 기업 유치와 높은 성장률 경제자유구역 내 다양한 산업의 고른 성장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업의 성장 대학과 연구개발 기관의 집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도지구 내 신성장산업 혁신 클러스터 강화(바이오, 반도체) 첨단제조업과 연계한 지식서비스 산업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 | 약점(Weakness) | WO : 약점해결 (기회 활용으로 약점 보완) | WT : 장기보완 (생존전략)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 등 부정적인 일자리 지표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간 격차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다양성 부족과 작은 예산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연수구 조직 정비 및 확대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강화 중소기업 육성기금 증액과 지원 사업 다양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통한 수요 창출 원도심 내 생활밀착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2) 정책제언

(1) 신성장산업 클러스터 강화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기업 지원센터 운영
 - 단지 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과 업체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관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세미나 지원
 - 기업 입지가 집적화되어 있음에도 지역 내 거래 비중이 높지 않고, 설문조사에서도 ‘업체 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지역 내 첨단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산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기술교류 및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 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프로그램 활용
 - 연수구는 관내 신성장산업 분야 기업과 지역 내 우수 대학이 연계하여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이 가능한 환경임
 - 단기 체험형 일자리보다는 채용 연계형 일자리를 통해 전문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다양화

- 원도심과 송도지구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운영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원도심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일자리 연계 사업, 송도지구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일자리 연계 사업이 필요함
 - 또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확대로 중소기업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사업 필요
 -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연수구 내 중소기업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국내외 판로개척’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수구에서는 사업이 축소되어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만 운영하고 있음
 - 인천 내 타 기초자치단체 대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가 적고, 특히 판로개척과 관련된 사업의 수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에서 다양화된 지원사업이 필요함
- 지원사업 운영인력 확충
 - 연수구 내 연평균 5% 이상의 고성장 업종이 10개로 매우 높고, 2011년 대비 2019년 총사업체 수는 151.73%, 총종사자 수는 194.97% 수준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연수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 수는 부족한 상황임
 - 연수구의 경제 규모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할 인력이 부족함

(3)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완 필요

-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기금의 용자 한도 증액 필요
 - 인천 내에서의 육성기금 용자 규모가 작은 편이며, 관내 기업들의 대다수가 용자 한도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남동구에서는 지역 기반 금융기관과 용자협약을 맺음으로써 지역 내 상생을 통해 자금 문제 해결을 시도함
-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 및 자금확보 고려
 - 연수구 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첨단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체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조성액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업체들의 용자한도 증액에 대한 요구가 높고 사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서구 수준까지 조성액 증액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인천시 지능형 기술 기반 제조현황 및 미래전략

최태림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인천광역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다년간 추진하여 일정 수준의 양적 보급을 이루었고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적한 제조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제조혁신을 이루는 부분은 여전히 취약함.
- 본 연구는 제조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한 국내외 사례와 인천시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인천시 제조업의 지능화를 촉진하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분석과 제언

- 제조데이터 분석 플랫폼, 예지보전 설비관리, 머신비전 검사 설비, 협동로봇, 제품설계 및 공정 시뮬레이션 등의 형태로 제조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업에 융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제품설계, 공정개선, 설비운영, 품질평가의 영역에 적용.
- 지능형 제조업의 인천시의 현황을 평가해 보면, 먼저 제조데이터 수집단계에서는 가공 장비와 수작업이 혼합된 중소제조업 공정특성으로 인해 아직 센서와 장비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비중이 작고, 제조데이터 분석·활용 모범사례가 부족하며, 수도권 내에서 공급업체 집적이 낮고 제조데이터 분석 전문업체가 소수인 상황임.
- 인천시의 스마트제조 지역산업 정책방향은 기존의 스마트공장 보급 중심에서 지능형 제조기술을 시험, 실증, 적용,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한 제조데이터 분석·활용 모범사례를 창출 및 확산하고, 지능형 제조기술을 실증하는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며, 중소기업에 적절한 스마트제조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요구됨.

싱가포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 서봉만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유치한 K-NIBRT(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와 K-바이오 랩허브(바이오 창업기업 육성 인프라) 사업의 추진으로 인천시 바이오산업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중앙정부의 공약사업 중 혁신 클러스터와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에서 주목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상세히 검토하고 인천시의 경험과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시사점

- 싱가포르 바이오클러스터와 인천바이오헬스밸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생산 거점이라는 점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
- 혁신 클러스터로의 전환이 두 클러스터가 지향하는 현재 전략 방향
- 거버넌스 구조 측면에서 싱가포르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간의 역할 분담 혹은 기능 조정이 필요한 상황
- 예산 확보와 투자 기금 조성을 통한 민간 투자유치 유인 확보가 중요

인천시 아파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변화 분석

■ 조형진 도시정보센터 전임연구원

■ 서봉만 도시정보센터 센터장



1. 배경과 목적

-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 6년간의 인천시 아파트의 PIR 변화를 분석
- 아파트 실거래가와 군구별 가구 추정소득을 사용하여 지역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인 PIR을 산출하여 지역별 주거(비) 부담 수준을 판단하여, 인천시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이슈를 제안

2. 결론 및 시사점

- 인천시 아파트 PIR의 변화패턴은 ‘급상승형’, ‘상승 유지형’, ‘지속 상승형’, ‘유지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지역간 주거비 부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주거비 부담의 차이가 크게 증가하였음
- 본 연구는 PIR을 이용해 인천의 지역별 주거부담 여건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한편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변 환경과 시설, 대중교통 여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일부 중위소득을 추정해서 적용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명시함.

인천시 음식점 개·폐업 변화 분석

■ 유소현 도시정보센터 전임연구원

■ 서봉만 도시정보센터 센터장



1. 배경과 목적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가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 1개월간 시행됨.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포함함에 따라, 업장의 수가 가장 많으며 경기 등 외부 요인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음식업의 개·폐업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포함한 시계열에서 음식점의 개·폐업에 나타난 시·공간적 변화를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활용해 업장의 수와 폐업 영업기간을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함

2. 결론 및 시사점

-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에 해당하는 시기에 폐업 건수의 증가와 장기 영업 음식점의 폐업이 나타남.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표되는 신도심 상권의 개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 영업 음식점의 폐업은 원도심 중 특히 미추홀구 상권에 집중됨
-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의 개·폐업 현황은 지역 경제의 활력과 성장단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음. 개·폐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자영업 영업 현황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환경과 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함

II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환경 · 안전 분야

● 기획연구

-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생활안전 분야
- 인천광역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사전 검토 연구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취약대상 공간적 상세화 및 정책적 활용방안
- 인천지역 읍면동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업데이트
-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증진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업데이트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 인천광역시 도시회복력 평가체계 개발 연구
- 2022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 인천광역시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정책연구

- 인천시 도시숲 조성현황 분석 및 시민 이용방안 연구
- 인천시 공원 이용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한강하구 수환경측정망 확충방안
- 인천 ESG 지표 개발 연구

● 이슈브리프

-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제도의 변화와 쟁점
- 인천광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생활안전 분야

■ 조성윤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취약요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안전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음.
- 지역안전지수 핵심지표 및 산출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환경이 상이하여 분석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지역별 사고 유형 및 발생 패턴이 달라 공통된 지표를 적용하여 지역의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생활안전사고 피해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인천시는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지표 선정의 합리성, 산출방식의 적절성, 분석 결과의 효용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구급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활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실질적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결과

1) 연구종합

- 행정안전부가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사망자의 지속적 감축 및 지역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보편화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일부 핵심지표의 연계성이 낮아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이 지역의 안전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무엇보다 진단이 아닌 평가의 방식으로 지역의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결과를 상대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혼란과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취약지표 및 경감지표 개선이 필요하며 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먼저, 취약지표의 경우 재난약자수, 건설업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유형별, 장소별, 연령별, 시기별, 장소별 사고 발생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생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천시에서는 낙상, 상해, 열상, 그 밖의 둔상, 추락의 순으로 생활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들 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고환경 개선, 교육 및 훈련 강화, 대응 인력 및 예산 증대 등 다양한 취약성 저감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감지표는 취약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지표로 구성하고 중장기적 위해지표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재난약자 지원 확대, 건설업 및 제조업 안전관리 강화 등과 같은 대응지표와 구조·구급 예산 및 인력 확보, 생활안전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과 같은 노력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정책제언

- 생활안전의 법적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된 사고 유형을 대상으로 공통된 지표를 적용하여 지역의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상대 비교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많은 오해와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생활안전관리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정책의 방향은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이 아닌 지역의 실질적 안전수준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첫째, 인천시는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도시 취약성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안전관리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요 생활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장소별, 연령별, 시기별, 장소별 발생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취약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의도성이 있는 사고, 부주의에 의한 사고,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 음주로 인한 사고, 폭행을 동반한 사고 등을 구분하여 점검 및 관리 강화, 단속 및 처벌 확대, 교육 및 홍보 실시 등의 전략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지역사회기반 안전관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생활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자율성과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지킴이 등 지역사회 조직을 활성화하여 생활안전사고의 반복적 발생 및 피해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셋째, 인천시민 안전의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인식 수준과 대응능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안전관리정책의 효율성 및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민안전 체감도, 인식도, 실천도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주요 현안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의식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맞춤형 안전관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시 안전관리정책의 인지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안전의식 수준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도시안전 취약성 저감을 위한 다각적 전략을_ 추진함과 동시에 구급·구조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실천적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구조·구급활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 점검 및 관리인력 확충, 신규 구급차 보강 및 노후 구급차 교체, 생활안전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등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
 - 아울러, 상습신고 및 허위신고, 구조·구급차량 출동 방해, 구조·구급대원 폭행 및 폭언 등이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사전 검토 연구

한 준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2017.8.24.)에서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하면서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사업 개발 및 주민 참여 촉진, 갈등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음.¹⁾
-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에너지 공급 기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료전지나 해상풍력 설치 및 태양광 부지 확보와 관련해 주민수용성 문제도 있고,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도 있음.
- 이에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인천시가 에너지 관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주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장·단점, 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 연구는 인천시 에너지 주요 현황 및 에너지 전담기관 필요성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 검토와 국내외 사례 검토를 하며, 설립가능한 에너지 전담기관의 유형별 특성 및 장·단점을 분석해봄으로써 인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단, 이 연구는 인천시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과 전담기관 유형별 특성 및 장·단점을 1차적으로 검토해본 연구로서 추후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 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공사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므로 사전 단계로서 사업 범위, 사업 적정성, 경제성, 가용 자원, 파급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 산업통상자원부. (2017.8.24.).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 개최.

2.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인천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수소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에너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에너지 복지, 주민수용성 확보 등 다양한 영역의 에너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해상풍력과 같이 고비용, 고난이도의 대규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설립하고자 하는 에너지 전담기관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인천의 에너지 주요 현황을 바탕으로 전담기관에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충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테면, 에너지센터와 같이 설립 요건이나 준비 사항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 측면에서 한계가 큰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에너지공사와 같이 설립 요건이나 운영의 책임은 까다롭지만 기능이나 역할 측면에서는 전문성과 효과성이 클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전담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및 기능,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충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담기관 유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검토 과정에서 지역 내 에너지 분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지방공기업인 공단이나 공사 형태를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타당성 검증, 주민 공청회,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야 가능함.
- 셋째, 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할 경우 기업성, 즉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이 가능함.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도 공공성과 더불어 기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별 수지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적정 자본금 및 가용 투자재원 분석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해외 에너지공사 사례에서도 대부분 지자체가 공사를 100% 직접 소유하는 형태이며, 전기, 지역난방, 지역냉방 등의 발전, 송전 설비를 비롯해 통신, 수송 등 대규모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음.

- 국내 타 지자체에서도 에너지공사 설립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 설립을 포기하였으며, 사전에 수익원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운영시 예상치 못한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음.
- 넷째, 인천에서 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해상풍력이고, 이와 관련해 해결되어야 할 여러 요인들이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며, 공사 설립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음.
 - 인천시가 소유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주로 연료전지와 태양광 중심의 소규모 설비이며, 지역난방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익이 크지 않아 공사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해상풍력의 경우, 서울이나 제주 사례와 같이 에너지공사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SPC 지분 참여를 통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참여 형태나 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할 경우 REC 기준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를 에너지공사의 재원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그러나 해상풍력은 주민 수용성 문제, 인·허가 절차 지연, 외부 자본 개입 및 개발 수익 유출 문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 정부 정책기조 등으로 인해 실제 개발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큼.
 - 해상풍력 기반의 에너지공사 설립을 고려할 경우, 해상풍력 개발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에너지공사 설립에 관한 지역 내 논의와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에너지공사의 수익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 설립할 것인지,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다섯째, 에너지공사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기존 공공기관 내부 조직 내지 에너지센터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타 지자체에서도 당장의 공사 설립이 어려워 기존 공공기관 내부 조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는 초기에 기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추후 해상풍력 관련 제반 장애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수익원 확보 등 공사 설립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경우,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 김보람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재정지출이 온실가스 감축에의 영향을 분석하여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감축 효과를 높이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의미함.
- 「탄소중립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에 발맞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추진현황과 국내외 도입·운영사례 관련 문헌과, 인천광역시 예·결산 특성과 실무현장의 의견수렴 등 인천광역시 도입 여건 등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설계하고 대상 사업 태깅(tagging) 방안과 단계별 운영 로드맵 등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함.

2.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 인천광역시 재정 규모는 2022년 기준 총 14조 3,970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0.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재정자립도는 51.1%(2022년 기준)이며, 2022년 인천광역시 본청의 예산액은 국비 29.32%, 시도비 70.68%로 구성됨.
- 인천광역시 본청 및 소속기관 예결산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 등 사업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3.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태깅(tagging) 방안

-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정도에 따른 방향과 강도에 따라 5가지 유형, 즉, 감축 - 약(弱)감축 - 중립 - 약(弱)배출 - 배출사업의 순차적 층위로 분류하였음.
- 배출감축 부문은 건물, 공공, 수송, 농축산,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흡수원으로 구분하였고, 대상사업의 유형은 해당 사업이 가진 정책적 성격을 고려하여 물리적 인프라 구축, 정책·기술 지원, 민간역량 강화로 구분함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초기 시행 시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하며, 점진적으로 세입예산 및 조세지출, 결산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유형 분류 시, 회계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출구조별(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성질별(목그룹·편성목·통계목), 재원출처별(자체사업, 보조사업), 사업방식별(직접, 구·군지원, 민간보조)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2017~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세출 예·결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세부사업과 예산액 모두 중립사업이 다른 유형(감축/약(弱)감축/약(弱)배출/배출사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 결산서 구조 등이 예산서와 달라 예·결산 연계·분석이 제한적임. 따라서, 제도 운영에 앞서 예·결산서 간 연계성을 고려한 법적 조치를 건의할 필요가 있음.

4.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로드맵(2022~2025)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기후친화적·재정적 접근을 통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전체 사업 및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주류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의의가 있음.
- 인천광역시는 환경국(5개과)과 자원순환에너지본부(4개과)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음. 이번 시범운영 결과, 체크리스트 및 예산서 작성에 대한 사업담당부서들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고 체크리스트 작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제외사업의 분류와 그 사유가 타당한 것을 확인하였지만,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의 방법론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함.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3단계의 로드맵을 제시함.
 - 1단계 : 제도 준비 및 시범운영을 위한 운영기반 구축과 전략적 도입 추진
 - 2단계 : 본격 시행, 목표와 대상 범위의 확대, 분류체계 및 방법론의 구체화·체계화
 - 3단계 : 기반 재정비와 제도 확대, 분류체계 및 방법론 정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5. 정책적 고려사항 및 정책제언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성 및 적실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내의 제도 운영사례들을 참고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선택적·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되, 정책 및 제도적 여건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
-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외 지자체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녹색예산제와 같이 기후·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한 지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탄소중립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의 격차’, ‘정책효과의 상충 또는 상쇄’로 인해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음. 특히, ‘그린워싱’을 경계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감축 예산을 작성할 수 있는 엄격한 기후예산 편성 및 관리원칙이 준비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온실가스 배출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패널티의 균형있는 설계가 중요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검토·평가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함.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과 우선순위 그리고 그 성과를 예·결산서에 반영하려면 문제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함. 이에 대한 공식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 구축체계와 평가방법론 또는 입증자료 DB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취약대상 공간적 상세화 및 정책적 활용방안

■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 류지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책임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명시함
 -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2절에 ‘기후위기 적응 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과 그 이행평가 지침에 따른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21)에서는 종합분석을 통한 지역 리스크를 도출하고, 이를 세부시행계획과 연계시키도록 함
- 기후위기 적응정책은 국가 및 광역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및 지역을 포함하는 취약대상을 정의하고, 공간자료를 구축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활용 가능한 기후변화 취약대상의 공간적 상세화를 위한 DB 구축 방법 및 활용 가능 자료를 목록화하고, 일부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후변화 리스크를 활용한 취약대상의 공간적 상세화 방안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에 지역의 기후 리스크를 도출 및 종합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기후 리스크 목록 중 우선순위 기후 리스크 목록을 활용하여 취약대상의 공간적 상세화를 시도함

- 리스크는 원인별로 취약대상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며,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의 공간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리스크 항목을 기준으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구분하고 리스크 분석을 위해 구축이 가능한 자료, 기구축되어 있는 자료의 활용 방법 및 구축이 필요한 경우, 구축 방법을 목록화하고 장단점 및 보완점을 제시함
- 장기적으로 구축이 필요한 자료의 경우 구축 방안을 제안함

3.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활용방안 제안

- 우선순위 리스크 항목 중, 단기간 공간자료 구축이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고, 정책과 연계되는 현황을 분석하여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피해 저감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무더위쉼터를 선정, 설치 및 관리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목적은 기후 취약계층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저감시키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폭염이라는 기후 원인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지역과 취약대상의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이와 관련된 인천광역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안함
 - 제3차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무더위쉼터 확대 사업이 포함됨.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고려하여 무더위쉼터의 조성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음
 - 환경부는 고령층 등 일반적인 사회적 취약계층 이외에도 기후 취약계층 즉, 고령자는 아니지만 폭염 등으로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부근로자 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도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는 실외 근로시간이 길어 폭염으로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1차산업 및 일부 2차산업 종사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가이드라인 작성하고, 필요시 이들을 위한 무더위쉼터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함

4. 결론

-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무더위쉼터 확대 정책 부분과 연계하여 분석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여 공간화를 수행하고 이를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적응대책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장기간 연구를 통해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체 데이터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DB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인천지역 읍면동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업데이트

■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 부찬중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책임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상향, 2050년에는 2018년 대비 배출량 88% 감축하는 시나리오 등 확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연료의 종류 및 에너지 사용량의 영향을 받으며 대기오염문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기 환경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저감 정책 적용을 위해 지역별, 오염 물질별 최신의 기초자료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제공자료가 아닌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배분하여 분석하고, 해당지역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작성하고자 함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지도

1) 온실가스 배출량 지도

- 2021년 기준 인천지역 건물부문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2,634ktCO₂eq 수준이며, 서구에서 22.2%,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각각 15.3%, 1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추홀구 11.3%, 동구 11.2%, 중구 9.6%, 연수구 9.4%, 계양구 6.6%, 강화군 0.9% 수준임

- 2021년 기준 인천지역 건물부문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9,422ktCO₂eq 수준이며, 서구에서 21.9%, 동구와 남동구에서 각각 18.0%,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수구 11.2%, 부평구 9.9%, 중구 7.9%, 미추홀구 7.0%, 계양구 4.9%, 강화군 2.0%, 용진군 0.5% 수준임
- 2021년 기준 인천지역 건물부문 지역난방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169ktCO₂eq 수준이며, 연수구에서 30.7%, 부평구와 서구에서 각각 24.9%,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동구 11.3%, 계양구 10.1%, 중구 5.4%, 미추홀구 0.8% 수준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지도

- 군·구별 PM_{2.5} 배출량 지도를 살펴보면 2018년에 서구(280톤), 용진군(174톤), 동구(152톤), 강화군(86톤), 2019년 서구(299톤), 용진군(171톤), 동구(105톤 강화군(78톤)등 배출량이 많은 군·구로 구분되고 용진군 영흥면, 동구 송현3동, 서구 오류왕길동 등 2018, 2019년 배출비중이 높음
- CAPSS 군·구별 SOX 배출량 지도를 살펴보면 2018년, 2019년 모두 용진군(5,327톤, 4,959톤), 동구(2,438톤, 1,412톤), 서구(1,2919톤, 1,069톤) 등이 배출 비중이 높은 군·구이고, 읍면동 지도를 살펴보면 용진군 영흥면(5,318톤), 동구 송현3동(2,353톤), 서구 오류왕길동(978톤), 부평구 갈산1동(218톤) 등이 배출비중이 높았고, 2019년에는 용진군 영흥면, 동구 송현3동, 서구 신현원창동, 중구 운서동영향이 높은지역으로 나타남
- 군·구별 NOX 배출량 지도를 살펴보면 서구(5,103톤, 4,359톤), 용진군(3,962톤, 3,814톤), 동구(1,896톤, 1,295톤)등 배출량이 많은 군·구로 구분되고, 읍면동의 지도를 보면 2018년에 용진군 영흥면, 서구 석남1동, 동구 송현3동, 서구 오류왕길동 등이 배출비중이 높았고, 2019년에 용진군 영흥면, 서구 신현원창동, 서구 검암경서동, 동구 송현3동 등이 배출영향이 높은 지역으로 구분됨

3. 결론

-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필수적이며 대기오염문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계로 대기 환경관리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이 요구되는 상황임
-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1년에 소폭 증가함
 - 2013년 대비 도시가스는 14.2%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전력은 동일한 수준이며, 지역난방은 54.4% 감소
 - 도시가스는 전체배출량 대비 21.5% 차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 77.1%, 지역난방 1.4%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전력사용에서 상당부분 차지함
- 2021년 기준 인천광역시 건물 부문의 용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업용이 45.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주거용 26.3% 상업용 18.8%, 문교사회용 4.0%, 기타 3.8%, 공공용 1.7%, 농수산용 0.1% 순임
-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12,225ktCO₂eq) 중, 서구가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구, 남동구가 각각 16.3%를 차지하고 있음
 - 연수구 11.1%, 부평구 11.0%, 중구 8.3%, 미추홀구 7.9%, 계양구 5.4%이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각각 1.7%, 0.4% 수준임
- 수송부문과 관련된 도로이동오염원과 비도로이동오염원, 비산먼지의 도로재비산먼지, 비포장도로 비산먼지를 제외한 점·면오염원을 활용함
 - 2018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을 보면 TSP 7,747, PM_{2.5} 989톤, PM₁₀ 3,930톤, SOX 9,888톤, NOX 16,124톤, VOC 48,568톤, NH₃ 6,986톤, CO 16,748톤, BC 90톤 배출됨
 - 2019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을 보면 TSP 7,034, PM_{2.5} 896톤, PM₁₀ 3,589톤, SOX 8,482톤, NOX 14,344톤, VOC 46,941톤, NH₃ 6,533톤, CO 15,540톤, BC 87톤이 배출됨
- 인천지역 에너지 수요중심 도시가스, 전력, 지역난방 사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도시가스 사용량은 직접배출에 해당하고, 전력 및 지역난방 사용량은 간접배출에 해당함
-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DB는 계량기로 측정가능한 도시가스, 전력, 지역난방 사용량만을 수신할 수 있음
- 대기오염물질은 CAPSS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배출량 산정의 고유한 한계점을 반영함

인천광역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증진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 이종욱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책임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383호, 2014. 5. 26., 일부개정)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범위 및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왔으나, 그간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행 건수가 미진한 상황이며 지역에서 실행된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운영 통계 및 협의 의견 분석 등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임.
- 따라서, 기초 자료 수집 후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단기적으로는 자치법규(조례)와 협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이 필요함.
- 본연구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유형별 운영 현황 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상세 분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 도출, 조례 개정 대비 자치법규 체계분석 및 필요조항 도출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결론 및 정책 제언

- 인천광역시의 지역 환경영향평가 수행 건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하여 현격히 저조하므로, 지방 정부가 협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증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지역의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등이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인천광역시 관할 행정 구역 내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황에 관련한 조사와 분석이 향후에도 계속 필요함.

- 지방 정부의 관점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할 행정 구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수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 차원의 검토와 협의 의견 제시 절차가 생략된다는 점임.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도 상존함.
-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증진을 위한 대상사업 추가 등의 노력에도 동력이 실리기 힘들다는 문제점도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 특성과 지리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함.
 - 사업 대상지의 환경 현황과 지리적 특성을 숙지하고 있는 지역 전문가의 의견이 협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필요함.
 -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건을 충족하여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대상사업 예외 조문을 일부 개정하도록 함.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별표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중 '9. 그 밖의 개발사업'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행이 가능하므로,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의견이 반영된다는 조건 하에 실제 인용이 활발히 일어난다면 실효성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임.
 -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변경 없이 지자체의 자체 노력을 통하여,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조례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함.
 - 일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공단에서 증설 예정인 대기오염 배출시설 등이 대상사업 추가를 위한 예시가 될 수 있음.
- 협의 의견 개진 관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들이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향을 보이므로,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의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 지역 전문가 및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의 참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조례 개정 시 조례 및 조례 규칙의 전반적인 구성은, 현행 조례에 대비하여 '세부 규정' 형태로 보강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업데이트

■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 최종석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책임연구원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정책계획에 따른 추진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책 D/B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필요가 존재함
 - 또한, 새롭게 등장한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개념을 본 정책 D/B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동 연구는 격년 단위로 정책인벤토리를 업데이트하고 기존 정책의 추진 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정책 계획 수립과 사업 성과평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관리 정책 수립 시 적용가능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목록화하고 추가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정책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대기환경관리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 인벤토리를 구축하고자 함

2. 기존 인벤토리 구축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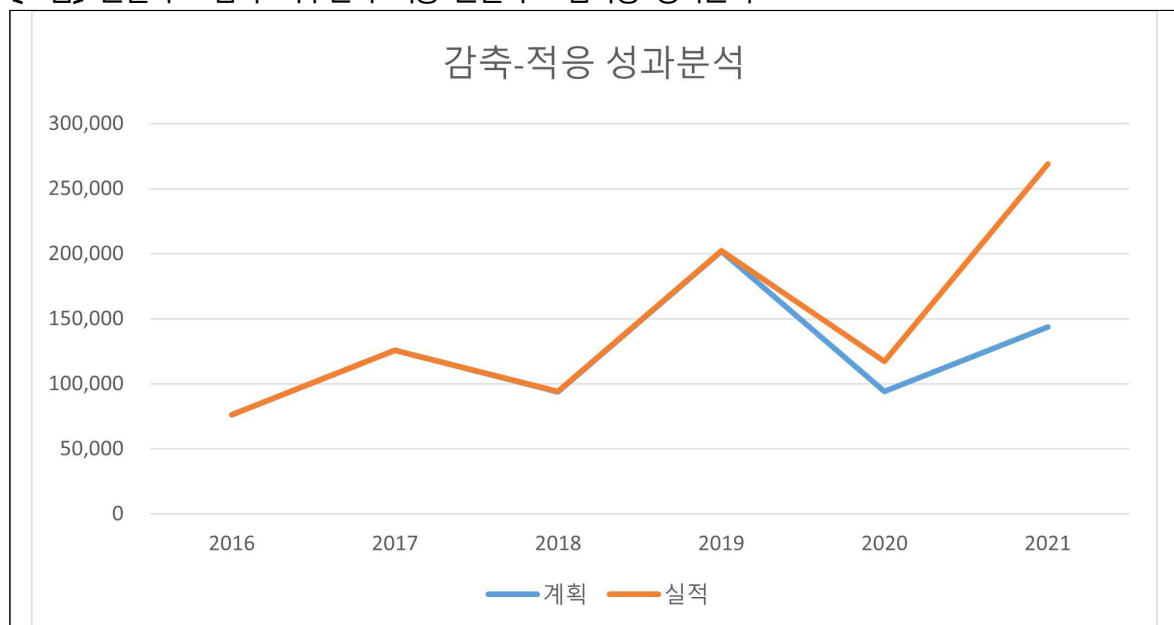
1) 기존 정책인벤토리 현황

-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대책(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과 대기환경 관리 정책을 목록화하고, 각 세부정책의 연계효과를 분석하여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음.

2) 정책카드 관리현황 분석

- 유형별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내 주요 사업들의 관리카드를 통해 성과분석을 진행하였음
 - 기존 연구의 기준시점이던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진행함
 - 각 정책 인벤토리별 성과분석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및 소요재원을 기준으로 계획대비 실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였음

[그림]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량 성과분석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0) 및 인천광역시(2021) 참조

3) 시사점

- 기존 연구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대기환경 관리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분류하고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정책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 특정 감축수단이 얼마만큼의 연계효과를 가지는지를 제시하지 못하여 향후 활용 및 갱신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인벤토리 개선방안

1) 통합 인벤토리 분류체계 개선

- 현재의 통합적 정책인벤토리의 경우 I.감축-적응, II.감축-대기, III.적응-대기, IV.감축-적응-대기의 4가지 유형으로 정책수단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연계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일원화할 필요가 존재함
 -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기존의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를 위한 원단위의 경우 비용화하여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할 필요가 존재함

2) 국가 또는 지자체의 신규 계획 도입 검토

- 국가 계획의 경우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등의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였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20년에 「인천형 그린뉴딜」, 2021년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2022년에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이 발표됨
 - 이에 따라 2024년 국가계획의 반영시점에서 인천광역시의 변경사항을 같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실적관리 개선방안 마련

-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정책인벤토리의 경우 각 유형별, 분야별, 정책별, 과제별 넘버링을 통해 신규 관리번호를 제시하여 관리되고 있음

-
- 따라서 D/B관리에 있어 고유 관리번호 외에 종합계획별 관리번호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관리카드 형태의 실적관리자료를 엑셀시트 형태의 DB화를 통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결론

- 향후 지속적인 정책목록 및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업데이트 필요
- 세분화된 인벤토리 분류체계의 일원화 필요
- 정량화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효과 연구 필요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 한 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기후환경연구팀장

■ 이태휴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책임연구원



1. 서론

-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국가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GIR)에서 IPCC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산정하여 배포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방법은 하향식 접근방식에 따른 산정 결과로, 실제 지역단위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 국가에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ETS)가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인천지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 기업이 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배출현황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이 연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정보 보완 차원에서 국가 산정자료가 아닌 자체 산정방법론을 통해, 즉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등의 자료를 활용해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업단지별 지도 형태로 표현하며, 산업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인천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 이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산정방법론을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산업단지별·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시함

- 현재 국가에서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배출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ETS)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제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도시가스, 전력, 열(스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산업단지별·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인천지역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마련시 산업단지의 배출현황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단지별로 업종별 배출현황을 검토하여 국가 단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선적인 감축 기술과 인천지역에 적용가능한 감축 수단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단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감축 수단을 참고하여 산업단지 전반에서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량은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 파악이 우선되어야 단계적인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 수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사업장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선정·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사업을 활용하여 산업단지별로 에너지 사용량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도 상쇄사업과 같은 대기업 - 중소기업 연계 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고효율 설비를 교체 및 지원하는 사업도 검토해볼 수 있음

인천광역시 도시회복력 평가체계 개발 연구

■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 염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복합위험사회에서 도시회복력 평가체계 부재는 그 자체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Florin & Jianhua, 2014) 도시 위험요인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도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UNDRR(UN 재난위험경감기구) 재난안전 롤모델 도시이자 레질리언스 허브 도시인 인천광역시는 도시회복력 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재난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 안전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과거 피해를 분석하고 인천시 재난안전 현황을 평가함.
 - 인천시 도시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환경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취약요인을 도출함.
 - 인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회복력 정량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인천시 도시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함.

2. 도시회복력 종합평가

- 도시회복력 세부 지표의 5년간 평균값을 활용하여 각 세부 지표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함. 요인별 세부 지표 개수가 다른 만큼 표준화한 값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 요인별 정량적 지표 값을 도출함.
-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물리·환경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요인이 하나의 축을 구성하도록 배치한 후 0에서부터의 거리를 통해 도시회복력 평가를 수행함.

- 도시회복력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도시회복력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도록 물리·환경적, 사회·경제적 요인과 같은 취약 요인은 최댓값인 1에서 지표 값을 뺀 값을 최종적으로 활용함.
- 물리·환경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요인을 종합하여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한 결과 최저 수준을 0, 최고 수준을 3의 양의 제곱근(약 1.732)으로 평가했을 때 인천광역시의 도시회복력은 0.80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한 결과와 각각의 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세부 요인에 대한 도시회복력 평가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물리·환경적 요인 세부 지표의 5년간 평균값을 종합한 결과 최저 수준을 0, 최고 수준을 1로 평가한다면 인천광역시의 물리·환경적 요인은 0.429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 사회·경제적 요인 세부 지표의 5년간 평균값을 종합한 결과 최저 수준을 0, 최고 수준을 1로 평가한다면 인천광역시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0.5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제도적 요인 세부 지표의 5년간 평균값을 종합한 결과 최저 수준을 0, 최고 수준을 1로 평가한다면 인천광역시 제도적 요인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0.423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 인천광역시의 도시회복력 수준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도시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연안 지역이면서 2020년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받은 울산광역시의 도시회복력 지표를 종합 평가함.
- 인천광역시 도시회복력 종합평가 과정과 같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요인 중 팔마비율, 제도적 요인 중 재난안전 자원봉사 참여율과 같이 자료 구득 과정의 문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를 활용한 분석을 수행함.
- 물리·환경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요인을 종합하여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한 결과 울산광역시의 도시회복력은 0.799 정도로 분석되어 인천광역시 도시회복력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3. 도시회복력 증진 전략

- 인천광역시의 도시회복력을 물리·환경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특성의 지역의 회복력 평가를 통해 지역 간 비교·분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도시회복력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인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 도시회복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보다 상세한 단위에서 분석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6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하는 노인 계층은 풍수해 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음(김명구 외, 2014).
- 풍수해 보험 등 개인적인 저감 대책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켜줌(Kreibich et al, 2005).
- 즉 풍수해 보험 등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여 재난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난안전 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도시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음.
- 재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만큼 재난 취약계층이 미리 대피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최경식, 2014).
- 현재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피체계 구축 및 대피 교육 등이 부족한 실정임(김은영 외, 2018).
- 재난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해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 도시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한우석 & 유진욱, 2015).
- 재난과 관련된 지역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지자체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강화할 필요함(이재은, 2011).
- 재난, 환경적 영향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으면 시민참여 과정이 계획 수립 과정에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재난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향상할 수 있으므로 타당성이 존재함(석인선, 2008).
- 재난안전 중장기 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 내 방재 및 안전 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재난안전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난안전에 대한 인천시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고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해 대응 역량을 향상할 수 있음.

2022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 주필주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1. 조사배경 및 목적

- 매년 자연재해, 사회재난, 안전사고 등의 발생·피해규모가 가속화되고 있음.
 - 재난의 불확실성, 복잡성, 상호작용성, 누적성 등의 특성에 따라 미래의 재난은 더욱더 예측과 대응이 쉽지 않음.
- 시민들의 안전의식 결여는 안전불감증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킴.
 - 시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따라 재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달라짐.
 -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안전불감증이 극대화되고 재난에 대한 인지가 미비하여
- 재난안전사고 피해가 증폭될 수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반영된 재난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지역 환경과 정책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 단위의 의식조사가 필요한 시점임.
 - 재난관리는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함.
- 의식조사를 통해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체감도, 인식도, 실천도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2. 재난안전 의식조사 개요

- 인천시 10개 구·군의 만 13세 이상 거주자(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의식조사를 실시함.

- 의식조사는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17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인구비례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음.
 - 청소년, 고령자 표집을 위해 온라인 패널조사와 면접 조사(군지역)를 병행함.
- 조사 내용은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의식 조사> 항목을 토대로 인천시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함.
 - 설문 문항은 재난안전 체감도, 인식도, 실천도 및 시민참여, 정책인지도 및 평가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함.
- 조사 결과, 인천시민 재난안전 체감도, 재난안전 중요도, 안전수칙 준수 수준 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시민행동요령 숙지 수준,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인지도 및 평가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실천도 및 시민참여, 정책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및 홍보기능 강화가 요구됨.

3. 정책제언

1) 연령대별·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

- 재난안전 체감도, 인식도, 실천도 및 시민참여, 정책인지도 및 평가 등 전반에 걸쳐 연령대 간,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청소년·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은 생활반경, 여가시간, 지역 애착도, 교육 참여 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는 국제도시, 신도시, 도서 지역 등 특성이 뚜렷한 지역이 많고, 인구 규모와 구성원 성격 등도 다양한 편임. 지역별 재난취약성과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재난안전 정보공유 및 홍보 확대, 교육 기능 강화

-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정보공유'와 '적극적 홍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민 다수가 재난안전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및 민간자율방재조직 등과 연계하여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 및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재난안전 정책 참여 및 실천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교육 실효성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해당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 직장 등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나이·지역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신청,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조직,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일상생활 곳곳에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체험형 교육을 병행하여 다양한 사례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3)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 인천시민의 80% 이상이 재난 대응에 있어 '시민참여'를 중시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시민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정보공유 및 홍보 확대, 교육 기능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참여'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함.
 - 재난안전 정책 기획~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입장과 의견을 직접 전달·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체'로서의 인식을 강화함.
- 참여 의지는 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껴 망설이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과 함께 적절한 유인책을 병행하도록 함

인천광역시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 주필주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복합적인 피해를 야기하며, 불가항력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고 할 수 있음.
 - 사악한 문제의 성격을 지닌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을 넘어선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
- 인천시의 경우 다수의 민간 자율방재조직 및 커뮤니티 조직이 존재하며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협력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됨.
 -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 현황 및 협업환경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와 지역사회 현장 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형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 거버넌스 모델(안)을 제시하고, 주체별 역할 및 실질적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인천시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제도적 여건과 민간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쟁점과 한계를 도출함.

2. 민간자원 현황 및 민관협력 추진 여건

- 민간영역 활동의 대부분은 재난 발생 이전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상시 예방-대비 단계 활동 경험이 재난 발생 이후 대응·복구 능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자기조직화를 통해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이 연속성을 갖고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간에게는 재난안전 관련 의제를 행정과 직접 논의·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며, 행정에 동원되거나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어 이미 고착화된 활동 외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움.
- 담당 실무자가 바뀌더라도 민간자원에 대한 태도와 실제 활동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부서 형태가 요구됨.
- 재난안전교육의 경우 이론이나 사례 중심의 집합교육과 현장 밀착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야 하며, 민관이 상호 입장을 설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합동 교육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재난안전 관련 위원회는 총 10개로 파악됨. 위원회 수는 적지 않으나 대부분이 연 1회~2회 선에서 소극적·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발생 이후 대응·복구단계에서의 역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음. 평상시 자원봉사자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함께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재난안전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역량 및 지원의 필요성,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공무원의 민관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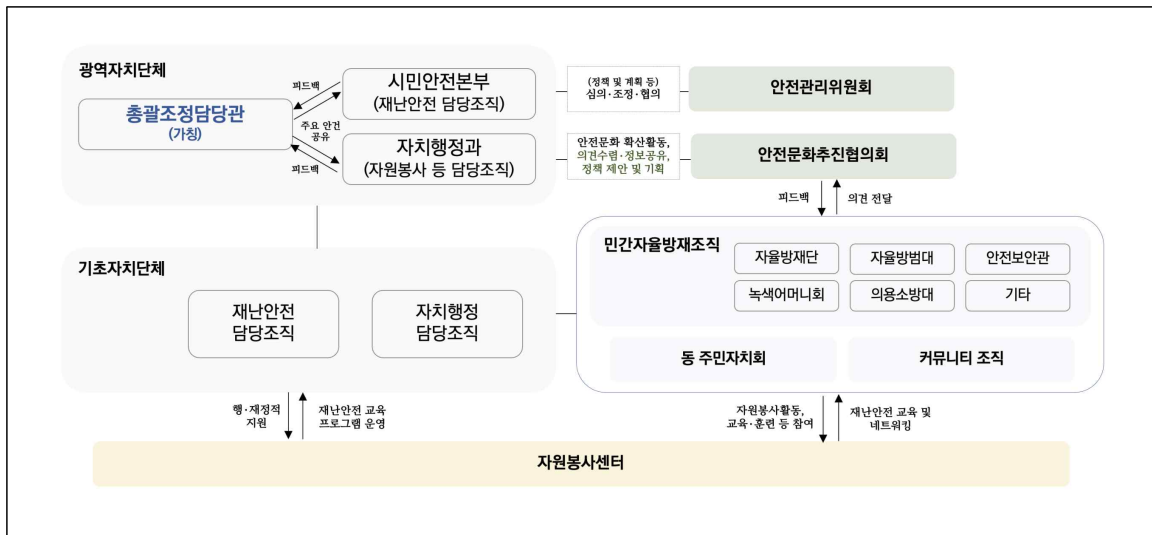
3. 지역사회기반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거버넌스 모델(안)

- 평상시 거버넌스 모델(안)에서는 유형별, 직무 성격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현재 업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총괄조정담당관(가칭)’을 두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함.
 - 평상시 총괄조정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 분야 업무를 전체적으로 정리·조정하는 것임. 또한 재난안전 관련 문의, 민원, 건의 및 제안사항 등을 일괄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공유하고, 피드백 내용을 재전달하는 역할도 부여함.
- 안전관리위원회의 정책 심의·조정·협의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안문협은 기존 안전문화 확산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제안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함.

- 자원봉사센터의 교육·훈련기능을 강화하여 역량 있는 리소스(resource)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간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상호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자원봉사센터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기관, 민간자율방재조직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그림 1] 인천형 재난안전 거버넌스 모델(평상시)



- 재난 발생 시 총괄조정담당관의 기능을 전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공공)와 재난 발생 현장(민간) 간 소통 창구로 활용함.
 - (1안) 재난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총괄조정담당관이 재난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시간으로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2안) 재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거나 현장 파견이 어려운 경우 시청 홈페이지 및 SNS 등에 임시 링크를 부여하여 지역 현장 상황과 요청사항을 직통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가 적재적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함.
 - (대응 단계) 위험도가 높은 재난 발생 직후에는 전문성이 검증된 자(조직)를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재난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인력풀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복구·회복 단계) 다수의 참여가 요구되는 복구·회복 단계에서는 충분한 자원봉사자가 적재적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함.

[그림 2] 인천형 재난안전 거버넌스 모델(재난 발생 시)



2) 기타 추진전략

- **(단기 전략)** 안전문화추진협의회 분과 구조 개편 및 기능 다원화, 민관협력 필요 분야 목록화
 - 안문협 기능을 안전문화 확산 활동, 단체별·분야별·지역별 주요 정보공유, 정책 기획 등 크게 세 가지로 확대하고, 민간영역의 요구와 의견을 합치된 형태로 전달할 수 있도록 분과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재난관리단계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 민관협력 필요 분야를 목록화하여 숙지함으로써 민간자원 투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목록화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민간자율방재조직 등이 함께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전략)** 재난안전부서 역량 강화 및 성과보상제도 마련,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 주체별 역할(영역) 공식화를 통한 책임과 권한 부여, 주체 간 연대 강화
 - 재난안전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원봉사센터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자(강사)로 육성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민간)의 책임과 권한, 역할 등을 관련 계획 및 매뉴얼 등에 반영하여 대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난안전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은 로컬 단위이므로 지역사회 결속 및 거버넌스 협력 기제를 파악하여 '협업 가능한 영역'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인천시 도시숲 조성현황 분석 및 시민 이용방안 연구

■ 권전오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인천시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특히, 2019년부터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 바람길숲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본 연구는 그간의 도시숲(미세먼지 저감숲, 도시 바람길숲) 사업을 종합 점검하는 목적으로 조성현황과 시민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9개 도시숲 사업 유형 중 사업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 바람길숲을 연구대상 도시숲으로 선정하였음.
- 현장답사 대상지로는 미세먼지 저감숲은 서구 석남 완충녹지 등 3개소, 도시 바람길숲은 부평구 맑은내 바람생성숲 등 5개소를 선정하였음.
- 도시숲 이용프로그램 현황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좌이음숲의 숲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지역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도시숲 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2. 도시숲 조성 개선방안

1) 미세먼지 저감숲

- 현장답사 결과 산림청이나 인천시에서 제시한 조성기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아래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었음.
 - 숲 조성 후 3~5년 주기로 식재 밀도조절이 필요하고, 토양 등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숲의 기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

- 조성기법에서 관목 식재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선이 차단되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방감 있는 설계가 필요해 보였음.
- 미세먼지 저감숲이기는 하나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책로, 벤치 등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한 곳은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음.
- 미세먼지 차단숲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인 완충녹지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도시 바람길숲

- 기존 산림의 가장자리에 도시 바람길숲(바람 생성숲)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산림 복원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토지 이용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의 숲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도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근린공원에 조성되는 바람생성숲의 경우에는 근린공원의 성격과 도시숲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밀한 설계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확산숲을 답사한 결과 수목의 식재밀도가 낮은 곳은 관목을 추가하여 다층식재를 추진하고 주변 숲의 자연림을 식재모델로 숲을 복원할 것을 제안하였음.
- 도시 바람길숲은 기존의 녹지축 연결이나 미기후 조절형 도시숲의 기능으로 재해석하여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3. 도시숲 사업대상지 확보와 도시계획과의 연계

- 도시숲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확보가 가장 중요함.
- 2020년에 도시숲법이 제정되었지만 도시 내에서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연동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이나 바람길 관련 기초자료가 충실히 갖추어져야 함.
- 도시숲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4. 도시숲 이용프로그램 개선방안

-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이음숲은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 완충녹지로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충기능과 시민이용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 시공되었음. 숲 이용프로그램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었음.
- 주민의견 수렴결과 숲 내 다양한 시설물과 공간을 요구하고 있었고, 숲 이용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을 요구하였음.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완충녹지의 경우 근린공원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인천대공원 등 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숲 이용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그러나 관리인이 상주하는 대형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주민자치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함.

5. 도시숲 관리체계 개선방안

-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숲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구 단위의 도시숲 관리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 공원 이용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권전오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목적

- 지난 20여년간 인천시는 공원의 양적인 공급 정책을 추진하여 2.3배(2002~2020, 개소수)의 공원을 공급하고 있음. 북부권 개발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면 양적인 증가세는 완화될 것이며, 고밀화된 도심에서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공간뿐 아니라 예산 확보도 어려워질 것임. 따라서 공원의 질적인 수준 향상과 함께 공원 이용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공원관리 계획체계를 정립하고 공원 이용프로그램 유형화를 기초로 이용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정책제언

1) 공원관리 계획체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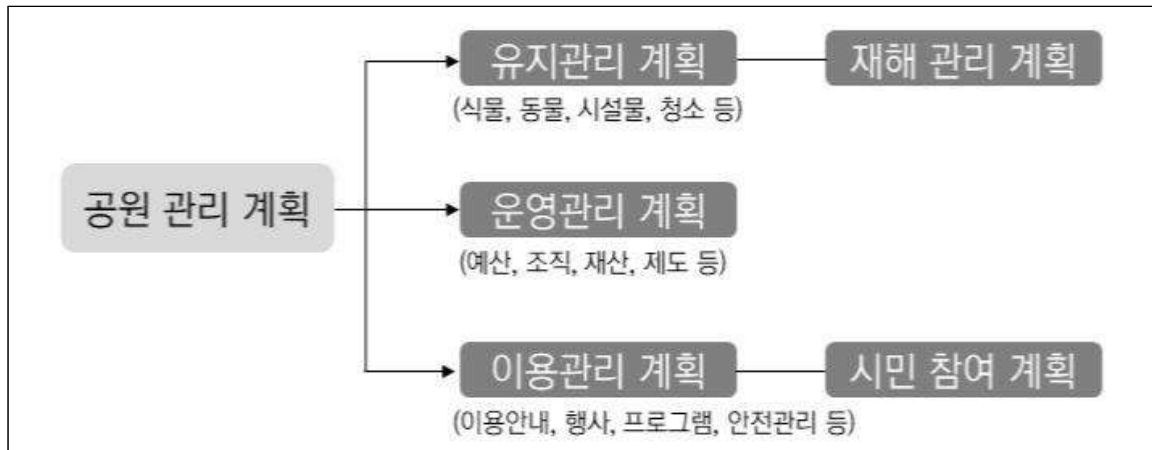
- 조경(공원)관리를 세분할 때 유지관리, 운영관리, 이용관리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그림 1] 공원 관리의 유형과 지향점



- 공원관리계획 체계는 ‘신조경관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경(공원)관리의 3가지 유형에 따라서 유지관리계획, 운영관리계획, 이용관리계획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유지관리계획 하부에 재해관리계획, 이용관리계획 하부에 시민참여계획을 포함.

[그림 2] 공원관리계획 체계 제안



2) 공원 이용프로그램 유형화 및 사례 종합

- 공원 이용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대분류, 소분류로 나누는 유형화가 필요함.
- 대분류는 도시공원법에서 제시된 공원시설의 유형을 참고하여 휴양 및 유희, 운동, 교양, 기타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함.
- 소분류유형은 15개 유형을 제시하였음.
 - 휴양 및 유희: 생태체험, 탐방, 자연축제, 치료(치유), 공예 및 만들기, 가드닝 및 도시녹화, 농사, 반려동물, 놀이(레크리에이션)의 9개 유형
 - 운동: 생활체육의 1개 유형
 - 교양: 역사, 문화예술, 교육의 3개 유형
 - 기타: 판매, 시민참여의 2개 유형
- 소분류 유형별로 공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이용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와 현장 적용과정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함.

3) 공원 이용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 공원시설과 연계한 공원이용프로그램 활성화

-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조합되었을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원이용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노후 공원을 재설계하거나 공원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홍보강화 등을 통해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원시설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원관리 대상 양식을 보완하거나 실시간 갱신될 수 있는 전산화 등이 필요함. 이를 통해 구청별, 생활권별 공원 배치와 함께 공원시설 배치를 함께 파악할 수 있음.

(2) 공원 이용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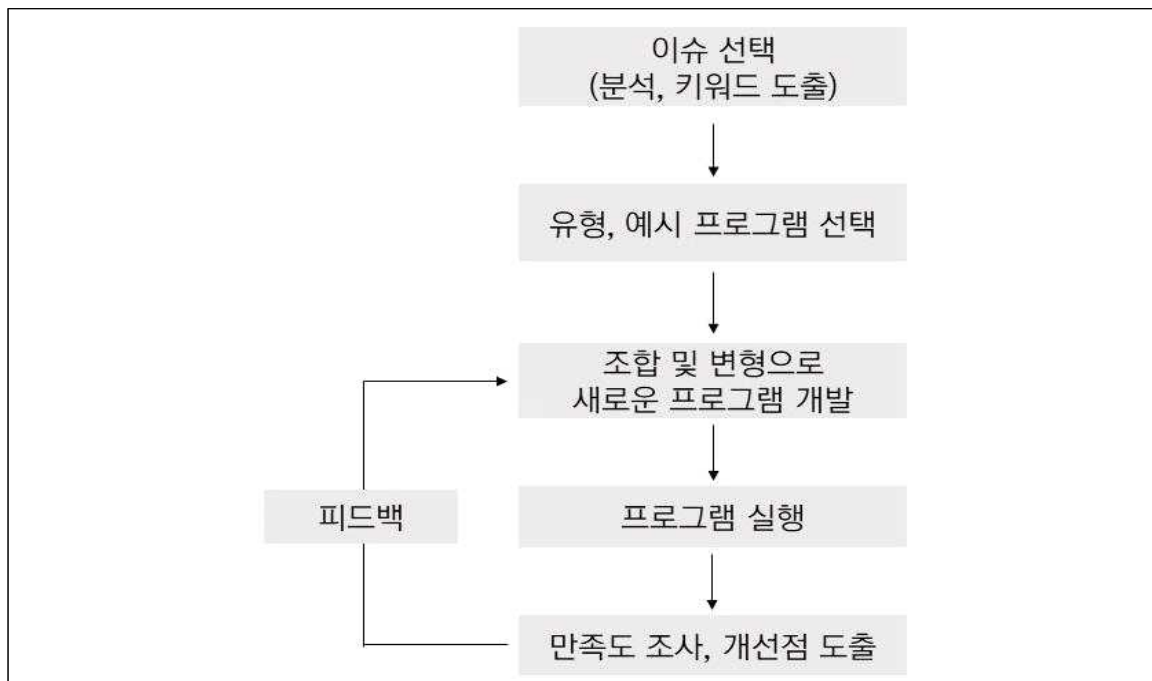
- 이용프로그램 다양화는 유형 다양화, 편중 완화, 시기적 다양화, 질적 다양화로 구성될 것으로 판단됨.
- 이용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공간적, 시간적, 계층적 확대가 필요함.
 - 공간적 확대는 대형공원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확대
 - 시간적 확대는 주말 위주에서 평일 시간대 운영
 - 계층적 확대는 유아, 초등학생 위주에서 청소년, 성인, 가족단위나 모임으로 확대 운영을 의미함.

(3) 주요 공원별 이용프로그램 제안

- 10만㎡ 이상이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을 우선 대상으로 공원 이용프로그램 운영
 -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27개소, 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 26개소(미 조성공원 포함)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원 이용프로그램 적용 절차
 - 주변 환경, 공원 입지, 규모 등 여건 분석
 - 공원내 자연자원, 공원시설, 공원 공간 등 자원 분석
 - 적용 가능한 공원 이용프로그램 유형, 예시된 프로그램 선택
 - 프로그램간의 조합이나 변형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 시민, 전문가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중요도와 선호도 조사

- 현장 적용
- 만족도 조사 후 개선안 도출
- 프로그램 개선후 재실시
- 사회적 이슈 대응 과정
 - 사회적 이슈 선택, 이슈 분석, 주요 키워드 도출
 - 공원 이용프로그램 유형 및 예시 프로그램 선택
 - 선택된 프로그램을 조합, 변형하여 최종 프로그램 선택
 - 프로그램 실행 및 피드백을 통해 개선

[그림 3] 사회적 이슈 대응 절차(공원 이용프로그램)



(4) 기타 정책제언

- 시민의 관점에서 공원 이용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관리되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 공원 이용프로그램을 기획, 관리하는 전담부서 필요

한강하구 수환경측정망 확충방안

■ 김성우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하구는 대한민국의 4대강 중에서 열린 하구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접경수역을 포함하는 유일한 하구임.
 - 한강하구 기수역은 인천 강화도·교동도 동서남북 일대, 김포반도 북쪽, 김포·파주·고양·서울 인근 한강하류, 한강 지류인 임진강·굴포천·아라천 하류 등을 포함(cf. 북한 예성강 하류 등도 포함되나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
- 한강하구는 기수역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우수한 환경이 보전되어 있는 반면, 수환경오염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가 한강하구 일부 수역에서 수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와 방식이 상이하여 대표성 확보 등이 어려움.
- 한강하구 일대의 연안·하천 통합관리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한강하구 공공수역의 수질·수생태계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기존 수환경측정망의 보완 및 확충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수환경측정망’은 환경부 물환경측정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망, 그리고 인천광역시 수질측정망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함.
- 기존 한강하구 수환경측정망의 운영 실태와 측정 데이터를 통한 현황 분석
- 현재 수환경측정망의 모니터링 시스템 및 측정결과 분석을 통한 보완점 파악
- 한강하구 수질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수환경측정망 확충방안 도출
 - 연구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 물환경측정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망 등 여러 수환경측정망 중에서 수질측정망 확충방안으로 한정

2. 한강하구 수환경측정망 기본 확충방안

1) 제1단계 : 인천광역시 환경기초조사 운영 실적 제고

- 강화도·석모도 및 전류리 수역의 국가 수질측정점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수질측정점의 추가 및 운영이 필요하나, 제2장1절에서 한강하구 수환경측정망 관련 법제도를 살펴본 바와 같이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현재 인천광역시가 운영 중인 한강하구 일대의 연안조사 및 환경기초조사를 지속해나가되, 특히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운영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강화도·석모도 및 전류리 수역의 국가 수질측정점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수질측정점의 추가 및 운영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한강하구 수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한강하구 기수역 현장관측 시에 조석간만의 막대한 영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측정방법을 일부 계류 관측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제2단계 : 중앙정부 기수역 수환경측정망 개별 확충

- 제1단계인 인천광역시 환경기초조사 운영 실적 제고를 추진해나가면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맞추어, 중앙정부에 국가가 운영하는 한강하구 기수역 수환경측정망의 확충을 추진하는 단계임.
- 한강하구 국가 수질측정망의 정점 확충뿐만 아니라 측정방법 및 측정항목의 보완을 추진해나가 되, 추가 정점은 현재 한강하구의 수질·생태환경 모니터링이라는 목적하에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정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3) 제3단계 : 법적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

- 최종적으로 한강하구 기수역 통합관리체계의 법적 근거가 충족되면, 관리 주체와 기간을 통합하여 데이터 일관성과 계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기관이 운영 중인 조사정점을 통합분석하여 중복성을 제거하고 전담 기관을 선정하여 한강하구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단계임.

- 측정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협력사업 및 연구 활성화,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관련 계획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운용이 필요함.

3. 한강하구 수환경측정망 세부 확충방안

1) 조사정점 신설(안)

- 인천연안 수역에서는 강화도·석모도 수역의 수질이 WQI 4~5등급인 시기가 많으나, 현재 해양환경측정망 정점은 없는 실정임. 한강 본류 수역에서 한강하구 기수역을 대표하는 정점으로 파주지점보다는 김포시 전류리 인근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나, 현재 물환경측정망 정점이 없는 실정임.
- 한강하구 일대의 조사정점을 신설·추가하는 총 5개소의 수환경측정망 확충방안을 도출함.
 -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정점 1개소 보완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망 수질자동측정망 1개소 신설 확충
 - 환경부 물환경측정망 수질측정망 1개지점 신설 확충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망 수질정점 2개정점 신설 확충
 - [별첨] 한강하구 수환경측정망 확충방안 (현행 ⇒ 향후)
- [별첨]의 황색원형은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정점의 측정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현재 해당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수질자동측정망의 관측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계류 관측을 병행하는 방안임.
- [별첨]의 청색원형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망 수질자동측정망 1개지점을 신설 확충하는 방안으로, 석모해협(석모수로) 인근 기수역의 수질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하여 인천강하 수질자동측정소의 관측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별첨]의 녹색원형은 환경부 물환경측정망 수질측정망 1개지점을 신설 확충하는 방안으로, 김포 전류리 인근의 한강 하류 지점을 신설 확충하는 방안으로, 한강하구 기수역에서 한강 등 담수에 의한 오염부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별첨]의 적색원형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망 수질정점 2개지점을 신설 확충하는 방안으로, 기수역에서 해양환경 및 육상기인오염원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방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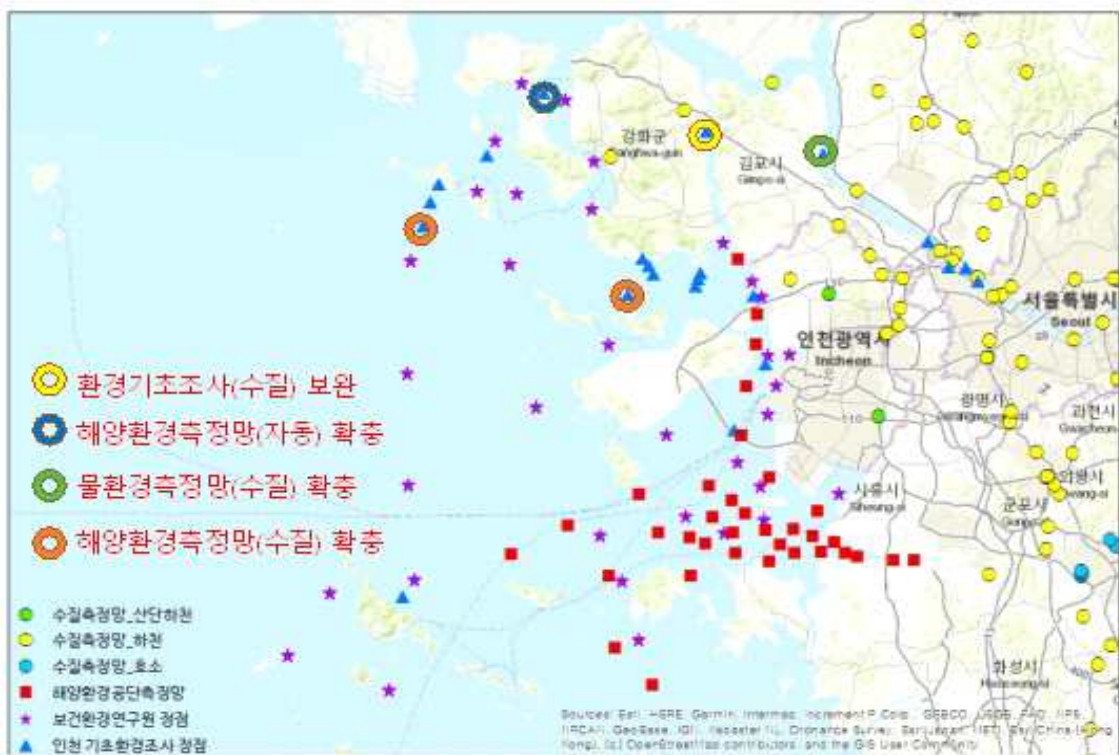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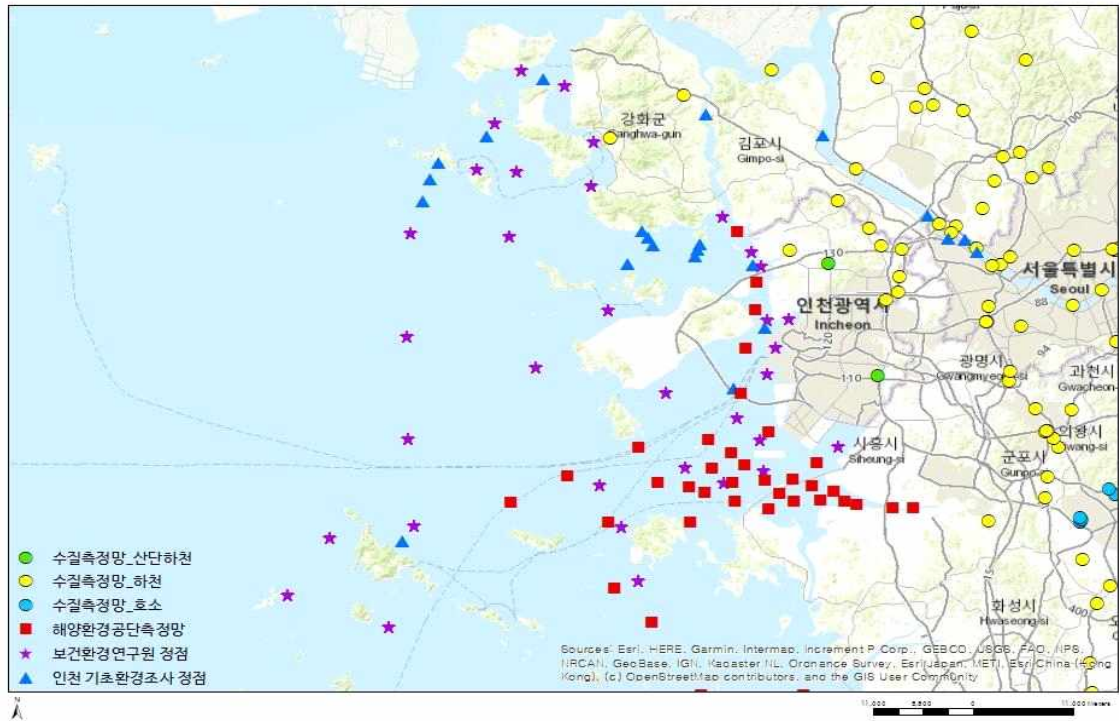
2) 측정방법 개선(안)

- 제3장2절2항 및 제4장1절1항을 종합한 결과,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와 물환경측정망 및 해양환경측정망 운용할 때, 계류 관측(mooring monitoring)으로 개선 필요함.
 -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24시간 동안 계류하면서 2~3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값을 이용하여 측정값의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계류관측은 인력·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여러 개소를 진행하기는 힘들므로 현재 수질자동측정소가 운영 중인 인천강화측정소, 향후 수질자동측정소를 추가 제안할 석모해협 인근 정점, 김포 전류리 정점 등 순차적 확장이 바람직함.

3) 평가항목 추가(안)

- 한강하구 수역에 환경부 물환경측정망을 확충할 경우, 기수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일관성 있는 수질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질평가지수(WQI)를 산출하는 5가지 측정항목을 기반으로 WQI를 기존 항목과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측정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한강하구 기수역은 현행법상 환경부가 관리하는 하천 수역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연안 수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수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함.
 - WQI 평가에 필요한 항목은 DO, Chl-a, 투명도, DIN, DIP 등 5개 항목으로, 기존 조사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DO, Chl-a 등) 추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또한, 김포 전류리, 파주지점 등의 한강하구 기수역의 측정정점에서는 추가 측정항목의 분석을 통합체계 구축 전이라도 환경부고시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별첨] 한강하구 수환경측정망 확충방안 : 현행 ⇒ 향후



인천 ESG 지표 개발 연구

■ 한 준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이정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내 ESG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ESG 이행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언하는 것임.
-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론 등 연구 전체의 수행 도식은 다음과 같음.

[표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구분 | 세부 내용 | 연구 방법 |
|--------------------|---|---|
| 서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 이론적 논의, 현황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의 개념과 주요 내용 □ 인천시 관련 정책 동향 등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분석 - 정책자료, 선행연구 등 |
| 관련 사례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사례 분석 □ 사례분석의 시사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분석(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 |
| 인천 ESG 지표(안) 개발·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ESG 지표(안) 설계·제시 - (주안점1) 비교 가능성, 자료 수집 가능성 등 지표 개발 원칙 고려·적용 - (주안점2) 인천시의 특성·현안 등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분석 □ 인터뷰·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 |
| 결론과 정책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의 종합 □ 지표 활용의 확대방안 및 정책 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 □ 논의의 종합 |

2. 인천 SDGs 및 ESG 운영 현황

1) 인천 SDGs 운영 현황

- 인천시는 2016년 「인천광역시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후 지속가능발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2021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25)’ 수립을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함.
-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공개된 제2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표 중 관리·측정이 곤란한 지표 등 일부 사례를 수정·보완하여 총 3대 분야 17개 목표, 30개 세부목표, 138개 지표로 수정 제안함.
- 이 연구는 인천시 및 인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운영상의 특징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인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비교·분석함.

2) 인천의 ESG 관련 이행 현황

- 인천시 내 공공부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ESG 이행 사례들을 수집, 분석함.
 - 이러한 예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공항,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공기업·공공기관 등 공공조직을 중심으로 ESG 이행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인천 ESG 지표(안)의 설계 및 제안

- 이 연구는 선행연구 등을 통해 지표 개발 및 선정 과정에 있어서 ESG 지표의 지속가능한 목표 관리, 지표의 객관성과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등을 개발 원칙으로 설정함.
- 이후 선행연구 등 문헌 조사(인천시 현황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등)와 시정 지표 등을 통한 민선 8기 시정 목표와의 연계성 검토, 현장 관계자 의견 조사 및 전문가 자문 과정 등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체계안을 제시함.
 - 인천 ESG 지표체계안에 대한 최종 도출 결과, 환경·사회·거버넌스 분야에 대해서 총 18대 분야, 49개의 세부 지표의 체계를 제시함(본문 [표5-2] 참조).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제도의 변화와 쟁점

■ 한 준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화,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이들 법률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한편,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양대 법률이 ‘기본법’의 형식을 갖추고 제정되었음
- 본고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 수행 변천을 살펴보고,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변화와 쟁점,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리하고자 함

2. 정책 제언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두 법률 간 이중체계 문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이 ‘규범’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침해하는 문제 등이 있으며,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우선 적용보다는 병렬적 적용으로 보아야 함
- 2022년 새로 적용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향후 거버넌스와 지방정부 제도 변화 등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에 따른 위원회들의 역할과 상호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지방정부 산하 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회 성격으로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달리 관계 부처 담당자 파견을 통해 추진단 구성 및 이행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와 관련해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역할과 권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의회 고유 권한 침해 가능성, 시민참여형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적 모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 주필주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염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안전보건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를 안전보건 책임주체로 명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무사항 그리고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가운데 의무 규정이 모호하고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는 도시의 여건과 환경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안전보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제안

- 인천광역시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시설별 특성과 주요 사고 발생 시나리오에 기반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광역시 안전보건사고 유형별 위험 및 취약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진단체계를 개발하고 전담조직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성 및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 정책 안내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 사례집 발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지원,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및 내용 안내, 법률자문 제공 등을 통해 법령 확대 시행에 따른 혼선 및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및 시설물 관리, 주요 행사 및 활동 안전수준 점검,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인천광역시 장애인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 주필주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서민경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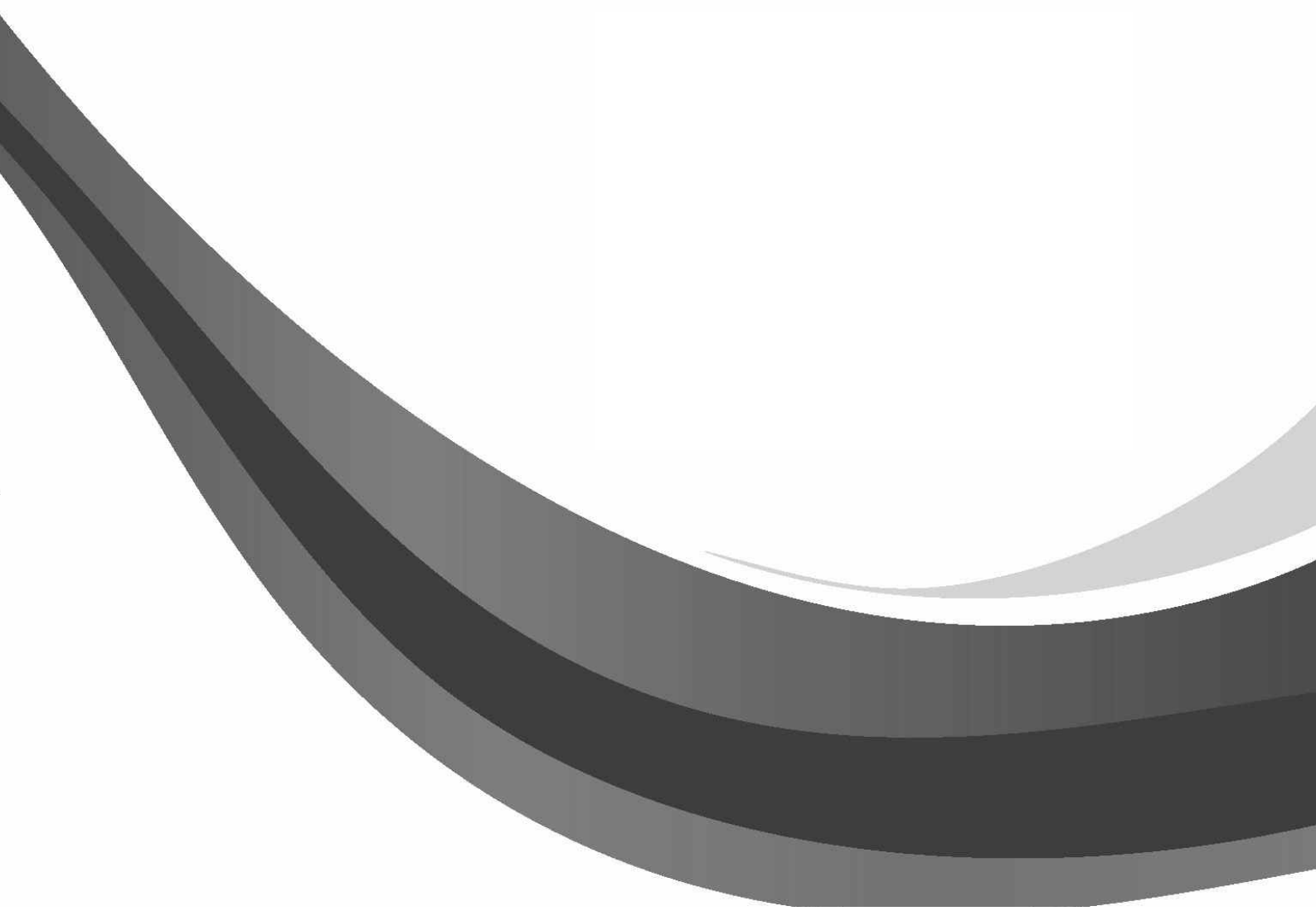
-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크게,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장애인은 재난취약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반면 위험을 보장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가 요구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사회복지의 이원화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취약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건강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2. 정책 제안

- 재난유형별, 재난단계별, 취약요인별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재난 예방·대비, 대응, 복구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범부서 차원의 종합적인 재난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내 장애인 재난안전 부문을 강화하고 소방, 경찰, 의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상시 안부확인 및 생활지원, 비상시 긴급대피 및 응급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난안전 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입장과 요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장애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교통물류연구부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교통 · 물류 분야

● 기초연구

TIMS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택시 이용행태 연구

● 기획연구

인천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교통사고분야

● 정책연구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

인천시 도로교통소음 관리 정책

건축물 전면공간 주차 차량의 보도 진입 방지방안

항만·항공·물류 분야의 통계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방향과 과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인천지역 교통문화지수 향상방안 마련 연구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방안

기축 아파트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 방안

● 이슈브리프

제물포 르네상스를 위한 중단기 광역 교통정책

TIMS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택시 이용행태 연구

■ 손지연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택시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수단으로 통행량과 이용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시장 개발 시 택시 수요감소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 COVID-19로 촉발된 교통여건 변화는 현재까지 택시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부족 등이 심각한 교통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향후 급격한 통행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인천시 택시 정책의 점검, 진단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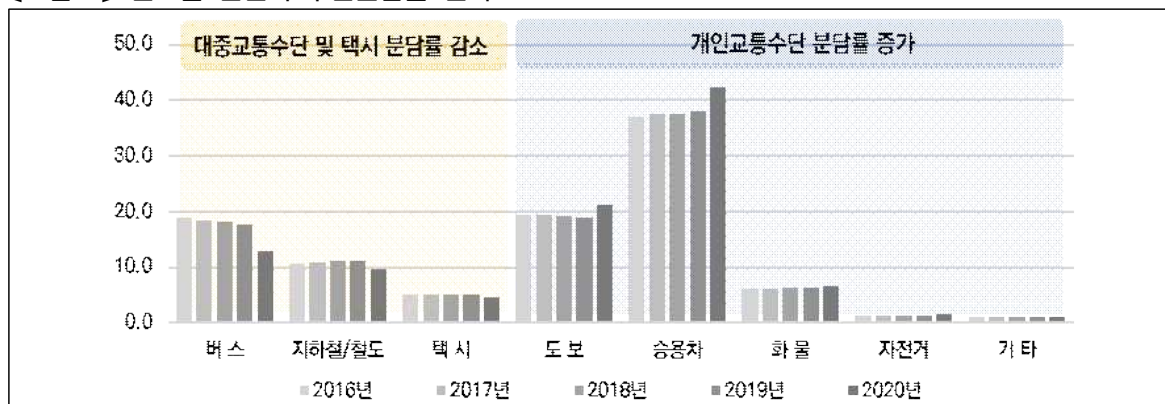
- 택시 이용수요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변화를 분석하고 COVID-19로 인한 택시 통행행태 변화를 진단하고자 함, 또한 인천시에서 택시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에 기반한 택시의 시·공간적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자 함.
- 인천시가 택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향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천시 교통정책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함.

2. 인천광역시 택시통행 특성

1) 수단분담률 및 통행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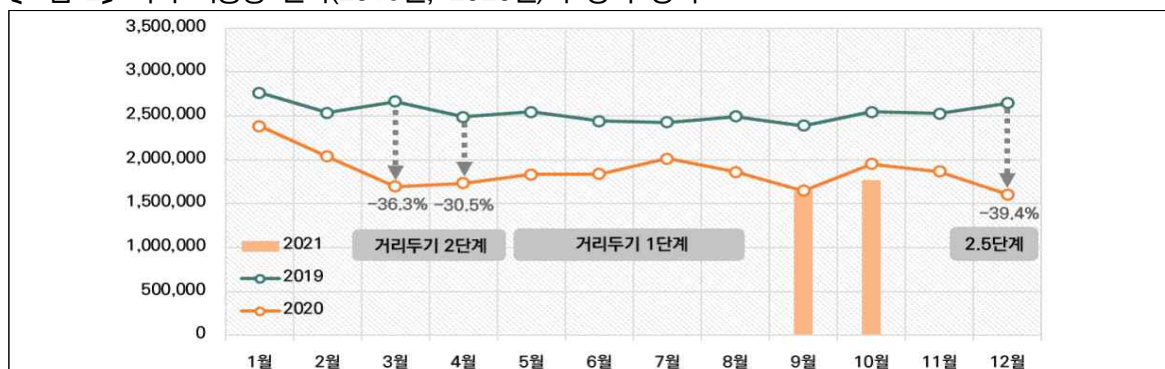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택시 수단분담률은 2016년 5.2%에서 2020년 4.5%로 0.7%p 감소함.
- 2016년~2019년 택시 수단분담률은 5.0% 이상이었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택시를 포함한 버스, 철도 수단은 분담률이 감소했으나, 개인교통수단인 승용차, 도보, 자전거 등은 증가함.

[그림 1] 연도별 인천시 수단분담률 변화



- 인천광역시 2019년 대비 2020년 일반택시 통행량 증감율은 -26.2%로 분석되었으며 월별 통행량을 보면 방역정책과 유사하게 통행량의 감소가 있었음.
-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4시 이후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심야할증시간 22시~04시 사이에는 평균 감소율 26.5%보다 높은 29.2%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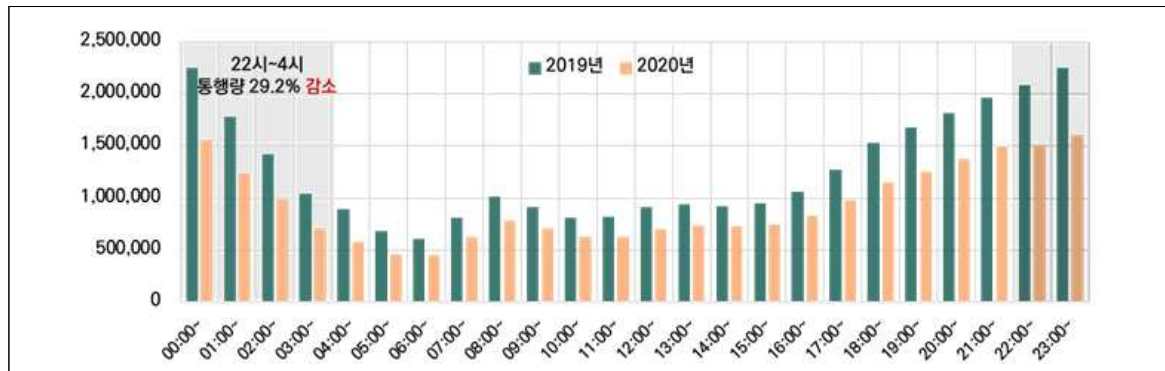
[그림 2] 택시 이용량 변화(2019년, 2020년)와 방역 정책



2) 시간·거리 특성

- 택시 이용은 시간대별로 분포에 차이를 보임. 심야시간대인 23시~ 익일 01시에 이용량이 가장 많고, 대중교통 운행이 시작되는 05시~07시에 이용량이 가장 적게 나타남. 주말은 주중에 비해 오전첨두 시간의 분포비율이 낮고, 00시~05시의 분포비율이 높음.

[그림 3] 시간대별 택시 이용량 변화(2019년, 2020년)



- 택시 이동거리 분석결과 주중 평균 이동거리는 5.8km, 주말은 6.0km로 주말 평균 이동거리가 다소 길게 나타남.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단거리 통행 비중이 감소하고 중장거리 누적비율은 소폭 증가함.

3. 대중교통 접근기반의 택시 이용특성 모형

- 취약지역과 일반지역의 연도별 승·하차 모형 분석 결과, COVID-19로 인한 요인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취약/일반지역 모형, 승차/하차모형에서는 각각 사용하는 요인들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통요인 : 상위 10개 요인은 시간변수(요일, 시간대), 사회경제변수(인구 및 종사자), 교통관련 변수(통행시간, 통행거리)로 각 모형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 차별요인 : 상위 10개 요인 중 취약지역 하차에는 시간변수가 가장 많이 사용됨. 교통요인은 취약지역 승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주요인이었으나, 취약지역 하차에서는 이용자의 통행시간, 통행거리 요인만 사용됨.
 - 시간대 요인 : 승차 모형에서 07시~10시(출근시간대)는 취약지역 승차 통행량에 기여도가 높고, 일반지역에서는 순위가 감소함. 휴일 전날은 2개년도 모두 주요 요인이며, 공휴일 전날과 승차량과의 상관성은 일반지역에서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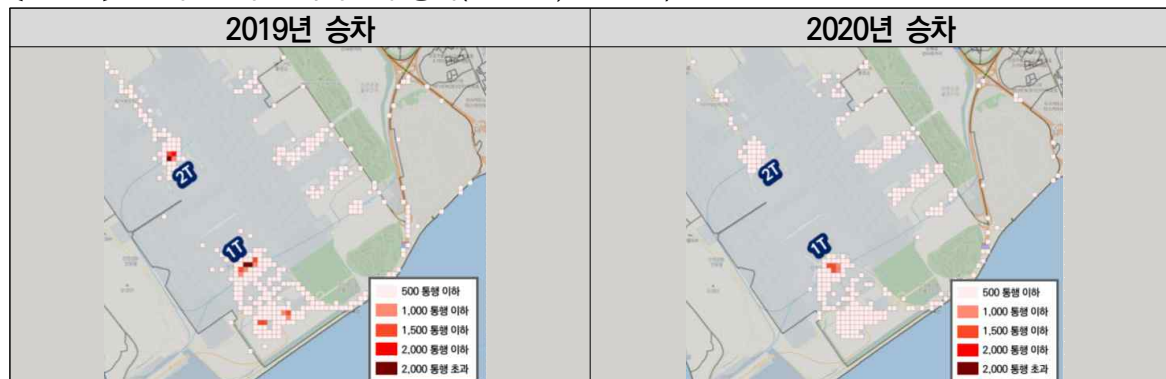
- 연령대 요인 : 취약지역 모형에서는 2019년에는 집계구의 20대 여성이 순위가 높았으나, 2020년에는 30대 남성이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교통 요인: 인프라 공급, 대중교통 접근성, 행태요인 등 모든 요인이 8개 모형에 모두 사용되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4. 택시의 기능 및 역할 진단

1) 취약시간대 이동성 확보 수단

- 택시는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요 이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공항 터미널(T1, T2)은 대규모 교통거점으로 24시간 비행기의 이착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대에는 승용차 혹은 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임.
- 2019년을 기준으로 T5 시간대(23~02시) 승하차 분포를 보면 T1과 T2에 통행량이 많고, 코로나 영향을 받은 2020년도에도 공항 인근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23시~02시 심야시간대 승차(2019년, 2020년)



2) 필수 목적통행을 위한 수단

- 병·의원은 POI 중 30위 내로 사용된 설명변수로 특히 일반지역·승차요인·2019년에 SHAP value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인천시 전역을 100m 단위의 격자로 구분하고 2·3차 종합병원 관련 통행을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2차 의료기관보다 3차 의료기관의 영향권이 더 크게 나타났고, 접근소요시간 및 거리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진료 기관에 따라 시간대별 이용에 차이가 있었고, 승·하차에 따른 분포의 차이도 발생함. 연도별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인천시 평균 분포와는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차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에 비해 07~10시(T1) 시간대에 하차집중도가 높고, 의료기관 승차통행보다 하차통행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3시~02시는 하차보다 승차 분포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심야시간대 병원 방문목적보다 응급실 등의 이용환자 등의 귀가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1] 시간대별 통행 비율

| 시간대 | | | T1 | T2 | T3 | T4 | T5 | T6 | T7 | 합계 |
|-----|---------|------|-------|-------|-------|-------|-------|-------|-------|--------|
| | | | 07~10 | 10~17 | 17~20 | 20~23 | 23~02 | 02~04 | 04~07 | |
| 승차 | 2차 의료기관 | 2019 | 8.1% | 33.5% | 14.5% | 15.7% | 16.2% | 6.8% | 5.3% | 100.0% |
| | | 2020 | 8.3% | 33.9% | 13.6% | 15.6% | 16.3% | 7.0% | 5.4% | 100.0% |
| | 3차 의료기관 | 2019 | 9.1% | 41.2% | 17.1% | 15.6% | 11.0% | 3.1% | 2.9% | 100.0% |
| | | 2020 | 10.2% | 38.3% | 15.5% | 15.4% | 13.3% | 3.8% | 3.4% | 100.0% |
| | 인천관련 | 2019 | 9.0% | 21.1% | 14.8% | 19.3% | 20.7% | 8.1% | 7.2% | 100.0% |
| | | 2020 | 9.4% | 22.2% | 15.1% | 19.5% | 19.6% | 7.6% | 6.6% | 100.0% |
| 하차 | 2차 의료기관 | 2019 | 16.9% | 32.9% | 13.1% | 14.7% | 10.1% | 4.1% | 8.2% | 100.0% |
| | | 2020 | 19.0% | 33.7% | 11.2% | 13.5% | 9.5% | 4.1% | 9.0% | 100.0% |
| | 3차 의료기관 | 2019 | 23.6% | 43.6% | 9.1% | 8.4% | 4.5% | 2.1% | 8.7% | 100.0% |
| | | 2020 | 25.5% | 44.2% | 6.6% | 7.4% | 3.9% | 2.0% | 10.4% | 100.0% |
| | 인천관련 | 2019 | 8.8% | 20.9% | 14.4% | 19.0% | 21.0% | 8.6% | 7.3% | 100.0% |
| | | 2020 | 9.3% | 22.0% | 14.8% | 19.3% | 20.0% | 8.0% | 6.6% | 100.0% |

3) 접근성 감소지역 불편 해소 수단

- 접근성 감소지역은 승하차 지점과 버스정류장의 최단 직선거리가 200m 이상인 집계구를 의미하며, [요약 그림 5]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택시는 이러한 접근성 감소지역에서 이동성을 높여주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인천대로 인근의 접근성 감소지역 관련 통행 분석 결과 출근 시간대 및 심야시간대에 인근의 도시철도 역사나 2·3차 종합병원, 시장 및 쇼핑몰, 변화가로 이동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 접근성 감소지역 유형



5. 결론

-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고 개인교통수단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지역적 특성은 택시 이용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거리두기 정책이 택시 이용 패턴을 변화시킴.
- 필수통행(ETT)목적의 발생빈도가 높은 월요일과 출근시간 그리고 심야시간대에는 택시가 주요 이동 수단이 되고 있으며, COVID-19 전·후의 변화에도 택시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에는 변함이 없음.
- 승·하차모형과 접근성 감소·일반지역 모형에서는 사용되는 변수와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 일반지역에서의 승·하차와 접근성 감소지역에서의 승·하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문제 지역에 대한 대응책이 달라야 함.
- COVID-19 등의 단기적인 영향과 플랫폼 운송사업과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의 등장기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함. 유사 기능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수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 도시에서 전통적으로 택시가 담당하던 기능과 역할에 전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택시 산업은 기능을 집중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취약 및 접근성 감소지역에서 특정 시간대에 택시 통행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대체교통수단을 도입하거나, 버스 배차간격 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여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인천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교통사고분야

박민호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 정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안전사고 취약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음.
- 지역안전지수 분야 중 교통사고 분야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지역안전지수가 산정된 이후 2020년 4등급을 제외하고, 매년 2등급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관내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등급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사고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세부 지표별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관내 구/군별 지표의 평가 및 비교분석을 통해 격차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안전지수는 지표 및 지수산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은 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존재하기에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천광역시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

1) 위해지표

❖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인천광역시의 경우, 매년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가 인천광역시 보다 훨씬 많은 서울특별시보다 수치가 높고, 수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타 광역시에 비해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9년 지표까지는 우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이후 우세가 둔화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는 중구, 동구에서는 편차율이 점점 커져 열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동구의 경우, 2019년을 기점으로 우세에서 열세로 전환됨.
 - 반면, 다른 구에서는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음의 편차율 값이 커졌으나, 강화군의 경우, 편차율은 음의 값을 보이거나, 우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 위해지표 변화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등급 상승을 위해서는 중구, 동구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남동구와 강화군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취약지표

❖ 인구 만명당 재난 약자수

- 인천광역시의 경우, 매년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평균과 비교하면 5% 이상의 편차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중구, 동구, 미추홀구, 강화군에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구에서는 편차율이 50%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구 만명당 재난 약자수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남동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우세에서 열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나머지 구/군에서는 우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만명당 의료보장 사업장 수

- 인천광역시의 경우, 매년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평균과 비교하면 8% 이상 의료보장 사업장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는 중구는 2020년부터 우세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구는 지속적으로 열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구 만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 인천광역시의 경우, 매년 특·광역시 중 최고로 높은 인구 만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여, 편차율을 살펴보면, 열세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는 미추홀구, 동구, 그리고 옹진군만이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계양구는 2018년부터 전국 구 평균의 2배가 넘는 열세가 지속되고 있음.

3) 경감지표

❖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

- 인천광역시의 경우,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의 편차율이 양, 음으로 계속 변하고는 있으나,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서 정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는 대부분의 구에서 인천광역시와 비슷한 편차율을 보이고 있으나, 군 지역의 경우, 강화군은 우세 둔화, 옹진군의 경우, 열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편차율이 전국 군 대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감지표 변화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등급 상상을 위해서는 옹진군을 대상으로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나머지 구/군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20년 CCTV가 특·광역시 평균보다 많이 설치되어, 편차율을 살펴보면, 열세에서 우세로 전환되었음.
- 경감지표 변화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등급 상상을 위해서는 부평구를 대상으로 교통단속 CCTV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미추홀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액

- 인천광역시의 경우, 열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개선사업 예산액이 가장 많은 부산광역시 는 우세가 지속됨에 따라 평균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는 군지역에서는 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세로 전환된 남동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에서는 열세가 지속/둔화되고 있음.
- 경감지표 변화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등급 상상을 위해서는 모든 구에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관련 예산액 증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특히 편차율이 큰 중구, 동구, 부평구, 서구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결론 및 정책제언

- 인천광역시의 교통사고분야 지역안전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및 관내 모든 구/군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특히, 지표별로 취약한 구/군에서는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지표 개선을 위한 관련 사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 및 관련사업들을 참고하여, 해당 구/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인 경감지표 영역에서는 '안전벨트 착용률'을 제외한 '교통단속 CCTV대수' 및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액'의 기준은 도로 면적임.
- 인천광역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관리해야 할 도로가 많으며, 관내에서는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의 순으로 관리해야 할 도로가 많은 만큼 현재 경감지표들의 기준인 도로 면적을 고려하면, 교통안전지수 상승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는 취약지표 중 하나인 '인구 만명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 평균을 상회하기에 증가되는 세수가 다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계획 대비 추진이 미진한 사업이 많으며, 이는 '취약지표' 및 '경감지표'에 영향을 미쳐 '위해지표' 결과로 나타나 결국 교통사고분야 지역안전지수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부터 추진까지 제대로 이루어 져야할 것임.
- 지역안전지수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그룹핑 및 그룹별 다른 평가기법의 도입과 같은 변화가 필요함.
- 지수 산정의 간편화를 위해 6~7개의 지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안전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지역안전지수 산정에 적용되는 지표선정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 지역안전지수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감지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향상 시키고, 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

■ 김운수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택배시장의 급성장과 전자상거래 및 배달업 등 자유업으로 분류되던 생활물류서비스는 시장규모, 통제의 그늘을 벗어나 무분별한 사업운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제도권 내에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서비스 거래의 확대에 이어지고, 그 중심에 택배와 배달서비스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
- 그동안 라스트마일 운송으로 간주되던 택배와 배달, 퀵서비스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등이 모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법적(2021.7.27. 시행) 지위를 가지게 됨.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생활물류시설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 관련 실태조사를 정부차원에서 시행할 필요성 대두됨.
 - 인천시에서도 생활물류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한 대응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휴게시설(쉼터)에 대한 설치 요구에 대응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 도시물류 실태에서 생활물류시설 확보 및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지원시설을 파악하여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토대 마련의 필요성에서 출발함.

2.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추진방향

1) 생활물류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례 및 설치방향

❖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례 검토

- 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복지 차원에서 이동노동자가 대기·휴식시간 동안 머물 장소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에 27개소가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음.
 - 서울과 경기도에 전체 63%가 설치되어 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임.
 - 현재 인천시의 경우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나,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이동노동자 쉼터 건립을 계획한 상태임.
- 주요 이용자는 대부분 대리기사나 라이더이며, 서울의 경우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쉼터를 조성해서 운영중임.
- 쉼터의 위치는 간이쉼터와 대전시 사례를 제외하면 2층 이상에 입점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운영형태는 전체 쉼터 중 16개소가 지자체 직접 운영, 나머지 쉼터는 노동자 권익 센터에 위탁 운영함.

❖ 생활물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방향

- 쉼터 조성의 필요성은 택배기사와 라이더 모두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편이며,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 음식판매시설, 휴게시설, 주차장시설로 응답함.
 - 제공했으면 좋은 서비스는 정비 서비스, 노동 관련 각종 상담과 정보 제공이며, 특히 택배기사의 경우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두 집단 간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희망 시간대 및 설치지역의 차이가 존재함.
 - 설문조사 결과 택배기사는 오전에서 오후시간을 가장 선호하며, 라이더의 경우 24시간 이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택배기사는 주차장시설이 확보 가능한 택배터미널 인근 또는 공영주차장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라이더의 경우 시내 중심상가가 가장 높았음.

2)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과제나 체계에 대한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미흡한 상태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인천시에서 생활물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검토함.
- 먼저 생활물류산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도심내외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물류센터 구축, 무인택배함 설치의 확대, 도심내 배송서비스를 위한 도심형 소형 물류센터 설치 등이 필요함. 특히 인천지역 어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주요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아직 한 곳도 없는 상태로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인천시 생활물류 쉼터 기능으로 음식판매시설, 휴게시설, 수면시설 및 주차장 시설이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쉼터별 경정비를 할 수 있는 기능과 노동 관련 각종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택배물동량의 처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점차 배송에 있어서도 제휴와 아웃소싱, 말단배송의 전문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화해지고 있음. 배달라이더는 단순히 음식배달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말단배송을 위한 수송수단의 일부로 확대되는 추세임. 이에 배달라이더의 엄격한 자격요건과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증제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함.
 - 생활물류와 관련된 각종 기초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조사와 통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정책추진의 근거에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생활물류 통계데이터의 구축이 매우 필요함.

[그림 1]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3. 정책제언

❖ 생활물류 관련 업무 확대에 대응한 조직 구성

- 국가적으로 물류산업은 장래 유망산업이며, 물류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생활에 밀접해지면서 해당업무가 더욱 증가하는 현실임.
 - 그동안 인천시는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정책을 추진함으로 최근 도심 내 물류시설로 인한 도시계획과 충돌, 급증한 택배화물의 배송 및 배달대행으로 인한 화물차 증가 등의 문제점을 겪고 있음.
- 인천지역 내 물류업무를 담당할 조직체계를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인천시 물류정책 수립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은 팀 단위 사무로 구성되어 있으나, 증가한 도시물류의 수요와 다양한 생활물류종사자들에 대한 대응하기까지 추가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초조사 및 통계체계 정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지만 해당 사업범위는 인천지역 내 기업체와 종사자가 대상임.
- 상시 변화되는 도시물류와 생활물류 변화속에서 선도적 정책추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자료와 지속적인 데이터축적은 매우 중요하여 기본계획에 준하는 생활물류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가 시행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생활물류 대상자 및 대상업무가 지자체로 편입되고 지역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임에 따라 정확한 현황 및 실태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판단의 근거가 될 것임.

❖ 생활물류 종사자 지원근거 마련(이동노동자·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필요)

- 2022년 3월 말 기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증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 또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음.
- 인천시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설치 계획을 노동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으나, 조례를 통한 실질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임.
 - 인천시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위한 조례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의 세부내용에 단순 이동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뿐만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기능도 확대할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인천시 도로교통소음 관리 정책

■ 석종수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 개요

-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도로교통소음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 도로변에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경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 교통량을 줄이거나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서 소음 피해를 줄이는 정책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 중 지역이나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소음 저감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방법이 있으면 이를 우선 고려해야 함
-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받게 되는 도로교통소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며, 도시의 주거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소음 저감 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결론과 정책 제언

1) 결론

- 도로교통소음 피해 저감 대책의 효과를 현장 실험으로 측정한 연구를 종합하면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의 소음 저감 효과가 가장 우수함

-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으로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단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방음벽을 설치해서 도로교통소음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임
- 소음 저감 능력이 우수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이 도로교통소음 피해를 줄이는 대책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도시에서는 도로에 설치된 방음벽 등이 가지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소음 피해 저감 대책 평가 요소 중에는 소음 저감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기성 주거지에서는 유지관리비가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지만 신규 주거지에서는 경관성이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임
- 소음 저감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는 단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
- 도로교통소음 피해 저감 대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하는 비용 중에는 설치비보다 유지관리비를 더 고려해야 함
- 도로교통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유형 중에는 소음원 대책 유형과 교통 제어 대책 유형의 중요도가 소음 경로 대책 유형이나 건물 배치 대책 유형의 중요도보다 높음
- 소음 저감 능력 측면과 경관성 측면에서는 소음원 대책 유형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설치비 측면과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는 교통 제어 대책 유형의 중요도가 가장 높음
- 도로교통소음 피해 저감 대책의 유형별 중요도의 순서는 기성 주거지와 신규 주거지 간에 차이가 없으며, 신규 주거지의 소음원 대책 유형의 가중치가 기성 주거지보다 조금 더 큼
- 도로교통소음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세울 때는 저소음 포장과 속도제어, 대형차 제어 대책의 우선순위가 높으며, 방음벽, 방음림, 방음독, 환경시설대, 능동형 소음제어, 건물의 평행 배치는 우선순위가 낮음
- 주거지에서 도로교통소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울 때는 저소음 포장, 차량의 통행속도 규제,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의 통행 제한 등의 대책을 우선 고려하고, 방음벽 등을 도로에 직접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단지 내부에 설치해야 함
- 저소음 포장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지만, 저소음 포장의 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일반 포장보다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므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소음 포장보다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음
- 공동주택 건축 심의를 위한 협의를 할 때, 주택법에 의한 도로교통소음 기준뿐 아니라 소음·진동 관리법의 교통소음 관리기준도 만족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함

- 주택법에서는 사업 면적인 30만㎡ 미만인 공동주택에서는 6층 이상인 세대에 실내소음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축 심의에서는 실내소음을 기준으로 심의하지만, 주민들이 거주할 때는 창문을 열었을 때의 소음에 노출되고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므로 건축 심의 단계에서도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실외소음도 기준을 만족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저소음 포장, 속도제어, 화물차 운행 제어 등과 같은 방법을 우선 고려하되,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용지 내에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함
- 방음시설을 결정할 때는 “주변 여건”과 “교통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방음시설을 선택해야 함

2) 정책 제언

- 주거지역 도로교통소음 저감 지침을 개발하고 소음관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교통소음을 관리하는 부서를 명확히 해서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는 소음 피해를 줄이는 정책이 환경부서의 역할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도로관리 부서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도로관리 부서와 환경부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 환경부서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의 기준 관련 업무, 건축 심의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도로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도로교통소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방음시설 설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도로변에 설치된 방음시설의 설치현황, 정비 이력 등을 관리하려면 인천시 관내에 설치된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저소음 포장은 일반 포장에 비해 공용성능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유지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것 못지않게 ‘성능보장형 계약’을 해야 함
 - 서울시 강남구와 강동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저소음 포장의 성능보장형으로 계약하고, 10년간 유지관리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음
-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은 내연기관차보다 소음도가 낮으므로, 저소음 자동차 보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소음지도를 활용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과학적인 소음관리 기반 구축이 필요함

-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도로교통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는 학교나 도서관, 병원 등 조용한 환경이 요구되는 시설을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과 건축계획 차원의 소음관리 정책이 필요함
- 2026년에 소매용 타이어에 소음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저소음 타이어로 교환하는 자동차에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과 같은 일정 정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건축 심의를 위한 부서 간 업무 협의 때 입주민의 도로교통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단지계획이 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소음·진동 관리법의 도로교통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도로가 먼저 건설된 곳에서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방음시설을 공동주택 용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ANC 기술이 실용화되면 ANC 기술을 도로교통소음 피해 저감방안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ANC 기술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그루밍 공법을 적용한 포장 등은 차량의 미끄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나 주거지역에서는 또 다른 소음 발생원이 되므로 꼭 필요한 곳 외에는 미끄럼 포장이나 그루밍 공법을 적용한 포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단지에 인접한 교차로에서 소음 저감 방안을 세우도록 함
 - 일반적으로 차량이 정속 주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보다는 감속 후에 가속하거나 정차 후에 출발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더 크므로 차량의 가속과 출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 부분에서 특별히 도로교통소음 저감방안을 세우도록 함
 - 교차로의 교통신호를 최적화해서 감속 또는 정차하는 차량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세워야 함

건축물 전면공간 주차 차량의 보도 진입 방지방안

■ 석종수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지난 3년간(2019~2021년) 전체 보행자 사고 중 보행자 전용 공간인 보도 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5.5%나 되고, 사망자 비율도 2.5%나 되어 보도 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보도 위 주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줌
- 이 연구는 공개공지를 포함한 건축선 후퇴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축물과 연접한 보도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건물 전면부에 주차하는 차량과 건물 전면부에 주차하기 위해 보도를 주행하는 차량을 막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와 물리적인 조치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함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 전면공간에 관한 법·제도와 사례를 검토하고 보도 위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도 위 차량 진입 방지 정책을 제안함

2. 차량의 보도 진입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정책

1) 행정·제도적 정책

- **(공개공지 등의 사후관리 제도화·구체화)** 공개공지 점검을 구체화해서 점검 시기와 점검 횟수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 **(조건부 건축허가)** 건축허가와 차량 진출입로를 허가할 때 차량 진출입 방지를 위한 시설(볼라드)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야 함
- **(위법 사항에 대한 적극 대처)** 공개공지 등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벌금을 5,000만 원 이하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공개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공개공지의 사후관리를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엄격한 도로점용 관리)** 주차장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해서 도로를 점용(초과 점용 등)한 자에게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해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도로 점검 항목에 불법 경사로 포함)** 도로 일상 점검 때 무단 설치된 경사로를 점검하도록 하고, 적발된 무단 설치 경사로는 원상회복하도록 행정 처리해야 함
- **(행정대집행 특례를 활용한 적극적인 원상회복 명령과 집행)** 보도를 불법으로 점용해서 주차시설로 활용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해서 적치물에 해당하는 차량과 주차시설을 제거해야 함
- **(보행자 길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보행안전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보행자 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과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을 조사해야 하므로, 이 조사를 시행할 때 보도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함

- **(보행자 길 정비 계획 수립)** 인천시는 “보행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과 적치물 등의 정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요 도보의 불법 주차 방지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서 수립해야 함

2) 시설 개선 정책

-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인천시는 “보행안전법” 제9조와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구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과 적치물 등을 정비하는 계획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방안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함
-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건축물 전면공지와 연결되는 보도의 경계부에 벤치나 기둥 수 있는 시설, 화분 등을 설치해서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함
- **(노상 주차장 공급)**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건축물 전면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전용하는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조성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항만·항공·물류 분야의 통계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방향과 과제

강동준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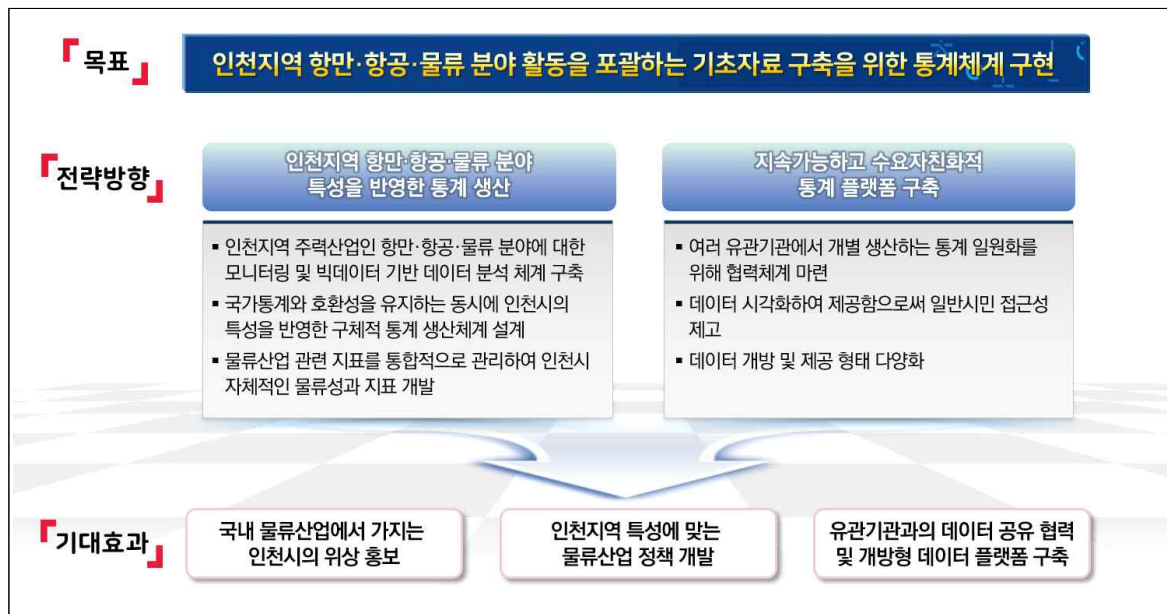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부처별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제도이자 통계청에서 통계에 관한 기능을 조정하며 국가 기본통계를 직접 작성하는 집중형 통계시스템임¹⁾.
 - 이러한 하향식 통계 시스템의 경우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지역 통계에 대한 품질을 개선하고 신규 지역통계를 개발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 및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공·항만 관련 산업이 인천의 주요 핵심 산업임을 고려할 때 항만·항공·물류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통계를 활용한 정책 입안이 필요함.
 - 최근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연결’ 또는 ‘통합’하여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은 합리적 결정의 기반이 되어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가 및 관련 기관의 항만·항공·물류 분야와 관련된 통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의 동 분야 정책 수립 및 발전을 위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선순위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등 항만·항공·물류 분야의 통계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음.

1) 백운성 외(2006), 충남의 지역통계 제공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 인천시 항만·항공·물류 분야 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

- 전문가 대상 FGI 및 자문회의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시 항만·항공·물류 분야 통계 구축은 ‘인천지역 항만·항공·물류 분야 활동을 포괄하는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통계체계 구현’이란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 첫 번째 전략인 ‘인천지역 항만·항공·물류 분야 특성을 반영한 통계 생산’을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축해야 함. 동시에 인천시 특성을 반영한 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가통계와 호환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 현재 인천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항만·항공·물류 분야의 데이터는 수출입 화물실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책입안자·결정자 및 일반시민에게 제공할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 특히 주력산업인 물류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물동량 및 화물차 통행량 등의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인천시 항만·항공·물류 분야 관련 통계 구축의 기본방향



- 현재 여러기관에서 자체 생산하는 통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수요친화적 통계 플랫폼 구축’을 실현해야 함.

- 인천시는 항만·항공·물류 분야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할 때 분야별 데이터 생성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인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할 지표를 관련 기관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함.
- 필요에 의해 일회성으로 데이터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개방하여 일반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일반시민이 활용하기 쉽도록 데이터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쉽게 인식 가능하도록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도 있음.
- 이처럼 인천시가 항만·항공·물류 분야의 통계를 생산 및 제공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국내 물류산업에서 인천시의 위상을 홍보하는데 활용, 둘째,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 데이터 공유 협력 및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임.
- 특히 일반시민에게 데이터를 가공 및 제공함으로써 물류산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가능할 것이며,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3. 정책제언

1) 항만·항공·물류 분야 통계의 증거기반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 필요

- 항만·항공·물류 분야의 정확하고 상세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는 증거기반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어디에서 제공하고 어떤 자료를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항만·항공·물류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개설하여 상기 분야에 대한 지식 함양과 더불어, 통계교육·연수 및 전문직 공무원 채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핵심산업인 항만·항공·물류 분야 기본 교육을 통해 순환보직으로 상기 분야 부서에 발령을 받더라도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각 부서의 통계 업무 담당인력의 통계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해 통계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정책개발과의 연계 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항공 분야의 경우 전문성 확보, 정책 일관성 유지 및 현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직을 채용한 바 있음

2) 인천시 항만·항공·물류 산업의 주도적 정책개발을 위한 자체 통계개발

-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용하거나 혹은 인천시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개발·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 수집해 관리하는 데이터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차원의 항만·항공·물류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해서 지역의 관점에서 해당 분야 산업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 및 업종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통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항만·항공·물류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체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 및 사업을 통한 산업 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하고 정밀한 관련 통계조사를 통해 지역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 확보를 위해 미시적이며 지역적인 통계가 필요함.

3) 조직 및 협력체계 구축

- 인천시 차원의 항만·항공·물류 분야 통계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개발의 일관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천시 내부 조직과 기관 및 업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함.
 - 현재 인천시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국제물류영역인 항만과 항공은 해운항만국(해양항만과·항공과)이 담당하고 있고, 국내물류영역인 지역물류는 교통건설국(택시물류과)에서 전담하는 등 이원화하여 운영중임.
 - 인천시의 지리적 입지 특성상 국제물류와 국내물류를 분리하여 계획·관리·운영하기보다는 항만·항공·물류 분야를 통합한 조직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항만·항공·물류 분야에 대한 자체적 통계개발 및 조사시 인천시 항만·공항·물류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인천시 데이터혁신담당관실 등 유관부서의 적극적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통계의 시계열성(지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시는 항만·항공·물류 통계의 근거 법령과 예산을 마련하여 상기 분야 통계의 지속성을 마련하고 지역 통계와 정부 통계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통계개발을 통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강동준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국내 해사법원이 부재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 이에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 원 규모로 추산
- 최근 법조계·업계·학계에서는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의 설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논거로 해사사건의 국외 유출, 해사사건의 국제성·복잡성·신속성을 고려한 전문성 확보, 해운업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임
- 해사법원의 수요 부족 등의 우려에도 국내 해사법원을 설립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왔으나 해사법원의 설치지역이나 관할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고, 인천시, 부산시, 서울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설립 시 인천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현황, 해사 관련 산업입지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해양사고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 인천 해사전문법원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2.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타당성 검토

- 21대 국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총 4건으로 인천광역시 2건(윤상현 의원·배준영 의원), 서울특별시(이수진 의원) 1건, 부산광역시(안병길 의원) 1건임.
-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지자체·학계·법조계·유관기관의 동향 검토 결과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성은 공감하나 설치지역 및 관할·심급·심판범위에 이견이 있는 상황임.

-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해사법원 설치 토론회, 범시민추진협의회, 촉구 성명서 발표, 학술대회, 기자회견, 간담회, 업무협약 및 협의회 결성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중임.
 - 서울은 해사사건과 더불어 국제상사사건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는 안을 제시함.
- 해양·해사관련 국제기구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이 있으며 인천 송도 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가 입지해 있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해사관련 법률서비스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인천 소재 국제기구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교육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등 15개가 있음.
- 인천은 국내 주요 해사·해양관련 기관 및 기구가 전무하며 관련 기관은 대부분 부산, 서울 및 세종시에 위치해 있어 해사·해양관련 국내 기구의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짐.
- 산업 입지 검토 결과, 해운·항만 물류분야 전국 사업체 및 종사자 수를 검토한 결과 전국 대비 54.9%, 59.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사전문법원의 수요가 기존 국내수요에서 향후 국외 수요로 확장될 것을 고려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은 국내 수요자, 국외 수요자 및 서비스 제공자(로펌)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실질 수요층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더불어 해사분쟁 발생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로펌 역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국내외 변호사의 이동 시간과 거리 기준 수도권이 가장 합리적인 지역으로 판단됨.
 - 해외 사법 수요자 접근성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의 항공네트워크 검토 결과 취항 국가 기준 5배, 취항 도시 기준 6.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국제적으로 해사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영국, 미국 및 중국의 해사법원 입지 검토 결과, 국제공항과 항만이 동시에 입지하면서 두 인프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즉 현장성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해사법원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현재 해사전문법원 신규 설치과 관련하여 해사사건의 범위를 선박, 해상, 선원 관련 분쟁으로 국한할 것인지 혹은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 민약 해사사건의 범위를 중국 해사법원과 같이 통상적인 해상사건 뿐 아니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율할 경우 그 사건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해경의 초동 조사일 것임.
- 해사사건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양경찰 본청이 위치한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입법·행정 등 모든 실무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천이 최적지로 판단됨.

3. 결론

- 해사법원의 수요는 기존의 국내 수요에서 국내외 수요로 확장될 것이며 해사법원의 설치장소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실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함.
 - 정치적 판단 등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외 수요자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
- 해사법원 설립 시 실질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이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해양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내 해양·해사기관의 입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기존 민사사건에 더해 어업권 등으로 확장될 경우 해경 본청이 위치한 지역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규모, 향후 항공사건 까지로의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최적지로 판단됨
-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적 원칙을 존중한다면 항만이 위치한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해사사건의 과실을 등을 판단하는 초동수사 및 행정처리가 편리한 지역이 필요함. 즉, 신속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입지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민·관·학·정·언의 적극적인 해사전문법원 유치활동과 국내외 해사관련 기구 유치 및 협력, 인천고등법원 유치 동반추진 및 전문인력양성 노력을 지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인천지역 교통문화지수 향상방안 마련 연구

■ 박민호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서론

- 인천시의 교통문화지수 순위는 2021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8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4위 수준(전년도와 동일)이며, 관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다양한 순위 및 등급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인천지역의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파악하여 교통문화지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교통문화지수 자체의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교통문화지수가 본래의 취지에 맞는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2. 교통문화지수 분석 및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교통안전법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 교통안전의식 및 교통문화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 및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전국 교통문화지수 점수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인천시의 경우, 2018년 교통문화지수 개편 이후, 13위 -> 10위 -> 4위 -> 4위로 상승하다가 정체되어 있음.
 - 미추홀구, 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구에서는 2021년 교통문화지수가 전년대비 감소함.
 - 2021년 기준으로 전국 군/구 기준으로 평균 이하인 지역은 중구, 강화군, 옹진군이며, 나머지 구는 평균 이상임.

1) 운전행태

- 인천시의 경우, 2018년은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나, 2019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용진군의 경우, 4년 연속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계양구, 남동구, 동구, 서구는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 관내에서는 가장 열악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용진군의 경우,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강화군은 전국 군 평균 이상의 개선을 향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됨.

2) 보행행태

- 인천시의 경우, 2018년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2019년에는 평균과 동일한 점수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용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구에서는 2021년 교통문화지수가 전년대비 증가함.
 - 2021년엔 용진군, 연수구, 남동구가 전국 평균 이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군/구에서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부평구의 경우,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용진군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의 편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용진군의 경우, 점수 및 개선율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집중관리 필요 지역), 강화군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이상의 개선을 향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됨.

3) 교통안전_종합점수

- 인천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와 함께 2020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국평균(17.54 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17.58점).
 - 2021년 중구와 연수구는 전국 구 평균 이하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구가 인천시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수구의 경우, 평균 이상이었던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 강화군, 용진군도 전국 군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11개 광역자치단체보다 점수가 낮으며,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의 점수인데, 이는 인천시의 교통문화지수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됨.
 - 특히, 용진군, 강화군, 중구, 연수구의 점수가 낮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됨.

4) 교통안전_교통안전실태

- 2018~2019년 사이 교통안전실태 점수가 낮았던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는 2020년에 크게 상승하였지만, 중구, 연수구는 타 군/구에 비해 점수가 많이 하락하였으며, 연수구의 경우 2019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군 평균은 2020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강화군과 옹진군 모두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구 평균 또한 202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인천시 관내 모든 구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강화군, 옹진군, 연수구는 점수 및 개선율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어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중구는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됨.

5) 교통안전_교통사고 발생정도

- 인천시의 경우, 2018년부터 꾸준히 점수가 감소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관련된 지표가 심각해짐을 알 수 있음.
- 2021년 기준, 남동구, 동구, 부평구를 제외하면, 2020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정도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남.
- 지속적으로 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군/구는 없음.
- 중구와 강화군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동구와 옹진군의 경우, 2021년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강화군과 중구는 점수 및 개선율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집중관리 필요 지역),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됨.

6) 교통문화지수 상승을 위한 평가영역 및 지표 도출

- 옹진군 : 교통안전_교통사고발생정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
- 강화군 : 교통안전_교통안전실태 영역
- 중구 : 교통안전 영역
- 연수구 : 교통안전_교통안전실태 영역

7)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 교통문화지수는 도로 이용자 또는 공급·관리자 각자의 노력으로 교통문화지수를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공급·관리자의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관심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및 관리, 도로 이용자의 교통문화 의식수준의 향상이 필요함.

3. 교통문화지수 개선방안

1) 조사 장소 및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 다른 지수와 달리 교통문화지수는 관측조사와 설문조사가 실시되는 특징이 있는데, 교통문화지수 산정 시, 대략 75%의 비율을 차지하는 관측조사(59점) 및 설문조사(16점)를 실시하는 장소 및 과정에도 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금과 같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샘플수를 늘리거나, 조사기간 및 장소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됨.

2) 평가항목 변경에 대한 고민 필요

- 각 자치단체별 교통문화지수 점수와 교통사고와 관련된 주요 지표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교통문화지수가 높을수록 교통사고에 안전한 자치단체인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와 관련된 주요 지표값이 낮다고, 교통문화지수 점수도 높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 관련 지표가 교통안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표 자체가 교통안전의 결과물이라고 볼 때, 교통문화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3) 통합지수 마련

- 기존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지수와 교통문화지수의 가장 큰 차별성은 관측조사이나, 지수를 향상 시키기 위한 개선책은 다른 지수와 차별성이 적음.
- 따라서 개선(안)이 유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유사한 형태의 지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하는데, 각종 교통안전 관련 지수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지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방안

이성훈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개요

-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직접 제어하지 않고 주행할 수 있게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로 교통사고와 혼잡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활용으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자율주행 버스·택시·배송 등의 서비스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전망과 파급효과로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ICT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은 자율주행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천문화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인적자원을 투입함
- 하지만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기술 수준은 운전자의 운행을 지원하는 수준인 레벨2 수준으로 자율주행차로 분류되는 레벨3 수준 이상의 기술은 개발이 진행중임
- 중앙정부는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인프라 및 제도를 정비하고 실증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임
- 지방정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여 실증을 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
 - 2022년 7월까지 서울 상암, 강남, 청계천, 충청권 광역교통망, 세종시, 광주시, 대구시, 제주도,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강원도 원주시와 강릉시, 경기도 시흥시, 전남 순천시, 전북 새만금 지역의 총 14곳의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됨
-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시범운행지구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현황 및 운영방안

- 2022년 7월까지 지정된 14개 시범운행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시범운행지구 중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범운행지구는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함(또는 제공할 예정임)
 -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은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자율주행기반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이동성 향상
 - 자율주행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육성
 -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지원
 - 자율주행기술 체험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자율주행서비스 활용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홍보
 - 하지만 2022년 10월 현재 각 시범운행지구 서비스에 운행되는 차량이 1~3대 수준이므로, 아직은 시범운행지구의 이동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범운행지구의 서비스 특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시범운행지구에서 단거리(1.3~10.0km) 위주로 고정된 노선을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파악함
 -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는 불완전한 자율주행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C-ITS/ITS 및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차량 인프라(차고지, 충전 및 정비시설) 및 도로 인프라(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정류장)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음을 파악함
 -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효과를 높이고 이용자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및 서비스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함
- 향후 인천시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면 다음의 두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의 사용을 제한해야 함
 - 현재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은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운전이 필요한 레벨3 수준이므로, 안전관리자가 탑승해야 함
- 인천시에서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은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선정, 인프라 구축, 운영평가, 서비스 평가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함

- 향후 인천시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하고 운영할 때 이를 잘 고려하여 시범운행지구의 운영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함

[표 1] 시범운행지구 운영 고려사항

| 구분 | 고려항목 |
|--------|---|
| 서비스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종류: 승용/승합차, 소형버스, 버스 • 주행도로: 단지내 도로, 일반도로, 간선도로/전용도로(BRT) • 노선운영: 고정노선, 일부 정류장 미정차, 동적경로 • 운영횟수: 정기운영, 수요응답 • 주행속도: 저속, 중속, 고속 • 운행형태: 퍼스트/라스트마일, 미들마일, 자율주행 주차 |
| 인프라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TS / ITS 시설 • 관제센터 • 차량시설: 차고지, 정비시설, 충전시설 • 도로시설: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도로노면표시, 정류장 • 정밀도로지도 |
| 운영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 운행거리, 운행차량, 이용실적 • 시설 관리 및 구축: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및 관리 • 제도지원: 지자체 조례제정 • 재정지원: 지자체 재정지원 • 안전관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안전관리자 배치 • 갈등관리: 주민 의견 수렴,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갈등관리, 관계기관 협업 • 시범운행지구 지정 효과: 시범운행지구 교통(통행속도, 교통량, 사고 등)상황 개선 • 규제특례 효과: 경쟁서비스의 이용실적 변화, 자율주행서비스 운영비용 절감효과 • 자율주행서비스 확산: 자율주행서비스 이용실적 변화(증가/감소) • 자율주행 발전 효과: 자율주행기술 향상 및 참여기업 성장 |
| 서비스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만족도: 통행시간, 접근성, 정시성, 예약방식 편의성, 안전성 항목 • 서비스 가격 만족도: 요금 수준 및 지불 방법 |

3. 인천시의 정책 방향

- 현재의 자율주행기술 수준과 기존 시범운행지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고려할 때 인천시 시범운행지구 운영 초기에는 단거리 노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실증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은 레벨3 수준(조건부 자율주행)으로 공사상황, 일반차량과의 상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운전이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은 자율주행기능 사용이 제한됨
 -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운행구간에 보행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하여 운행하는 구간이 짧을 수 있음
 - 따라서 운영 초기에는 단거리 노선 구간을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하여 운행하는 구간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시범운행지구의 초기 서비스 선정시 시민에게 자율주행기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인천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구간이 선정되어야 함
 - 기존 시범운행지구는 운행 차량수가 적어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시민에게 자율주행기술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인천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간의 선정이 필요함
- 시범운행지구의 인프라는 자율주행기술 표준에 맞춰 구축되어야 함
 - 자율주행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표준화 역시 진행중임
 -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기술 표준에 맞춰 구축해야 함
-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며, 기존 운수사업자 및 관계기관과의 갈등관리가 필요함
 - 재정지원 등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안전관리지침 마련 등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따른 기존 운수사업자(버스, 택시)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군·구청,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기축 아파트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 방안

정동재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및 전기자동차 전환 정책 흐름을 좇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인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한 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제도임.
- 그런데 최근 2022년 1월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강화됨. 기축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대상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의무설치 비율은 2%로 신규 부과됨.
- 기축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는 2025년 1월 27일까지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가 기축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천시 역할과 향후 정책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인천광역시 아파트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 현황과 실태 점검

- 인천시 주거 및 주차 환경, 즉 인천시 아파트 주거비율, 건축연한, 세대당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차면수, 분양유형 등을 분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방안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주요 요소를 점검함.
 - 첫째, 인천시민의 아파트 주거비율은 다른 주택유형의 주거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고, 2016-2020년 사이 61.4%에서 64.1%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 둘째, 인천시 아파트의 평균 건축연한은 2022년 기준 19.9년이고, 전체 아파트 단지의 약 25%가 건축연한이 30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임.
 - 셋째, 건축연한이 오래될수록 세대당 주차면수가 적음. 주택건설기준규정의 주차면수 설치 기준이 높아지기 이전에 사용승인되었기 때문임. 또한 아파트의 분양유형에 따라서도 주차여건에 차이가 나타남. 임대 주택 등은 주택건설기준규정의 주차면수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임.
 - 넷째, 인천시의 세대당 주차면수는 같은 시기 세대당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적어서 전반적으로 주차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이로부터 인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보급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인천시 주거지역 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정책 중에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보급정책이 특히 중요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둘째, 건축연한이 30년 이상인 아파트 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 아파트 단지로서 별도의 관리가 요구됨.
 - 셋째, 충전시설 설치 수용성을 낮추는 요인에 관한 논의와 정보를 축적하여 충전시설 보급 사각·취약 시설 지정 및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아파트 단지 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수요 증가 속도에 맞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
- 또한 인천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 충전시설 보급 실태를 점검하고 보급방안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 인천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861개 중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 단지는 34개 단지로 전체 단지수의 8.4%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보급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한 아파트 단지 비율은 아파트 사용승인 시기별로 차이가 있음. 높은 건축연한처럼 충전시설 설치 수용성을 낮추는 요인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충전시설 보급 사각·취약 시설 지정 및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 실태와 의무설치 제도에 관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아파트의 주차 및 충전 환경과 적정 의무보급 비율에 대한 인식,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정책에 대한 선호도, 의무설치 기간과 방식에 관한 의견 등을 파악함.

- 아파트 단지의 충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기자동차를 주로 충전하는 장소는 '집'인 한편 충전시설은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이 특징적임.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의무보급 비율에 대한 응답자 인식은 전기자동차 운행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응답자와 운행하지 않는 응답자가 적정 의무보급 비율로 5% 이상을 응답한 비중은 각각 59.0%, 31.8%로서 적지 않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응답자는 '의무보급 비율 상향'에 비교적 큰 관심을 보이고, 반면 전기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응답자는 '충전기 설치지원' 정책과 '예외지역 지정'을 더 선호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의무설치 기간과 방식에 관해서는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응답자는 '1년 이내'에 '한 번에 설치'를 선호했고 반면 전기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법적 유예기간 이내'에 '점진적 설치'를 선호함.

3. 인천광역시 기축 아파트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 방안

- 인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천시 역할과 향후 정책 추진방안을 제안함.

[표 1] 인천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 방안

| 보급 방안 | 내용 |
|--------------------------|---|
| 보급목표 수립 및 이행률 점검 | • 균등보급 및 전망치 등을 활용한 다섯 가지 보급목표 제시 |
| 보급 사각·취약 시설 관리 | • 두 가지 보급 사각·취약 시설 유형 제시 |
| 의무보급 예외시설 조사 및 예외기준 논의 | • 예외시설 규모를 조사하고 예외시설을 제외한 보급목표 제시 |
|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와 정책 지표 필요성 논의 |
| 민간시장 인센티브 지원과 사후 책임성 강화 | • 민간시장 인센티브 지원과 사후 책임성 강화 필요성 논의 |
| 입주자 인센티브 지원과 인식 개선 | • 입주자 인센티브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필요성 논의 |
| 충전시설 보급계획 수립제도 도입과 조례 개정 | •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기본계획(가칭)' 수립 제도 필요성 논의 및 인천시 조례 개정 방향 제시 |

- 첫째,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을 촉진하고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설치기준이 준수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이행률을 점검해야 함. 이 연구는 다섯 가지 보급목표를 제안함.
- 둘째, 인천시는 주차여건이 열악하거나 건축연한이 높아서 입주자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수용성이 낮은 시설, 또는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기업이 충전시설을 보급하기 어려운

시설을 보급 사각·취약 시설로 지정하고 별도로 관리 및 모니터링해야 함. 또한 보급 사각·취약 시설에 대해 필요시 인천시가 직접 충전시설을 보급해야 함. 이 연구에서는 보급 사각·취약 시설의 효율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해 보급 사각·취약 시설에 속할 수 있는 시설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제안함.

- 셋째, 인천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한 두 종류의 설치 예외시설 규모를 조사하고 관리해야 함. 또한 예외시설 변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보급목표에 반영하고,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 넷째, 인천시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보급현황과 문제점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현안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함. 또한 기초자료의 수집뿐만 아니라 보급 이행률, 보급 사각·취약 지역 지수, 의무보급 예외시설의 변동 등과 같은 정책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함.
- 다섯째, 인천시는 민간기업이 충전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되, 충전시설 보급 이후 사후관리가 장기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갖추거나 의무 운영기간 부여와 같은 제도를 통해 사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여섯째, 인천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적극적으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입주자 인센티브 지원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정책을 추진해야 함. 한편 충전기 보급관련 인센티브와 패널티 정책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축 아파트 단지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해야 함.
- 일곱째,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기본계획(가칭)' 수립 제도를 도입하고 보급목표 수립 및 이행률 점검, 보급 사각·취약 시설 관리, 의무보급 예외시설 지정 및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급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 틀을 마련해야 함.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급 방안의 이행력을 확보해야 함.

제물포 르네상스를 위한 중단기 광역 교통정책

■ 석종수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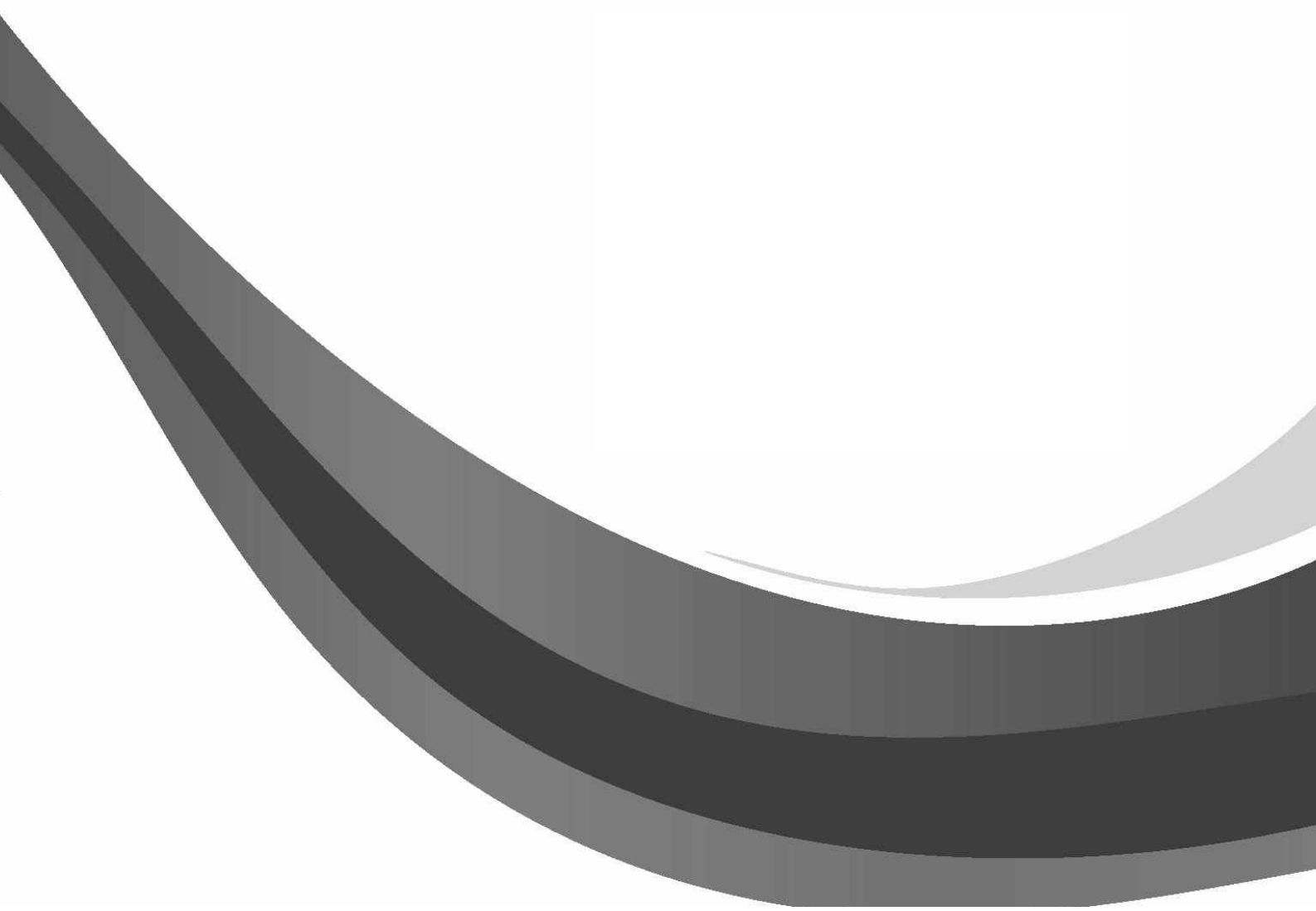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외부에서 사업지로 접근하는 광역 교통체계 개선이 매우 시급하며, 관련해서 추진되는 경인선 지하화, KTX 인천역 유치, 제2공항철도 건설 등의 사업들은 모두 장기적인 프로젝트임
- 현재 철도를 이용해서 사업지까지 접근하려면 서울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경인선의 급행(특급)열차를 인천역까지 운행하고, 나아가 경인선 급행(특급)열차가 송도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제안

- 경인선 특급(급행)열차가 인천역까지 운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역의 승강장 구조변경과 선로 증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천역의 물리적 여건으로는 쉽지 않음
- 지상과 지하로 나뉘어 있는 경인선과 수인선을 지하에서 직결하면 경인선 특급(급행)열차를 인천역까지 운행하는 것은 물론 수인선 송도역까지 운행할 수 있음
- 경인선 특급(급행)열차가 인천역을 거쳐 송도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면 서울에서 인천역까지 도달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KTX가 송도역에서 출발해서 생기는 인천역의 광역 교통 접근성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음
- 서울에서 인천역까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중단기 대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인선 지하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도시공간연구부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I

도시계획 분야

●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 개선방안
인천시 준공업지역 토지이용 실태와 관리 방안

● 정책연구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
인천광역시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녹지축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개선방안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
인천광역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정책 방향

● 군·구협약 정책연구

연수구 원도심 노후아파트 정비·관리 정책방향

● 이슈브리프

인천시 청년주택 공급방향
인천지역 수도권규제의 역사적 흐름과 대응방안

인천광역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 개선방안

이인재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에 다수의 문화재가 존재함. 인천에는 80건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으며, 190여건의 시지정문화재가 행정구역 전역에 분포하고 있음. 특히 강화군과 중구에는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앞선 시대의 유산인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의 건설공사,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문화재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로 볼 수 있음.
- 국보, 보물, 유형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등은 일정 공간에 고정된 문화재로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일정 구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여기에 더하여 문화재구역 외곽 일정 범위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문화재구역이 직접적인 보호구역이라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보호구역보다는 규제가 덜 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지역으로 인정하여 설정된 구역으로 볼 수 있음.
- 문화재구역에서 문화재 관리는 절대적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는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기준을 초과하여 개발을 원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개발주체는 현상변경 절차를 신청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음. 개발주체가 신청한 내용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문화재 보존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사전에 반대하는 민원이 최근 발생하고 있음. 문화재의 보존과 사유재산의 보호 두 가지 가치가 맞서고 있음.
-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기준이 적절한지,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검토 결과

1) 건축규제 적용거리 검토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강화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은 조사 결과 300m 이하 범위에서 건축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시지정문화재의 경우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실제 적용되는 건축규제 범위는 대체로 300m 이하로 조사됨
- 시지정문화재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시지역은 조례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200m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0m 이하 지역에서 건축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2) 건축허용기준 검토

- 인천시 개별 문화재 각각의 보존지역의 건축허용기준을 분석한 결과, 보존지역 내 구역별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제가 주 내용이었으며, 그외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높이규제 없이 해당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함
- 구역별 건축허용기준을 살펴보면 1~2구역 내에서 건축허용기준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으며, 3~5구역은 일부만 건축허용기준을 적용함

3) 현상변경신청 안건 검토

- 구역별로 살펴보면, 신청건수는 1구역이 가장 많았고, 그 외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순임.
- 거리별로 살펴보면, 100m 이하에서 가결 65.3%, 부결 34.7%, 100~400m 구간은 가결 약 80%, 부결 약 20% 비율로 나타남. 400~500m 구간은 심의신청 건수가 총 건수에서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4) 타지자체 기준 비교 요약

- 전국 17개 시도의 거리기준을 비교하면, 인천보다 완화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적용한 곳이 12곳 있으며 (A, B유형), 인천과 같은 수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적용하는 곳이 5곳임 (C유형), 인천보다 강화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적용하는 곳은 없음 (D유형).

[표 1] 시도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및 유형

(단위: m)

| 구분 | 국가지정문화재 | | 시도지정문화재 | | |
|-------------|--|-------------------|---------------------|-------------------|-----|
| |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공업지역 | 녹지지역, 도시 지역외지역 | 도시지역 중 주거상 업공업지역 | 녹지지역, 도시 지역외지역 | |
| A유형 (10)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200 | 500 | 200 | 300 |
| B유형 (2) | 서울특별시 | 100 | 100 | 50 | 50 |
| | 제주특별자치도 | 500 | 500 | 300 | 300 |
| C유형 (5) |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200 | 500 | 200 | 500 |
| D유형 (0) | 없음 | | | | |

2. 개선방안 제안

- 현재 인천광역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범위에 대한 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실효성 제고 및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천광역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범위를 제안함.

[표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범위 종합 제안

(단위: m)

| 구분 | 국가지정문화재 | | 시도 지정문화재 | |
|---------------|-------------------------|------------------------|------------------------|------------------------|
| | 도시지역 중 주거, 상 업, 공업지역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
| 설정범위 종합제안 | 200 | 300 | 150 | 300 |
| 참고:대안 전체평균 | 175 | 275 | 112.5 | 212.5 |

3.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1) 조례개정 등 개선사항

- 타시도에 비해 강화된 인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리기준을 타지자체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함. 기준완화를 위한 문화재보호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 행정 후속조치로 조례 기준 변경과 보존지역 고시도면 재정비 절차가 필요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규제는 일부 도시계획 관리수단으로 대체 가능하며, 도시계획 수단 중 용도지구 중 특화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문화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수 있음. 이외에도 도시계획 수단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지별 건축규제가 가능함. 이 경우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이 필요함.
-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재개발 추진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함.

2) 시 담당부서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개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개발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관분석 등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요구됨. 민간이 작성한 경관분석 자료를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경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함
- 일정규모 이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향후 연구과제

- 향후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강화지역 포함한 인천 전지역 대상으로 연구범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타 시도와의 공동연구를 제안함

인천시 준공업지역 토지이용 실태와 관리 방안

■ 안내영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 준공업지역은 28km²(2021.04 기준)이고 인천시 전체면적의 2.56%를 차지함
 - 인천시 전체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모두 포함)은 23.74km²
 - 미추홀구 면적은 24.84km², 부평구 면적은 32.01km²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어서 공장과 창고를 주용도로 하지만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며 지정된 곳에 따라 다양한 특성으로 나타남
- 다양한 토지이용 현황과 변화가 예상되는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준공업지역의 도시관리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관련 제도와 주요 사업과 연계한 준공업지역 관리 방안 도출함

2. 인천시 준공업지역 관리 방안

1) 인천시 준공업지역 관리 방향

- 물리적 환경 관리와 기능 관리의 구분
 - 준공업지역에는 단독산단처럼 공업관련 기능은 높으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구역이 있는 반면 혼재구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용도와 기능을 관리해야 하는 구역으로 구분됨

-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기능의 재편보다 물리적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이 필요
- 주거와 공업관련 용도, 여타 다른 기능이 혼재된 구역은 구역 내에서 기능을 구분하고 주요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전체 공간구조 개편 전략에 기반한 공업지역 해제와 지정 필요
 - 이전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공업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주거지역화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 등 공업지역 해제 수요에 의해 이뤄짐. 최근에는 남동첨단산업단지처럼 신규 지정 수요가 발생하면서 대체지정이 이뤄짐
 - 개별 사안에 맞추어 해제와 지정이 이뤄지면서 산발적인 해제가 이뤄짐
 - 특히 주거지역화 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주변 잔여 공업지역의 용도 혼재를 가속화시킴
- 노후한 단독산단과 준공혼재구역에 대한 관리 계획 필요
 - 준공업지역 중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물리적으로 열악한 단독산단과 일반공업지역 주변의 준공혼재구역임
 - 단독산단 중 부평농장과 청천농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도가 높아 물리적 환경 개선 필요. 특히 부평농장과 청천농장은 인천시 S자 녹지축 주변에 위치하여 환경적 관리가 중요
 - 일반산업단지 주변 준공혼재구역은 주거용도와 공업용도의 비율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짐. 일반공업지역과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지역은 적절한 기능 관리가 중요

2) 인천시 준공업지역 관리 방안

- 「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통하여 인천시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공간전략과 구역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 「도시공업지역법」은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 그 동안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계획없이 산업단지 위주로 계획, 관리하였으나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도입하여 도시 전체 공업지역에 대한 전반적 전략 계획이 가능해짐
 - 그러나 「도시공업지역법」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법으로 도시의 모든 공업지역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의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산업정비구역은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공업지역 등에 1만㎡이상으로 지정하고 산업정비구역계획을 수립함
 - 산업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함. 공업지역정비사업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준용하여 수용, 환지 방식 등을 사용하여 개발할 수 있음
 - 산업혁신구역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5천㎡이상으로 지정
- 주공혼재구역이 일반공업지역과 시가지의 접이지대 역할을 수행하므로 구역 내에서 주거와 공업용도를 구분하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비
 - 주거와 공업용도가 비등한 지역은 공업용도 비율을 유지하되 혼재된 공장과 주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재배치
 - 주거우세구역은 공동주택부지와 저층주거지를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정비와 관리 방향 설정
 - 다(多)용도 혼재지역은 판매, 업무, 수리 등 기능 특화를 고려하여 관리
-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사업,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 등 대규모 중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화
 - 제물포 르네상스의 주요 대상지는 내항·남항 배후부지를 포함하고 있고 주요 준공업지역을 포함
 - 특히 주공혼재지역으로 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부평산단주변의 준공업지역과 가좌역 부근의 준공업지역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사업과 연계 가능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

이왕기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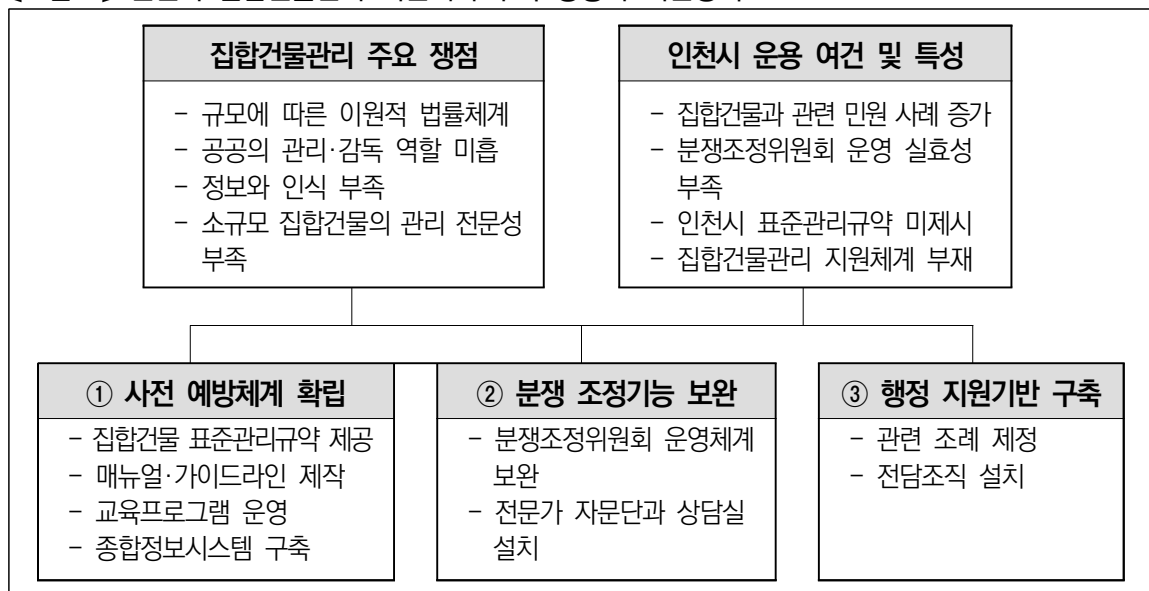
- 집합건물은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일 건축물이 다수의 구분된 부분으로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의미함. 집합건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 역할을 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집합건물법」 적용대상이 확대됨
- 주거용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적용받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이원적 관리 문제가 있음
-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구성원이 자체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건물을 운영·관리하도록 함. 다양한 형태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만,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어 분쟁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 2020년 2월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 권한이 확대되고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집합건물 지원체계와는 달리 인천시는 전담인력과 행정지원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인천시 집합건물 현황과 민원 특성 이해와 현행 지원체계 파악이 필요함. 그리고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한 수준에 불과한 인천시 현행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
- 연구 범위는 주거용 집합건물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주거용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과 주거 용도가 포함된 복합용도 시설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을 적용대상으로 함. 단,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정책 수단은 다른 유형의 집합건물에도 적용 가능함

2.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지원방안

1) 인천시 지원체계 구축 방향과 사업유형

-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체계 구축 방향은 사전예방, 분쟁 조정기능 보완, 행정 지원기반 구축 등 3가지 측면에서 제안함
- 집합건물에 관한 일반적인 쟁점과 인천시 집합건물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지원 방향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임.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 갈등과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영역임. 표준관리규약 제공,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합건물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 다음은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기능을 보완하는 것임. 먼저 취약한 제도적 분쟁 조정기능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함. 현행 법체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기존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과 전문가 지원기능을 추가로 확보하여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마지막으로서는 사전예방체계 확립과 분쟁 조정기능 보완 등의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전담조직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조직과 예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그림 1] 인천시 집합건물관리 지원체계 구축 방향과 지원정책



2) 갈등 사전예방체계 확립

- 현시점에서 인천시가 우선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임. 인천시는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2020년 「집합건물법」 개정에 맞는 새로운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인천시도 표준관리규약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한편, 공공의 역할이 제한적인 「집합건물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건물 관계자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익숙하지 않은 집합건물관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는 핵심역할이라 할 수 있음.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공공에서 지원하는 업무, 집합건물 관리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매뉴얼, 갈등·분쟁사례집,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관련 주체 간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3) 분쟁 발생 시 공공지원 방안 강화

-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강제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물론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필요함. 우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서울시와 경기도가 매뉴얼,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다양한 홍보방안을 병행해야 함
- 다음으로 집합건물 전문 상담실이나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필요함. 온라인에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집합건물의 특성상 사례가 다양해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하는 집합건물 전문 상담실을 설치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전문가 지원을 위해 전문가 자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4) 행정 지원기반 구축

- 현재 인천시는 집합건물 관련 갈등·분쟁의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해당 조례가 없고, 전담인력 및 조직도 구성되지 않음. 집합건물 갈등 사전예방체계 확립과 분쟁 조정기능 보완을 위한 행정 지원기반이 우선해서 구축되어야 함
- 먼저,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현재 집합건물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인데, 조례 성격을 모든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방식과 일부 지원사업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제정할 수 있음. 인천시 조례는 서울시처럼 모든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단일 조례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집합건물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공동관리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건축물의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어 공공차원의 지원계획과 정책지원이 필요함. 집합건물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담당 조직을 팀장과 팀원 2인으로 구성된 최소 3인 이상의 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 부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집합건물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해야 함

인천광역시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이인재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으로 초고령화 및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귀농어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발굴 등이 각 시도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천시의 강화군, 옹진군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증감률 및 고령화비율 등 8개 항목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분석하여 선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¹⁾ 되었으며, 인천시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귀농어, 귀촌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귀농귀촌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는 2019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2020년 대비 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도 귀농귀촌 인구가 전국추이와 비슷하게 늘고 있으나, 전국 대비 귀농·귀촌 가구 및 인구 비중은 낮은 편이며, 귀농어촌 정보 제공 및 지원·상담 체계 또한 타 시도 대비 열악한 실정임.
- 인천시는 비도시지역인 강화군 및 옹진군 등 군지역 농어업 인구를 유입 및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인천시로 귀농, 귀어, 귀촌을 준비하는 예비귀농어촌인을 위한 지원정책 및 종합적인 안내와 관련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시 농어촌 지역 내 인구유출 방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인구유입 확대 유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 전체로 하며, 주요검토 및 제안지역으로는 인천시의 비도시지역 및 농지(전,답)분포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검토 대상으로 함.

1) 김셋별 기자. ‘인구감소 심각’ 국내 89곳, 인천 강화·옹진군 2곳. 인천투데이 (2021.10.18.) 기사 내용 참고

2. 인천광역시 귀농어촌 이주지원 방향 제안

1) 귀농어촌 관련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구정책적 접근 필요

- 인천시의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빈집발생의 문제, 생활환경의 낙후 등의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함
- 인천시 농어촌의 초고령화 및 빈집 증가와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 농어촌 내 생활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 할 수 있는 거점(센터) 역할이 필요하므로 이에 적합한 운영기관 및 운영방식 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귀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례 제정 필요

- 귀농어·귀촌을 위한 정책 및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서는 귀농어·귀촌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함
- 근거법령의 마련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의 집행, 예산계획 등을 세울 수 있으며,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인천시 농어촌 지역 내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의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음

3) 인천광역시 특성 반영된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운영방식 필요

- 인천시는 도시지역, 섬지역, 농촌지역 등이 혼재하고 있어서 다양한 측면의 귀농, 귀어, 귀촌 상담과 현장에 적합한 정책제안이 필요
- 인천시에서 추진해야할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의 방향은 각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 지원센터, 귀어학교, 농어업인연합회 등에서 시행하는 귀농어촌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당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 수행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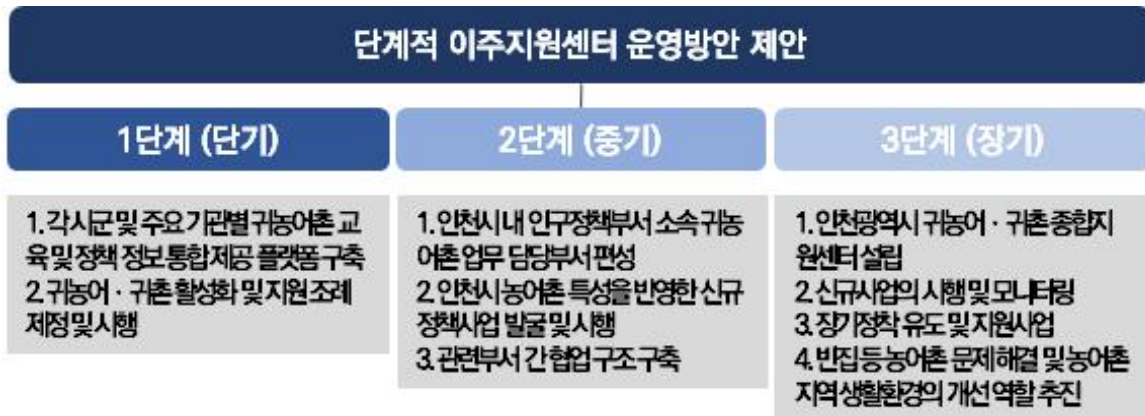
4) 단계별 이주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필요

- 1단계: 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 귀어학교 운영, 한달 살아보기 추진
- 2단계: 인천시청 내 귀농어귀촌 담당업무 부서 지정, 특성화 체험 프로젝트 추진
- 3단계: 인천광역시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설립, 장기 체류 프로그램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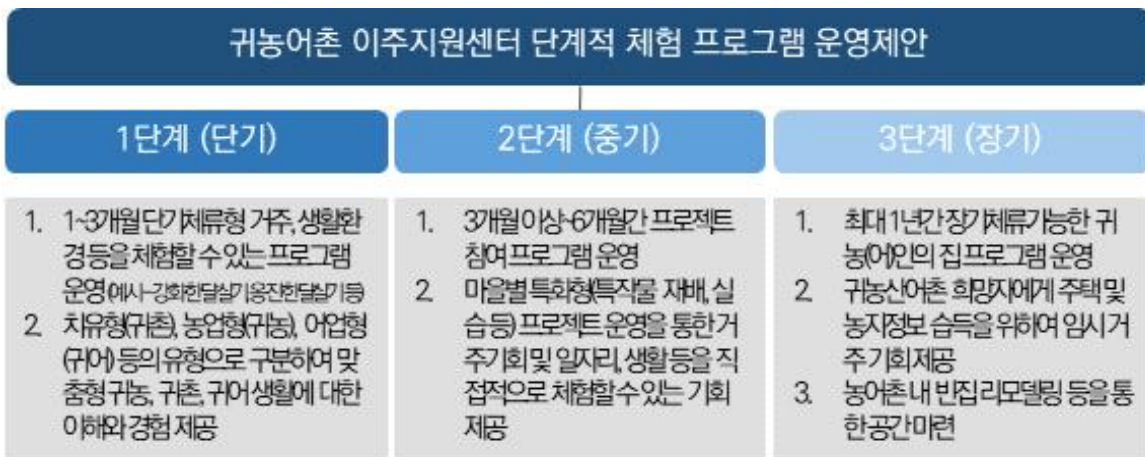
5) 인천광역시 귀농어귀촌 이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식 제안

- 향후 인천광역시 귀농어귀촌 이주지원센터를 설립 시 비전 및 전략, 목표, 중점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함

[그림 1] 인천광역시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단계적 조성방안 제안



[그림 2] 인천광역시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단계적 주요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안



[그림 3] 인천광역시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비전 및 전략 제안

| | | | |
|---------|---|--------------------------|---|
| 비전 및 전략 | 농어촌 지역의 기능 회복 및 인구 활성화 | | |
| 목표 |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조기정착 및 소통 네트워크 구축 | | |
| 중점 추진전략 | 거버넌스 구축 | 정보제공 | 이주지원 프로그램 운영 |
| | -귀농어·귀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협업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기본계획 수립 | -도시민 플랫폼 운영 -이주희망자 교육 | -인천 농어촌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 -농어업 및 관련 가공업 등 직업교육 -주거 및 농지 지원 등 |

3. 정책제언

1) 인천광역시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설립 단계적 추진

- 인천광역시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설립 단계적 추진을 통해 강화·옹진군 지역의 농어촌 인구유입 정책 마련이 필요.

2)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설립 준비 과정 진행

- 귀농어촌 이주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근거법령 마련을 우선 시행하여, 귀농어·귀촌 지원 계획의 수립, 예산계획, 정책 및 사업의 집행 등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3) 인천광역시 특성 반영된 귀농어촌 이주지원 정책 및 센터 운영방안 마련

-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내 위치한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귀농어업 + 농산물 가공 및 판매 + 관광산업 등과 연계하여 인천시만의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융합 콘텐츠 및 산업(일자리) 정책 발굴이 필요함
-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귀어학교, 농어업인연합회 등에서 시행하는 귀농어촌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당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필요함

녹지축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개선방안

■ 이종현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결과 요약

1) 건축물 높이관리 정책방향 마련

- 무분별한 높이의 건축물 입지로 도시환경 저해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높이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임.
- 건축물의 높이기준은 무분별한 높이의 건축행위로부터 수변 및 산지 등 자연경관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경관과 도시 내 인공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도시환경관리 및 경관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임.
- 최근의 주택가격 이슈로 정비사업 및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 S자 녹지축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기준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임.
- 인천시 주요 녹지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로 인해 도로결절점 또는 대로변에서만 조망이 되는 실정이므로 추가적인 자연경관 차폐를 최소화하여 더 이상의 경관훼손을 예방하는 목적의 건축물 높이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인천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인접한 저층주거지역의 도시환경적 피해를 줄이고, 도시 경관관리 차원에서 최대높이 및 평균높이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함.
- 반면 도심 내 역세권 및 상업지역과 같이 도시 인프라의 집적과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건축물 높이를 적정수준까지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 도심부 내 역세권 및 상업지역은 인천시의 중장기 계획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상 도심부에 해당하는 구월, 부평, 송도 내 주요 역세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2) 건축물 높이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건축물 높이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경우, 높이기준 개선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건축물 높이기준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과 조망경관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유도해야 하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자연경관의 중요성 및 과도한 높이의 건축물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시각공유가 필요함.
- 조망경관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를 관리할 경우, 시민이 얻을 수 있는 조망경관의 가치가 무엇인지 설득력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높이기준은 단순히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사항이 아니라 현재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향후 개발 및 정비 시 적절한 높이를 유도하고, 지역특성별로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을 통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공감대 필요함.

2. 정책제언

1) 현재 조망가능한 가시면적의 유지방안 마련

- 현재 인천시 S자 녹지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해발 90m이상 지역의 가시면적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를 기준으로 조망유지 및 확보 원칙을 제시하고 향후 개발로 인한 가시빈도 변화 분석 등을 통해 지정 조망상태의 저하여부를 심의하는 운영방식이 필요.
- 현재 가시면적이 주로 확보되는 도로를 주요 경관축으로 설정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 및 건축선 등을 제시하는 관리계획 마련이 필요.
 - 법정계획인 경관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인천시 전반의 경관관리 방향성 및 세부사항까지 제시할 필요.
- 현재 조망가능한 가시면적 유지를 위한 높이기준은 시민합의가 가능하도록, 조망점의 위치 또는 구간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 기존 가시면적 유지를 위한 경관검토 기준 등을 제시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함.

2) 산지 및 구릉지 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위한 세부관리계획 수립 필요

- 구릉지 및 산지 내 (해발고도 30m이상 지역) 과도한 높이의 개발을 지양할 수 있도록 ‘(가제)인천시 주요녹지축(S자녹지축) 주변지역 세부 경관관리계획(안)’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
-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구릉지 및 산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획지별 규모 및 높이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계획 마련 필요.
 - 지구단위계획 내에 해발기준 건축물 입지가능 높이를 표시하여 최대 계획높이 내에서 건축행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
 - 해발기준 높이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과도한 터파기 등에 의한 옹벽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릉지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저층부의 테라스 하우스 등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계획수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 필요.
 - 높이관리가 필요한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에 적합한 인센티브의 종류는 저밀개발 및 지형의 변형 최소화를 유도하는 대신, 용적률 및 건폐율 등 밀도완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아닌 대지내 조경공지 등의 건축기준 완화, 해당 주택의 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금 혜택,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는 주거비율의 상향 및 상가비율 축소 등 해당 건축물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항목마련이 필요함.

3) 산지 및 구릉지내 높이관리를 위한 결합개발방식의 정비사업 추진

- 산지 및 구릉지 내에 위치하여 저밀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고밀개발이 가능한 정비구역과의 결합개발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창의적인 사업방식 운영이 필요.
- 결합개발방식의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의 내용에 따라 시행이 가능한 사업방식이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사례지역은 아직 없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구릉지에 위치한 노후주거지역들을 정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사례가 늘고 있음.
- 결합개발 추진은 인천시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의 내용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인천의 주요 녹지축 주변의 저층노후주거지와 역세권 주변 정비사업구역간의 결합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4) 도시 내 지역별, 특성별 입체적 높이관리 계획 마련 필요

- 사업성 등을 이유로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자연경관의 보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높이관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높이는 평면적인 형태의 계획안으로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인천시 전체적으로 입체적 경관상세계획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입체적 경관계획을 유도하여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정비 지구 등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포함하는 개발사업 등의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입체적 경관상세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높이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및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

■ 조상운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함
- 그러나, 국가 또는 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50% 이내에서 일부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제공함
- 인천시는 2018.2월 부터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을 제정하고, 지원대상 정비기반시설의 유형 및 지원금액의 한도 등 세부 규정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정비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정비사업의 여건이 변화되어 보조대상 정비사업이 증가하여 관련 예산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현 시점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보조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차원에서 정비사업 시 합리적인 정비기반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업비 보조실태 분석을 통해 보조기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개선방안

1) 사업비 보조기준 개선의 필요성

- 정비사업별 사업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함
-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원대상 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에 활용되는 도시정비가금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안정적 운용·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사업비 보조기준 개선방안 필요성



2)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중복지원 문제 개선

- 정비사업 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비 보조와 함께 구역 내 국·공유지의 무상양도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현행 인천시 기준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정 시 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및 용적률 완화 면적을 제외하지 않아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공유지 무상양도나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구역과 그렇지 못한 구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시 무상양도되는 국공유지와 용적률 완화 면적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예산지원 대상시설 선정기준의 적정성 확보

- 인천시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정 시 구역면적 5만㎡ 이상에서 공원녹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원·녹지면적과 교통영향평가지 요구된 교통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가지지 못하고, 관련 법과의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인천시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정 시 법정 의무 시설과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요구된 교통시설 설치 면적을 포함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함

4)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방식의 개선

- 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기준단가의 개선
 - 인천시가 적용하고 있는 기반시설 유형별 공사비 추정단가는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단가라 할 수 있으나, 고정값으로 매년 여건변화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점,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과 관련 2010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는 정비기금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설치비용의 100%를 지원할 수 없는 구조임. 이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국토부가 매년 공식적으로 고시하고 있는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예산지원 대상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경, 제안함
 - 현행 산정식에서 무상양도 국·공유지 및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을 제외하고 법정 의무 시설 및 교통영향평가지 요구된 시설면적은 포함함. 이때 설치비용은 토지비는 제외하고 공사비에 한함
 - 최종 지원액 = [예산지원 대상 정비기반시설 면적 - (무상양도 국·공유지 면적 + 용적률 완화 면적) - 중복면적] × 시설별 공사비 최저단가 × 50% 이내

5)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당위성 확보

- 사업방식에 따른 지원기준 차등 제안
 -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지 않고 있으나, 인천시는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구분 없이 모든 사업방식에 보조하고 있음. 재건축사업은 건축물의 멸실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주로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지원은 정책수단으로서의 당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인천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하여 우선적으로는 재개발구역에 지원하고, 재건축구역은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당위성을 확보함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평가단 활용
 - 정비사업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시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검증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함
 - 검증평가단의 역할은 예산지원 대상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적정성 판단, 예산지원 대상 정비기반시설의 제외 대상 검토, 재건축사업 방식의 보조의 적합성 검토 등을 수행함

인천광역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정책 방향

■ 민혁기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 개요

- 주택 200만 호 공급 등 국가적인 정책목표에 의해 90년대 조성된 다수의 택지개발지구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천 역시 연수, 계산, 구월 등 택지개발지구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 단지 단위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택지개발지구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은 해당 구역을 넘어서는 파급효과를 도시에 미치기 때문에 인천시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계획적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과밀·혼잡, 지역불균형 문제 발생 예상
- 특히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적 변화(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밀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기능과 주거환경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본 연구는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호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①관련 제도 검토(제2장), ②인천시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련 현황 분석(제3장), ③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 사례 검토(제4장)로 구성됨.

2. 인천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분석

1)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

- 앞으로 택지지구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주거환경, 기반시설의 정비·관리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 80~90년대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의 주거환경은 현재 조성되는 신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도로와 공원·녹지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택지지구마다 도시·주거환경의 여건과 문제점이 다르므로 향후 각 택지지구에 대한 상세한 조사·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이어질 필요가 있음.

2)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장기적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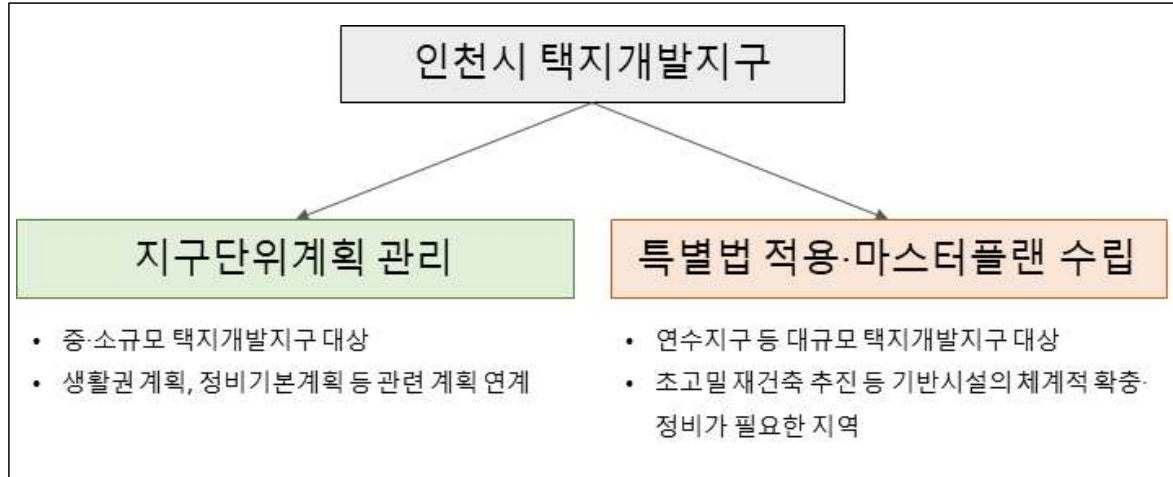
- 인천시는 주택시장 경기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건설비 증가로 인해 정비사업의 추진가능성이 크게 낮아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여건이 양호한 서울시의 경우에도 잠실, 반포, 개포 등 아파트 재건축이 장시간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 노후 택지지구 아파트 재건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시가 대응할 필요가 있음.

3) 대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 대응 필요

- 인천시 노후 택지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가능하게 되면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및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예상됨.
- 도로와 공원·녹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경우 대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현재보다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주거생활권 차원에서 연계하는 방안이 요구됨.

3. 인천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정책 방향

[그림 1] 인천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관리 방향



1)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 인천시는 다수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체계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는 택지개발지구의 평균 용적률이 높은 수준이고 정비사업의 단위 이윤이 작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서울과 다르게 더 높은 수준의 고밀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밀도 상승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인천시 생활권 계획 수립

- 국내 특·광역시 중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며, 서울시는 생활권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로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권역·지역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는 도시계획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간주, 활용하고 있음.
- 노후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천시 생활권 계획 수립은 인천시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확충이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이 생활권 차원에서 연계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도시계획체계를 제안함.

3)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 정비·관리를 위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 연수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고밀 정비사업이 다수 추진되는 지역의 경우 지구 전반의 공간 재조직, 대대적인 기반시설의 확충과 연계를 위해 현재 국토부에서 준비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같은 신규 제도 도입이 필요함.
 - 1기 신도시와 상황이 유사한 연수지구와 같은 대규모 노후 택지지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제외되면 다른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하지만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는 인천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고밀 정비사업(용적률 500% 등)은 도시의 기반시설 여건과 밀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이뤄져야 하며,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같은 계획 하에 제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연수구 원도심 노후아파트 정비·관리 정책방향

민혁기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인천시를 포함한 국내 대도시는 빠른 인구·경제, 도시성장에 발맞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왔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전에 지어진 다수의 주택에 노후화 문제가 커지고 있음.
- 기존 주택정비사업은 원도심 저층 주거지의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이었지만,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표준 주택유형이 되면서 노후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음.
- 연수구의 경우 90년대 추진된 연수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건축 연한 30년에 가까워지고 최근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정비사업이지만,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역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영향력을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발밀도 증가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정비사업 모델이 여전히 주목받는 시점에서,¹⁾ 연수구 원도심 아파트 단지의 밀도상향이 지역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음.
- 시대가 변화하면서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그에 따른 주거단지 계획·개발기법이 발전·변화하고 있음. 본 연구는 주거단지 및 신도시 개발 사례,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수구 원도심 노후아파트 정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1) 진중언·정순우(2022.04.29.)

2. 결론

1) 원도심 노후아파트 정비·관리 정책방향

❖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 추진

- 연수구 원도심 주거지는 8개의 지하철역이 인접해 있을 만큼 지하철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역세권 대부분이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역세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노후주택 정비, 역세권 주변 상업·업무 기능 강화, 공공시설(업무·창업시설, 문화·커뮤니티시설 등) 확충을 위하여 지하철역 인접 단지는 주거·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편익이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유도
- 또한 현재 원도심에 부족한 도로-철도 환승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역세권에 환승·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삶과 밀접한 핵심 기반시설·생활공유공간 확충

- 연수구 원도심은 주거용지 비중이 높고 공원·녹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대규모 단지로 분절되어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부족함.
- 향후 재건축 추진시 지역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원·녹지,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공간조직·시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비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 공원·녹지의 경우 기부채납 되는 공원이 기존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접 단지의 재건축 시 기부채납 되는 공원은 녹지축 또는 대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함.
- 도로의 경우 원도심 교통체계, 교통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도로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함.
- 지하철역 인접 단지의 경우 가로변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역세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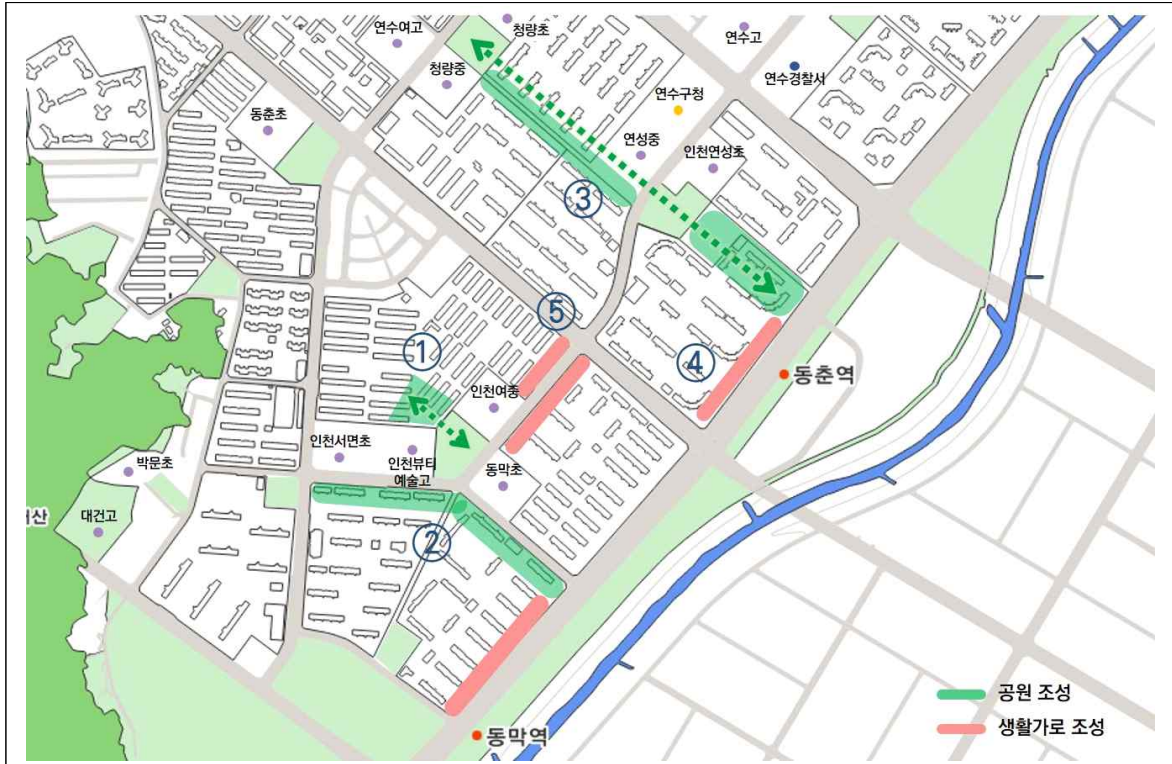
❖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주거정비 유도

-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 등 자연산림과 인접한 노후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 및 리모델링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고품격 주거단지를 유도하여 지역 장소성을 형성·강화
 - 건축물의 규모뿐 아니라 인접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설계 필요
- 자연환경 경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중저층형 건축을 유도하고 기부채납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량이 적고 주변 녹지가 충분하여 공원 확충의 필요성이 낮음.

2) 주거생활권별 정비·관리방안 예시

- 동춘 주거생활권은 단지 주변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고 이를 선형으로 연계·확대 하며, 동춘역·동막역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개발, 생활가로 조성이 필요함.
- 연수·선학 주거생활권은 환승역인 원인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체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버스 환승센터를 조성하며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도로를 확폭할 필요가 있음.
- 연수·청학 주거생활권은 주변 산림자원과 정비 후의 주택단지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녹지 인접 지역에 대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비계획적으로 추진된 옥련 주거생활권은 노후아파트는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건축시 체계적으로 도로와 공원·녹지를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인접한 단지를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합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림 1] 동춘 주거생활권 정비·관리 방안 예시



[그림 2] 연수·선학 주거생활권 정비·관리 방안 예시



[그림 3] 연수·청학 주거생활권 정비·관리 방안 예시



[그림 4] 옥련 주거생활권 정비·관리 방안 예시



인천시 청년주택 공급방향

■ 기윤환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 인천시 청년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28.5%로 저출산 등에 의해 감소 중이지만, 비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으로 전국 대비 인천의 청년인구 구성비는 다소 높은 수준이며, 소득불안정에 따른 재정적 한계로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의 주거문제에 직면해 있음
-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행복주택·청년전세임대·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택공급과 전월세 보증금·월세 등 금융지원 같은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 본 연구는 인천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에 부합한 인천형 청년주택의 유형과 공급방향을 제시함

2. 정책 제안

- 자가소유가 가능한 청년주택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직주근접 청년형 분양주택'과 실질적 소유가 가능한 '이익공유형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여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형 역세권 분양주택', '청년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 분양형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익공유형 청년주택은 '수익형'과 '이익공유형'으로 구분하여 임대와 소유, 수익창출이 가능토록 공급을 유도함
-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인천형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빌트인 구조의 1인·청년 가구 사물인터넷(IoT)' 청년형 임대주택, 역세권 중심의 '청년 행복주택·우리집', 보육 및 교육환경이 확보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인하대·청운대와 연계한 '대학생 행복기숙사' 등으로 차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 인천형 청년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역세권 중심의 활성화 사업추진에 의한 청년주택공급계획 마련, 청년수요 대응을 위한 청년주거실태조사 실시, 인천형 청년주택 정립 및 지원 기준 마련 등 사업 및 정책추진이 필요함

인천지역 수도권규제의 역사적 흐름과 대응방안

■ 이종현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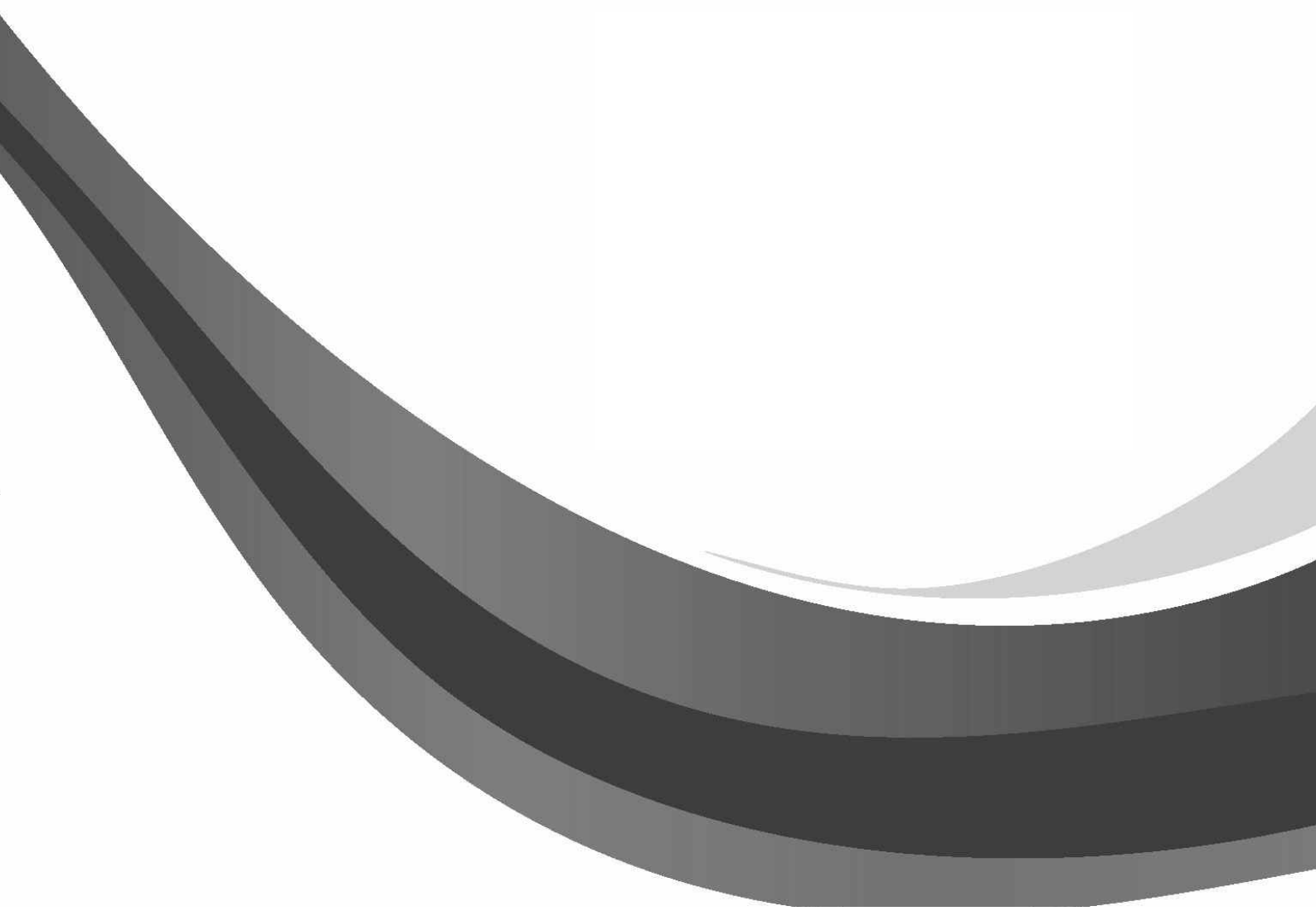
- 수도권규제는 1970년대 서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국토균형발전으로 정책목표가 전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 향후 서울인구 정체가 예상되어 정책목표는 달성되었으나, 그동안의 규제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부족 및 비수도권과의 역차별이 증가하면서 접경지역 등 일부지역은 전국 최하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음
- 4차에 걸친 수도권정비계획 내용 변경으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였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과정 등에서는 수도권 차별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함

2. 정책 제안

-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방향으로는,
-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강화·응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제경쟁력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권역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 과밀지표 및 주택가격, 통근비율 등과 연동하여 과밀억제권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각종 지원법규에 포함된 ‘수도권 제외’ 항목은, ‘과밀억제권역 제외’ 또는 ‘수도권 제외(접경지역은 감면)’ 등으로 제외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함
- 넷째 균형발전정책의 공공기관이전 대상에 한국환경공단 등 성장관리권역 입지기관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인구감소에 대응한 대학정원 정책에는 대학정원이 현저히 부족한 인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I

투자분석 분야

● 기획연구

공공주차장 사업 편익추정을 위한 주차 지표 분석 및 적용방안

2022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진단과 보정수요 발굴에 관한 연구
- 교통관리비 밀도조정 및 공항·항만수요 중심으로 -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인천시 공단의 경영성과 분석 및 사업다각화 방안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인천 신항 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지 활용방안

공공주차장 사업 편익추정을 위한 주차 지표 분석 및 적용방안

■ 박찬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20년(2019년 12월 제3차 정기 투자심사)부터 2021년 말까지 시에서 신규로 시행하려는 사업에 투자심사 사업은 총 156건이었음. 이 중에서 교통 관련 사업은 총 33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주차장 건립사업은 총 11건이었음. 즉, 교통 관련 사업의 33%는 주차장 건립사업이며, 정기 투자심사 1회당 평균 1.4건의 주차장 건립사업을 검토하는 등 시 투자심사 주요 대상 사업임.
-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주차장 건설 및 운영비용과 주차 공간 확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분석함. 주차장 건설 및 운영비용은 기존의 주차장 건설 사업을 바탕으로 구축한 기본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반면에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편익 추정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 차량 편익과 주행 차량 편익으로 구성됨.
 - 주차 차량 편익은 신규 주차장이 건설됨에 따라 기존의 주차장까지의 탐색시간이 절약된다고 가정하여 분석함. 주행 차량 편익은 주차 공간 추가에 따른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가 감소하여 이면도로 주행 차량의 통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얻는 편익을 분석함. 주차장 건립에 따른 수익은 주차장 시설 입지에 따른 급지별 요금에 평균 주차시간과 점유율을 고려하여 산정함.
-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편익 산정은 기존의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편익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주차 지표는 시 공영 주차장의 이용행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 주차장 건립사업의 편익 추정에 활용되는 주차 지표는 평균 주차시간(시간), 회전율(회/일), 주차장 점유율(%)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및 각 군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차량 유출입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차지표 추정모형을 구축함.

- 또한 주차장 유출입자료를 분석하여 주차장 특성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활용도를 파악 함. 그리고 향후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정책은 유출입자료를 바탕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수립하는 것을 제언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정리

- 본 연구에서 추정하려는 지표인 회전을, 평균 주차시간, 점유율이며 이는 실제 공공 유료주차장의 유출입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였음.
- 주차지표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토지이용현황과 영향권내 사회경제지표,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결과자료를 활용하였음.
-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산분석 모형과 다중회귀 모형을 구축하였음.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분석 모형이 적정함을 제시하였음.
- 실제 편익산정시 적용 모형은 주간/야간시간대와 해당 주차장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주차지표를 반영함. 해당 주차장의 300m반경 내에서 토지이용의 주 특성을 파악하여 주/야간으로 시간대를 구분하여 [표 1]의 값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함.

[표 1] 토지이용 및 시간대를 반영한 주차지표 적용안

| 구분 | 주간 | | | | 야간 |
|-----------|--------|--------|--------|--------|--------|
|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 주차시간(분/대) | 124.98 | 102.44 | 354.07 | 156.93 | 298.54 |
| 회전율(회/시) | 0.18 | 0.32 | 0.02 | 0.07 | 0.03 |
| 점유율(%) | 35.77 | 51.43 | 25.99 | 24.24 | 10.93 |

2) 정책제언

- 유출입자료 제공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및 인천시 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주차장의 유출입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용도 및 주/야간 시간대에 따른 주차지표를 구축하였음. 이렇게 파악한 주차지표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주차장 사업 투자심사 시 편익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하지만 기 구축된 자료가 존재하였으면 본 연구에서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기존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주차장 편익산정에 활용하였을 것임. 따라서 공공주차장 운영에만 그치지 말고 이용자료를 집계하여 공영 주차장 이용관련 정책수립시 활용하며,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서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공공주차장 이용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공공주차장 유출입 자료를 통해서 이용이 활성화한 지역과 저조한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리고 주차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한가한 시간대 또한 파악할 수 있음.
- 상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공공주차장의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평균 주차시간은 짧으나 회전율은 높은 것이 특징이었음. 이로 인하여 상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은 차량들의 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 즉, 주차장 유출입구 선택에 신중해야 할 것임. 반면에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공공주차장의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평균 주차시간은 길고, 회전율은 낮은 것이 특징이었음. 이런 지역의 공공주차장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으므로 주차장 유출입구를 필요 이상으로 계획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주차장의 이용도 활성화와 관련한 지표로 주차장 점유율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15분 단위로 집계하여 시간대별 평균 점유율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매 시간단위로 변화하는 주차장의 점유율을 확인하여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의 주차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이 포화될 정도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및 시간대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지역 및 시간대에 주차공급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주차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반면 특정구역의 불법주차대수는 상당히 많지만, 인근 공영 주차장의 점유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주차장은 이용개선을 고려해 봐야 함. 진출입로의 위치는 적절한 것인가?, 공영주차장의 위치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였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지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주차수급 실태조사 개선

- 각 군·구에서는 3년마다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함. 주차수급실태조사는 군·구를 블록단위로 주차장 공급면수(노상, 노외, 부설), 현 주차대수, 불법주차대수를 주간/야간, 평일/주말로 구분하여 제시함. 그러나 조사기준 및 결과제시 등이 군·구별로 상이하였음.
- 물론 군·구의 주차 특성이 달라서 통일된 규칙으로 조사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하더라도 각 군·구별 규칙은 존재해야 함. 따라서 최소한 주/야간 구분 시간과 결과표의 양식은 균일하게 맞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2022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

▣ 박효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초빙선임연구위원
▣ 박찬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1. 비용산정 기준 개요

1) 연구 배경

- 재정사업의 투자심사에서 초기 건설비용은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따라서, 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제시한 건설비용은 높은 신뢰도가 요구됨. 그러나, 사업구상 단계에서 사업주무부서 주무관이 높은 신뢰도를 가진 건설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의 기획/구상단계에서 사업주무부서의 담당자가 객관적인 틀에서 간편하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그 결과를 배포한 바 있음. 2022년도에도 비용산정 방법과 단가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함.

2) 비용 정의 및 자료

- 재정투자사업 비용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초기 투자비)와 운영 기간에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운영비의 합을 말함.

[표 1] 총사업비와 운영비의 정의

| 구분 | | 내용 |
|------|---------|---|
| 총사업비 | 재정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토목, 건축공사의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으로 구성 |
| | 민간 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 |
| 운영비 | | 운영비는 시설완공 이후 운영 기간에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 |

- 투자심사는 도로, 철도, 보건, 복지, 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건설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으로 구분되며, 건설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사업유형과 실적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 사업의 유형별 실적 자료

| 사업유형 | | 실적자료 발표기관 |
|------|-----------------------------------|--|
| 토목사업 | 도로, 철도, 단지(부지), 항만(여항) 등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 단가 등) |
| 건축사업 | 청사, 주차장,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 조달청 및 한국 조달연구원(실적단가 등) 서울특별시 기술 심사담당관실(실적 단가 등) 한국감정원(건물신축단가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실적자료 등) |

2. 비용산정 방안

- 건설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시설부대경비)로 구분됨.
 - 총사업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사 종류별 공사비로 나누어지며, 보상비는 토지매입비와 기타 보상비로 구분됨.
 - 토목사업은 유지관리비를 적용하고, 건축사업은 운영관리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로 산정함.

[표 2] 비용의 구성 체계

| 비용 | 총사업비 | 공사비 | 토목 |
|----|-----------------|-------------|---------------|
| | | | 건축 |
| | | | 가계 |
| | | | 전기 등 |
| | 용지보상비 | | 토지매입비 |
| | | | 기타 보상비 |
| | 부대비 (시설부대경비) | | 조사비 |
| | | | 설계비 |
| | | | 감리비 |
| | | | 시설부대비 |
| | 운영비 | | 인건비 |
| | | | 제경비 |
| | | | 유지관리비 |
| | | | 수선보수비 및 점검비 등 |
| | |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 | |

주) 재정사업의 도로, 철도 등 토목사업에는 유지관리비만 적용함

- 건설비용의 추정 방법은 제공된 시간과 인력투입의 한계성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추정 방법과 세부적인 추정 방법으로 구분함.
- 참고로 개략적인 추정 방법은 본 비용산정기준을 이용하여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세부적인 추정 방법은 용역 등을 통하여 외부의 지원을 받아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함.
- 본 연구는 개략적인 비용추정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의 단가 및 분석 절차 등을 제시하였음. 사업의 유형이 결정되면 해당 사업의 비용산정 절차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재정사업의 비용을 간략하게 추정할 수 있음.

[표 3] 건설비용의 추정 방법

| 구분 | 단계 구분 | 비고 |
|------------|--------------|----------------|
| 개략적인 추정 방법 | 예비 건설비용 추정단계 | 사업추진부서 |
| 세부적인 추정 방법 | 확정 건설비용 산정단계 | 외부 전문가 / 기관 위탁 |

3. 비용산정 유의사항

- 건설비용 비용산정의 기준연도는 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하는 년도 또는 전년도로 기준으로 함. 비용의 적용단가는 투자심사 의뢰 단계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비용/용량법 개념으로 공사 종류별로 체적, 면적 연장 등의 단가를 제시함.
- 비용산정 기준에서 제시한 단가보다 신뢰도가 높은 단가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이용함. 단, 기반 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등에서 제시한 단가와 같이 세금(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을 부과하기 위하여 제시된 단가는 이용하지 않음.
- 공사비는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본 비용산정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용단가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설계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함.
 - 일반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단가 산출서와 일위대가를 이용하여 순 공사비를 산정하고 원가계산을 통하여 산정함.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함.
- 보상비에서 토지매입비는 기회비용 개념으로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등 실제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도,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매각을 통해 금전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 그러나, 기존 목적과 동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즉, 재건축이나 증축의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진단과 보정수요 발굴에 관한 연구

- 교통관리비 밀도조정 및 공항·항만수요 중심으로 -

■ 박찬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인천시의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 지역 특성 등을 진단하여 특수한 재정수요의 발굴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 이를 위해 인천시의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재정현안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인천시의 경제·사회·문화·기타 물적 측면 등의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 특수 재정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였음.
-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2.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진단

1) 기준재정수요

- 주민1인당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인천시가 0.31백만 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적으며 부산(0.41백만 원), 대구(0.48백만 원)와 비교하여 적은 편임.
- 인천시의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 규모가 가장 적게 산정되는 것은 주민 1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이 광역시 중 가장 적게 산정되는 반면 주민 1인당 기준재정수입액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게 산정되기 때문임.
- 이는 결국 인천시의 재정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 발생 항목이 발굴되어 기준재정수요 산정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2) 기준재정수입

-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보면 인천시 기초수요 측정 항목 중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농업비, 임수산비, 교통관리비의 보정계수 값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음. 이와 같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보정계수 값이 낮은 것은 이들 측정항목에서 인천시의 표준행정수요가 적게 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들 항목은 표준행정수요 산정시 인구수, 행정구역면적(관련 면적) 등이 활용되고 있어 인천시 통계값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요가 덜 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수요가 덜 산정되었다는 의미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산정된 수요액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수요액이 많이 산정되었더라도 통계값이 충분히 반영되어 산정되지 못했다는 의미임.

3) 보정수요

- 인천시의 보정수요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대부분 높게 반영되어 있음. 지역균형수요는 15개 측정항목 대부분 높게 반영되고 있으며, 지역관리수요는 15개 항목 중 인천시에 해당하는 항목은 14개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으며 월등함.
- 사회복지수요 역시 인천시에 해당하는 항목 수는 9개로 부산 다음으로 많이 반영됨. 시책수요의 반영항목은 11개 중 인천시 해당하는 항목 수는 9개로, 광역시 중 가장 많이 반영됨.

3. 보정수요 발굴

1) 교통밀도 조정방식

- 인천시의 경우, 기초수요를 산정하는 표준행정수요 산정의 회귀식에 활용된 등록자동차대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자치구)이 작아 발생한 원인으로 보임.
- 그 원인은 행정구역면적이 작은 영향이지만, 이는 자동차밀도가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어 현행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밀도 보정이 필요함.
- 밀도보정은 인천시만의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동차밀도가 높음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행·재정수요(교통관리 경비 지출의 체증)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보정방식

- 기초수요로 반영하기 어려운 교통관리비의 보정은 지역균형수요로 반영함이 적정함.
- 기초수요 교통관리비 측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수요에 자동차밀도의 측정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수요보정 방식은 (자동차밀도 × 자치단체별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의 10%(가중치))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교통관리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경비지출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도록 함.

2) 공항·항만수요의 보정

○ 필요성

- 첫째, 공항·항만은 국가 또는 광역차원의 기간시설이지만, 해당시설이 입지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 또는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발생함.
- 둘째, 공항·항만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환경보호의 재정수요를 발생시킴.
- 셋째, 공항·항만의 편익은 전국적 또는 광역적이지만 교통유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에 대응하는 재정부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됨.
- 넷째, 공항·항만이 운영됨에 따라 항공기와 선박을 매개로 하는 외부불경제가 야기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비용은 항만과 공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측면에서 공항과 항만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하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짐.

○ 보정방식

- 지역균형수요에 '공항·항만지역'의 측정항목을 신설하여 공항·항만이 입지한 자치단체의 교통관리비를 보정함
- 수요보정 방식은 공항·항만의 화물량과 여객수를 반영하여 산정함
- 산정방식은 (화물량 × 자치단체별 화물 1톤당 교통관리비 평균 표준행정수요의 10%) + (여객수 ×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교통관리비 평균 표준행정수요의 10%)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공항·항만은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경비지출이 많음을 고려하여 수요산정액의 70%는 시도, 30%는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도록 함.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 박찬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심사 여건에 맞는 경제성 분석 수행 방법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개념과 현행 투자심사 제도에서 경제성 분석의 의미를 살펴보고, 인천시 및 타 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성 분석 수행현황 및 검토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함.

2. 결론 및 제언

1) 사업 수요 중심의 타당성 검토 강화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수요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예상 수요 및 유사 시설 수요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권고함.
 - 편익 산정에 한계가 있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사업 수요에 대한 의견을 비중 있게 다루도록 함.
- 단기간 내 분석이 가능하도록 중력모형 방법 등 간소화된 수요예측 방법의 적용 및 방법론 보완 연구수행이 필요함.
- 심사의뢰서의 통계자료 및 유사시설 내역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요시설 현황 및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함.

2) 사업부서 타당성 조사 자문 및 검증 확대

- 사업부서가 제시하는 경제성 분석 결과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자문 및 컨설팅 지원을 제도화함.
-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사업이나 별도의 설문조사와 같이 일정 기간의 연구수행이 필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중심의 타당성 재검증 연구를 수행함.

3) 다양한 유형으로 경제성 분석 적용 확대

-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이 높고 기존 사례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편익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적용함.
 - 사업 수요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체육시설, 관광·체험·전시시설의 경우 사업 수요에 기반한 편익 산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의 부록에 분석 사례를 제시함.
 - 가용자료 등의 문제로 단기간 내 적용이 어려운 방법은 기존 타당성 조사에서 사용된 수치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분석 사례를 축적하여 일반화된 기준을 만들어 나감.
- 투자심사 빈도가 높고 경제성 분석 필요성이 높은 사업유형은 내부적인 분석 기준을 정하여 활용하거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내부적인 분석 기준을 마련한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용 엑셀 파일 등을 작성하여 투자심사 여건에 맞게 운용함.
 - 이 경우 심사의뢰서 작성 교육, 사전검토 등을 통해 분석에 요구되는 기초통계 자료를 심사의뢰서에 포함하도록 권고함.

4)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간접효과도 편익에 포함

- 지역 사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간접효과는 편익 산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전시·관광 시설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시설이용 편익 뿐 아니라 지역경제 기여 또는 관광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편익에 포함함.
- 향후 사업유형별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지역 사업 및 공공사업의 관점에서 편익에 포함해야 하는 간접효과에 대한 식별 및 계량화 연구가 필요함.

5) 지불의사에 기반한 편익 산정 방식 적용

- 당장 기존 연구문헌의 WTP 추정치를 간편법으로 활용할 때 적용 기준의 일관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기존 연구의 WTP 추정치는 준거시설 대비 사업추진 여건과 특성 및 내용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사전 사례조사를 통해 취사선택의 편익을 줄이도록 함.
-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인천시민의 지불의사 추정이 필요하며, 지역 사업에 대한 기존 CVM 조사 방법에 의한 편익 추정의 한계를 개선하는 편익 산정 방식 연구가 필요함.
 -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구분하여 지불의사를 조사하는 등 영향권 범위 설정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이용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편익 추정 방법의 고안이 필요함.

6) 분석 결과의 제시 및 활용도 개선

- 투자심사의 심의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값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누락된 편익 항목 등 분석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해야 함.
 -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과도한 수요 예측이나 운영 시 재정부담 증가 등과 같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검토의견에 이를 강조함.
- 사업유형별 편익 산정 방법의 차이를 감안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향후 분석 결과를 DB화하여 유사 유형별 평균 수치와의 비교 등을 제시함.

인천시 공단의 경영성과 분석 및 사업다각화 방안

■ 박찬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공기업으로서 공단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 수단인 동시에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조직으로서 그 역할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법률적으로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중시 정책에 따라 운영수지의 중요성도 증대됨.
 - 최근 인천시설공단과 인천환경공단은 비록 회계상 수치이지만,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수년간 고착화된 사업구조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인천광역시 산하 공단의 경영성과를 타 지자체 공단과 비교 분석하고, 각종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결론 및 제언

1) 인천광역시 공단의 경영성과 분석

- 인천광역시 공단의 영업수익은 다른 광역지자체 공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으며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최근 10개 광역자치단체 공단의 연평균 영업수익 증가율을 비교하면, 인천시설공단이 41.8%로 가장 높고, 인천환경공단도 39.3%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인천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의 최근 5년 연평균 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부채증가율은 다른 공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인천환경공단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다소 높은 편임.
- 지방공단의 재무상태표에는 부채가 계상되어 있지만, 해당 부채는 대행사업비용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으로서 경영상 문제가 아님.
- 특히, 부채비율은 공단 자산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지방공단이 자체적인 자본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함.

2) 지방 공단의 사업다각화

- 지방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다각화는 민간 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 내·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
- 공기업 활동에 의한 파급효과가 민간기업 활동에 의한 파급효과 보다 크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사업다각화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단의 사업다각화 추진유형을 사업대상과 사업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대상 확장형’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다각화 방안을 제안함.

[표 1] 지방공단 사업다각화 추진유형

| 구분 | 기존 기능/제품 | 신규 기능/제품 |
|----------|----------|----------|
| 기존 대상/시장 | 강화형 | 기능 확장형 |
| 신규 대상/시장 | 대상 확장형 | 개척형 |

3) 대상 확장형 사업다각화 방안

- 인천시설공단이 가장 먼저 새로운 대상인 공공시설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인천시의 각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임.
- 현재 인천시 부서에서 직접 또는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 특히, 현재 인천시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유지관리 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의 주체를 민간에서 공단으로 전환한다면, 공단이 효과적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음.
 - 민간위탁을 공단위탁으로 전환하는 기준은 예산절감, 관리의 효율성 등이 될 수 있음.
 - 또한, 대상 확장형 사업다각화는 현재의 사업대상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사업대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리적 위치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환경 관련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능으로 전문화된 환경공단이 일반 공공시설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환경공단의 사업대상 확장도 환경관련 공공시설물로 제한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인천환경공단이 대상을 확장하여 사업다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의 영역을 단순 환경에서 에너지,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으로 개념적 확대가 필요함.
 - 즉, 과거 환경의 개념은 상하수도, 폐수, 대기오염, 폐기물, 쓰레기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현재 환경의 개념은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환경관련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념도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음.

4) 개척형 사업다각화 방안

- 인천시립도서관(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의 인천시설공단 위탁
 -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의 소유권은 인천시에 있으며, 인천지식정보센터(주)는 건물 준공 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인 2029년 1월까지 무상사용하는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음.
 -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도서관시설의 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인천시에 이양해야하기 때문에, 인천시설공단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의 공단위탁
 - 가로등과 같은 도로조명은 시민과 도시를 연결하는 스마트 인프라로서, 도시인프라(신호등주·가로등지주·CCTV지주·보안등주)에 공공와이파이, IoT, 지능형 CCTV, 전기충전, 자율주행 등을 함께 운용하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공단의 통합관리가 필요함.
 - 인천시도 2022년 4월 하나의 폴(Pole)에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스마트폴 구축 시범사업에 3개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함.
- 인천광역시 공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진출

- 인천광역시 공단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진출하여 충전소가 확대된다면 전기차의 보급도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광역시 공단 입장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통해 공단의 재원을 일정부분 자체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즉, 인천시의 전기차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충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마련하여 공단에 위탁한다면, 공단은 전기판매 수익을 창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임.
- 인천광역시 공단의 스마트쉘터 사업진출
 -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는 향후 많은 스마트 쉘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설의 통합관리의 주체는 공단이 적절함.
 - 특히, 스마트 쉘터는 시설물로서 유지관리에 예산이 투입되지만, 광고물로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인천광역시 공단의 상수도 지원 사업진출
 -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의 원격검침 확대 정책이 맞추어 검침업무의 전문성 강화 효과를 기대함.
 - 인천광역시 공단의 새로운 수입원으로서 전문기관화가 가능하고 수도민원의 현장 대응력이 향상될 수 있음.

5) 인천광역시 공단의 공사 전환 가능성

- 일부 지자체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고 있으나, 대부분 도시공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도시공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에는 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더욱이 인천시는 공사로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교통공사와 관광공사도 설립·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의 공사 설립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
- 인천시설공단의 사업내용을 고려한다면, 공사로 전환하면 오히려 재정적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인천시설공단에서 자체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임.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 박찬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는 매년 다양한 지방재정투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효과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인천시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에는 사업 준비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다수 있음.
- 이에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내용과 실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미비점을 사전에 간파하고 그것을 개선한 ‘완전하고 종합적인 사업’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아울러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인천시 투자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금보다 나은 형태와 방식으로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둘째,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역할과 방법을 모색하면서 기구의 발전방안을 강구함.

2.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1) 투자심사 결정 사유의 표준화·정형화

- 인천시 지방투자심사제도의 심사 결정 방식과 내용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투자심사 결정 사유를 표준화·정형화하고, 투자심사 검토 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함.
- 유형별 투자심사 판정 사유의 주요 관점을 분석하여, 향후 투자심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유형 1: 투자심사 유형화 요소 중에서 비교적 단순명료하게 사유를 뒷받침해 주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합리성을 지니는 것임.
 - (1) 법률 및 사전절차 (준수), (2) 국가/상위계획 연계, (3)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5) 이전재원 지원, 국비·시비 확보, (6) 공유재산 관리, (7) 직전 투자심사 결과
- 유형 2: 투자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나 판단사항을 통해 명확히 어떤 상태나 수준으로의 변화(수정, 보완) 조치를 요구하거나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임.
 - (10) 사업(시설) 규모 적정성, (11) 사업 내용(콘텐츠) 구체화, (12) 총사업비(사업비용) 객관적 산정, (14) 세부(구체적) 운영계획 수립, 입지/안전성/리모델링
- 유형 3: 유형 1과 유형 2의 중간적 성격을 지님.
 - (4) 자체재원 조달(능력), (6) 지방채 발행, (7) 가용재원 (범위 내), (8) 경제성/경제적 타당성 점검, (9) 재무적 수익성 (점검/ 확보), 운영수지, (15) 유사 시설 점검(참고)

2) 투자심사 결정 사유에 대한 개선방안

- 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투자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하도록 함.
- 투자사업의 특성상 민간기능이 많이 포함되고, 사업 운영의 경영수지가 중요한 경우에는 투자심사 이전에 재무성 분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관계 공무원, 인천공투센터, 투자심사위원 등이 함께 논의한 투자심사(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서 또는 팜플렛 형태로 발간해서 공유함.

3)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인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풀(pool)을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 조건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분과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현행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과 결정 사유 및 내용의 표준화정형화 노력이 필요함.

3. 인천공공투자센터의 성과와 발전방안

1)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성과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이 반영된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하고 있음.
- '19~'22년 기간 중 총 177건의 사업 중 심사의뢰서에 B/C가 제시된 비중은 11.3%에 불과한데 비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B/C를 산정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시한 비중은 24.8%로 객관적인 수치자료를 상당 부분 보완하여 제시함.
- 투자심사 사업의 사업비 산정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설립 이후 매년 비용산정 기준 연구를 수행하여 총사업비 산정 방법과 토목 사업 및 건축 사업의 유형별 공사비 단가 등을 제공하고 있음.
- '19~'22년 기간 센터에서 검토한 233건의 사업 중 60.7%에 달하는 139건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재산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센터 설립 이전에는 90% 이상이었던 적정 또는 조건부 사업승인 비율이 센터 설립 이후 80% 대로 약 10%p 가량 감소하였으며, 센터설립 이후 투자심사 제도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지난 4년간 4,901억원의 재정이 절감되었음.
- 그 외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의뢰서 작성의 충실성 제고, 인천시 대규모 사업 추진 지원, 인천시의 민간투자 사업 추진 지원,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 지원 등의 성과를 보임.

2)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발전 방안

- 센터의 운영과 위상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거나 인천시 내규 등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 다양하면서도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센터의 인력이 지금보다 일정 수준 보강될 필요가 있음.
- 센터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등 품질 강화 및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선도기구로서 실용적으로 검토, 분석, 진단, 대안 제시를 통해 관련 정책을 선도하는 기구로서 독자적 위상 정립을 모색해야함.
- 국내 최고 수준의 외부 전문가 풀(pool)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과의 상호 학습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함.

인천 신항 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 박찬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 신항 진입도로는 송도 국제도시 11공구 개발구역을 통과하는 간선축으로 송도 11공구 매립공사가 완료되고 공동주택, R&D 및 연구단지, 바이오단지 등이 입주하면 각종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는 신항 진입도로 하부에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 인천 신항 진입도로는 신항으로 진입하는 대형 물류 차량이 9개의 교차로 통과해야 함에 따라 제어 지체로 통행시간이 증가함.
 - 인천 신항 진입도로에 인접한 11공구 개발구역에 공동주택 입주시 화물차량과 일반차량의 혼재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 주변에 화물차량으로 인한 소음, 대기질 등 악화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인천 신항 지하도로 건설 사업(L=4.26km, B=20m, 왕복4차로)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성 평가 항목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제시해야 함.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19.5)」에는 정책효과 항목으로 생활여건 영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효과에 대한 계량화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사용한 지불의사(WTP) 추정을 통해 인천 신항 지하도로 건설 사업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함.
 - 분석 결과를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효과 근거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분석 내용

1) 분석방법

-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생활여건 개선 효과는 비시장적 가치(non-market value)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추정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에도 활용되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사용해 생활여건 개선 효과를 계량화함.
- 생활여건 개선효과의 수혜대상은 ① 신항 진입도로 인접 주거 및 상업시설 입주자, ② 신항 진입도로 인근 지역 종사자(인접 시설 이용자)로 설정하고 CVM 방법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를 위한 가상의 상황은 ①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본 사업 추진시 추가적인 분양가 지불의사, ② 인근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지불의사로 구분하여 질문함
 - 조사 문항 설계시 본 사업의 편익과 중복되지 않도록 인근 지역 생활여건 개선 효과에 국한함.
- 조사개요
 - 조사방법 : 1:1 개별면접조사
 - 조사대상 : 만 19세~69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지역 주민 및 직장인
 - 조사기간 : 사전조사 - 2022.10.18.~11.06. / 본조사 - 2022.11.11. ~ 11.23.
 - 표본추출 : 송도지역 주민 및 직장인 랜덤 표본. 사전조사 200명, 본조사 1,000명.
- 지불의사 및 생활여건 개선 효과 추정
 -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조건부로짓모형을 추정하고 각각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산함.
 - 지불의사금액에 해당 구역에 인접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입주물량, 송도11공구 종사자수 추정치를 적용하여 생활여건 개선 효과를 추정함.

2) 분석결과

- ①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61.2만원/㎡의 추가적인 분양가 지불의사가 있으며, ② 인근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1인당 103,644원/년의 추가적인 세금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불의사 추정치를 토대로 생활여건 개선효과의 총량을 기증하기 위해 송도 11공구 개발계획을 토대로 신항 진입도로 인접 주거 및 상업시설 총 공급면적을 추정하면 2,387,924㎡으로 나타남.
- 인근 시설 이용자는 본 사업 노선이 포함된 송도 11공구 종사자로 간주하고, 기 개발된 송도 경제자유구역 면적대비 종사자수를 토대로 송도 11공구 종사자수를 추정하면 29,067명 수준으로 예상됨.
- 최종 분석 결과 ① 사업노선 인접 입주자 지불의사 총액은 1조 729억원 ② 인근 이용자 지불의사 총액은 626억원으로 본 사업의 생활여건 개선효과는 총 1조 1,355억원으로 추정됨.

[표 1] 인천 신항 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생활여건 개선 효과 추정 결과

| 구분 | WTP | 지불거부 제외 | 총액 추정 요인 | 총액 |
|-----------|----------------|-------------|-------------------------|--------------|
| 인접지역 입주자 | 61.2만원/㎡ × | (1-26.6%) × | 인접 구역 공급면적 2,387,924㎡ | = 10,729억원 |
| 인근 시설 이용자 | 103,644원/명,년 × | (1-30.7%) × | 인근 지역 종사자 29,067명 × 30년 | = 626억원 |
| 합 계 | | | | : 1조 1,355억원 |

3. 결론

- 인천 신항 진입도로를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본 사업은 송도 국제도시 11공구를 관통하는 대형 화물통행으로 인한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으나, 이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산정 항목에 대부분 누락되어 있어 사업 타당성 검토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통해 생활여건 개선효과를 추정한 결과 총 1조 1,355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예타 지침상 이러한 효과를 편익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정책성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사업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지 활용방안

■ 배덕상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글로벌캠퍼스(IGC) 2단계 부지 활용 방안 검토라는 경제청의 연구 요청사항, 기존 사전조사 용역 결과의 제한점, 인천글로벌캠퍼스(IGC)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 ① IGC 2단계 사업 추진안의 학생수요 예측값 및 사업비 분석
 - ② 3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 제시
 - 대안1: 기존안(2단계 부지에 5개 대학 추가 유치를 위한 시설물 건립). 만약, 5개 대학 추가 유치 불가 시 건립될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입주한 대학의 정원을 확대
 - 대안2: 기존안 축소 및 폐지. 대안으로, 2단계 부지에 R&D센터 건립
 - 대안3: 기존안 폐지. 대안으로, 2단계 부지를 타 용도(인천대에 제공)로 활용

2. 2단계 부지 활용 대안 비교

1) 대안1

- 대안1은 인천글로벌캠퍼스 1단계 및 2단계를 합쳐 학생 수 10,000명의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임. 이 안은 현재 인천경제청의 계획안임.
- 이러한 시설만 증대시키는 전략은 아직까지 수용률 대비 재적학생 70% 수준으로써 비활성화된 1단계 입주 대학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시설 증대 전 1단계 입주 대학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

2) 대안2

- 대안2는 추진 법적 이슈가 있음. 우선, 중앙정부(산업부,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함. 또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법 제한을 완화(인근 부지 참조할 때 용적률 300% 확보)해야 함.
- 기술개발센터 건립을 통해 산업체가 입주 시, 1단계 입주 대학과 기술개발센터에 입주한 기업간의 유기적 융합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음. 이는, 1단계 입주 대학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3) 대안3

- 대안3 또한 추진 법적 이슈가 있음. 우선, 대토 관련, 중앙정부(산업부,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함. 대토 시 토지 교환 가격 기준 설정 관계자 협의가 필요함. 대안2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센터 건립 및 분양을 위한 공법상 제한 완화가 필요함.
- 대안3의 사업구조는 대안2와 동일함. 따라서, 재무적 타당성은 대안2 참조.
- 인천대는 해외대학 네트워크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1단계 입주 대학과 산학연 협력이 용이하며,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2단계 부지 해외 대학 유치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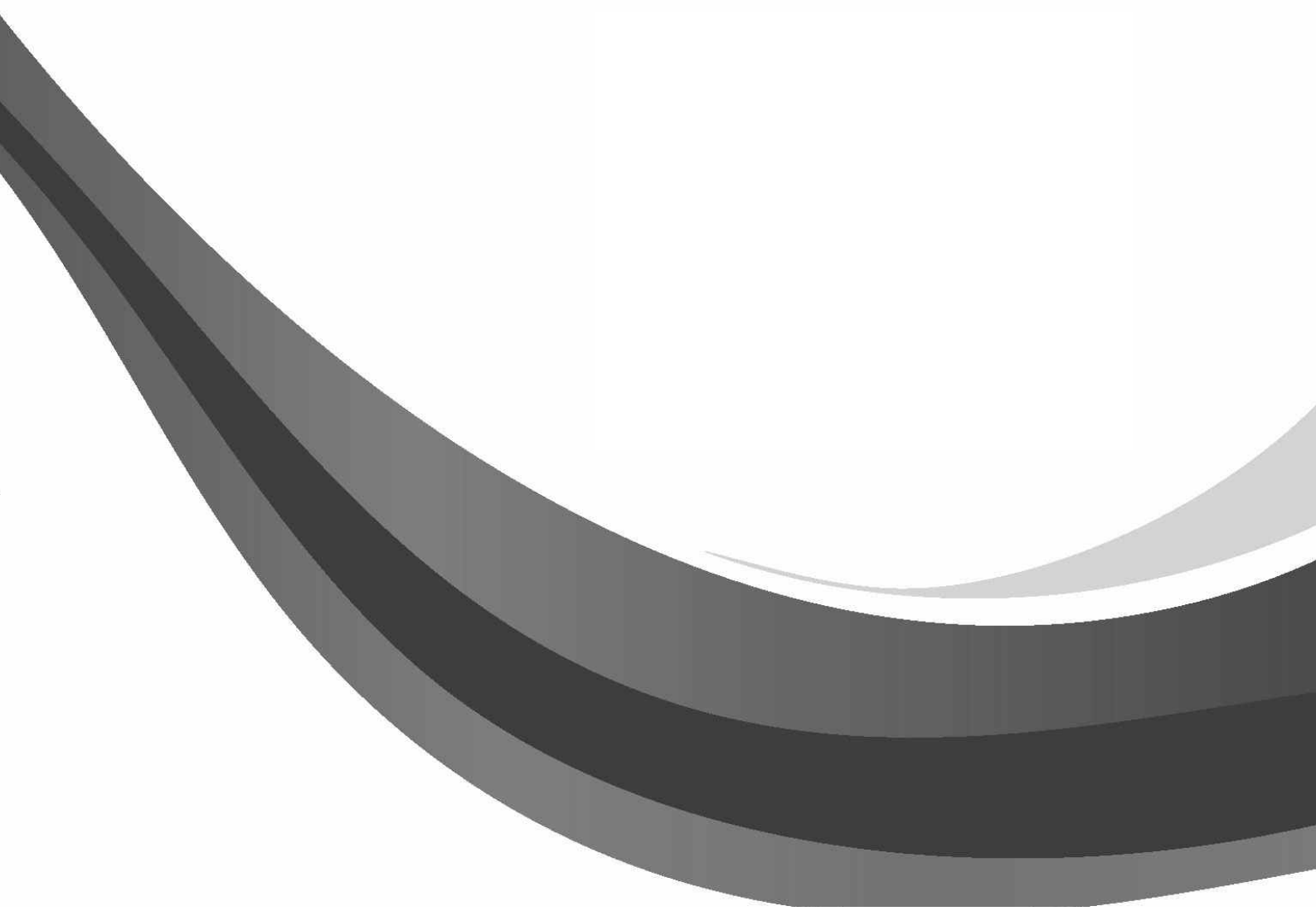
[표 1] 대안 비교

| 구분 | 대안1 | 대안2 | 대안3 |
|--------------------|--|--|--|
| | 10개 대학 학생10,000명 | 기술개발센터 건립 | 인천대학교에 대토 |
| 대안 추진 법적 이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 계획에 맞춰 시설물 건립 • 추진 법적 제한 사항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법상 제한으로 현재 부지에는 학교만 건립 가능함. • 공법 제한 완화를 위해 산업부, 교육부 등의 승인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지와 인천대학교 11공구 부지 간 대토를 위해 산업부, 교육부 승인 필요 • 토지 교환 가격 관련 이해관계자간 협의 필요 |
| 시설물 건립 사회적/재무적 타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수용 대비 재적 학생 수가 70%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단계 사업의 사회적 경제성은 확보 불가한 것으로 보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 가능 • 토지불하면적비율 50%, 분양율 100% 시 경제청의 실질적 이윤은 96억원, 토지불하면적비율 75%, 분양율 100% 시 실질적 이윤은 144억원으로 추정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동 |

| 구분 | 대안1 | 대안2 | 대안3 |
|---------------|--|---|---|
| | 10개 대학 학생10,000명 | 기술개발센터 건립 | 인천대학교에 대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송도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경기 양호하며 분양가가 사례 대비 적정 수준이므로 현 수준에서 분양은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임. | |
| 1단계 입주 대학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구도로써는 불가함. • 1단계 입주 대학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부지에 연구개발센터가 조성됨으로써 입주 업체와 1단계 입주 해외 대학간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기반 형성될 수 있음. • 이러한 산학연네트워크는 입주 대학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대는 기 구축된 해외대학 네트워크 및 비교적 규모있는 연구 인적 자원 및 인프라 보유 중 • 이러한 환경은 1단계 입주 대학 활성화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 유치에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 이해관계자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은 원안 추진 환영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경제청 등은 인천글로벌캠퍼스를 2단계까지 추진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은 대안3에 추진시 반대할 가능성 있음. • 인천경제청의 2단계 시설 조성 관련 자원 절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은 대안3에 추진시 반대할 가능성 있음. • 인천경제청은 11공구 매각 등으로 자원 확보 가능한 이점 발생 • 인천대는 1단계 입주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할 수 있는 기반 확보1 |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학술행사·국제교류·정책간담회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국내 학술행사

- 2022년 미래산업연구단 기획세미나 (1~4차)
- 2022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성과 공유 토론회
-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정기총회 및 공동연구발표회
- 2022 도시정보 콜로퀴움 (1~4차)
-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5~6회)
- 도시연구세미나 (22~23회)
- 한국ITS학회 2022년도 국제학술대회 인천연구원 세션
- 2022년 인천지역 공공분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세미나
- 2022 아시아 태평양 혁신 콘퍼런스 인천세션
- 2022 DMZ 국제포럼 인천세션
- 2022 인천미래정책포럼
- 2022년 인천-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공동세미나
- 2022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1~4차)
- 2022 인천기후환경포럼 (1~4차)
- 2022 황해평화포럼 분과회의: 정책세미나
- 2022 인차이나클러스터: 중국 전문가 회의 (1~10차)

2022년 미래산업연구단 기획세미나 (1~4차)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연구원은 2022년 미래산업연구단을 구성하여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경제, 기술,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는 산업별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임직원 대상 세미나 개최를 통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과 토론을 겸하여 인천의 미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월 12일(수) ~ 1월 19일(수) [총 4회]
 - 1차 : 1월 12일(수) 14:00~16:00, 대면회의 + 화상회의 병행
 - 2차 : 1월 12일(수) 16:00~18:00, 화상회의
 - 3차 : 1월 14일(금) 14:40~16:40, 화상회의
 - 4차 : 1월 19일(수) 15:00~17:00, 화상회의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및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미래산업연구단

■ 발표 및 토론

- [1차] 이상진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혁신기획본부장)
 - “디지털 빅푸쉬 전략과 산업 디지털 촉진법이 여는 산업경제의 미래”
- [2차] 이성호 (이노디랩 대표이사)
 - “디지털 전환의 발전 현황 및 핵심 역량”
- [3차] 김성우 (김안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탄소중립과 ESG”
- [4차]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산업부문 현황과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2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성과 공유 토론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 2021년 연구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성과 전시회 및 발표회를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개최함.
- 이를 통해 시민들과 더불어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지식공동체 핵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발표회] 2022년 1월 20일(목) 13:00~14:00 - 온라인 생중계
[전시회] 2022년 1월 20일(목) ~ 2월 4일(금) - 16일간
- 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
- 주제 : “시민과 함께하는 2021년 연구성과 및 2022년 연구방향”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의회
- 주관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의회(입법정책담당관)

■ 발표 및 전시

□ 역점연구과제 발표

- 발 표 1 : 채은경 (인천연구원 전략분석팀장, 연구위원)
- “2022 인천 아젠다 30”
- 발 표 2 : 배은주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시 도시회복력 증진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발 표 3 :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인천시 도시공간 조성방안”
- 발 표 4 :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 “팬데믹 시대 장애인 자녀 돌봄의 변화”

- 발 표 5 : 윤석진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탄소중립 전환기 인천시 그린뉴딜 정책의 이슈와 제언”
- 발 표 6 : 한 준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발 표 7 :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선임연구위원)
- “그린뉴딜을 위한 자연환경 및 공원녹지 분야 정책 수단 개발”

□ 전시내용

- 인천연구원
 - 연구보고서(기초, 정책, 기획, 수탁) 및 단행본(역점과제, 인문총서, 학술지)
 - 이슈브리프, 인포그래픽스, 카드뉴스, 뉴스레터, 한중DB, SNS
 - 동영상(연구과제/학술행사/기관홍보), 리플렛(연구원 소개 + 전시 프로그램)
- 시의회
 - 의원연구단체별 활동소개 전시패널
 - 2021년 연구연구단체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021 정책소통 페스티벌 행사 동영상

〈행사사진〉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정기총회 및 공동연구발표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는 인천 관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중 정책연구 기능 또는 연구수요가 있는 총 15개 기관이 모인 공동연구 협의체임.
- ICReN 회원기관들은 2022년 총회를 통해 2021년 운영성과 점검 및 회칙 제정, 2022년 공동연구사업 등을 논의하고, 2021년에 수행한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10:00~11:40
- 장소 : 비대면 화상회의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의결 및 발표

□ 보고/의결 안건

- ICReN 2021년 운영성과
- 회칙 및 연회비
- 2022년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사업
 - 개항장 관광콘텐츠 육성 방안 연구
 - 인천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 특허정보를 활용한 인천 산업 기술융합 및 기술협력 분석

- 인천광역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 프롭테크(드론, GIS 등) 활용한 인천 도시재생사업 아카이빙 협업
-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시 정책지원 방향 설정
- 인천시 ESG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 데이터 공동 활용

□ 2021년 공동연구 성과발표

- 발 표 1 :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와 정책 방향”
- 발 표 2 :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부장)
 - “문화정책 기획연구: 구도심 문화적 활성화 연구”
- 발 표 3 : 이예진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초등돌봄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 발 표 4 : 유 비 (인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행사사진〉



2022 도시정보 콜로кви움 (1~4차)



■ 행사 목적 및 성과

-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이 점차 일상화되고, 정부도 공공데이터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간 연계 등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도시정보 콜로кви움은 도시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최신 빅데이터 기술 동향 등을 통해,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 5월 11일(수) [총 4회]
 - 1차 : 3월 23일(수) 10:00~11:30
 - 2차 : 4월 06일(수) 10:00~11:30
 - 3차 : 4월 26일(화) 14:00~15:30
 - 4차 : 5월 11일(수) 10:00~11:30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 “BIG-DATA와 도시”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 발표 및 토론

- [1차]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 “AI 데이터 경제 시대의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거버넌스”
- [2차] 김태현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장)
 - “빅데이터와 공간계획의 과제”
- [3차] 김영철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 “스마트시티를 위한 도시분석”
- [4차] 최준기 (KT AI/BigData사업부 본부장)
 - “AI 및 Bigdata 기반 Digital Transformation: KT사례 중심”

도시연구 공모논문 발표회 (5~6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연구원 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회는 신진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논단 원고를 공모하고, 심의를 통해 연구결과가 주목되는 논문의 학술발표회를 실시함.
- 이를 통해, 신진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의 도시연구에 관한 관심과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발표 및 토론 과정을 통해 최신 연구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학술지 『도시연구』 기획논단 원고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제5회] 2022년 4월 8일(금) 10:00~12:00
[제6회] 2022년 10월 7일(금) 10:00~12:00
- 장소 : 온라인 영상회의 [패널 화상회의 + 온라인 생중계]
- 주제 : [제5회] “이주민의 도시”
[제6회] “초고령사회와 도시”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제5회

- 발 표 1 : 박준영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 “이주와 기업의 스케일 확장과 교차
: 다단계 판매업에 참여하는 중국계 이주자를 중심으로”
- 발 표 2 : 남수연 (성결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조교수)
- “이주노동자의 시공간적 주거경로에 따른 주택품질의 변화”

- 발 표 3 :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 부연구위원)
김수경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김희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귀화 이주민의 계층상승 기대감과 문화적응 태도에 대한 연구”
- 지정토론 : 이성호 (경상국립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
김호기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
최영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 제6회

- 발 표 1 : 도화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과 영향요인 분석”
- 발 표 2 : 조인호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 형평성에 관한 연구”
- 발 표 3 : 안상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 “코로나19 시기에 노인 1인 가구의 정신건강은 정말로 악화되었는가?”
- 지정토론 :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행사사진〉



도시연구세미나 (22~23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도시연구세미나」는 행·재정 및 도시계획, 환경, 교통물류, 사회문화 등 도시 관련 전 분야를 주제로 최신 이론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관련 연구자 및 관계기관 실무담당자, 현장 활동가를 섭외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는 학술행사로 연 2회 개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대학 교수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과정에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학술지 『도시연구』 기획논단 원고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제22회] 2021년 4월 8일(금) 14:00~18:00
[제23회] 2021년 10월 8일(금) 14:00~18:00
- 장소 : 온라인 영상회의 [패널 화상회의(Zoom) + 온라인 생중계(Youtube)]
- 주제 : [제22회] “이주민 도시의 문화와 제도”
[제23회]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제22회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김기화 (인하대학교 아동복지학 박사)
- “결혼이주여성 공동체의 상호문화 실천과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 발 표 2 :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 연구위원)
-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발 표 3 :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 부연구위원)
- “지방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개편방향 연구”

- 지정토론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연구위원)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23회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안지연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전임연구교수)
- “성찰적 도시공동체 속 노년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 나이듦’의 가능성 연구”
- 발 표 2 :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종사자 인식에 대한 연구”
- 발 표 3 :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 혁신’ 추진방안”
- 지정토론 : 김향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교수)
이용갑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정덕영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부센터장)

〈행사사진〉



한국ITS학회 2022년도 국제학술대회 인천연구원 세션



■ 행사 목적 및 성과

- 미래 스마트시티를 위한 다양한 기술 및 연구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ITS학회가 개최하는 2022년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함.
- 인천연구원 주관 특별세션에서 인천광역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인 I-MOD 버스의 역할 정립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고,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유도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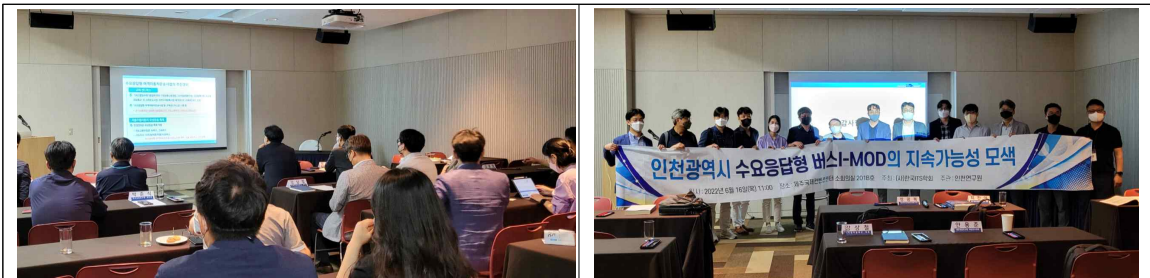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6월 16일(목) 11:00~12:20
-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회의실 201B
- 주제 : “인천광역시 수요응답형 버스(I-MOD)의 지속가능성 모색”

■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황윤식 (㈜브이유에스 대표)
 - “수요‘응답’보다 ‘분석’과 ‘전략’이 중요하다”
- 발 표 2 : 강상철 (㈜지앤티솔루션 대표)
 - “지역별 수요응답형 서비스 비교”
- 토론사회 : 이용재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 지정토론 :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최찬영 (SKT Telco Data Biz Team 부장)

〈행사사진〉



2022년 인천지역 공공분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세미나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2022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지역 공공기관 특화 ESG 경영’ 수립 제언 및 이행실적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28일(금) 14:00~17:50
- 장소 : 미추홀타워 20층 미추홀관
- 주제 : “인천지역 공공분야 ESG 경영 활성화 방안”
- 주최 :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주관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ESG 교육 전문가 세미나

- 강 연 자 : 한규훈 (IBS컨설팅)
- 교육주제 : “공공기관의 ESG 전략 수립과 기관 적용방안”

□ ESG 전략 및 성과창출 전문가 자문

- 전 문 가 : 김정훈, 한규훈 (IBS컨설팅)
- 주요내용 : “기관별 ESG 추진현황 분석 결과 공유 및 애로사항 컨설팅”
 - (TRACK 1) ESG 도입단계 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
 - (TRACK 2) ESG 진행단계 기관 또는 공사·공단

2022 아시아 태평양 혁신 콘퍼런스 인천세션



■ 행사 목적 및 성과

- 아시아 태평양 혁신 네트워크는 2010년에 설립되어 혁신의 법적 측면과 경영 및 경제적 측면에 관심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학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매년 정기 콘퍼런스를 회원 기관들이 차례로 개최함.
- 2022년 연례 학술회의가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인천세션을 구성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혁신과 지역경제를 논의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대응 과제를 모색함.

■ 행사 개요

- 일시 : [전체일정] 2022년 10월 28일(금)~29일(토) 09:00~18:00
[인천세션] 2022년 10월 29일(토) 10:45~12:15
- 장소 : 인하항공우주융합캠퍼스 / [인천세션] 203호
- 주제 : [전체주제] “혁신과 휴머니티” / [인천세션] “혁신과 지역경제”
- 주최 :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인천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기술경영경제학회
- 주관 : [인천세션] 인천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

■ 발표 및 토론

- 세션사회 :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도시정보센터장)
- 발 표 1 : 이정영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기업의 혁신 활동 결정요인”
- 발 표 2 : 박선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유광민 (인천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 “한국 지역 혁신 성과 분해분석과 균집화”
- 발 표 3 : 문우춘, 최진혁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연구위원)
-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기술 혁신: 인천광역시 UAM 사례”

2022 DMZ 국제포럼 인천세션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광역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하는 <2022 DMZ 국제포럼>이 “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시대,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인천에서 개최됨.
- 인천연구원은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과 공동 주관기관으로 자체 세션을 구성하여, 새 정부 및 인천광역시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지속적인 인천형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4일(금) 16:10~18:00
- 장소 :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 그랜드볼룸3
- 주제 : “접경지역에서 초국가적 도시주권과 평화지대의 모색”
- 주최 : 인천광역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세션사회 :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
- 발 표 1 : 조형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 “접경 협력을 위한 탈주권적 현장도시 모델”
- 발 표 2 : 장정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소장)
- “주권의 새로운 가능성?: 홍콩과 현장도시(차터시티)”
- 발 표 3 :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한강하구를 통한 남북 생태환경협력 방안: 상향식 모델을 중심으로”
- 발 표 4 : 임철희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을 통한 평화지대 모색”
- 발 표 5 :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 접경수역에서의 남북협력 추진방향”

2022 인천미래정책포럼



■ 행사 목적 및 성과

- 민선8기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시책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정 방향 제시를 위하여, 인천연구원이 2022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도시연구단>과 <제물포 르네상스연구단>의 연구성과에 기초해 토론회를 개최함.
- ‘글로벌도시 인천’과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핵심가치 및 사업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산업 및 사회문화, 해양관광 및 항만재개발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시사점을 논의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13:30~17:30
- 장소 :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하버베이홀
- 주제 :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진단과 제언”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후원 : 인천광역시의회

■ 발표 및 토론

□ 기조연설

- 기조연설 : 한상을 (인천광역시 초일류도시기획관)
-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 제1세션 :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방향과 과제

- 세션사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글로벌도시연구단장)

- 발 표 1 : 배은주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형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
- 발 표 2 :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한 인천시 경제산업계획 추진 방향”
- 지정토론 : 송영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박경용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기획단장)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한 준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 제2세션 : 인천의 미래 제물포 르네상스

- 세션사회 : 조상운 (인천연구원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장)
- 발 표 1 :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
 - “인천내항 항만기능 이전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
- 발 표 2 :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제물포 르네상스 해양관광지구 조성 과제”
- 발 표 3 : 탁영식 ((주)건일 사장)
 -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사업, 내항재개발: 실천대안 마련을 위한 의제 설정”
- 지정토론 : 장동민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류윤기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장)

〈행사사진〉



2022년 인천-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공동세미나



■ 행사 목적 및 성과

-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인천과 제주의 사례 비교·검토를 통해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향상 및 개선방안을 논의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분석 방법과 비용 산정 사례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2월 15일(목) 15:00~17:00
- 장소 : 제주 유탕유블레스호텔 에메랄드홀
- 주제 : “투자심사 개선방안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 주최 : 인천연구원, 제주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연구원(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박찬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 “공공주차장 사업편의 추정을 위한 주차지표 분석 및 적용방안”
- 발 표 2 : 김한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연구원)
- “제주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개발 연구”
- 토론사회 : 이세구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 김대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부연구위원)
최영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부연구위원)
박성덕 (대구경북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박형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투자분석위원)
박효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초빙선임연구위원)
한명주 (경기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1부장),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연구위원)

2022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1~4차)



■ 행사 목적 및 성과

- 녹색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공유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관내 공무원, 기업체, 시민단체, 대학생 등 관심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

■ 행사 개요

- 일시 : [1차] 2022년 2월 22일(화) 15:00~17:00
[2차] 2022년 5월 27일(금) 15:00~17:00
[3차] 2022년 8월 26일(금) 15:00~17:00
[4차] 2022년 12월 1일(목) 15:00~17:00
- 장소 : 실시간 온라인 강의(<https://climateacademy-ii.mlive.kr>)
- 주제 : [1차] “순환경제로 가는 길”
[2차]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의 역할 : 블루카본을 중심으로”
[3차]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의 위협과 대응”
[4차] “유럽발 에너지 위기와 우리의 대응”
- 주최 : 인천연구원(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주관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강사

- [1차]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2차] 권봉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
- [3차] 이강웅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 [4차]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2022 인천기후환경포럼 (1~4차)



■ 행사 목적 및 성과

-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포럼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가 위주의 정례적인 포럼을 진행함.
-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현안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함.

■ 행사 개요

- 일시 : [1차] 2022년 3월 29일(화) 14:00~17:00 / 온라인 화상회의(ZOOM)
[2차] 2022년 7월 5일(화) 14:00~17:00 / 온라인 화상회의(ZOOM)
[3차] 2022년 9월 27일(화) 14:00~16:30 / 온라인 화상회의(ZOOM)
[4차] 2022년 12월 19일(월) 15:00~19:30 /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 장소 : 비대면 화상회의
- 주제 : [1차] “해외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과 인천에의 시사점”
[2차]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적용방안 및 시사점”
[3차]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4차] “제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중립 대비 현황”
- 주최 : 인천연구원(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주관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발표 및 토론

□ 2022년 1차 포럼

- 발 표 1 :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장)

-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정책 동향 및 활동”

○ 발 표 2 : 강민경 (인천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글로벌 대응전략”

○ 토 론 : 참석 포럼위원

□ 2022년 2차 포럼

○ 발 표 1 :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방안”

○ 발 표 2 :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현황 및 시사점”

○ 토 론 : 현승진 (한국환경공단 탄소예산지원부 과장)

참석 포럼위원

□ 2022년 3차 포럼

○ 발 표 1 :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소 센터장)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계획”

○ 발 표 2 : 김태호 (광주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 “광주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방안”

○ 토 론 : 민미연 (한국환경공단 탄소예산지원부장)

강진영 (제주연구원 청정도시연구부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 연구위원)

참석 포럼위원

□ 2022년 4차 포럼

○ 발 표 1 : 이상원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정부의 제조업부문 탄소중립 방안과 인천지역 제조업에 대한 시사점”

○ 발 표 2 : 한 준 (인천기후환경연구소 기후환경연구팀장)

- “인천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과 탄소중립 인식 및 준비현황 그리고 과제”

○ 토 론 : 참석 포럼위원

2022 황해평화포럼 분과회의: 정책세미나



■ 행사 목적 및 성과

- 황해평화포럼은 <평화경제협력분과>, <평화교육인문분과>, <평화접경생태분과> 등 3분과 체제로 운영 중이며, 학계, 국제기구, 국책 및 지방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위원들의 심도 있는 자문의견을 통해, 국내외 정책동향을 비롯해 시정 방향과 현안을 점검함.
- 2022년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남북 생태환경 분야 협력, 문화유산 교류, 접경수역에서의 그린데탕트 등에 관해 국제협력 및 인천의 역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접경지역 인천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 여론 환기 및 인천시 관련 정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함.

■ 행사 개요

- 일시 : [평화접경생태분과] 2022년 3월 24일(목) 15:00~17:00
[평화교육인문분과] 2022년 6월 28일(화) 15:00~17:00
[평화경제협력분과] 2022년 9월 23일(금) 15:00~17:00
- 장소 : 인천연구원 1층 대강당
- 주제 : [평화접경생태분과]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평화교육인문분과] “남북 문화유산 교류와 평화 공감대 형성 방안”
[평화경제협력분과] “인천 접경수역에서의 그린데탕트 구현 방안”
- 주최 :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평화접경생태분과 정책세미나

- 발 표 1 : 최현아 (한스자이텔재단 수석연구원)
- “환경생태분야 북한의 활동과 협력 방향 - HSF 사례 : 서해안 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 발 표 2 : 도혜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프로그램 담당자)
- “황해 국제협력 방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의미”
- 발 표 3 : 서승오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장)
- “람사르협약과 습지보전을 통한 남북협력”
- 종합토론 : 참석 분과위원 전체

□ 평화교육인문분과 정책세미나

- 발 표 1 :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북한 문화유산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 발 표 2 : 권혁희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문화유산과 남북교류: 인천-황해도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중심으로”
- 발 표 3 : 김창수 (문학평론가,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초빙교수)
- “인천 황해도 공동 문화유산과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방안”
- 종합토론 : 참석 분과위원 전체

□ 평화경제협력분과 정책세미나

- 발 표 1 :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내외 기후환경 정책과 남북협력 방향”
- 발 표 2 : 원동준 (인하대 전기공학과 교수)
- “탄소중립에 따른 인천시의 에너지분야 남북협력 방안”
- 발 표 3 : 최현아 (한스자이텔재단 수석연구원)
-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향”
- 종합토론 : 참석 분과위원 전체

〈행사사진〉



2022 인차이나클러스터: 중국 전문가 회의 (1~10차)



■ 행사 목적 및 성과

- 중국 교류협력 플랫폼 「인차이나포럼」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전문가 회의인 <인차이나 클러스터>를 운영함.
- 국내외 각계 중국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인천의 실천과제와 역할을 정립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구분 | 일시 | 주제 |
|-----|---------------------------|---|
| 1차 | 03월 23일(수) 10:30~13:00 | 인차이나포럼 한중청년프로그램 (INChina+Youth) 기획회의 - “인차이나포럼-성균중국연구소-라이코어코컬(청년스타트업기업) 공동사업 협의” |
| 2차 | 03월 26일(토) 10:30~12:00 | 인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공동세미나 - “한중 교류의 현황과 미래 과제” |
| 3차 | 04월 15일(금) 14:00~16:00 | 한국유라시아학회 공동세미나 - “탈냉전이후 위협인식 변화 미중러 삼각관계” |
| 4차 | 05월 21일(토) 10:00~12:00 | 중국지역학회 공동세미나 - “양안 접경 도시 샤먼에서 마주한 대만 청년들” |
| 5차 | 05월 23일(월) 15:30~18:00 | 인차이나클러스터 회의 - “수교 이후 분야별 한중관계 현황 및 특징 진단과 제언” |
| 6차 | 05월 28일(토) 10:00~12:00 | 한국유라시아학회 공동세미나 - “전망이론을 통해 본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정세” |
| 7차 | 09월 19일(월) 16:00~18:00 | 인차이나클러스터 회의 - “한중수교 30년과 양국 관계의 재구성” |
| 8차 | 10월 01일(토) 09:45~12:00 | 한국유라시아학회 공동학술세미나 - “세계 식량 체계의 재편과 한-북방 식량 안보 협력” |
| 9차 | 11월 28일(월) 15:00~18:00 | 인천-제주 정책 교류회 - “한중지방외교 30년과 인천-제주 대중국 교류협력” |
| 10차 | 12월 01일(목) 16:00~18:00 | 한국-대만 국제세미나 - “대만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대만민심 동향 및 향후 양안관계 전망” |

■ 발표 및 토론

□ 1차 회의 (한중청년프로그램 INChina Youth 기획회의)

- 논의주제 : “인차이나포럼-성균중국연구소-라이크어로컬 공동사업 협의”
- 사 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참 석 자 : 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현성준 (라이크어로컬 대표)
홍창기 (라이크어로컬 이사)
김담희 (인천광역시 국제협력담당관실 주무관)
윤성원 (인천연구원 초빙연구원)

□ 2차 회의 (인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공동세미나)

- 주제발표 : 김현철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원장, 공자아카데미 원장)
- “한중 교류의 현황과 미래 과제”
- 토론사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지정토론 : Li Jian (李劍, 아주일보 정치사회부 팀장)
Wang Xia (王霞,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부교수)
장영덕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정주영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 3차 회의 (한국유라시아학회 공동세미나)

- 주제발표 : 김선재 (국회도서관 해외조사처 조사관)
- “탈냉전 이후 위협인식 변화 미중러 삼각관계”
- 토론사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지정토론 : 조정원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공민석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4차 회의 (중국지역학회 공동세미나)

- 주제발표 : 문경연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양안 접경 도시 샾면에서 마주한 대만 청년들”
- 토론사회 : 이장원 (충북대학교 정외과 교수, 중국지역학회 회장)
- 지정토론 : 공유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허은진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

□ 5차 회의

- 토론주제 : “수교 이후 분야별 한중관계 현황 및 특징 진단과 제언”
- 토론사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지정토론 : 주장환 (한신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최필수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김선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
이민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표나리 (국립외교원 교수)

□ 6차 회의 (한국유라시아학회 공동세미나)

- 주제발표 : 이주연 (안양대학교 연구교수)
- “전망이론을 통해 본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정세”
- 토론사회 : 이기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외교학부 교수)
- 지정토론 :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연구위원)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 7차 회의

- 발 표 1 : 안치영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한중 사회문화 현황과 상호인식”
- 발 표 2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중 경제산업관계 변화 진단”
- 발 표 3 : 민귀식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신흥안보와 한중관계”
- 발 표 4 : 주장환 (한신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유라시아 지역질서 변화와 한중 협력”
- 토론사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8차 회의 (한국유라시아학회 공동학술세미나)

- 주제발표 : 김도훈 (한국외국어대학교 HK 국가전략사업단 연구교수)
- “세계 식량 체계의 재편과 한-북방 식량 안보 협력”
- 토론사회 :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윤성욱 (충북대학교 정외과 교수)
조형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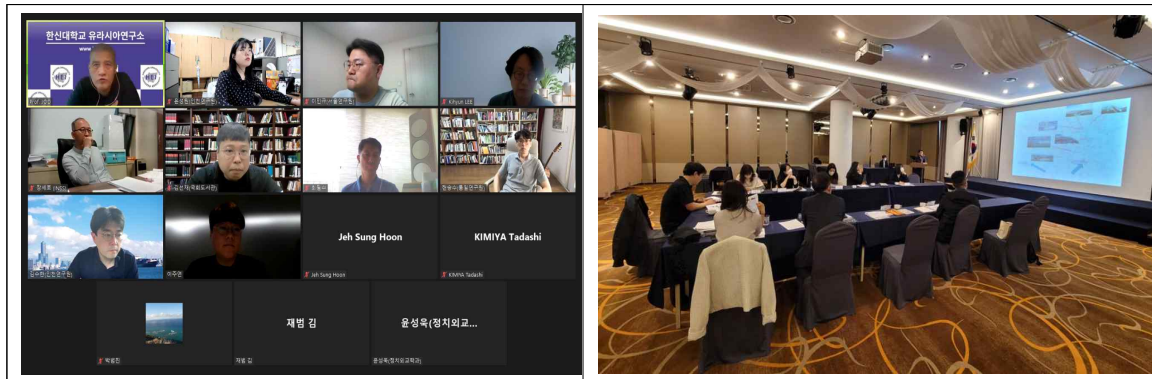
□ 9차 회의 (인천-제주 정책 교류회)

- 발 표 1 : 정지형 (제주연구원 연구부장, 연구위원)
- “제주-중국 지방정부 도시외교 전략”
- 발 표 2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한국 지방정부 의 대중국 교류 양상 및 특징”
- 토 론 : 고경민 (제주국제평화센터 센터장)
LIU TINGTING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관광정책과 주무관)
김은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중국교류팀 팀장)
김담희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중국교류팀 주무관)
한예솜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국제기획팀 주무관)

□ 10차 회의 (한국-대만 국제세미나)

- 발 표 1 : 하범식 (대만 국립가오슝대학교 한국연구센터장, 동아어문학과 교수)
- “2022 대만 지방선거 결과와 시사점”
- 발 표 2 : 우준광 (대만 국립해양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교수)
- “양안접경, 진먼다오의 지방선거 결과 및 시사점”
- 발 표 3 : 린쯔하오 (대만국방안전연구원 연구원)
- “대만에서 바라보는 향후 양안관계 및 동아시아 국제정세”
- 토론사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토 론 : 주장환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장, 중국학과 교수)
이재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행사사진〉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국제 학술행사

- 2022 인차이나포럼 한중 전문가 국제회의
- 제6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 인차이나포럼 2022 국제컨퍼런스
- 2022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 2022 황해평화포럼
- 2022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 제27차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 제15회 인천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2022 인차이나포럼 한중 전문가 국제회의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차이나포럼은 한중수교 30년을 맞아 관련 연구소 및 학회와 공동으로 △사회·문화 △경제 산업 △신흥안보 △국제관계 등을 다루는 한중 전문가 국제회의를 개최함.
- 이를 토대로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 본행사(9/27)에서 회의결과를 공유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8월 20일(토) 09:30~16:10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 “국제질서 전환기 한중관계 진단과 과제”
- 주최 : 인차이나포럼
- 주관 : 인차이나포럼,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현대중국학회,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한국유라시아학회

■ 발표 및 토론

- 세션 1 : 한중의 사회문화 현황과 상호인식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 세션사회 : 안치영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장)
 - 발 표 1 : 류하이룡 (중국 런민대학교 교수)
- “아이돌의 국가: 팬 민족주의의 대두와 현황”
 - 발 표 2 : 윤종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한국 사회에서 대중국 인식: 변화 양상과 주요 쟁점”
 - 지정토론 : 마더용 (중국 런민대학교 교수)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교수)
홍 징 (중국 산둥대학교 교수)
조형진 (인천대학교 교수)

□ 세션 2 : 한중 경제산업관계 변화 진단

[현대중국학회]

- 세션사회 : 양평섭 (현대중국학회 회장)
- 발 표 1 : 투신환 (중국 경제무역대학교 교수)
- “RCEP와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
- 발 표 2 :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 “한중 경제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 지정토론 : 파오룽 (중국 난징대학교 교수)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문익준 (국민대학교 교수)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세션 3 : 글로벌 신홍안보와 한중협력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 세션사회 : 민귀식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장)
- 발 표 1 : 우 명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교 교수)
- “신홍안보 시각에서 바라본 한중환경협력”
- 발 표 2 : 김상규 (한양대학교 교수)
- “사이버 영역의 한중 협력 의제”
- 지정토론 : 저우젠런 (중국 칭화대학교 교수)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 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디지털전환연구팀장)

□ 세션 4 : 유라시아 지역질서 변화와 한중협력

[한국유라시아학회]

- 세션사회 : 주장환 (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
- 발 표 1 : 쉰싱제 (중국 지린대학교 교수)
- "국제질서의 분층(分層)과 분류(分流)"
- 발 표 2 : 이기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역내 질서의 변화와 한중미래발전을 위한 과제”
- 지정토론 : 정지용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
김재관 (전남대학교 교수)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선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

제6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 행사 목적 및 성과

- 문호도시 정책포럼은 글로벌 경제의 주요한 공간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 관문도시들의 도시발전 경험과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과제를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행사임.
-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지방정부 등 분야별 한중관계를 회고하고, 동아시아 수도권 관문도시 간 역할 재정비를 통해 동반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14:00~18: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화상회의(zoom) + 온라인 생중계(YouTube)]
- 주제 : “한중수교 30년, 회고 및 전망: 동북아 문호도시의 발전과 협력과제”
- 주최 : 인천연구원, 텐진사회과학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후원 : 인천광역시

■ 발표 및 토론

□ 세션 1 : 한중수교 30주년 회고와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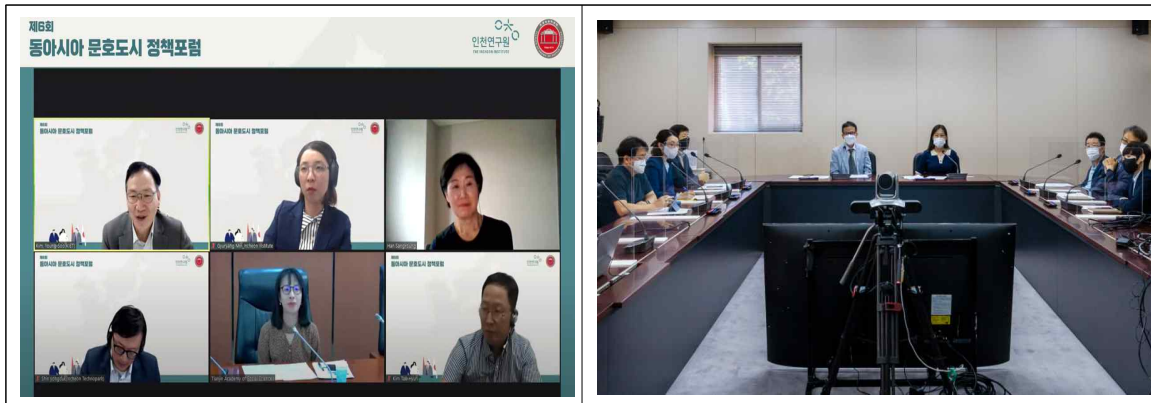
- 세션사회 : 김수한 (인천연구원 글로벌도시연구단장)
- 발 표 1 : 핑리쥘 (PING LIQUN, 텐진사회과학원 동북아지역협력센터 집행부주임)
- “한중 경제무역 협력 30년 회고 및 RCEP 배경하의 새로운 기대”
- 발 표 2 : 표나리 (국립외교원 교수)
- “한중수교 30주년: 교류협력과 문화 갈등”

- 발 표 3 : 문현미 (한양대학교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위원)
- “한중수교 30주년과 지방정부 공공외교”
- 발 표 4 : 이민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연구위원)
- “한중관계 30주년: 짙어진 미-중 관계 종속화와 ‘구동화이’ 접근 필요”

□ 세션 2 : 한·중·일 환경·산업경제 분야 우호 협력

- 세션사회 :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실 선임연구위원)
- 발 표 1 :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
-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 인천시 부품산업의 현황과 전망”
- 발 표 2 : 왕후이즈 (WANG HUIZHI, 텐진사회과학원 자원환경및생태연구소 부소장)
- “징진지 지역 탄소 중립 및 배출 감소를 위한 모색”
- 발 표 3 : 한상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일본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
- 지정토론 : 신용덕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산업센터장, 수석연구위원)
김은경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태현 (서울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니우구이민 (NIU GUIMIN, 텐진사회과학원 자원환경및생태연구소 연구원)

〈행사사진〉



인차이나포럼 2022 국제컨퍼런스



■ 행사 목적 및 성과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상생·창조·소통의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를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인천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
- 민선 8기 인천시 對중국 교류에 관한 시정 방향과 민·관·산·학 공동 협력과제를 논의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09:30~17: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온·오프라인 병행]
- 주제 : “상생·창조·소통의 미래지향적 한중관계와 인천”
- 주최 : 인천광역시, 주한중국대사관
- 주관 :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현대중국학회, 한국유라시아학회

■ 발표 및 토론

□ 1부 개막식 및 기조연설

- 개막식 : 포럼 소개 영상, 개회선언, 국내외 인사 축사, 기념촬영
- 기조연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상생·창조·소통의 한중관계와 인천”

□ 2부 특별기획 한중 청년대화

- 1세션 : ‘청년 논문 공모전’ 수상자 발표·토론
-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를 위한 청년들의 제언”

□ 3부 학술단체 공동 전문가 회의

- 2세션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 “한중 사회문화 현황과 상호인식”
- 3세션 : 현대중국학회
- “한중 경제산업 관계 변화 진단”
- 4세션 :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 “글로벌 신흥안보와 한중협력”
- 5세션 : 한국유라시아학회
- “유라시아 질서 변화와 한중협력”
- 6세션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국제질서 전환기 한중관계 진단과 과제”

□ 4부 비즈니스 회의

- 7세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차이나 챌린저스 데이 2022
- “코로나 이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포지션과 협력 기회”
- “코로나 이후 글로벌 투자 현황 및 이슈”

□ 5부 협력·부대 행사

- 인천상공회의소 : 한중 온라인 수출상담회
- 인차이나포럼 : 연중사업 ‘청년탐방’ 등 영상 상영
- 시민참여 프로그램 : 퀴즈 부스, 포토존 운영

〈행사사진〉



2022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광역시와 유엔재난경감사무국(UNDRR)의 협력사업으로, 재난안전 분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재난위험 경감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인천이 복원력 허브(Resilience Hub)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29일(목)
-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A
- 주제 : “복합위험사회 대응을 위한 도시의 역할”
- 주최 : 인천광역시,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인천연구원
- 후원 : 행정안전부

■ 발표 및 토론

□ 1일차 : 2022년 9월 28일(수) 10:00~16:40

-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 제1세션 : “복합위험 대응을 위한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리더의 경험”
- 제2세션 :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 방안”
- 제3세션 : “복합위험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및 적용”

□ 2일차 : 2022년 9월 29일(목) 10:00~14:40

- 제4세션 : “복합위험 관리를 위한 지방행동자 행동”
- 제5세션 : “복합위험 관리를 위한 재난복원력 실천”

□ 부대행사 1 : 시민안전세미나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14:00~15: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회의실(205호)
- 주제 :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 및 연대 방안”

□ 부대행사 2 : 2022 하반기 재난안전 전문가 세미나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13:30 ~ 9월 30일(금) 11: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회의실(205호)
- 주제 : 재난안전 주요 현안 논의 및 연구성과 공유

□ 부대행사 3 : 제7회 재난안전전시회

-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29일(목)
-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B
- 내용 :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재난안전 정보와 체험의 장

〈행사사진〉



2022 황해평화포럼



■ 행사 목적 및 성과

-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론화 및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
- 황해에서의 평화 정착과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역내 평화 네트워크를 강화함.
- 접경지역인 인천의 평화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대내외 여론 환기 및 인천시 관련 정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14일(금) 10:00~18:00
- 장소 : 웨라톤그랜드인천호텔 [온·오프라인 병행]
- 주제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여정, 그 시작 인천”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후원 : 통일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도시공사, EAAFP, RRC-EA, 한스자이텔재단

■ 발표 및 토론

□ 개회식 및 기조발표

-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 기조발표 : 홍용표 (前 통일부장관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의 연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세션 1 (통일 세션) 새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분석

- 세션사회 :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통일학연구원장)
- 발 표 1 : 김준형 (前 국립외교원장 / 한동대학교 교수)
- “국제정세 전망과 한반도 평화구축 과제”
- 발 표 2 : 김형석 (前 통일부 차관 / 대전대학교 교수)
- “새 정부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의 과제”
- 발 표 3 :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새 정부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전망과 과제”
- 지정토론 :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박종철 (대전대학교 교수)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차문석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 세션 2 (북한 이탈주민 세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 세션사회 :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발 표 1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장)
- “북한 이탈주민 정책 현황과 과제”
- 발 표 2 :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기자)
- “일본 입국 탈북자: 그 개황과 정착 과제”
- 발 표 3 : 박철성 (인천하나센터장)
- “인천시 북한 이탈주민 현황과 과제”
- 지정토론 :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순실 (통일교육복지센터 대표)

□ 세션 3 (남북 그린데탕트 세션 A) 인천형 남북 기후환경협력 모색

- 세션사회 : 박제훈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 발 표 1 :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협력과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방안”
- 발 표 2 :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내외 기후환경 정책과 남북협력 방향”
- 발 표 3 :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 접경수역에서의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방향”

- 지정토론 : 최현아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소 연구교수)
조경두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 세션 4 (남북 그린데탕트 세션 B) 인천형 남북 생태환경협력 국제플랫폼 모색
 - 세션사회 : 박흥순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 발 표 1 : 서승오 (람사르 동아시아지역센터장 RRC-EA)
- “다자간 습지 보전을 통한 남북협력 방안”
 - 발 표 2 : 베른하르트 켈리거 (한스자이델재단 소장)
- “황해의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남북한 협력과제”
 - 발 표 3 : 더그 왓킨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AFP 소장)
- “황해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이동성 물새 국제협력 사례발표 및 제안”
 - 발 표 4 : 안나 그리칭 (버몬트대학교 교수)
- “지속가능한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플랫폼 구축방안”
 - 지정토론 :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권전오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세션 5 (남북 도시협력 세션) 인천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 세션사회 :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 발 표 1 :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변화와 새로운 대외 경험 수요”
 - 발 표 2 :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인천의 미래상과 남북협력 활용 방안”
 - 지정토론 :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미래도시연구소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행사사진〉



2022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 행사 목적 및 성과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
- 2022년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영향과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지방정부, 기업 등의 노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10:00~16:3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3층 회의실(302~307호) [온·오프라인 병행]
- 주제 : “기후위기의 리스크와 기회”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술센터
- 후원 : 기획재정부, 환경부

■ 발표 및 토론

□ 개회식 및 기조연설

-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 기조연설 : Khaled Abdelrahman (주한이집트 대사)

□ 세션 1 : 기후위기 리스크 관리

[라운드테이블]

- 세션사회 : 손성환 (인천광역시 GCF 자문대사)
- 패널 :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유훈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Oyun Sanjaasuren (GCF 대외협력국장)
 Sanjaya Bhatia (UNDRR 동북아시아사무소장)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세션 2 : 기후금융의 혁신

- 세션사회 : 김철수 (정동경제연구소장)
- 주제발표 : 김태한 (CDP 한국위원회 수석연구원)
 - “기후금융과 기후공시의 역할”
- 지정토론 : Virender Kumar Duggal (ADB 기후변화 선임위원)
 - 안영신 (기획재정부 기후대응전략과 사무관)
 - 안옥상 (KDB산업은행 ESG 기획부장)
 - 정순혁 (기아자동차 탄소중립전략팀 책임매니저)
 - 최지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선임 이코노미스트)

□ 세션 3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 세션사회 :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 주제발표 : 김세현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장)
 -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전략”
- 지정토론 : 민미연 (한국환경공단 탄소예산지원부장)
 -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 한상원 (인천 탄소중립 비전 포럼 청년분과위원)

□ 세션 4 : 기후기술과 자원 연계

- 세션사회 : 김형주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
- 발 표 1 : Djoko Hartoyo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지역인프라개발국장)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개도국의 어려움 및 기술-재정 연계 필요성”
- 발 표 2 : 윤 성 (엔벨롭스 대표)
 -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에서 기술-재정 연계의 주요 장애요인”

- 발 표 3 : 김태건 (녹색기술센터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장)
-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하의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사업 활동”
- 지정토론 : 곽상훈 (하나증권 글로벌투자서비스팀장)
안주희 (KDB산업은행 ESG기획부 기후변화사업팀 부부장)

□ 세션 5 : 건물과 탄소중립 도시

- 세션사회 :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 발 표 1 :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건축물의 역할”
- 발 표 2 : 최경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장)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 부문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
- 지정토론 : Robert Dijksterhuis (네덜란드 내무부 지속가능건물부문 대사)
이은엽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장)
김중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ICT 융합연구단 책임연구원)

〈행사사진〉



제27차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 행사 목적 및 성과

- 2020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행동 주체가 된 지방정부의 일원으로 제27차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참가하여, 국제기후변화 동향 파악 등 선도적 저탄소도시 조성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파리협약의 이행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천광역시 주최의 부대행사를 주관하여,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저탄소 도시 활동을 홍보하고 글로벌 도시 협력을 강화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09:30~11:30
- 장소 :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내 한국홍보관
- 주제 :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이클레이(ICLED)
- 주관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 “인천광역시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전략과 추진기반 구축”
- 발 표 2 : 김영명 (한국 당진시 부시장)
- “GCoM 서명도시로서 당진시의 기후행동”
- 발 표 3 : Joana Balsemão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시 기후변화 시의원)
- “카스카이스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 발 표 4 : Lautaro Lorenzo (아르헨티나 에스테반 에체베리아 지방정부 환경사무국장)
- “아르헨티나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 발 표 5 : Benjamin Jance IV (기후및에너지시장 글로벌 협약 연구및혁신 책임자)
- “GCoM을 통한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가속화”
- 토론사회 : 손성환 (인천광역시 GCF협력 자문대사)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 행사 목적 및 성과

- UNESCAP의 지식과 경험, 인천광역시의 도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도시 차원의 기후 행동 촉진 파트너십을 확대, 강화함.
- 세계 다양한 도시와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을 통해, 각 도시의 현재 이니셔티브를 보완하고 도시 수준의 기후 조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여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탄소중립 노력을 널리 알림.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8(목)
- 장소 : 웨라톤그랜드인천호텔 그랜드볼룸 [온/오프라인 병행]
- 주최 : UNESCAP,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연구원(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GCF, 시티넷, 기후변화센터, 이클레이, 혁신녹색개발계획(중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 발표 및 토론

□ 개회식·기조연설·비전선포식

- 개회식 : 개회사, 환영사, 축사
- 기조연설 :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전 환경부 장관)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 세션 1 : 기후거버넌스와 도시의 역할 및 정책

- 세션사회 :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
- 주제발표 : Monique Nardi (UNFCCC 프로그램 오피서)
Xu, Jun (중국 충칭시 환경생태부 선임엔지니어)

Ganbold Tsog (몽골 울란바토르시 수도대기및환경오염국 과장)
 Junko Akagi (일본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키타큐슈도시센터 연구매니저)
 김세현 (인천광역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장)

□ 세션 2 : 자연기반 혁신 솔루션

- 세션사회 : 손봉희 (ICLEI 한국사무소 사무국장)
- 주제발표 : 서승오 (람사르 동아시아지역센터장)
 Zou, Tao (중국 베이징칭화통행도시계획&설계연구원 지속가능도시계획과장)
 Tserendulam Shagdarsuren (몽골 환경관광부 기후변화과장)
 Sun, Yanyan (중국 동잉시 습지보전센터 선임엔지니어)
 Maja Jovanovic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시 환경보호사무국)

□ 세션 3 : 순환경제와 도시

- 세션사회 :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 주제발표 : Elaine Tan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 과장)
 부기철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강지석 (광명시 광명사업사이클센터 과장)
 Shi, Yi (상하이 에코사이클연구센터)

□ 세션 4 : 녹색금융

- 세션사회 : Bapon Shm Fakhruddin (GCF)
- 주제발표 : Amgad Elmahdi (GCF 물분과 리더)
 Alessio Giardino (ADB 지속가능개발과기후변화국 선임물전문관)
 권오극 (K-Water 차장), 김도균 (K-Water 차장)
 Byambasaikhan Bayanjargal (몽골 비즈니스협회 부회장)

□ 세션 5 :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시민&이해관계자의 참여

- 세션사회 : Paulie Mora (CityNet 선임프로그램책임자)
- 주제발표 : Melissa Chin (Think City 전략분석매니저)
 강동률 (SDSN 청소년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Andrea Valentine A. Villaroman (필리핀 케손시 기후변화환경지속가능과)

□ 세션 6 : 지역협력의 역할

- 세션사회 :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 주제발표 : Madelaine Arlene Alfelor Gazmen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아시아태평양 대사)
Asih Budiati (GCoM 아시아팀장)
Sanjeevani D. Singh (UN-ESCAP 환경개발분과 경제담당관)
Alissa Raj (C40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지역 부국장)

〈행사사진〉



제15회 인천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연구교류 협정에 따라, 공통 현안에 대한 연구사례를 선별해 윤번제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도시정책 연구의 상호 벤치마킹과 연구성과의 심화 및 연구 수준의 제고에 활용함.
- 코로나 시대 주민의 자치 역할과 커뮤니티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에 인식을 함께하고, 인천과 기타큐슈의 ‘커뮤니티’ 관련 다양한 사례 및 정책을 공유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14:00~18:00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제 : “커뮤니티의 현재와 정책”
- 주최 : 인천연구원,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
- 주관 : 인천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김정욱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정
- 발 표 2 : 후카야 히로이 (深谷 裕,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 교수)
- 의존증(중독) 회복자의 커뮤니티로의 포섭
- 발 표 3 :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주택공급 현황과 주택정비사업의 이슈
- 발 표 4 : 이금동 (李錦東,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 특임준교수)
- 초고령사회 축소도시의 커뮤니티 만들기: 기타큐슈시 ‘평생 현역 유메오이 사숙’을 사례로
- 지정토론 :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장)
미나미 히로시 (지역전략연구소 부소장)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202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정책간담회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 업무협약
전국시도연구원-한국환경연구원 업무협약 및 환경포럼
인천경제연구회 업무협약 및 창립총회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사업 업무협약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 사업」 시행자로 선정됨.
 - 사업명 : V2V 기반 공유물류망 구축을 통한 당일배송 서비스 실증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2월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이에 따라 인천시, 연구원, 협력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물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14:00~14:30
- 장소 : 시청 접견실
- 참석 : 행정부시장, 교통건설국장, 인천연구원장,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장, 참여업체 임원

■ 협약 내용

- 인천광역시 : 협약에 의한 사업의 기획·조정, 예산지원 및 정산, 점검
- 인천연구원 : 사업 총괄 운영, 사업실적의 평가 및 분석, 리빙랩 운영
- (주)브이투브이 : 물류서비스 실증을 위한 집행 총괄
- (주)휴맥스, (주)하이파킹 : 충전소, 정류소 및 차고지 제공
-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삼영물류(주), 패스트박스(주), (주)NS홈쇼핑 : 배송물품
- 인하대학교 : 실증사업의 서비스 평가와 분석, 리빙랩 운영, 자문

〈행사사진〉



전국 시도 연구원-한국환경연구원 업무협약 및 환경포럼

■ 행사 목적 및 성과

-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과 한국환경연구원은 “지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협의체 업무협약” 조인식을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단위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에서의 이행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한국환경연구원이 “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 지역기반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주제로 주최하는 <2022년 제2차 KEI 환경포럼>에 참가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계획 및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발전 방향과 정책시사점을 논의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8일(목)
- 장소 : 제주 히든클리프호텔 [협약] 오피스홀 / [포럼] 심포니홀(유튜브 생중계)
- 주제 : [협약] “지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협의체 업무협약”
[포럼] “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 지역기반 탄소중립 이행전략”
- 주최 : 인천연구원, 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울산연구원, 전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제주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 주관 : 한국환경연구원, 제주연구원
- 참석 : 협약 체결기관 임직원

■ 협약 내용

- 환경분야 관련 연구 수행 및 데이터 보유 현황 공유
- 환경분야 관련 공동 및 협력 연구·사업 기획 및 추진

- 환경분야 관련 탄소중립 및 지역별 적응 현안·이슈 공유
- 국가와 지역의 환경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지역 간 협력방안 도출
- 환경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활동
- 환경분야 관련 신규 이슈 및 상호 협력분야 발굴 노력

■ 발표 및 토론

□ 라운드테이블

- 발 표 1 :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방향”
- 발 표 2 :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
 - “탄소중립 국가정책 추진전략”
- 토 론 : 참석 기관장 전원
 - “탄소중립 관련 지역의 주요 이슈”
 - “기관의 주요 연구동향과 미래 협력방향 제언”

□ 세션 1 : 지역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사례와 발전 방향

- 발 표 1 :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도시SOC연구팀장)
 - “대구형 탄소중립, 시민주도 8G 전략”
- 발 표 2 : 유정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탄소중립 전략과 향후 과제”
- 발 표 3 : 장남정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라북도 탄소중립 계획수립 현황 및 핵심사업”
- 세션사회 : 편상훈 (울산연구원 원장)
- 지정토론 : 정윤희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 오혜정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 한 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현 (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장)
 - 조승희 (광주전남연구원 탄소중립정책기획팀장)
 - 허종배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 세션 2 : 지역 탄소중립 추진사례와 시사점

- 발 표 1 :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대표이사)
-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 사업 사례”
- 발 표 2 : 강진영 (제주연구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
- “제주 탄소중립 도시조성 전략”
- 발 표 3 : 이소영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 “충청북도 탄소중립 추진사례와 향후 과제”
- 세션사회 : 이용식 (인천연구원 원장)
- 지정토론 : 박진호 (경남연구원 지속가능환경연구실장)
남호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문충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마영일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행사사진〉



인천경제연구회 업무협약 및 창립총회

■ 행사 목적 및 성과

- 인천 소재 지역경제 연구기관들과 연구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 혁신과 관련한 학문적, 정책적 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 싱크탱크를 구축함.
-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등과 함께 「인천경제연구회」를 구성하고, 업무협약 조인식 및 창립총회 개최를 통해 참여 회원기관들의 지역경제 공헌의 실현 발판을 마련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2년 12월 16일(금) 14:00~17:00
- 장소 : 한국은행 인천본부 회의실
- 주최 : 인천연구원,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 주관 : 한국은행 인천본부
- 참석 : 협약 체결기관 임직원 20명

■ 협약 내용

- 「인천경제연구회」 운영 및 토론회 개최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 기타 협력이 필요하다고 참여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 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혁신공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 종합토론 : 참석자 전원

〈행사사진〉



II정책연구보고서 2023-01

2022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발행인 이용식

발행일 2023년 1월 31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 260-2600

FAX. 032) 260-2629

<http://www.ii.re.kr/>

인쇄소 (주)동양인쇄사 (032-432-9480)

©인천연구원 2022

ISBN 979-11-6870-132-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사는 금합니다.